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4542-01

데이터 기반 농정구현을 위한 농업경영체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23. 12. 15.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데이터 기반 농정구현을 위한 농업경영체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문한필 (전남대학교)
연구원:	조재성 (충남대학교) 김영준 (강원대학교)
연구보조원:	윤영석 (전남대학교)
보조원:	이가은 (전남대학교) 이승진 (전남대학교) 정재윤 (전남대학교)

〈연구 요약〉

○ 본 연구에서 농업경영체 유형화는 3가지 기본방향 하에서 그 방안이 모색됨.

- ① 중장기 농정방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형화, ② 맞춤형 농정과 농업경영 정보 등록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유형화, ③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유형화

○ 농업경영체 DB의 생산자원 보유 정보(작물재배, 농업시설, 가축사육)에 기반하여 1차적으로 크게 4가지 경영체 유형(① 논농업경영체, ② 밭농업경영체, ③ 시설농업경영체, ④ 축산업경영체)을 구분할 수 있음.

- 대분류 4가지 영농형태(생산자원 보유 기반)의 조합에 따른 복합영농을 모두 고려하면 다음의 1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가능
- 그러나 복합영농을 하는 경영체가 상기 4가지 영농형태 유형에 중복하여 속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유형화 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원자료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기에, 등록정보 관리나 활용(정책연계)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음.

〈농업경영체 DB 기반 15가지 세부 영농형태별 유형〉

세부 영농형태 구분	대분류 영농형태				유형 비중 (2018~22)
	논	밭	시설	축산	
논 단일영농 (A)	√				14.73%
논&밭 복합영농 (AB)	√	√			23.76%
논&시설 복합영농 (AC)	√		√		0.88%
논&축산 복합영농 (AD)	√			√	0.55%
논&밭&시설 복합영농 (ABC)	√	√	√		4.86%
논&밭&축산 복합영농 (ABD)	√	√		√	3.03%
논&시설&축산 복합영농 (ACD)	√		√	√	0.05%
논&밭&시설&축산 복합영농 (ABCD)	√	√	√	√	0.90%
밭 단일영농 (B)		√			40.59%
밭&시설 복합영농 (BC)		√	√		5.07%
밭&축산 복합영농 (BD)		√		√	1.97%
밭&시설&축산 복합영농 (BCD)		√	√	√	0.34%
시설 단일영농 (C)			√		1.76%
시설&축산 복합영농 (CD)			√	√	0.04%
축산 단일영농 (D)				√	1.47%

○ 일차적으로 DB 기반 영농형태(생산자원 보유)에 따른 유형 분류(중복 허용)를 했다면, 다음은 영농규모(재배면적, 사육두수), 농외소득 3,700만 원, 경영주 연령과 및 영농경력을 추가적인 유형화 기준으로 고려해 농정과 연계한 유형 세분화를 모색함.

○ 먼저 영농규모 구분은 주요 농림사업에서 설정한 규모기준과 함께 경영체의 영농규모 분포, 특정 구간의 경영체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전체 농업수입/자산/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가경제조사 참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

- 예를 들어, 논농업경영체는 논 재배면적에 따라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세분류됨.
0.5ha 미만인 경영체(기초경영체), 0.5ha 이상 2ha 미만인 경영체(일반경영체), 2ha 이상인 경영체(전문경영체)

〈영농형태 유형별 영농규모 기준 유형 구분〉

논농업경영체	논 0.5ha		논 2ha	
	기초 (61.5%) 17.8%	일반 (27.5%) 32.2%	전문 (11%) 50%	
밭농업경영체	밭 0.25ha		밭 1ha	
	기초 (54.6%) 17.5%	일반 (34.9%) 38.2%	전문 (10.5%) 44.3%	
시설농업경영체	시설 0.1ha		시설 0.5ha	
	기초 (48.2%) 4.8%	일반 (34.3%) 28.4%	전문 (17.5%) 66.8%	
축산업경영체	준전업농 기준		기업농 기준	
	기초 (62%) 18.1% 소 2.6% 돼지 3.4% 닭 0.6% 오리	일반 (26.3%) 40.1% 32.8% 20.8% 9.4%	전문 (11.7%) 41.8% 64.6% 75.8% 90.0%	

주: 영농형태별 경영체 개수의 비중(괄호 안 백분율 표기)으로 그래프를 나타냄. 단, 흰색으로 표시한 백분율은 해당 생산자원의 전체면적에서 각 유형 경영체들의 면적(합계)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축산업경영체는 소, 돼지, 닭, 오리의 사육두수 비중을 흰색으로 제시함.

○ 다음으로, 경영주의 농외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영체는 영농규모에 따라 취미경영체(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인 기초경영체와 동일한 영농규모), 부업경영체(일반), 소득다각화경영체(전문)로 각각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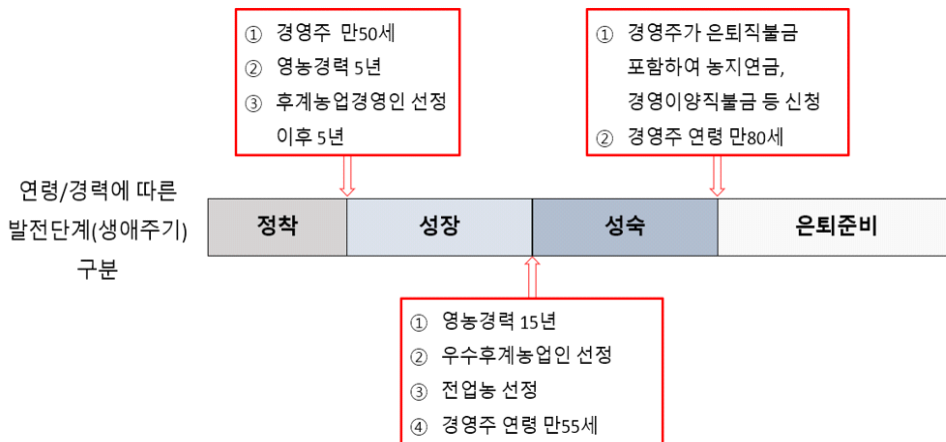
〈영농규모별 농외소득 3,700만 원 기준에 따른 유형 구분〉

영농규모와 농외소득에 따른 유형 구분 (논농업경영체 예시)	취미	부업	소득다각화	농외소득 3,700만 원
	기초	일반	전문	
	0.5ha		2ha	

○ 마지막으로 경영주 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라 개별 경영체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으로의 진입, 영농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 생산자원의 이양과 은퇴 등 생애주기적 성장경로의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경영주 연령과 영농경력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들을 특정한 유형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경영체의 발전단계 또는 생애주기 차원에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경영주 연령/영농경력에 따른 농업경영체 발전단계 구분〉



○ 결국, 개별 농업경영체는 보유한 생산자원의 종류에 따라 일차적으로 4가지 영농형태 유형에 중복하여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영농규모와 농외소득(3,700만 원)과 같은 추가적인 기준들이 적용되고, 연령/경력에 따라 상이한 발전단계를 반영하면, 모든 경영체는 상호배타적으로 특정 ‘유형-단계’의 조합에 속하게 됨.

- 예를 들어, 논 재배면적이 2.5ha이고, 시설 재배면적이 0.05ha이며, 농외소득이 3,000만 원, 경영주 연령은 63세, 영농경력은 18년이라고 하면, 이 경영체는 **성숙단계의 논농업전문경영체 유형이자 시설농업기초경영체 유형**으로 특정됨.

○ 상기 제시된 영농규모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된 경영체 유형별로 등록해야 하는 경영정보의 범위를 차등화할 수 있음. 즉, 기초 유형 경영체에게는 현행 정보를 간소화하게 하고, 일반 유형 경영체에게는 현행 정보를 유지하게 하며, 전문경영체에게는 매출액, 종사자 등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 기초 유형 경영체 집단을 대상으로 현재와 같이 세부 품목으로 구성된 농작물 재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되, 개별 품목의 농작물 재배 정보 확인 절차 및 현행화는 생략하고 대신 품목류에 대한 정보 확인 및 현행화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농업인력의 부족이나 미스매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일단 전문경영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의 고용 형태나 고용경로, 노동시간, 수행작업, 영농경력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일반경영체까지 종사자 관련 추가정보 입력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해서도 비자 유형, 근로여건(노동환경)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한다면,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급이나 농업·농촌 현장 외국인 노동자 인권 관련 실태 파악 및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전문 유형 경영체에 한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시 매출액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이 경우 전문 유형 경영체는 농산물 판매 전표, 거래내역서, 정산서 등 매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또한, 전문 유형 농업경영체에 한해서는 경영체 등록정보 자료 갱신 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임. 나아가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 농업경영체(순차적으로 일반 농업경영체까지 확대)의 경우 작물재배(가축사육) 정보를 최소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현행화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전문경영체에 요구되는 생산액(판매액) 정보는 농업경영체 성과 기반 정책평가, 농업경영체 성과 보상체계 도입,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 또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 유형화는 각 유형에 따라 신청가능한 모든 농림사업들을 메뉴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농림사업이 각각의 경영체 유형 중 어떤 유형들이 신청가능한지를 매칭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임. 이는 신규로 설계되는 농정 프로그램들에도 적용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가장 큰 차별성은 다른 어떤 DB/통계와 달리 개별 경영체의 재배작물(사육가축)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임. 이 정보(품목 재배면적, 가축 사육두수)가 특히 갱신이 지연되기에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이 정보의 현행화가 개선될 경우 그 정책적 활용도와 가치는 다른 어떤 DB/통계보다 클 것임.
 - 품목(축종)별 재배면적과 사육두수 정보가 모든 경영체별로 등록되어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취합될 경우, 개별 품목의 수급 예측, 가격 전망 등의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할 수 있음.
 - 품목에 따라서는(특히 밭작물) 갱신(현행화)의 한계가 분명 존재함에도 수급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전수조사 자료를 산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DB의 시계열적 변화를 토대로 현시점의 표본조사 등과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그 효용성은 충분할 것으로 기대됨.
 - 수급 및 가격 전망 기초자료로서의 효용이 충분하다고 입증될 경우, 오히려 갱신 주기를 단축해야 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단, 농업인에게는 잦은 정보제공의 댓가를 제공해야 함.

- 이외에도 공간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계할 경우, 전국단위 외에도 지자체단위 농업구조, 농지이용, 작물재배(축종사육)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소멸 대응, 농지 등 농업자산의 보전, 지역농정의 설계와 집행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2.1. 연구 내용	4
2.2. 연구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제2장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현황과 과제

1. 맞춤형 농정 추진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도입	15
1.1. 맞춤형 농정의 추진 배경과 개념	15
1.2. 맞춤형 농정의 추진원칙과 추진체계	16
1.3.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도입	17
2.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추진 경과와 현황	20
3.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문제점과 개선과제	25
4.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개편방향	30
4.1.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개념 재정립	30
4.2. '농업융복합경영체(가칭)' 신설	32
4.3. 농지대장,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의 연계	34
4.4. 세제기반 농업정보 구축: 중장기 발전방향	39
4.5. 농업경영체 유형화와 등록정보 차등화	41

제3장 농업경영체 유형화 사례

1. 농가경제이론 기반 유형화 기준변수 선정 사례	44
2. 농가데이터 활용 군집분석 기반 유형화	49
2.1. 농가경제조사 활용 농가 유형화 사례(김수석 외, 2006)	49
2.2. 유형 구분을 위한 임계점(Cutoff values) 기준 설정 사례	51
3. 2016년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	54
4. 국내 선행연구 농가 유형화 사례	57
5. 미국 사례	60
5.1. 2000년대 ERS 유형화	61
5.2. 2010년대 ERS 유형화	62
4.3. 미국의 농업경영체 지원	65
6. EU 사례	66
6.1. EU의 농업경영체	66
6.2. EU의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69
6.3. 독일의 농업경영체	72
6.4. 프랑스의 농업인 정의 개정	73
7. 일본 사례	76
8. 주요 정책수단의 농업경영체 구분	78
8.1.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	78
8.2.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	83

제4장 농업경영체 유형화 방안

1. 농업경영체 유형화의 기본방향	86
1.1. 중장기 농정방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형화	86

1.2. 맞춤형 농정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	89
1.3.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유형화	91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 기반 경영체 유형 구분	94
2.1. 개요	94
2.2. 농업경영체 유형화	96
2.3. 주요 특성별 농업경영체의 분포	120
3. 농가경제조사 DB 기반 농가 유형 구분	143
3.1. 개요	143
3.2. 식량 농가 경영 특성 현황	147
3.3. 원예 농가 경영 특성 현황	153
3.4. 축산 농가 경영 특성 현황	159
4. 농업총조사 DB 기반 농가 유형 구분	164
4.1. 개요	164
4.2. 식량 농가 특성	167
4.3. 원예 농가 특성	170
4.4. 축산 농가 특성	172
5. 주요 농정수단 반영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175
5.1. 공익직불제 식별 기준 활용	175
5.2. 농업인의 「진입-성장-은퇴」 성장단계 고려	177
5.3. 핵심농정 기반 농업경영체 유형화 방안	179
6. 소결	182

제5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차등화 방안

1. 개요	192
2. 차등화 방안	194

2.1. 현행정보 간소화	195
2.2. 종사자와 매출액 정보의 추가 요구	205

제6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활용 방안

1. 등록정보 관리방안	209
1.1. 신규등록	210
1.2. 갱신(현행화)	213
1.3. 현지조사	214
1.4. 말소	216
2. 등록정보 활용방안	216
2.1. 농업경영체 유형화에 따른 등록정보 활용방안	218
2.2. 등록정보 차등화로 확보한 추가 정보 활용방안	219

참고문헌

.....	221
-------	-----

표목차

표 1-1. 농업경영체 등록 항목	5
표 2-1. 초기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	17
표 2-2. 농업경영체(개인)와 농가 및 농가인구 비교	22
표 2-3. 시도별 농업경영체 수와 농가 수 변화	23
표 2-4. 정책지향목표에 따른 연계사업 분류	24
표 2-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지대장 및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의 비교	38
표 3-1. 농가 의사결정 변수에 대응하는 ARMS 변수	47
표 3-2. Briggeman et al.(2006, 2007)의 6개 농가 유형별 특징	48
표 3-3. 김수석 외(2006)의 농가 특성 변수	49
표 3-4. 김수석 외(2006)의 6개 농가 유형별 특징	50
표 3-5. 2000년대 ERS 농가 유형화	61
표 3-6. 2010년대 ERS 농가 유형화	63
표 3-7. EU의 농업경영체 기준	66
표 3-8. EU 농업경영체의 경제규모 계층	71
표 3-9.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요건	79
표 3-10. 소농직불금의 농가 지급요건 및 기준	81
표 3-11. 농민수당 지급 현황(광역자치단체 기준)	82
표 3-12. 축산법과 허가·신고제에 따른 축종별 사육규모 분류기준	84
표 3-13. 한육우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84
표 3-14.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85

표 4-1.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농업경영체 수	97
표 4-2.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모집단과 표본의 평균 및 분산	98
표 4-3. 노지 경종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101
표 4-4.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102
표 4-5. 노지 및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104
표 4-6. 노지 경축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107
표 4-7.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109
표 4-8. 노지 및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110
표 4-9. 축산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113
표 4-10. 연령대별 전체 농업경영체의 분포표	120
표 4-11. 재배면적별 전체 농업경영체의 분포	121
표 4-12. 연령대별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122
표 4-13. 재배면적별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123
표 4-14. 연령대 및 논 재배면적별 논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124
표 4-15. 연령대 및 밭(노지) 재배면적별 밭(노지)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126
표 4-16. 연령대 및 시설 재배면적별 시설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128
표 4-17. 재배면적 규모별 농업경영체의 작물재배(논, 밭, 시설) 면적 비율	130
표 4-18. 연령대별 가축사육 농업경영체의 분포	131
표 4-19. 연령대 및 축산업 허가제 기준(소, 돼지, 닭, 오리)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분포	132
표 4-20. 연령대 및 축산업 허가제 기준에 따른 소 사육 농업경영체의 분포	133
표 4-21. 연령대 및 축산업 허가제 기준에 따른 돼지 사육 농업경영체의 분포	134
표 4-22. 연령대 및 축산업 허가제 기준에 따른 닭 사육 농업경영체의 분포	135
표 4-23. 연령대 및 축산업 허가제 기준에 따른 오리 사육 농업경영체의 분포	136
표 4-24. 가축사육 규모별 농업경영체의 사육 마릿수 비율	137
표 4-25. 연령대 및 재배면적별 미곡류 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138

표 4-26. 연령대 및 재배면적별 조미채소류 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140
표 4-27. 재배면적 규모별 농업경영체의 미곡 및 조미채소류 면적 비율	142
표 4-28. 분석에 활용된 영농 형태별 농가 수	144
표 4-29.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 수 비중: 식량 농가	145
표 4-30.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 수 비중: 원예 농가	145
표 4-31.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 수 비중: 축산 농가	145
표 4-32. 연령별 농가 수 비중	146
표 4-33.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업수입: 식량 농가	147
표 4-34.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업수입: 식량 농가	148
표 4-35.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고정자산: 식량 농가	148
표 4-36.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고정자산: 식량 농가	149
표 4-37.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 식량 농가	149
표 4-38.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 식량 농가	150
표 4-39.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외소득: 식량 농가	150
표 4-40.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외소득: 식량 농가	151
표 4-41. 농지면적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점유비중: 식량 농가	152
표 4-42. 연령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점유비중: 식량 농가	152
표 4-43.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업수입: 원예 농가	153
표 4-44.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업수입: 원예 농가	154
표 4-45.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고정자산: 원예 농가	154
표 4-46.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고정자산: 원예 농가	155
표 4-47.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 원예 농가	155
표 4-48.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 원예 농가	156
표 4-49.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외소득: 원예 농가	156
표 4-50.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외소득: 원예 농가	157

표 4-51. 농지면적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점유비중: 원예 농가	158
표 4-52. 연령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점유비중: 원예 농가	158
표 4-53. 농업수입 기준 유형별 고정자산: 축산 농가	159
표 4-54.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고정자산: 축산 농가	160
표 4-55. 농업수입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 축산 농가	160
표 4-56.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 축산 농가	161
표 4-57. 농업수입 기준 유형별 농외소득: 축산 농가	161
표 4-58.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외소득: 축산 농가	162
표 4-59. 농지면적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점유비중: 축산 농가	163
표 4-60. 연령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점유비중: 축산 농가	163
표 4-61. 영농형태별 농가 수	164
표 4-62. 경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 수 비중: 식량 농가	165
표 4-63. 경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 수 비중: 원예 농가	166
표 4-64. 판매액 기준 유형별 농가 수 비중: 축산 농가	167
표 4-65. 경지면적 규모별·연령별 농가 수 비중: 식량 농가	167
표 4-66. 경지면적 규모별·영농경력별 농가 수 비중: 식량 농가	168
표 4-67. 경지면적 규모별·농외수입 비중별 농가 수 비중: 식량 농가	169
표 4-68. 경지면적 규모별·판매규모별 농가 수 비중: 식량 농가	169
표 4-69. 경지면적 규모별·연령별 농가 수 비중: 원예 농가	170
표 4-70. 경지면적 규모별·영농경력별 농가 수 비중: 원예 농가	171
표 4-71. 경지면적 규모별·농외수입 비중별 농가 수 비중: 원예 농가	171
표 4-72. 경지면적 규모별·판매규모별 농가 수 비중: 원예 농가	172
표 4-73. 판매 규모별·연령별 농가 수 비중: 축산 농가	173
표 4-74. 판매 규모별·영농경력별 농가 수 비중: 축산 농가	174
표 4-75. 판매 규모별·농외수입 비중별 농가 수 비중: 축산 농가	174

표 4-76.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경지면적에 따른 지급단가 변화	175
표 4-77.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현황	176
표 4-78. 농식품 분야 청년농 지원사업 현황	177
표 4-79. 농업경영체 DB 기반 15가지 세부 영농형태별 유형	185
표 5-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 (개인 경영체)	192
표 5-2. 영농형태 유형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차등화 방안	195
표 5-3. 응답자가 생각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항목의 필요성	196
표 5-4.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198
표 5-5. 통계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작물 분류 비교	199
표 5-6. 농지면적별 농업수입 점유비중	200
표 5-7.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수	206
표 5-8. 연령별 농가 수	206
표 5-9. 판매처별 농업인 매출 증빙 서류	208
표 6-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 가능한 공공기관 자료	215
표 6-2. 농림사업에서 농업경영체 유형화 활용 예시	219

그림목차

그림 1-1. 농업경영체와 농가 수 추이	2
그림 2-1. 1인 농업경영체 증가 추이(좌)와 구성원수별 농업경영체 비중(우)	22
그림 2-2.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개념의 분리(안)	33
그림 2-3. 현행 세법상 농업인의 소득과세	39
그림 2-4.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내용	41
그림 3-1. k 평균 군집분석 및 PAM을 활용한 HDI 임계점 기준 설정	53
그림 3-2.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목표 및 과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55
그림 3-3. 개별 농가경영체 유형 분류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56
그림 3-4. EU의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실제 농업인' 판단 절차	69
그림 3-5.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단가	81
그림 4-1.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	87
그림 4-2. 유형화 개요도	96
그림 4-3. 경종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덴드로그램	100
그림 4-4. 경축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덴드로그램	105
그림 4-5. 축산 농업경영체 덴드로그램	112
그림 4-6. 전체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121
그림 4-7. 작물재배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123
그림 4-8. 연령대 및 논 재배면적별 논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3차원 그래프) ..	125

그림 4-9. 논 작물재배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125
그림 4-10. 연령대 및 밭(노지) 재배면적별 밭(노지)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3차원 그래프) ..	127
그림 4-11. 밭(노지) 작물재배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127
그림 4-12. 연령대 및 시설 재배면적별 시설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3차원 그래프) ..	129
그림 4-13. 시설 작물재배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129
그림 4-14. 가축사육 농업경영체 연령의 커널 밀도	131
그림 4-15. 연령대 및 축산업 허가제 기준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분포(3차원 그래프) ..	132
그림 4-16. 소 사육 농업경영체 연령 및 사육수량의 커널 밀도	133
그림 4-17. 돼지 사육 농업경영체 연령 및 사육수량의 커널 밀도	134
그림 4-18. 닭 사육 농업경영체 연령 및 사육수량의 커널 밀도	135
그림 4-19. 오리사육 농업경영체 연령 및 사육수량의 커널 밀도	136
그림 4-20. 연령대 및 재배면적별 미곡류 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3차원 그래프) ..	139
그림 4-21. 미곡류 재배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139
그림 4-22. 연령대 및 재배면적별 조미채소류 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3차원 그래프) ..	141
그림 4-23. 조미채소류 재배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141
그림 4-24. 공익직불금의 농지면적과 농외소득 기준 농업인 유형화	179
그림 4-25. 농업인과 농업경영체(농가경영체) 개념 조정과 유형화	180
그림 4-26. 농업인 성장단계에 따른 유형화(청창농 지원 및 은퇴직불제 연령 기준) ..	181
그림 4-27. 농업경영체 DB 기반 영농형태별 대분류 및 세부 유형화	184
그림 4-28. 논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논 재배면적)별 세부 유형화	186
그림 4-29. 영농형태 유형별 영농규모 기준 유형 구분	187
그림 4-30. 영농규모별 농외소득 3,700만 원 기준에 따른 유형 구분	189
그림 4-31. 경영주 연령/영농경력에 따른 농업경영체 발전단계 구분	190
 그림 5-1.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동의서	 201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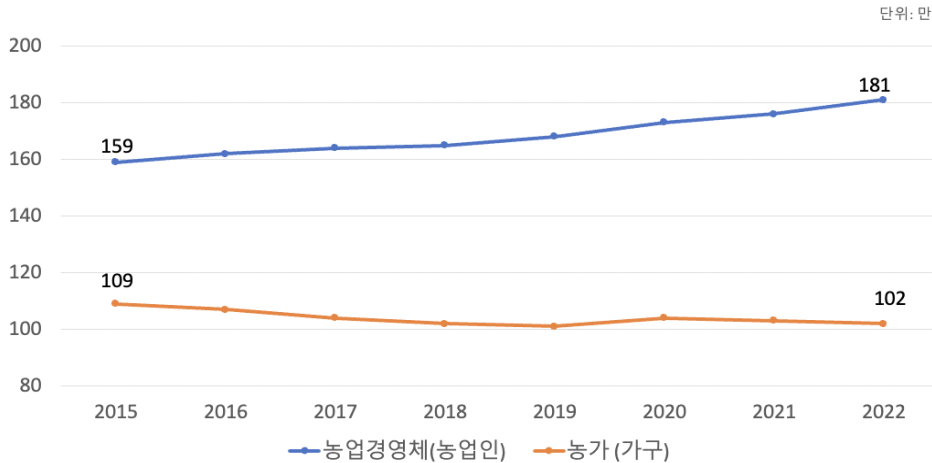
○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는 농업경영체의 인구학적·경제적 특성과 영농 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2008년에 도입되었고, 다음 해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 제정(2009.10.2.) 되었으며, 같은 법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용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법인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사업(농림사업) 외에도 중앙정부 타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부여받거나 세제감면, 저리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짐.

○ 농업인에 대한 경제적 유인(Incentive) 제공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된 정책사업과 지원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빠르게 늘어남. 실제로 개인 농업경영체는 2015년 159만 개에서 2022년 181.1만 개로 13.9% 증가했음.

- 그러나 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업무편람에 따라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됨에 따라, 정작 실경작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등록이 거부되는 사례도 다수 보고됨.
- 반대로 제도적 허점이나 법규정의 미비를 이용해, 정책자금 수령이나 세제감면 등을 꾀하는 비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증가했을 수 있고, 경영체별로 주어진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세대분리 등록이나 필지분할 등록도 증가했을 수 있음.

〈그림 1-1〉 농업경영체와 농가 수 추이



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는 각각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상이한 정보를 제공한다.¹⁾

자료: AgriX, 통계청.

○ 최근 농업경영체의 명문화된 등록기준과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목표로 「농어업경영체법」이 일부 개정(2023.8.16.)되었는데, 여기에는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과 농어업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됨.

-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구체적인 직권말소 사유 규정, 거짓·부정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 및 벌칙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됨.

○ 따라서, 금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적되어 온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제도적 한계점이나 현실적 제약사

¹⁾ 농업경영체는 농업의 구조적 문제,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통계청은 농림어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표본조사와 같은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농가 수를 집계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등록 단위는 단일 농업경영하에서 농업 생산을 하는 경제단위인 '경영체'인 반면,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가'를 전수조사하여 집계됨.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에 따르면 농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임.

항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이를 위해서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의 운영 현황과 농업경영정보의 관리 및 활용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함.
- 다음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농정 구현 및 지방농정 지원과 같은 당초 도입 취지 및 중장기 농정방향과 부합하게끔 현재 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등록정보가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경영체를 유형화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유형별로 등록해야 하는 경영정보의 범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농업경영체 유형화 및 등록정보 차등화는 농업경영체 유형별로 지원가능한 연계사업의 매칭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계사업의 지원 자격 및 요건도 이에 맞추어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정방향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농업경영체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차등화하여 수집·관리·활용(농업정책과의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이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이루어진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의 개선성과를 평가하고, 남아있는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며,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여건과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농업경영체의 유형화 방안과 이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운영 현황과 등록정보 관리·활용 실태 파악

- 유형별 농업경영체 추이 분석 및 전망
-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와 등록업무 추진 프로세스 등 전반적인 등록정보 관리시스템 점검
 - ▶ 신청·접수 → 확인(공공기관의 자료이용 및 현지조사) → 등록·통보 → 등록확인서 발급
-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2023.8.16., 시행 2024.2.17.)이 등록제도 운영 및 등록정보 관리·활용에 미치는 파급효과 검토

○ 농업경영정보 항목별 정확도와 활용도 진단 및 개선방향 검토

- 농업경영정보 수집 항목(등록 항목)의 적절성 검토
 - ▶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주소 등 일반현황, 농지 및 농작물, 가축 등 재배정보, 생산 및 유통 등 농업인 54개 항목(농업법인은 여기에 10개 항목 추가 등록)
-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 시, 등록정보의 활용도 및 신뢰도 분석
- 중장기 농정방향과 부합하는 등록정보 수집범위 모색
- 연계사업·제도 활용도 측면에서 등록정보의 관리실태와 문제점, 개선과제 등 진단

〈표 1-1〉 농업경영체 등록 항목

구 분		항목(개)	세부내용
일반현황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경영주, 경영주의 농업인 등 인적사항, 영농이력, 공동경영주 여부 등 • (농업법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구성원, 출자규모 등 일반현황
농지 및 농작물 재배/ 보조금 신청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재지, 농지면적, 시설현황, 품목별 재배면적 등 • 보조금 신청인, 신청면적 등
가족·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사육품목, 사육규모 등
농업법인만 해당	농산물 생산·유통 및 가공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등 • 가공대상 품목 및 품목별 판매량 등
	소득·자산·부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 농업외 소득, 자산, 부채 등
기타 (연계정보)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조·융자금, 친환경 인증,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업무 편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 유형화 및 등록정보 차등화 관리방안 모색

- 농업경영체 특성 및 규모 등에 따라 유형화 분석
 - ▶ 농업경영체 유형화 기준 및 범위 설정
 - ▶ 농업경영체 유형화에 따른 특성 분석
 - ▶ 농업경영체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유형화 모색
 - ▶ 농업정책 대상 유형화에 따른 차등화 관리 사례 검토
 - ▶ 국내외 유사 사례조사 및 시사점 제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차등화 관리방안 제시
 - ▶ 농업경영체 유형별에 따른 수집정보 수준 및 범위 설정
 - ▶ 농업경영체 유형별 효율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방안 모색
 - ▶ 농업경영체 유형별 등록정보 차등화 관련 제도적 과제 검토
- 농업경영체 유형화 및 등록정보의 차등화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 ▶ 농업경영체 유형화 및 정책활용 범위 등에 의견수렴

○ 법률 개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관리 고도화 개선방안 제시

- 농업경영체 유형별 등록정보 차등화와 정책대상 식별 연계방안
- 데이터 기반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등록정보 관리·활용 개선방안
 - ▶ 농업경영체 유형별 정보 등록 및 현행화 방안
 - ▶ 농업경영체 유형별 등록정보 관리·활용 및 환류 방안
- 농업경영체 유형별 등록정보 차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기타 등록정보 차등화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2.2. 연구 방법

○ 선행연구 등 국내외 관련 문헌조사

-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및 등록정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관련 연구
- 농업인 유형화와 정책연계, 정보 차등관리 관련 국내외 사례연구

○ 통계자료 분석

- 농업경영체 등록실태 분석(농업경영체 DB 원자료 활용)
- 2018년 이후 농업경영체 패널데이터 구축해 유형화 모의실험 실시
 - ▶ 농업경영체 패널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개별 경영체별 시계열적 변화를 추적하고 어떠한 요인들(농업경영체 특성, 지역이나 정책 등 외부환경의 영향 포함)이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인지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실증분석이 가능
- 농업경영체/농가 유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농가경제조사 원자료(2018-2022 패널), 2020년 농어업총조사 원자료 활용

○ 농업정책 대상 유형화에 따른 차등화 관리 사례(국내외 유사 사례)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가능성 검토 및 시사점 제시

- 국내 전업농, 후계농업인, 청년창업농, 소농직불금(기본형 공익직불제), 소상공인 확인서 등 특정 정책대상 육성 사례조사
 - ▶ 비농업부문의 사례로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정보를 이용하여, 창업·성장·도약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자가 소상공인 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증명하는 서류이며,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제도로 확인서 내에 업종 정보, 매출액 정보, 상시근로자 정보, 업체 형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음.
- EU, 미국, 일본, 독일 등의 농업경영체 유형화 사례조사
 - ▶ 예를 들어, EU는 2014년 공동농업정책에서, 기존 단일직불제를 기본직불제(Basic Payment Scheme)로 전환하면서, 녹색직불제(Greening Payments)를 도입했으며,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농 직불제(Small Farmers Scheme), 청년 농업인 직불제(Young Farmers Scheme), 자연조건 제약 지역 직불제(Areas facing natural or specific constraints: ANC) 등을 신설한 바 있음.
 - ▶ 미국은 2000년대 초반 농가소득 등 몇 가지 기준을 활용하여 전체 농가를 다음의 8개로 유형화함(Womach, 2005); Limited resource farms, Retirement farms, Residential/lifestyle farms, Farming occupation/lower sales, Farming occupation/high sales, Large family farms, Very large family farms, and Nonfamily farms(8번째 비가족농 유형은 Rural residence farms, Intermediate farms, and Commercial farms로 다시 유형화함).
 - ▶ 일본 농림수산성은 효율적·안정적인 농업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자 1993년에 ‘농업 경영 개선 계획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인정농업자를 선정·지원하고 있음. 또한, 신규 취농자를 지역 농업의 전업농(担い手)²⁾으로 육

²⁾ 전업농은 ① 인정농업자, ② 기본구상의 수준에 도달한 농가(인정농업자로 지정받지 못한 농가 중에서 시정촌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농업 경영지표에 도달한 농업인), ③ 마을영농(마을농지의 3분의 2 이상을 임차 또는 작업수탁을 하면서 공동판매 경리를 행하는 임의조직) 등을 포함(김태곤·유찬희, 2019)

성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인정 신규 취농자 제도를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으로 규정하고 인정농업자 제도와 마찬가지로 시정촌의 인증 및 관리하에 지원됨.

- ▶ 독일의 농업경영체는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농업경영체를 다른 사업경영체와 조세행정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임. 일반적으로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는 이를 인정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반면에,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는 임의등록 절차를 따름. 하지만 임의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 등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농업경영체들은 지원법상의 등록제에도 등록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 유형화 및 등록정보 차등화를 위한 전문가 대상 계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

- AHP는 복잡한 문제나 대상을 계층적으로 분해하여 각 요소 간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농업경영체의 유형화 기준 설정에 있어, 각 기준의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정량적 분석을 통한 농업경영체 유형화 방안 모색

- 농업경영체 또는 농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성분분석, 랜덤포레스트와 같은 머신러닝 기법, 군집분석(Latent Class Analysis 포함)등의 방법론을 적용
- 농업경영체 DB(AgriX)에 수록된 경영체 주소 및 영농이력 등 현황 정보, 재배면적 및 판매량 등 경영 정보, 정부보조금 및 친환경 인증 등 연계 정보를 직접 활용해 정량적으로 농업경영체 유형화 시뮬레이션을 실시
- 소득 및 자산 정보가 포함된 농가경제조사 원자료(2018-2022 패널)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농업경영체 유형화 시뮬레이션도 가능
 - ▶ 주성분분석은 다수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변수들이 지니고 있는 핵심 특성을 추출하는 차원 축소 기법으로, 농업경영체 DB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를

소수의 핵심적이며 독립적인 변수로 축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 랜덤포레스트는 다수의 결정트리를 통해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하는 머신러닝의 앙상블 기법 중 하나로, 특정 변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와 그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경영체를 규모나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고자 할 때, 유형화에 적합한 변수를 식별하는 데 효과적임.
- ▶ 군집분석은 개체들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그룹화하는 기법으로, 덴드로그램을 활용해 최적의 군집 수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유형화가 진행되지 않은 대상을 유형화할 때 특히 유용하며, 주성분분석, AHP, 랜덤포레스트의 결과와 함께 사용하면 분류 대상의 보다 체계적인 유형화에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함.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2008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등록제도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와 등록정보의 범위와 정확도 제고, 등록정보 활용 활성화 등의 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다수 진행됨.
-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DB)는 도입 당시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는 행정자료로 출발하면서 엄밀한 의미에서 통계 DB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경영체 DB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함.
- 더욱이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의 농가 수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경영체 수의 격차로 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됨.
- 통계청 조사의 농가와 농업인구는 매년 감소하는데 반해 농업경영체 DB의 농업경영체와 농업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농가와 농업경영체의 정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한 상황임.

- 최근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겪으면서 농업경영체와 농지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김수석 외(2011), 김수석 외(2013), 김정호·최은아(2015), 김관수 외(2019), 김정호·이경해(2020), 문한필 외(2022), 유찬희 외(2022a), 유찬희 외(2022b) 등이 있음.

- 김수석 외(2011)과 김수석 외(2013)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 농업경영체 단위 정보가 정책사업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통합정보시스템(Agrix) 구축,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림사업의 단계적 연계(정보 획득의 용이성 및 정보의 신뢰성 기준), 등록제를 활용한 농업경영체의 자격 및 인증기준 정립, 등록정보의 체계적 활용도 확대 등을 제시함.
- 김정호·최은아(2015)는 맞춤형 농정의 흐름 속에서 농업경영체 유형에 맞추어 경영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역할에 주목함. 신지식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 및 DB 인식을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농업경영체 등록제 및 DB 관리·활용 개선방안을 제안함. 김정호·이경해(2020)는 김정호·최은아(2015)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자율등록에 따른 신고누락 문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신뢰성 저하, 상시 관리 및 현행화 미흡, DB 구축과 활용의 한계를 개선과제로 제시함.
- 김관수 외(2019)는 경영체 등록을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나 개별 정책사업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없어, 개별 사업과 수령자 매칭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함. 동시에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 부여하는 번호로는 개별 농업인의 보조금 수령 실적이나 종류 등을 심층분석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함. 이외에도 농업경영체 DB와 지자체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동되기 어렵고, 농업경영체 DB 자체를 적시에 현행화하기 어려운 점도 한계로 지목함. 이에 기존 인식번호 부여 사례를 다양하게 검토하여 고유식별번호 도입방안을 제안함.

- 문한필 외(2022)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정의를 분리하고 농업경영체만의 물적요건을 재설정하는 등록제도 개편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유명무실한 공동경영주의 등록과 최근 분리독립한 1인 경영체들의 재통합을 유인하는 방안으로 농업노동시간을 활용해 실효 공동경영주 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제안함. 이외에도 기존에 등록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실경작 농업인의 법적 권원을 마련하거나 물적요건을 추가하는 대안과 ‘자경’ 개념을 준용하여 ‘실경작 농업인’을 새로이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함. 또한, 비농업인의 등록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 진입장벽 강화,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적발, 제재 강화를 제시하고, 농업경영체 부정등록 방지를 위한 지능형 AI 시스템과 농업 관련 범부처 정보들을 통합·연계한 실경작 검증방안을 모색함.
- 유찬희 외(2022a)는 의무와 권리 측면에서 농업경영체가 농정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속력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시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책대상 농업인과 농업경영체’를 식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판단함.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임의등록제 방식에서 의무등록제로 점진적으로 전환, 정책대상이 아닌 농업인과 농업경영체를 분류하기 위해 농지대장 등을 교차검증하는 방안, 경영주 외 농업인 지위를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김수석(2013), 김정호·최은아(2015), 김한호 외(2015), 한석호 외(2016), 문한필 외(2022), 유찬희 외(2022a), 유찬희 외(2022b) 등이 있음.

- 김수석(2013)은 연구 당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간평가를 통해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를 재검토하고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향후 등록제의 방향을 재설정 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시스템을 참고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김정호·최은아(2015)는 농업경영체 관리 실태 파악과 함께 문헌조사와 현지 사례조사를 통해 농업경영지원제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농업인의 의견조사와 전

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농업경영체 DB 구축 및 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함.

- 김한호 외(2015)는 농업경영체 DB 자료 중 농가소득(이전소득 제외)과 자체적으로 고안한 전업화·전문화 지수를 이용하여 농가를 4개 유형(고소득 전업, 저소득 전업, 고소득 겸업, 저소득 겸업)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농가의 특성을 비교해 기간(基幹)농가로 육성, 소득안정 정책 강화, 6차 산업화 촉진 등의 방향을 제시함.
- 한석호 외(2016)는 농업경영체 DB 운용 및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유사한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국내외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비교·분석함. 이와 함께 문헌조사와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의 기초를 분석하고, 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관리·활용방안을 논의하고 등록 과정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다각화하면서 농관원과 지자체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과 DB 자료를 구축할 때 내검(內檢)과 사후관리를 체계화하여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제안함.
- 문한필 외(2022)는 등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등록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총괄 컨트롤타워 보강, 민원전담부서 신설, 공무원과 공무원직 간 명확한 업무분장, 불필요한 업무 해소, 현행화 기간의 유연화, 등록제도 관련 교육·홍보 강화를 제시함.
- 유찬희 외(2022b)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직권말소 단계별로 농관원 실무담당자가 느끼는 업무상 어려움을 질적·양적 방식으로 진단하고, 악성 민원 대응이 전체 등록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임을 파악한 다음, 해결과제로서 '특별민원 대응팀' 신설, 등록정보 간소화, 등록업무 담당자와 농업인 대상 홍보와 교육 강화, Agrix 시스템 개선, 현지조사 단계에서 위성정보 활용도 제고 등을 제안함.

○ 농업경영체의 정의와 유형화 등에 관한 최근 연구는 임소영 외(2020), 강마야 외(2020), 이명현(2021), 문한필 외(2022)등이 있음.

- 임소영 외(2020)는 우리나라와 일본·미국·유럽·대만의 농업인, 농가 및 농업경영체 규정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 2,51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우편) 농업인 설문조사 및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282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농가 및 농업인

의 정의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함.

- 강마야 외(2020)는 서로 다른 뜻을 내포하는 ‘농업경영체’ (행정), ‘농가’ 및 ‘농가 인구’(통계), ‘농업인’(법률), ‘농민’(헌법 및 현실)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지적하고, 농업인 또는 농민을 정의할 때는 농업 및 농촌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농민’ 개념을 별도로 설정하고 이 중 경제활동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한 이를 농업인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농민과 농업인 정의를 「농어업식품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층위를 두고 담는 방안을 제안함. 또한, 농업인과 농민의 개념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결과적 측면을 제시하고, 특히, 법률 및 정책 검토를 통해 느슨한 농업인 정의 및 증명 가능한 인증(농지) 기준이 비농업인이 악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진단함.
- 이명현(2021)은 EU와 스위스의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의, 농업구조통계, 직접지불제 수급조건을 살펴보고 농업인 규정으로 ① 경제적 독립성, 단일성 개념, ② 농산물 생산활동 이외 농업자원의 보존 개념 반영, ③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농지를 최대한 포괄하는 개념을 제시함.
- 문한필 외(2022)는 농업경영체의 물적 요건을 현행 농업인의 물적 요건(1000㎡ 이상 농지)보다 상향조정하는 것과 기존의 토지 외에도 농업생산에 활용되는 건물이나 기계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표준영농규모로 환산하는 것도 가능)하고, 농업경영체를 ‘일반 농업경영체’와 ‘전문 농업경영체’로 분리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 경우 전문 농업경영체에 한하여 의무등록제로 전환이 가능하고, 전문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등록정보의 고도화와 선진 농정수단 도입도 추진될 수 있다고 봄.

○ 미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Womach(2005)에 따르면 2000년대 미국의 초반 농가소득 등 몇 가지 기준을 활용하여 전체 농가를 다음의 8개로 유형화하여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에는 물가 상승, 대농 수 증가 등 변화에 따라 8개 농가 유형의 농가소득 기준이 갱신됨(USDA ERS, 2013).

- Limited resource farms, Retirement farms, Residential/lifestyle farms, Farming occupation/lower sales, Farming occupation/high sales, Large

family farms, Very large family farms, and Nonfamily farms(8번째 비가족농 유형은 Rural residence farms, Intermediate farms, and Commercial farms 로 다시 유형화함).

- 한편, USDA ERS 연구자와 대학교수들이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경영주(principal operator)와 배우자가 농업(farming)과 비농업(off-farm) 작업(work)에 대해 노동 시간을 어떻게 할당하느냐에 따라서 농가를 Single Income Ruralpolitan, Double Income Ruralpolitan, Active Seniors, Farm Operator with Spouse Working Off Farm, Traditional Farms, Commercial Farms 등 6개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Briggeman et al., 2007).

○ 본 연구에서는 농정 기조가 맞춤형 농정에서 (직불제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 되었으나, 농정방향 전환에 대응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다는 목적 하에서 아래와 같은 단계로 세부과제를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 그리고 실제 농업경영체 원자료를 가지고 유형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향후 농정에서 경영체 등록정보가 어떠한 위상으로 자리매김하여 어떠한 기능을 담당할 지를 재검토한 다음, 2) 앞으로 필요한 농업경영정보가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3) 농업경영체를 어떠한 기준에서 유형화하며 이를 농림사업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그리고 4) 등록정보를 경영체 유형별로 어느 수준에서 차등화하며 어떻게 적시에 정확하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II.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현황과 과제

1. 맞춤형 농정 추진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도입

1.1. 맞춤형 농정의 추진 배경과 개념

- “맞춤형 농정”이란 정부가 정책 수혜자(농업경영체)의 유형별로 정책 프로그램을 메뉴 방식으로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가 스스로 발전 단계에 따라 정책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농정 추진방식임.
 - 농업인 개개인에게 정책을 맞춘다는 의미보다는 유형별로 차별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이를 농업인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의미임.
 - 농가 특성을 반영한 형태가 “농가 맞춤형”이며, 지역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으로 확장될 수 있음.
- 2000년대에 들어서 세계 농정은 가격지지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지불제 등의 정책을 확대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었음. 우리 정부도 직접지불제와 같은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 내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농가 유형별로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맞춤형 농정을 계획함.
 - 맞춤형 농정은 기존 농정이 품목 중심 경쟁력 제고의 일정 효과를 거두었으나 농가 단위의 구조조정에는 미흡하여 기존 농정 틀을 수정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었음.
- “맞춤형 농정”은 2000년대 초반 당시의 주요 정책수단(제도, 투융자)을 수요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정책의 만족도와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추진방식이었음.

- 맞춤형 농정의 추진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농업경영체의 유형 구분임. 이는 맞춤형 농정의 핵심이 농업경영체의 유형별로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농업경영체의 유형 구분이 필수적임.

1.2. 맞춤형 농정의 추진원칙과 추진체계

- 맞춤형 농정의 5가지 추진 원칙은 ① 목표의 명확성, ② 수단의 차별성, ③ 대상의 배타성, ④ 적용의 형평성, ⑤ 선택의 자율성이었음.
- 목표의 명확성: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단이나 방법이 구체화될 수 없으며, 시행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 수단의 차별성: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으로 나누어 정책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 효율성을 추구하는 산업정책과 형평성이 핵심인 복지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
- 대상의 배타성: 경영체 유형별로 배타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상충성과 중복성을 배제해야 함. 정책 프로그램이 배타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맞춤형 농정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며,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됨.
- 적용의 형평성: 정책 프로그램의 적용이 불균형하지 않도록 양적 또는 질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을 추구해야 함. 그동안 전업농의 산업정책 중심이었기 때문에 영세고령농가에 대한 방책이 미흡하며, 따라서 농정 차원의 복지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긴요함.
- 선택의 자율성: 농업인 스스로가 필요한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함. 정부의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수혜자인 농업인이 선택하는 자율성을 기본으로 해야 함.

○ 맞춤형 농정의 추진을 위해 농가등록제 실시, 농림사업시행지침의 개정, 정책자금 메뉴화, 행정조직 설치 등의 체계를 구상하였음.

〈표 2-1〉 초기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

구분	주요 내용
농가등록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등록사항으로 영농종사자, 경작지규모, 재배작목, 사육두수 등을 등록하게 해서 직불제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상세 등록사항으로 경영실적, 영농교육실적, 정책수혜실적 등을 등록하게 해서 그 밖의 농림사업의 데이터로 활용 ◆ 일차로 농가등록제를 시행한 후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었음.
농림사업시행지침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수요에 맞게 기존 정책사업을 조정 ◆ 여기서 농업지원정책, 농업인소득정책, 농촌복지정책 등 각종 정책사업을 분석하여 부족한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음.
정책자금 메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융자사업을 종합자금화하되, 자금의 성격에 따른 메뉴화로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었음. ◆ 영농시설자금(농지, 시설 등), 운영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구분 필요
행정조직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맞춤형 농정팀”을 구성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농정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 ◆ 지자체에 “맞춤형 농정 담당”을 설치하여 도와 시·군 단위로 맞춤형 농정의 집행기구 역할을 하도록 함.

자료: 저자 작성

1.3.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도입

○ 맞춤형 농정 추진 당시 농가 유형 분류는 아직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해 개념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책 시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음. 따라서, 농가의 현실과 맞춤형 농정 추진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농가 유형 분류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했음.

○ 당시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농식품부가 각각 다른 분류체계를 갖고 있었으며, 지금도 부처간 통일된 분류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적 정책을 위한 분류체계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음.
 - 통계청은 농업총조사에서는 전업농/겸업농 분류를 사용하고, 농업기본통계조사에서는 주업농/부업농/자급농 분류를 사용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음.
- 농식품부는 당시 「농업·농촌 기본법」에 따라 통계청의 분류와 별도로 정책적 육성대상으로서 전업농업인을 개념화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 유형화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았음.
- 첫째, 기존 전업농업인은 정책적 육성을 목적으로 설정된 개념으로 농가 유형별로 그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맞춤형 농정과와는 그 목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둘째, 전업농업인을 품목별로 접근하기 때문에 구분의 기준이 너무 많고 또한 지표로서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농가등록제(처음에는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아닌 농가등록제를 구상함) 도입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농가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영농 규모, 소득 등)이 제안됨.
- 맞춤형 농정의 기본원리는 농가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메뉴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농가들이 자신들의 처지에 상응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유형별로 개별 정책메뉴를 제시하는 것임.
- 먼저 품목별 전문성을 보여 주는 쌀전업농, 원예중소농, 축산전업농과 고령복합농에 대해서는 직불제 등 일반적인 농업정책을 적용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동시에 품목별 특성에 맞는 개별 지원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함.
- 고령복합농과 고령영세농에 대해서는 고령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영이양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메뉴를 제시함.

- 특히, 고령영세농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농으로서 사회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은퇴할 수 있는 은퇴 프로그램을 개발함.
- 부업농은 원칙적으로 직불제 등 농업생산 및 소득정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그러나 농촌인구를 유지하는 농촌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메뉴를 제공함.

○ 투입요소에 대한 지표로 기존의 경지규모 대신에 “환산영농규모지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이 지표는 경지 이외의 농업고정자본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얻은 값을 경지면적과 합쳐 농가의 영농규모로 파악하는 것임.

- 환산영농규모지표는 품목 구분 없이 농가별 종합적인 영농규모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존의 경지규모에 의한 분류보다 더 현실에 부합하는 분류지표가 될 수 있음.
- 특히 축산을 포함하는 복합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수단임.

○ 산출성가에 대한 지표로는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이 지표는 농가들의 영농 성과를 표준소득 형태로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농가를 유형화하는 것임.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에 의한 농가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절차가 차례로 이루어져야 함. 첫째, 단위당 품목별 표준소득을 산출함. 둘째, 품목별 표준소득을 근거로 개별 경영체의 표준소득을 산출함. 셋째, 일정 크기의 경영체 표준소득을 영농규모의 단위로 나타내고, 영농규모 단위의 크기에 따라 농가를 계층적으로 구분함.

○ 또한, 농업소득과 연령, 생산품목 등 농가들의 종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가를 유형화하는 군집분석 방식도 제안됨. 김수석 외(2006)에서 군집화된 6개 유형은 쌀 전업농, 원예 증소농, 축산전업농, 고령복합농, 고령영세농, 부업농임.

○ 한편, 1999년에 제정된 「농업·농촌 기본법」은 2008년에 「농어업식품기본법」으로 전

면 개정되었는데, 이때 시행령으로 정한 농업인 기준에는 1994년 「농지법」에 처음 규정한 경작 또는 사육 규모 기준을 유지하면서 농산물 연간 판매액 하한액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변경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을 추가함.

- 더욱이 2009년에 개정된 「농어업식품기본법」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함으로써 “경영”이라는 개념을 법률의 정의 규정에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도입함.

○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는 2006년부터 추진된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고자 2008년에 도입됨. 즉, 농업경영체의 인구학적·경제적 특성과 영농 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함.

-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전체 농가 약 123만 호 중 약 83만 호가 등록을 신청함(김관수 외, 2019).

○ 이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 2009년(10.2)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용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임의등록 방식으로 제도화됨.

- 「농어업식품기본법」 제40조도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을 명시

○ 2010년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규 및 변경 등록과 등록정보 확인을 담당하고 있음.

2.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추진 경과와 현황

○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음.

- 2013년 8월에 농업경영체 등록 DB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직불제 사업 통합 관리를 도모함(김관수 외, 2019).
- 2014년에는 등록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를 일제 현행화함.
- 2016년에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에서는 농업경영체를 연령, 영농경력 및 재배면적 등의 경영특성에 따라 6가지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농업인 지원방향을 제시함.
- 2020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변경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함(김정호·이경해, 2020).
- 2021년 2월에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³⁾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후 3년 이상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말소되도록 함.⁴⁾
- 2023년 8월에도 「농어업경영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과 농어업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함.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 조사 실시 근거, 구체적인 직권말소 사유 규정, 거짓·부정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 및 벌칙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됨.

○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된 정책사업과 지원제도가 늘어나면서, 각종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증가하는 추세임. 실제로 개인 농업경영체는 2015년 159만 개에서 2022년 181.1만 개로 13.9%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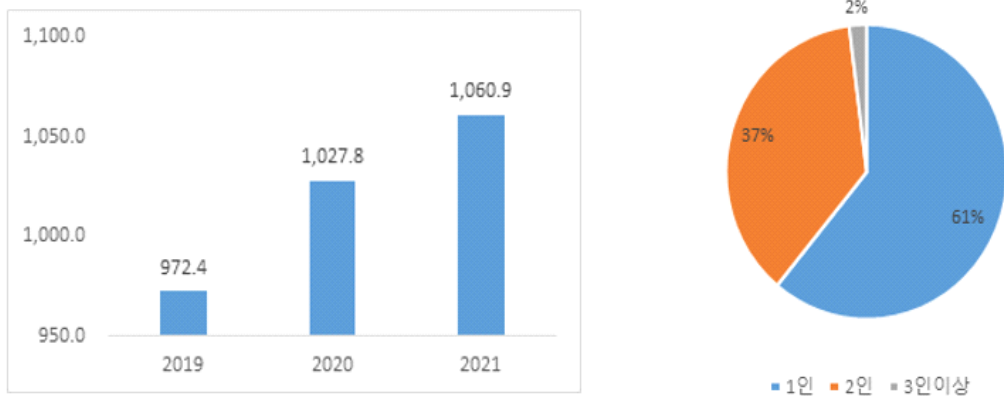
- 농업경영체 구성원인 농업인 수는 같은 기간 258만 명에서 255만 명으로 소폭 감소(-1.2%). 이렇게 전체 구성원은 감소했으나 개인 농업경영체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신규 또는 분리 등록을 통한 1인 농업경영체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시사함.
- 1인 농업경영체 수는 2019년 97.2만 개에서 2021년 106.1만 개로 약 8.9만 개가 늘

3) 제4조 제2항(“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을 신설

4) 같은 법 제6조의 2(등록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제3호에서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유효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 정보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함.

어났음. 2021년 기준 구성원 수별 농업경영체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1인 농업경영체의 비중은 61%에 달하지만, 3인 농업경영체의 비중은 2%에 불과함.

〈그림 2-1〉 1인 농업경영체 증가 추이(좌)와 구성원수별 농업경영체 비중(우)



자료: 비투엔(2022), 문한필 외(2022) 재인용.

○ 한편, 농업경영체와 자주 비교되는 농가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

-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농가와 농가인구 추이를 보면, 2015년 농가 수는 108.8만 가구에서 2022년 102.3만 가구로 6%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농가인구는 258.3만 명에서 247.9만 명으로 4% 감소함.

〈표 2-2〉 농업경영체(개인)와 농가 및 농가인구 비교

단위: 만 개/명/호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5년 대비 2022년 증가율(%)
개인 농업경영체	159	162	164	165	168	173	176	181	12.2
개인 농업경영체 구성원 수	258	255	247	244	245	248	251	255	-1.2
통계청 농가	109	107	104	102	101	104	103	102	-6.4
통계청 농가인구	257	250	242	231	224	231	222	217	-15.6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22.

〈표 2-3〉 시도별 농업경영체 수와 농가 수 변화

단위: 천 개/호

구분	2018		2020		2022		2018년 대비 2022년 증가율	
	경영체	농가	경영체	농가	경영체	농가	경영체(%)	농가(%)
전국	1,658	1021	1,730	1,035	1,811	1,023	8.4	0.2
서울	18	3	21	8	24	6	23.3	100.0
부산	19	7	20	12	22	11	12.2	57.1
대구	34	16	36	25	37	23	9.2	43.8
인천	23	11	24	13	25	12	9.3	9.1
광주	25	10	28	17	30	14	16.7	40.0
대전	22	9	23	13	24	11	9.2	22.2
울산	25	12	26	15	27	13	9.4	8.3
세종	11	6	12	7	13	6	15.8	0.0
경기	209	113	213	121	223	114	6.3	0.9
강원	102	68	106	67	110	67	7.3	-1.5
충북	107	71	111	66	116	72	7.5	1.4
충남	187	123	193	122	201	117	7.0	-4.9
전북	146	95	157	93	165	90	11.5	-5.3
전남	219	145	233	137	245	147	10.3	1.4
경북	261	176	268	166	281	170	7.1	-3.4
경남	199	123	205	121	213	120	6.6	-2.4
제주	50	31	53	30	54	30	6.6	-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griX;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22.

○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정보는 크게 정보제공과 농림정책 관련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통계서비스(농림사업정보시스템)를 통해 제공되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현재 농림사업 92개에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을 지원자격으로 설정한 농림사업들은 정책지향목표에 따라서 4분야(소득보전 및 복지후생, 품목 육성, 생산성 향상, 사회적 가치(환경, 식품안전 등) 증진)로 분류 가능(표 2-4 참조)

-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기준으로 92개 연계사업 중 소득보전 및 후생복지 지향 사업은 13개, 특정 품목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34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26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업은 21개로 분류됨.

〈표 2-4〉 정책지향목표에 따른 연계사업 분류

소득보전 및 복지후생 (13)	개인 시설 대상 (34)	생산성 향상 (26)	사회적 가치(환경, 식품안전) (21)
<p>기본형 공익직불(소농직불) 기본형 공익직불(면적직불) 피해보전직불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 업인안전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 기계종합보험) 농업자금이차보전 (농축산경영자금-재해 대책경영자금) 농업자금이차보전 (농업경영회생자금) 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영농도우미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p>	<p>전략작물직불금 지원 농업자금이차보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교육· 컨설팅)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시설· 장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다각화) 식량작물선도경영체교육훈련 가루쌀 생산단지조성(교육·컨설팅) 가루쌀 생산단지조성(시설·장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라이스컨소시엄 지원 채소가격안정지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과원규모화(과원임대사업) 과원규모화(과원임대차사업) 과수인공수분꽃가루생산 단지조성 저온유통체계구축(화훼류습식 유통)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녹차, 약용 등) 버섯배지관리센터사업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공동선별비지원 화훼유통개선지원 인삼계열화사업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 지원 산지유통활성화지원 과실브랜드 육성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 조직 육성(통합지침)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곤충산업화 지원 곤충유통사업지원 곤충사육시설현대화</p>	<p>농업자금이차보전 (농축산경영자금-농업경영자금) 농업자금이차보전 (농축산경영자금-축산경영자금) 농업자금이차보전 (농업종합자금-농축산 생산지원) 농업자금이차보전 (농업종합자금-가공산업 등 지원) 농업자금이차보전 (농업종합자금-농기계·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농업자금이차보전 (농업종합자금-농촌관광산업 지원) 토양개량제지원 맞춤형 농지지원 경영실습임대농장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보급, 컨설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 에너지시설)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유통시설현대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스마트팜 현장실습형 교육(직접교육비) 스마트팜 현장실습형 교육(해외연수)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농식품 ICT 융복합 촉진 농식품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 사업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가공·유통시설 및 주택)</p>	<p>친환경농업직접지불 친환경축산직접지불 경관보전직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꾸러미사업지원 직매장 지원 직거래장터지원 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축산 악취개선)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 자원화시설 마을형퇴비저장시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 자원화시설 개보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 자원화시설 신규) 축산물HACCP지원사업(축 산물 HACCP 컨설팅)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사업 식품판로지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유기농업자재 지원(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지원(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유기농업자재 지원(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가공·유통시설 및 주택)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p>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농업경영체가 증가하는 것은 전체 농업부문 관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사안이나, 농업경영체의 증가가 적절하지 않은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설계로 인한 것이라면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법」을 계기로 농업경영체가 농가를 대체함에 따라 농가는 더 이상 법률적 용어가 아닌 통계 용어로서 지위만을 가지게 됨. 그러나 가족농 체제 자체가 크게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가는 여전히 정책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음.
 - 농가의 경우, 물적 요소인 경지나 가축의 자경 또는 사육을 전제로 농업생산 단위를 가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인 반면, 현재의 농업경영체는 단순히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합집합으로 규정되어 있음.
 - 현행 제도 하에서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개념은 상호 모순된 측면이 있음. 가령, ‘농업법인 취업자’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지만, 단독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거나 농협조합원에 가입을 할 수 없으며 영농경력도 인정받지 못함. 이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와 ‘경영주의 농업인’을 구분하지 않고 법률상으로는 동등한 위치인 ‘농업인’이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모든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3.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문제점과 개선과제⁵⁾

- 먼저 농정 추진방식이 여전히 품목 중심이며, 전체적, 평균적 접근임. 맞춤형 농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세부 정책사업은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
 - 맞춤형 농정의 기본 방향은 농가를 유형화하여 시장 지향적 정책 대상 농가와 사회 복지적 정책 대상 농가를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현행 농정 추진방식은 차별화보다는 평균화, 유형화보다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함.

⁵⁾ 문한필 외(2022)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 일정 수준 이상 농가의 농업정책자금 지원 졸업제, 소득 보전보다는 소득위험 관리를 위한 농가 단위 소득안정 방식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지금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농가 유형별 차별화보다는 전체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직불제 방식 위주의 예산이 확대되고 있음.
- 그 결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가 농업인 및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확인 수단에 머무름. 농가를 특성별로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기보다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의 조건이 맞는지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름.

○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자체의 한계

- 첫째, 농업경영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담는 수단이 되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모든 농업경영체와 모든 농업인(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합집합이므로)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농정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자체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둘째, 농업경영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에 버금가는 등록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임. 그러나 여전히 농업경영체 등록방식이 임의등록방식으로 농업경영체에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농업경영정보 등록(제공) 의무와 이에 따른 권리 관계의 불완전, 허위·부정 등록이나 현행화 지연 시 법적 제재 및 강제 조치 근거 미흡 등이 지적
- 셋째, 농업경영체등록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직불제를 포함한 많은 정책사업들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 결과, 농업경영체등록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정보를 담아내려는 시도가 있었음. 그 결과, 오히려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음.

-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인, 농업경영정보 등 핵심 용어의 정의에 관해 「농어업식품기본법」을 준용

-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단순 합집합
- 농업경영체의 정체성 모호(농업 생산·경영단위로서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단일성 결여, 독자적인 생산요소 사용 여부나 농업경제활동 인정범위 등 개념 차별화 미흡)

○ 개별 농업인과 이 농업인이 운영하는 물적 자원이 결합된 '경영체' 개념 부재

- 법·행정상 통용되는 농업경영 단위를 단순히 농가에서 농업경영체로 전환
- 농업인 정의에 규정된 물적 요소인 경지면적을 그대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농업인' 등록기준으로 적용

○ 경지면적만을 실질적인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으로 적용

- 연간 농산물 판매액(120만 원)과 농업 종사시간(90일)은 독자적인 요건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음.
- 농지 외 지목(초지, 대지)이나 시설·건물·장비 등은 물적 요건으로 불인정
- 농업기술과 푸드테크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농업·경영체 출현 시 수용 불가

○ 오랜 기간 동일한 등록 요건 적용

- 등록 요건이 낮아 소규모 농업경영체 양산에 기여
- 비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용이(농업인 기준만 충족하면,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등만 있으면 등록 가능)
- 규모화, 전업화, 전문 경영체 육성 등의 농정방향과 괴리

○ 동일주소, 동일세대 분리등록 유인 제공

- 기존 경영체에서 분리하여 신규등록하는 것이 정책사업 수혜나 세제 혜택 측면에서 유리
- 생산수단의 별도 소유를 확인하기 위한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의 의사결정을 확인하기 위한 본인 명의 농자재구매영수증,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본인 명의 농산물판매영수증 제출을 통해 가능

○ 비농업인의 신규등록 수단으로서 동일필지 분리등록 활용 가능

- 등록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각각의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경영체별 경계를 설치하면 가능
- 「농지법」 제23조 제8항에 따라 이모작 목적의 8개월 이내 개인간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 공동경영주 등록의 실효성 부재

- 공공경영주의 개념 미정립, 법적 지위 불명확 등 제도화 미흡
-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와는 달리 겸업소득이 있을 경우 등록 불가
- 농업경영체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의 증가로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것보다는 1인 경영체로 각기 따로 등록하는 것이 훨씬 유리

○ 농업경영체 등록의 목적과 활용에 대한 비전 미제시

- 농업인 마스터정보, 농업경영체 통계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인지, 정책 지원대상 식별, 맞춤형 농정 구현,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등을 주목적으로 할 것인지 불명확
- ‘과학농정’ 모토는 있지만 장기적인 등록정보 활용 비전은 부재
- 비전에 따라 목표로 하는 등록정보의 양과 질을 설정해야 제도개편 방향 구체화 가능
 - ▶ 등록정보의 범위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일반현황부터 농지, 농작물과 가축 등 생산정보, 비용, 판매, 소득, 자산, 부채, 정부지원 수혜실적, 세금 납부실적까지 다양
 - ▶ 정책적 활용 범위도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일반현황과 기초적인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농업부문의 마스터정보로서의 역할부터, 농업인 식별, 개별 정책사업들의 수혜 대상 식별, 농업직불금 지급규모 산정과 지급기준 설정,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까지 확장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대한 우려

- 임의 등록 한계, 자발적 변경등록 지연 등 현행화 미흡과 비농업인 등록 용이로 등록정보의 품질 저하
- 등록정보 제공 의무와 합당한 수준의 배타적 권리 관계 미설정
- 품목/가축, 재배면적/사육두수 등 현행화 쉽지 않은 항목의 등록방식 재검토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역할과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 현재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개념과 기준의 혼용, 임의등록의 한계, 등록정보의 현행화 지연, 거짓·부정 등록의 유인 존재 등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 따라서, 대다수 지원사업들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신청인의 농업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민원 포함)의 원인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오류나 한계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음.
 - ▶ 정책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포함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에 지원대상의 범위를 가늠하고, 지원 목적과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 농지대장, 공익직불제 등 여타 핵심 농림정보 관리체계와 비교해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의 운영 효율화 및 등록정보의 활용 고도화를 위한 투자 필요

○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등록해야 하는 경영정보의 범위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즉, 농정당국이 모든 유형의 농업경영체로부터 동일한 등록정보를 일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유형별로 꼭 필요한 정보만을 확보하고 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등록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렇게 농업경영체 유형에 따라 차등화되어 취합된 등록정보는 개별 정책별로 지원 대상을 식별하는데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4.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개편방향

4.1.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개념 재정립⁶⁾

-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고 정의함에 따라 개념 상 상호모순 발생
- 농업인은 ‘경영인’으로서 농업경영을 하거나 ‘종사자’로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인(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하기도 함)이며, 농업경영체는 인력과 자본을 결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별도의 ‘독립체’로 구분할 필요
 - ‘농업인’은 개인, 법인 종사자, 가구주 및 가구원 등 역할에 상관없이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
 - ‘농업경영체’는 사회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분화되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경영 주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재정립
- 농업경영체는 ‘경제적 독립성’과 ‘단일성’이라는 개념을 충족해야 함. 영농 현장에서 이러한 개념에 부합하는 생산 및 경영 단위는 농가 또는 가족농임.
- 따라서 ‘농업인’과 별개로 법인이 아닌 개인 경영체인 ‘농가경영체(가족농경영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법인경영체’와 함께 ‘농가경영체(가족농경영체)’를 ‘농업경영체’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이 법률 체계와 현실에도 부합.

⁶⁾ 정현출(2023)을 참조하여 작성

- 미국도 가족농을 개별 경영체로 간주
- 동일 경영체의 구성원이 별도의 경영체로 분리등록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등록하지 못할 확률이 낮아야 함.
- 농가경영체의 분리를 유인하는 현 등록제도의 개선 필요(1인 경영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영농 규모화 추진과 배치될 소지가 큼). 공동경영주 개념을 포함하여 농가경영체로 등록되었을 경우 더 유리하도록 제도 개편 필요

○ 농업 생산 및 영농활동과 연계된 지원정책의 대상자는 ‘활발하게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영체’가 되어야 하며, 농업 ‘종사자’로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인에게는 농업노동력과 관련된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임.

- 그러나 현재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각종 지원정책 관련 규정을 보면 정책의 특성을 막론하고 대상자로 「농어업식품기본법」 상 ‘농업인’ 규정을 준용하거나,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경영체’를 지원자격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그런데, 농업인 기준이나 농업경영체 정의에 대한 관심이나 불만은 대부분 농업·농촌 관련 지원정책 대상자의 자격 심사과정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농업인’ 정의는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넓고 요건 충족이 그리 어렵지 않은 반면, 지원 대상자를 일반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로 표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각각의 정책 특성을 반영한 선별 기준에 맞는 ‘일부’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가 선정되기 때문임.
-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작 규모나 농업 매출액의 상향 조정, 농촌 거주 요건 강화 등을 통해 농업인 정의를 정밀하게 다듬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모든 정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본법상 농업인 정의와는 별개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한 개별 규정은 필요하기 때문임.
- 따라서,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개념을 분리해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우선 구분하고, 이들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수혜가능한 지원사업군을 큰 틀에서 분류하여 제시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으며, 맞춤형 농정의 구현에도 바람직함.

○ 즉, 「농어업식품기본법」 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인(가칭)’과 ‘농업종사자(가칭)’로 구분하고, 개별 농업경영인이 주체가 되어 인력과 자본을 결합해 농업생산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별도의 ‘독립체’인 농업경영체(가족농경영체와 법인경영체)로 새롭게 정의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 각각을 식별해 다양한 농정사업을 수행하는 ‘정책지원시스템’을 일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개념의 재정립은 법체계상 모순 해결뿐만 아니라 실제 영농현장과 부합하고 지원정책들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4.2. ‘농업융복합경영체(가칭)’ 신설⁷⁾

○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하여 운영하는 경영체가 계속 출현할 수 있는데, 미래농업의 외연 확장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포함하는 ‘농업융복합경영체(가칭)’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1호는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⁸⁾에서 세 가지 산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의 세부산업을 명시함.
- 한편, 「농어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이들과 관련된 산업’은 농업 전후방연관 산업을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그 세부사업으로서 ‘식품산업, 생산 소재·장비산업, 유통·마케팅, 농업·식품기반 벤처사업, 농업교육·지도·컨설팅 산업’을 포함하는 정의를 명시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농업과 관련된 융복합 사업 영역을 흡수할 수 있는 예비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⁷⁾ 정현출(2023)을 참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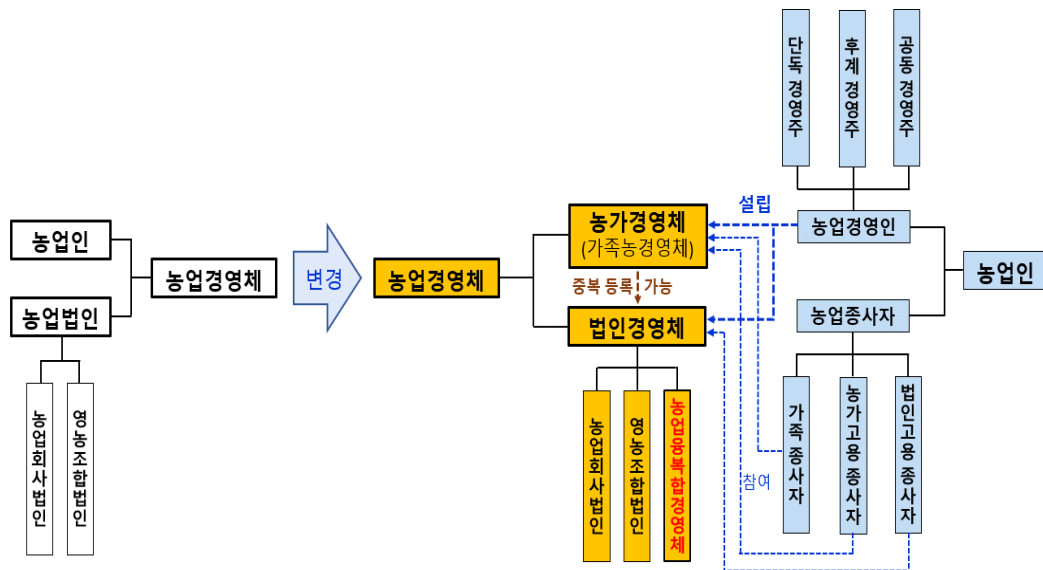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 ‘농업융복합경영체(가칭)’는 「농어업식품기본법」 또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단일 경영권 아래 농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하여 운영하는 경영체’로 정의할 수 있음.

○ 다만, ‘농업융복합경영체(가칭)’는 농업 생산활동에 특화된 ‘농가경영체(가족농경영체)’와는 구분하여 법인경영체의 한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즉, ‘농업융복합경영체(가칭)’는 법인경영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주된 산업활동(산출물인 재화나 서비스가 속하는 산업)’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대응되도록 생성하는 ‘농업융복합 업종코드’를 부여해 각종 융복합 관련 정책의 지원대상으로 관리함.
- ‘농가경영체(가족농경영체)’도 요건을 갖추어 시 ‘농업융복합경영체’로 중복 등록을 가능하도록 허용

〈그림 2-2〉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개념의 분리(안)



4.3. 농지대장,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의 연계

○ 현행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는 농업경영체가 자기의 경영정보를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임의등록 제도이지만, 농업·농촌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면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어 현재는 사실상 모든 농업인이 등록하고 있음. 다만, 농업법인의 상당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

-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서는 신규등록 시 신청서 내용의 정보가 입력되면, 주민등록정보, 토지대장 등의 다른 DB와 연계되어 등록된 정보가 1차적으로 검증되며, 담당자가 현장조사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 후 2차적으로 적합한 정보로 확인 시 최종적으로 등록이 완료됨. 농업경영체의 변경등록도 신규등록과 시스템 입력 및 검증단계는 동일함.⁹⁾

○ 문한필 외(2023)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현재 농림사업 92개, 비농업분야 사업 및 제도 31개, 지자체 자체사업 370여 개에 연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에게 제공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서비스(농림사업정보시스템)¹⁰⁾를 통해서 지역별·연령별·품목별 등으로 집계된 각 등록항목의 평균값이 제공되고 있음.

- 그러나 변경된 등록정보의 갱신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모든 농업경영체의 등록내용과 실체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인력이나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¹¹⁾
- 더욱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별도의 예산사업이 아니다 보니 등록제도와 등록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실정임.

9) 추가로 개발된 농업경영체 변경이력관리시스템은 농업경영체 정보 수정, 삭제 등을 포함한 모든 이력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언제, 누가, 어떤 항목을 변경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10) <https://uni.agrix.go.kr/docs7/biOlap/dashBoard.do>(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 서비스)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를 포함하여 많은 지원사업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해야 하는 입장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관원의 등록정보 관리 업무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다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유찬희 외, 2022b)

○ 반면,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경우 그 사업예산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익직불정책과가 신설되었고,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농관원 지역사무소마다 경영직불팀이 조직됨.

- 공익직불금 지급정보는 농업경영체 일반 현황(경영체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농지 일반 현황(경작, 휴경·폐경 면적 및 임대차 사항 등), 직불금 지급내역(지급면적 및 지급액) 등으로 구성됨.
- 정부는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직불금 지급대상을 일차적으로 선정하고,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분석검증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현장 이행점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한 감액 여부와 감액률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산출한 직불금을 지급함.

○ 농업인에 대한 마스터정보 성격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확도 제고, 활용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정책대상 범위와 예산규모에서 가장 큰 농림사업인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등록정보의 실질적인 연동이 가능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두 제도의 통합적 운영 및 정보 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농지에 대한 마스터정보인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농정당국은 영농 주체인 농업인과 핵심 생산자원인 농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함.

-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 소유 및 이용 관리를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 일반 현황, 임대차 현황, 농지취득 및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농지정보의 작성기준과 작성대상이 변경됨.¹²⁾

12)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세대)별로 1,000㎡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한 반면, 농지대장은 모든 필지가 등록대상이 되고 이를 모두 점검하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관리 책임의 명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농지대장의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됨. 또한, 최소면적(1,000㎡) 조건이 폐지되어 조사대상 농지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하는 등 실태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4년까지 농지대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임.

- 2020년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기본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2017~20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조건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농지원부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한 점 외에도 농업인 정보가 농지 정보와 효과적으로 연동되지 못했기 때문임.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지대장은 개별 경영체가 특정 농지(필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만, 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상호 교차검증을 통해 두 정보의 정확도 제고와 신뢰성 개선이 가능함.

- 농지(필지)는 고정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는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준인 농지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변동’을 보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임(유찬희 외, 2022a).
- 농지대장의 농지 일반 현황(지적공부상 지목·면적, 실제 지목·면적, 이용 현황, 경작 현황 등) 및 임대차 현황(농지면적, 임차 기간 등)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농지 일반 현황(농지 소재지, 지목, 임차기간 등)을 교차검증 가능(필지 고유번호인 PNU 코드를 기준으로 비교 가능)¹³⁾

○ 이렇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공익직불금 지급 정보가 통합·관리되어 경영체별로 경영정보와 정책지원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되고, 농지대장과 시스템적으로 자동 연동된다면, 농업분야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배가됨에 따라 재정지원의 효율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농업경영정보와 농지정보의 현행화, 다른 농업정보들과의 연계성 강화, 다양한 정보들을 교차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생산된 정보의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정확하

¹³⁾ 농지 소재지가 지번(본번 및 부번 포함) 단위까지 표시되므로 농지 소재지와 경작자 정보를 매개로 하여 결합하거나 교차검증을 해서 기재된 정보의 신빙성을 판단한 다음,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검증된 DB 정보를 기준으로 다른 DB의 동일 항목 정보를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음. 만약, 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경작 및 농업 종사 여부를 추가로 검증함. 한편, 농지 소재지 정보를 입력할 때 필지 고유번호(PNU) 코드를 자동으로 함께 생성하도록 한다면 자료 간 공유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유찬희 외, 2022a).

고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농업정보를 토대로 체계적인 농업경영체 지원과 효과적인 농정 추진이 가능할 것임(농업분야 각종 보조금의 비농업인 부정수급 문제 해소에도 기여).

○ 상기 세 데이터베이스(DB)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중복되어 수집되기 때문에 교차 검증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다른 DB의 정보를 그대로 연결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활용하면, 등록의무를 줄여 농업인의 등록 편의와 등록업무의 간소화도 기대할 수 있음.

- 중복 수집되는 정보를 어떤 DB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범용화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각 정보의 수집·생성 주체와 프로세스, 정확도 등을 비교·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공익직불제 지급정보나 농지대장에는 없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만의 차별적인 정보는 품목별 재배면적(노지, 시설)과 가축 사육현황,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보조금 신청, 교육 이수, 인증현황, 면세유 배정량 등임(표 2-5 참조).

- 보조금이나 교육 이수, 인증현황 등의 정보는 AgriX에서, 대가축 사육현황 정보는 축산물 이력제¹⁴⁾를 통해서 각각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만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사실상 품목별 재배면적(노지, 시설)과 소가축 사육현황이라고 할 수 있음.

- 품목별 재배면적(사육현황 포함) 정보를 활용하면, 해당 면적에 표준적인 생산량이나 가격을 적용해 경영체별 소득·경영안정 지원프로그램 설계 가능. 단, 품목별 재배면적은 현행화가 가장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노출

¹⁴⁾ 소, 돼지의 경우,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성되는 정보가 기록·관리되고 있음(한편, 닭, 오리 등 사실상 유통단계 이력제로 운용되고 있음). 따라서 소와 돼지 외 축종의 사육규모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만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 할 수 있음.

〈표 2-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지대장 및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의 비교

구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대장	공익직불금 지급정보
일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명		신청인 명
	주소		경영체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경영주와의 관계, 경영주 명
	공동경영주 여부(○, X)		
	연락처		
			등록 완료 일시
농지 현황	농지 소재지	농지 소재지	농지 소재지
	재배품목	이용현황(농작물 경작, 축사 등)	
	품목별 재배면적(노지, 시설)		
	필지 삭제 사유		
	시설 종류, 시설 면적		
	지번	지번	지번
	지목(공부, 실제)	지목(공부, 실제)	지목(공부, 실제)
	면적(공부(자경/임차), 실경작 면적)	면적(공부, 실제)	면적(공부, 실제)
	농지 소유자	성명(소유, 임대차)	
	임차 기간	임차 기간	임차기간
		주민등록번호(소유, 임대차)	
		주소(소유, 임대차)	
		면적(소유, 임대차)	
		임대료	임차 여부
사육 현황		용도 지역(공부)	
		농지 구분(진흥, 비진흥)	농지 구분(진흥, 비진흥)
	사육시설 소재지		
	사육 품목(종)		
	사육 규모		
	시설 면적(공부, 실제)		
	경영 형태(자영, 임차, 임차 기간)		
	용도(축사/부대시설)		
보조금 관련	신청 면적, 진흥지역 여부(○, X)		지급 면적(진흥, 비진흥, 합계)
	농지 이용 현황(○, X)		
	보조금 신청 사업명		
	재배 품목		
	신청인 명		
			면적 기준지급액(진흥, 비진흥, 합계)
			실지급액(합계)
			감액률

주: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규칙, Agrix 직불제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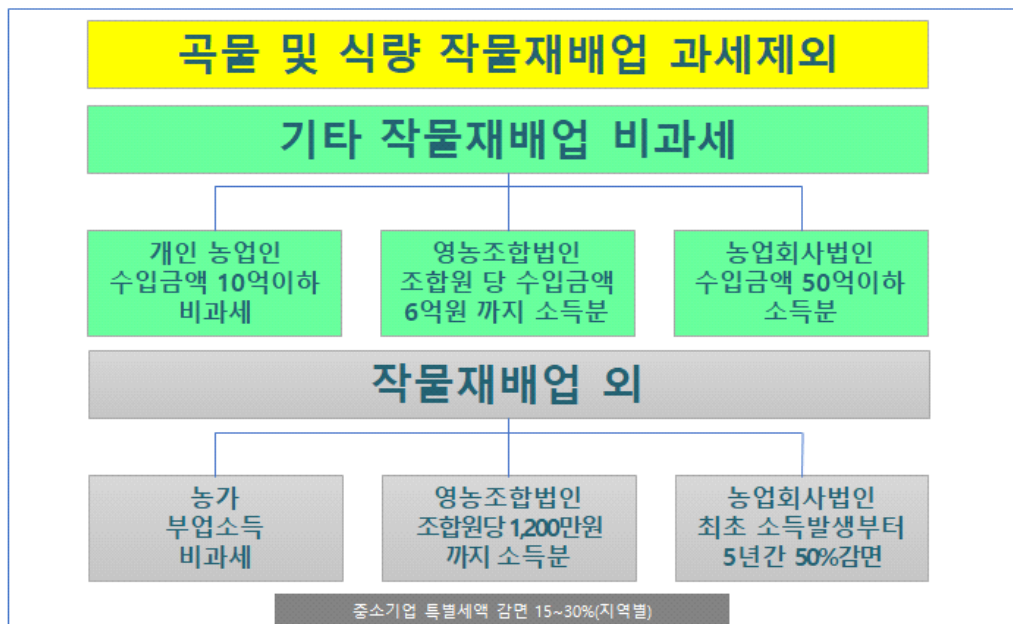
자료: 유찬희 외(2022a).

4.4. 세제기반 농업정보 구축: 중장기 발전방향

○ 해외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농업경영체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에 더해 특정 정책의 지원대상이 되려면 해당 법령에 정한 등록절차를 따로 거쳐야 함. 어떤 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식별하기 위한 기초적 목적만으로는 모든 사업체에 세법상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등록제도 외에 별도 체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이처럼 세법상 사업자등록 제도를 기초로 경영체를 식별하면 우리나라처럼 누가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인가 하는 별도의 확인제도가 필요 없음. 일반적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지는 세법상 등록 여부로 판단하고, 특정 정책의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는 개별 지원법령에 따른 추가 등록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분이 분명함.
- 또한, 등록한 사업자는 실적 증빙용 회계장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므로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실적 파악, 고용인력의 노동시간 산출 등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와 관련해서도 신뢰성 높은 정보를 파악하기 쉬움.

〈그림 2-3〉 현행 세법상 농업인의 소득과세



자료: 홍정학(2023.8) “농업인 소득과세 현황과 개선방안” (농식품정책학회 발표자료)

○ 우리나라는 농업인의 경우, 곡물 및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세를 전액 과세하지 않음(과세제외). 따라서 벼,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등을 재배하면 얼마를 벌든 소득세가 면제됨.

- 그 외 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하는 소득, 수입금액(매출액, 조수입)이 10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함. 따라서 과일, 채소, 시설작물 등을 재배하면 매출액 10억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됨.

- 농업법인의 경우 곡물 및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법인세 전액 면제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수입금액(매출액, 조수입) 6억 원에 해당하는 소득까지 법인세가 감면

▶ 농업회사법인은 수입금액 50억 원에 해당하는 소득까지 법인세가 감면

○ 우리나라는 농업인에 대한 소득 파악이 어려워 농업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이 낮음.

- 농업인은 과세특례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거의 하지 않음. 다른 산업에서 정책대상자의 수입과 지출 및 소득자료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수집

- 농업은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농가경제조사 활용하여 제대로 된 소득파악 어려움.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돼 EITC(근로장려세제)와 CTC(자녀장려세제)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된 바 있음.

○ 농업인의 소득세 과세특례로 대부분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을 거래할 때 계산서 수수가 미비하여 농산물거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움.

-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농업인의 가격교섭력과 농산물 수급안정에도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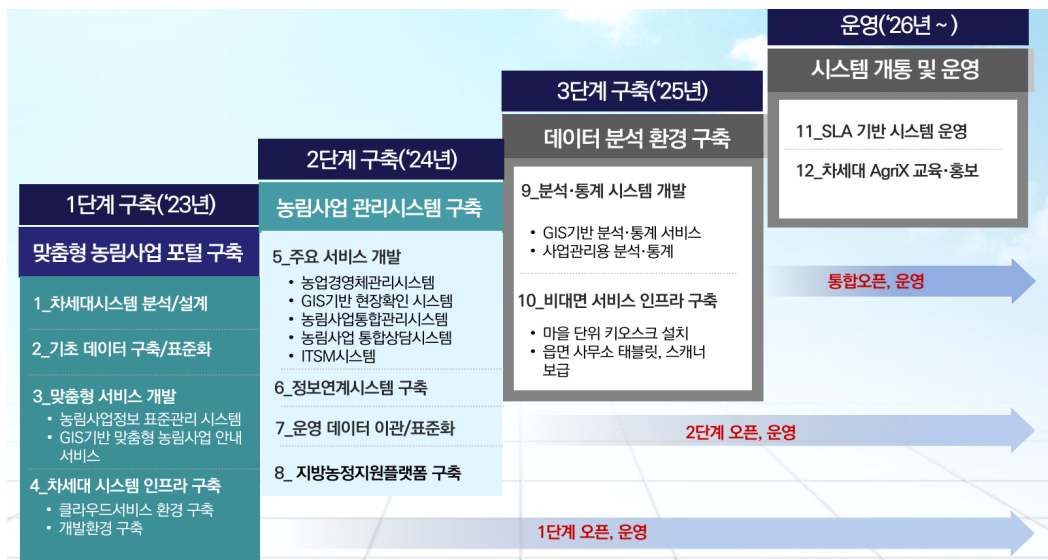
○ 미래농업의 경영안정, 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의 확대에 따라 세제기반의 농업정보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농정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및 농업소득세(부가가치세 포함) 부과는 재정보화가 목적이 아니라 투명한 경영정보와 올바른 소득과약을 통해 농업분야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를 당당히 요구하자는 취지임.

4.5. 농업경영체 유형화와 등록정보 차등화

- 선진국과 동일하게 세제기반 농업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개편 전에 과도기적 수단으로써 맞춤형 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인 농업경영체 유형화와 유형별로 등록해야 하는 정보를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그림 2-4〉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내용



자료: 문한필 외(2022),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AgriX에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¹⁵⁾ 2023년부터는 맞춤형 농림사업 포털 운영, 빅데

이터 기반 통계분석, 농업분야 마이데이터(MyAgriDate)¹⁶⁾ 제공 등이 가능한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시작함.

-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및 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서비스 개발
- 업무지원 통합관리시스템, 통합상담시스템 개발, 지방농정 지원플랫폼 구축
- 데이터 활용 분석환경 구축, 농업인 대상 비대면서비스 인프라 설치 및 보급

○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의 도입 초기 목적은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는 경영체별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었음.

- 구체적으로 농업경영체의 자발적 신고를 기초로 기본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이 과정에서 농업경영체별로 식별된 경영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김수석, 2013).

○ 맞춤형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영체별 소득자료의 확보가 요구되었기에, 2019년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추정 소득·자산·부채’ 항목이 포함되었으나, 정확도와 현행화 측면에서 한계가 커 2020년부터 삭제됨(개인이 아닌 농업법인은 계속해서 해당 정보를 기재함).

○ 현재 개인(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는 소득·자산·부채 관련 항목을 제외하고 개별 경영체의 기초적인 경영정보와 경지면적, 품목별 재배면적(사육두수 포함)이 기재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별로 식별된 경영자료를 통합 관리한다는 일차적인 목적만을 달성하고 있으며, 그 역할이 농업인을 식별하는데 오히려 부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더욱이 까다롭지 않은 농업인 요건이 장기간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농지 소유와

15)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에 논농업직불제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Agriculture Integrated information eXcellent system)을 구축함. 이후 2013년에 농관원의 농업경영체시스템이 농정원의 AgriX로 이관됨.

16) 개인이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이용은 다양해지고 직불금 지급이 중요한 농정 현안이자 쟁점으로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농업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의 역할이 주목받아 왔음.

- 그러나 이는 현행 법률과 행정 체계에서 농지를 이용하는 주체이자 정책대상인 농업인을 명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함. 가장 큰 이유는 농업인과 농지 관련 정확한 정보의 현행화와 이들 정보의 연계·통합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임. 여기에 농업인과 농업경영체를 동일시하는 인식과 법률체계도 일조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활용 목적이 ‘맞춤형 농정 구현’에 부합하려면 ‘농업인을 식별하는 수단’을 넘어 다변화된 농업경영체들의 정책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체 유형별로 수요에 부합한 지원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그러나 권리와 의무 차원에서 모든 경영체에게 동일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를 요구할 필요는 없음. 취합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소요되는 비용은 비례하여 늘어나지만 정보의 정확도는 반비례로 저하될 가능성이 큼.
- 더욱이 모든 경영체의 정보를 취합하지 않더라도 일부 경영체의 정보만을 취합해도 전체 경영체의 경영상황과 시장수급 등 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등록정보의 차등화는 관리 및 행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임.
- 즉, 유형별로 제공해야 하는 등록정보를 ① 기본적인 경영정보(개략적인 경영규모 포함), ② 품목별 재배면적과 축종별 사육규모, ③ 농축산물(가공품 포함)의 생산량이나 판매액, ④ 소득·자산·부채 등으로 차등화하여 관리 가능
- 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축산물이력제 등 다른 통계 DB를 활용하면, 일부 경영체의 등록정보만으로도 전체적인 농업경영정보와 주요 품목의 생산 및 수급상황을 예측·전망할 수 있을 것임.

Ⅲ. 농업경영체 유형화 사례

1. 농가경제이론 기반 유형화 기준변수 선정 사례

-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유형화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농업경영체 간 연관 수준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농가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형화를 위한 기준이 되는 변수를 선정하여 다양한 경영체를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상호 배타적인 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농가경제의 기초 구성요소인 농업경영체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이 되는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농가경제이론(Farm Household Economic Theory)에 기초할 필요가 있음.
 - 농가경제이론에 의해 도출된 농가(여기서는 농업경영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의 주요 의사결정 관련 변수들을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는 의사결정이 유사한 농가들로 농가를 유형화할 수 있게 됨.
 - 또한, 의사결정 과정이 유사한 농가들은 농업정책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
- 농가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농가경제이론의 경우, 정태모형에 비해 동태모형이 현실 경제를 더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음.
 - 즉, 동태모형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를 조절하기 위해 저축, 투자, 차입 등을 활용하는 농가의 의사결정을 더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음.
 - Huffman (1991), Shively and Pagiola(2004), Fafchamps(1993), Meghir and Weber(1996), Phimister(1995), Deaton(1988) 등이 대표적으로 동태모형을 활

용하여 농가 및 가구의 의사결정을 파악함.

○ Briggeman(2006, 2007)도 동태농가효용모형(Dynamic Farm Household Utility Model)을 개발하여 농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를 도출함.

- 각 농가는 매기 예산제약 하에서 자신의 평생기대효용(Lifetime Expected Utility)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비, 농업 노동, 배우자의 농업 노동, 농외 노동, 배우자의 농외 노동, 농업 투자, 농외 투자, 차입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림. 이러한 평생기대효용 극대화 문제의 목적함수는 (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underset{c, L_F, L_F^c, L_N, L_N^c, I^F, I^N, B}{Max} \sum_{t=0}^T [\delta^t ((1 - \phi_t) U(c_t, l_t, l_t^s; Z) + \phi_t V(A_t^F, A_t^N, B_t; Z))] \quad (\text{식 1})$$

- 농가의 효용(U)은 소비(c), 여가(l), 배우자의 여가(l^s), 연령, 영농규모, 지역, 인적자본 등의 농가 특성을 나타낸 변수벡터(Z)로 구성된 함수임. 다시, 유산함수(Bequest: V)는 농업 자산(A_t^F), 농외 자산(A_t^N), 차입(B_t), 그리고 연령, 영농규모, 지역, 인적자본 등의 농가 특성을 나타낸 변수벡터(Z)로 이루어진 함수임. 그리고 ϕ_t 는 사망률을 의미함.
- 농가는 소비(c), 농업 노동(L_F), 배우자의 농업 노동(L_F^s), 농외 노동(L_N), 배우자의 농외 노동(L_N^s), 농업 투자(I^F), 농외 투자(I^N), 차입(B) 등을 선택하여 효용을 극대화함.

○ (식 1)을 통해 도출된 농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주요 변수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소비)** 소비의 한계효용이 사용 가능한 자금의 한계효용과 같은 지점에서 농가의 소비수준이 결정됨.

- **(노동시간)** 농가의 경영주와 배우자의 농업노동의 한계가치가 농외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업에 노동시간을 할당함.
- **(투자)** 농가의 투자를 통해 결정되는 농가의 자산은 농산물 생산과 비농업부문 투자를 통한 수익에 영향을 미침. 또한, 농가의 투자는 농가의 수익 관리, 은퇴, 세금, 상환 능력, 유동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임. 한편, 농가의 자산은 담보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가의 차입에도 영향을 미침.
- **(차입)** 농가는 차입을 통해 사용 가능한 자금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을 대비해 소득이 많을 때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소비 평탄화 (consumption-smoothing)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농가의 농업 및 농외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침.

○ Briggeman et al.(2006, 2007)은 농업자원관리조사(ARMS,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가를 유형화하였음. 이 때 농가 유형화를 위한 기준이 되는 변수로 동태농가효용모형에서 도출한 농가의 의사결정 주요 변수들(소비, 농업 노동, 배우자의 농업 노동, 농외 노동, 배우자의 농외 노동, 농업 투자, 농외 투자, 차입)에 대응하는 8개 변수들을 활용하였음.

- 소비, 농업노동, 배우자의 농업노동, 농외노동, 배우자의 농외노동, 농업투자, 농외투자, 차입에 대응되는 ARMS의 변수들은 각각 최소 가계지출액, 경영주 농작업 시간, 배우자 농작업 시간, 경영주 농외노동시간, 배우자 농외노동시간, 농업자산, 비농업자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임.
- ARMS 데이터를 활용해 동태농가효용모형에서 도출한 상기 8개 주요 의사결정 변수 외에도 6개 농가 특성 변수(농가소득, 근로농외소득, 비근로농외소득, 연령, 대졸 여부, 가구 규모)를 추가하여 농가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을 실시함.

〈표 3-1〉 농가 의사결정 변수에 대응하는 ARMS 변수

의사결정 변수	ARMS 변수
소비	최소 가계 지출액
농업 노동	경영주 농작업 시간
배우자의 농업 노동	배우자 농작업 시간
농외 노동	경영주 농외 노동 시간
배우자의 농외 노동	배우자 농외 노동 시간
농업 투자	농업 자산
농외 투자	비농업 자산
차입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자료: Briggeman et al. (2007)

○ Briggeman et al.(2006, 2007)은 상기 14개 기준변수들을 이용한 군집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농가를 다음의 6개 유형으로 군집화함.

- 외벌이 농촌 도시민(Single Income Ruralpolitan)
- 맞벌이 농촌 도시민(Double Income Ruralpolitan)
- 활동적 노인(Active Seniors)
- 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외소득 활동을 하는 농가(Farm Operator with Spouse Working Off Farm)
- 전통적 농가(Traditional Farms)
- 상업형 농가(Commercial Farms)

○ Briggeman et al.(2006, 2007)이 구분한 6개 농가 유형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음.

〈표 3-2〉 Briggeman et al.(2006, 2007)의 6개 농가 유형별 특징

유형	특징
외벌이 농촌 도시민 (Single Income Ruralpolit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주가 주요 노동자로 비농업부문에서 전일제로 일하는 농가 ◆ 농업 자산에 비해 비농업 자산의 규모가 크고 농외소득이 소득의 주요 원천임. 이러한 특징으로 볼 때 농촌 도시민의 특징을 갖고 있음.
맞벌이 농촌 도시민 (Dual Income Ruralpolit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외소득 및 배우자 농외 노동시간의 평균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음. ◆ 모든 응답자가 배우자가 농외소득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
활동적 노인 (Active Seni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주가 주로 농업소득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자산비 부채율이 낮고, 가구 소비 수준이 가장 낮으며, 사회 보장, 연금, 이자, 배당금 등 비근로농외소득 수준이 높음.
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외소득 활동을 하는 농가 (Farm Operator with Spouse Working Off F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주의 평균 농작업 시간이 길고, 배우자의 평균 농외 노동시간이 김. ◆ 모든 응답자가 배우자가 농외 소득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
전통적 농가 (Traditional Fa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주와 배우자 모두 평균 농작업 시간이 가장 긴 유형 ◆ 농업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 모든 응답자가 배우자가 농업소득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
상업형 농가 (Commercial Fa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주는 주로 농업소득 활동에 참여하고 배우자는 전통적 농가 유형에 비해 농가에서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 ◆ 경영주와 배우자의 농작업 시간에 비해 농업 자산의 규모가 가장 큼. ◆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모든 유형에서 두 번째로 낮음.

자료: Briggeman et al. (2007)

2. 농가데이터 활용 군집분석 기반 유형화

2.1. 농가경제조사 활용 농가 유형화 사례(김수석 외, 2006)

- 국내에서 김수석 외 (2006)에서는 농가들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4년 농가 경제 원자료를 활용하여 농가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분석하고 전체 농가를 몇 개의 유형으로 군집화함.
- 농가 유형화를 위한 기준이 되는 변수로 농가경제조사에 포함된 다섯 가지 범주(경영규모, 경영성과, 경영주의 경영능력, 영농형태, 농가경제실태)의 21개 변수를 선정함(표 3-3 참조).

〈표 3-3〉 김수석 외(2006)의 농가 특성 변수

범주	변수
경영규모 지표	경지면적, 농업자본, 영농시간
경영성과 지표	농업부가가치, 농업소득,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자본생산성
경영주의 경영능력 지표	연령, 교육수준
영농형태 지표	쌀 수입 비중, 채소수입 비중, 과수수입 비중, 축산수입 비중
농가경제실태 지표	가족구성원수, 임차농지 비율, 농외소득(겸업소득, 사업외 소득, 이전소득), 가계비, 부채비율

자료: 김수석 외(2006)

- 선정된 21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유사성이 있는 변수들을 몇 개의 공통인자로 추출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함.
 - 공통인자는 몇 가지 일차 변수의 변동을 주로 설명하는 통합지표임.
 - 변수의 개수가 많은 고차원 자료의 차원 축소 목적으로 유용함.
 - 요인분석 결과, 21개의 변수에 관한 정보의 61.2%가 7개 공통인자에 집약적으로 표현됨.

○ 이렇게 추출된 7개 공통인자 변수를 이용하여 k-medians 군집분석(clustering)을 실시함. 최종적으로 6개 유형(쌀 전업농, 원예중소농, 축산전업농, 고령복합농, 고령영세농, 부업농)으로 군집화됨.

- 김수석 외(2006)에서 구분된 6개 농가 유형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3-4>와 같음.

<표 3-4> 김수석 외(2006)의 6개 농가 유형별 특징

유형	특징
쌀 전업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농업부가가치, 농업소득 측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농업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평균 경지면적과 영농시간은 유형들 중 가장 큼. • 다른 유형에 비해 젊고 교육수준이 높음. • 농업 총수입에서 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임차면적비율이 높고, 겸업소득은 높으며, 임금소득과 이전소득은 많지 않음.
원예 중소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가가치와 농업소득 수준은 중간 정도 • 채소 수입 비중이 높음. • 임차면적 비율이 가장 높음. • 이전소득은 가장 낮고 부채 비율은 가장 높음.
축산 전업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농업부가가치와 농업소득이 가장 높음. • 경지면적이 낮고 토지 생산성은 가장 높음. •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고령 복합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주 인적 자본, 영농시간, 가족구성원 수, 토지 생산성, 부채 비율 등이 고령영세농 유형과 비슷한 특징 • 복합영농의 형태를 나타냄. • 겸업소득과 임금소득이 낮으며, 이전 소득이 높음. • 가계비와 부채비율도 가장 낮음.
고령 영세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작면적이 작은 편이고, 농업부가가치, 농업소득도 낮음. •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가장 높고, 교육수준은 가장 낮음. • 농업 총수입에서 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겸업소득과 임금소득은 낮으나 이전 소득은 가장 높음. • 가계비와 부채 비율도 가장 낮음.
부업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경작면적, 영농시간, 농업부가가치, 농업소득이 가장 낮음. • 농외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임금소득은 가장 높음. •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가장 높고, 교육 수준은 가장 낮음.

자료: 김수석 외(2006)

2.2. 유형 구분을 위한 임계점(Cutoff values) 기준 설정 사례

○ 군집분석은 다수의 개체를 성격이 비슷한 몇 가지 군집으로 분류하여 같은 군집에 속하는 개체들 간에는 서로 유사하고 다른 군집에 속하는 개체들 간에는 서로 상이한 속성을 지니도록 방법임.

- 군집분석은 분명한 분류기준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임.

○ k 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은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의 하나로 각 개체들이 평균이 가장 가까운 군집에 속하도록 n개의 개체를 k 군집으로 분할하는 알고리즘임.

- n개의 관측치(x_1, x_2, \dots, x_n)를 k 그룹 $S = (S_1, S_2, \dots, S_K)$ 으로 군집화하여 군집 내 제곱거리합(Sum of Squared Error)을 최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함.

$$\arg \min \sum_{i=1}^k \sum_{x \in S_i} \|x - u_i\|^2$$

- 이 때 u_i 는 각 군집 S_i 의 평균을 의미함.

- 이상적인 군집의 개수는 경험법칙(rule of thumb)에 의해 $\sqrt{n/2}$ 로 알려짐.

○ k 평균 군집분석은 단일 변수를 k 군집으로 분할하는데 활용할 경우, 변수 분할의 임계점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음.

- 변수를 크기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k 평균 군집분석에 의해 분할된 그룹이 변하는 지점을 변수 분할의 임계점으로 간주할 수 있음.

○ Wang et al.(2023)은 인간 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몇 가지 군집으로 분할하는데 k 평균 군집분석을 활용하였음.

- 인간개발지수(HDI)를 기준으로 ‘저개발’, ‘중간개발국’, ‘고도개발국’ 등으로 분류하는 기존의 분류는 주관적 가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 일관성이 없이 임의적이라는 비

판이 제기됨.

- 인간개발지수를 크기에 따라 내림차 순으로 정렬했을 때, k 평균 군집 분석에 의해 분할된 그룹이 변하는 인간개발지수의 값이 대략 0.85, 0.65로 나타남.
- Wang et al.(2023)에서는 인간개발지수가 0.85보다 클 때 ‘고도개발국’, 0.65이상 0.85미만일 때 ‘중간개발국’, 0.65미만일 때 ‘저개발국’으로 분류함.

○ 군집분석의 새로운 접근법인 PAM(Partitioning Around Medoids)은 각각의 군집을 대표하는 k개의 대표 개체(medoid)를 찾고, 이와 가장 유사한 개체들을 하나의 군집에 속하도록 n개의 개체를 k 군집으로 분할하는 알고리즘임.

- 임의로 선택된 대표 개체를 반복적으로 교체하여 오차를 측정함으로써 각 그룹 내 절대오차(absolute error)의 합을 최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함.

$$\arg \min \sum_{i=1}^k \sum_{x \in S_i} \|x - m_i\|^2$$

- 이 때 m_i 는 각 군집의 대표 개체(medoids)를 의미함.
- k 평균 군집분석과 마찬가지로 같은 그룹 내 개체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다른 그룹과의 거리를 최대화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 그러나 PAM은 k 평균 군집분석에 비해 이상치(outlier)에 대해 덜 민감하여 안정적인 군집 분석 방법으로 알려져 있음.

○ Graskemper et al.(2021)은 PAM 방식을 이용하여 유럽 농가를 유형화하였음.

- 이때 농가 유형화를 위한 기준이 되는 변수로 연령, 성별, 대학 교육 여부, 농업 교육 여부, 농외소득 여부, 동업 여부, 농외활동 여부, 경작면적, 초기 경작면적, 주업 여부, 유기농 여부, 농업 형태,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함.
- PAM을 활용한 군집분석 결과, 유럽 농가는 전통적 농가(conventional growers), 다양한 역할을 하는 청년농(versatile youngster), 가족농(Family-based farmers)로 분류됨.

○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다수의 개체를 성격이 비슷한 군집으로의 분류하는 것 이외에도, k-평균 군집 분석과 마찬가지로 단일 변수를 k 군집으로 분할하는데 활용함으로써 변수 분할의 임계점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음.

- 변수를 크기에 따라 내림차 순으로 정렬했을 때 분할된 그룹이 변하는 지점을 변수 분할의 임계점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전술한 Wang et al.(2023)에서는 인간 개발 지수(HDI)를 몇 가지 군집으로 분할하는데 k 평균 군집분석 이외에도 PAM을 활용하였음.
- 인간개발지수를 크기에 따라 내림차 순으로 정렬했을 때, k 평균 군집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PAM에 의해 분할된 그룹이 변하는 인간개발지수의 값이 대략 0.85, 0.65로 나타남.

〈그림 3-1〉 k 평균 군집분석 및 PAM을 활용한 HDI 임계점 기준 설정

Country	Rank	HDI	Health	Education	Income	PAM cluster	K-means cluster	UNDP cluster
Norway	1	0.953	0.959	0.915	0.985	1	1	1
Switzerland	2	0.944	0.977	0.897	0.960	1	1	1
Australia	3	0.939	0.970	1.065	0.918	1	1	1
Ireland	4	0.938	0.948	0.962	0.950	1	1	1
Germany	5	0.936	0.941	0.940	0.927	1	1	1
Iceland	6	0.935	0.968	0.950	0.926	1	1	1
Hong Kong, China	7	0.933	0.986	0.855	0.962	1	1	1
Sweden	7	0.933	0.963	0.904	0.932	1	1	1
Singapore	9	0.932	0.973	0.832	1.014	1	1	1
Netherlands	10	0.931	0.954	0.908	0.932	1	1	1
Denmark	11	0.929	0.937	0.949	0.932	1	1	1
Canada	12	0.926	0.962	0.899	0.917	1	1	1
United States	13	0.924	0.916	0.903	0.953	1	1	1
United Kingdom	14	0.922	0.949	0.914	0.902	1	1	1
Finland	15	0.920	0.946	0.905	0.909	1	1	1
New Zealand	16	0.917	0.954	0.941	0.880	1	1	1
Belgium	17	0.916	0.943	0.942	0.913	1	1	1
Liechtenstein	17	0.916	0.929	0.827	1.039	1	1	1
Japan	19	0.909	0.983	0.848	0.901	1	1	1
Austria	20	0.908	0.950	0.852	0.924	1	1	1
Luxembourg	21	0.904	0.953	0.792	0.978	1	1	1
Israel	22	0.903	0.964	0.874	0.875	1	1	1
Korea (Republic of)	22	0.903	0.959	0.862	0.889	1	1	1
France	24	0.901	0.965	0.840	0.902	1	1	1
Slovenia	25	0.896	0.940	0.886	0.865	1	1	1
Spain	26	0.891	0.974	0.824	0.882	1	1	1
Czechia	27	0.888	0.906	0.893	0.865	1	1	1
Italy	28	0.880	0.972	0.791	0.886	1	1	1
Malta	29	0.878	0.939	0.818	0.882	1	1	1
Estonia	30	0.871	0.888	0.869	0.856	1	1	1
Greece	31	0.870	0.945	0.838	0.832	1	1	1
Cyprus	32	0.869	0.933	0.808	0.869	1	1	1
Poland	33	0.865	0.889	0.866	0.841	1	1	1
United Arab Emirates	34	0.863	0.883	0.738	0.985	1	1	1
Andorra	35	0.858	0.949	0.714	0.931	1	1	1
Lithuania	35	0.858	0.843	0.879	0.853	1	1	1
Qatar	37	0.856	0.897	0.698	1.067	1	1	1
Slovakia	38	0.855	0.877	0.831	0.859	1	1	1
Brunei Darussalam	39	0.853	0.883	0.704	1.003	2	1	1
Saudi Arabia	39	0.853	0.842	0.787	0.938	1	1	1
Latvia	41	0.847	0.842	0.866	0.834	1	2	1
Portugal	41	0.847	0.945	0.759	0.847	1	1	1
Bahrain	43	0.846	0.878	0.758	0.911	1	1	1
Chile	44	0.843	0.919	0.800	0.814	1	2	1
Hungary	45	0.838	0.863	0.815	0.836	1	2	1
Croatia	46	0.831	0.889	0.791	0.816	2	2	1
Argentina	47	0.825	0.873	0.816	0.788	2	2	1
Oman	48	0.821	0.881	0.786	0.890	2	2	1
Russian Federation	49	0.816	0.788	0.832	0.829	1	2	1
Montenegro	50	0.814	0.881	0.790	0.774	2	2	1
Bulgaria	51	0.813	0.844	0.805	0.791	2	2	1
Romania	52	0.811	0.855	0.762	0.819	2	2	1
Belarus	53	0.808	0.816	0.838	0.770	2	2	1
Bahamas	54	0.807	0.859	0.726	0.844	2	2	1
Uruguay	55	0.804	0.887	0.733	0.800	2	2	1

3. 2016년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

○ 농식품부는 2016년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방식을 제안하였음.

- 일반적·평균적 지원 방식으로 농업인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경영체를 연령, 영농경력 및 재배면적 등의 경영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농업인을 지원하여 농업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음.

○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하여 농가 특성과 경영 특성을 기준으로 경영체를 유형화하였음.

- 먼저 경영체 유형화를 위해 접근 방법, 유형 경계, 품목 혹은 농가 등 구분 단위, 연령, 경력, 후계농 등 농가특성, 재배면적, 조수입, 판매액, 추정조수입 등 경영특성, 전업, 겸업 등 겸업여부 등을 기초로 다양한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함,
- 다음으로 이론적 개념 및 현실 부합성이 가장 높은 다음의 시나리오를 선택함
 - ▶ 농가특성에 의한 1차 분류(창업농, 취미농, 고령농)
 - ▶ 재배면적, 농업조수입을 기준으로 2차 분류(전문농, 예비전문농, 일반농)
 - ▶ 겸업 여부를 기준으로 3차 분류(일반농, 6차농)

○ 연령, 경력, 후계농 등 농가특성과 재배면적, 조수입 등 경영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문농: 영농경력 5년 이상(65세 미만)으로 품목(군)별 재배면적 상위 30% 이상이면서 농업조수입 5천만 원 이상
- 일반농: 영농경력 5년 이상(65세 미만)으로 농업조수입 3천만 원 이상
- 고령농: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65세 이상
- 창업농: 영농경력 5년 미만으로 65세 미만

- 취미농: 영농경력 5년 미만으로 65세 이상

〈그림 3-2〉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목표 및 과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비전	농업 체질개선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치	효율성을 기초로 한 소통과 배려의 농정 추진			
유형	전문농 (예비전문농 포함)	창업농	일반농 (6차농 포함)	고령농
목표 ('16→'25)	전문농 (174→190천호)	청년창업자 (10천호)	조직화·다각화 인원 (132→405천호)	경영이양 비율 (3→10%)
프로 그램	전문농 프로그램	창업농 프로그램	일반농 프로그램	고령농 프로그램
전략	규모화 첨단화	창업활성화 일자리창출	조직·고품질화 6차산업화	경영이양 배려농정
주요 과제	① 전문경영체 등록 ② 경영진단, 컨설팅 등 지원 ③ 전문경영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① 학교교육과 창업 연계 강화 ② 귀농창업 정착 지원 ③ 법인 취창업 활성화	① 다양한 성장경로 제공 ② 조직화(공동체, 법인)·다각화 (6차경영체) 지원 ③ 지역농업의 6차산업화	① 경영이양 프로그램 보완 ② 신규 프로그램 도입 검토 ③ 복지서비스 강화
설계 원칙	맞춤형 정책		프로그램 개발	협업 활성화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13~'17)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14.1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6, “20여 년 만에 농업경영체 지원 패러다임 바뀐다”. 보도자료

○ 농가특성과 경영특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5개 경영체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설정함.

- 전문농: 생산 및 경영기술 등 기업적 경영체로의 성장을 위해 경영진단부터 컨설팅 및 재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 일반농: 평균 이하인 경영 규모와 농업 의존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경영체 특성에 맞는 경로를 개발하고 조직화 및 다각화 확대를 통해 성장 및 소득 불균형 문제를 완화
- 고령농: 경영이양 수단을 다양화하고, 경영 이양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복지 패키지 지원 강화
- 창업농: 학생 창업자 및 귀농 창업자 등 신규 창업농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수단 및 지원 체계 등을 차별화

〈그림 3-3〉 개별 농가경영체 유형 분류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영농 경력	연령	경영지표(조합)		경영체유형	세부유형	대상 (천호)
5년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후계농)	재배면적 상위30% +조수입5천만원	→	전문농	전문농	129
		+조수입3천만원	→	일반농	예비전문농	45
		그 외	→		6차농	98
	65세 이상 75세 이상	-	→		일반농	486
		-	→	고령농	고령농	397
		-	→		은퇴농	293
5년 미만	65세 미만	-	→	창업농	창업농	121
	65세 이상	-	→	취미농	취미농	1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6, “20여 년 만에 농업경영체 지원 패러다임 바뀐다”. 보도자료

4. 국내 선행연구의 농가 유형화 사례

○ 황의식 외(2003)는 농가 유형별 소득 변동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농가를 두 가지 방식으로 유형화하였음.

- 첫째, 경영주 연령(60세 미만 vs 이상)과 표준영농규모(6,000평 미만 vs 이상)을 기준으로 농가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둘째, 농가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40% 미만 vs 이상)과 농가소득의 가계비 충족 여부(적자 vs 흑자)를 기준으로 농가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김한호 외(2012)는 의사결정나무의 하나인 분류 및 회귀나무(CART,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체를 2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농업경영체의 특성을 분석함.

-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경영주 연령, 가구원 수, 경영면적, 임차면적, 시설재배면적, 농업소득, 품목별 소득비중 변수를 생성하고, 이들 중 농업소득을 목표변수, 나머지를 설명변수로 이용한 CART 분석을 수행하여, 농업경영체를 크게 쌀소득비중이 낮은 대규모 농업경영체, 일정 쌀소득비중이 있는 중간규모 농업경영체, 쌀소득비중이 낮은 소규모 농업경영체, 쌀소득비중이 높은 초소규모 농업경영체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그리고 분류된 4가지 유형의 농업경영체를 각 품목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축산 전문농, 원예 전문농, 특약용 전문농, 채소 중심 복합농 등 22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함.

○ 김한호 외(2015)는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전업화지수를 토대로 농가를 고소득 전업농, 저소득 전업농, 저소득 겸업농, 고소득 겸업농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분류 기준은 농가소득의 경우 천만 원, 전업화지수의 경우 0.5를 기준으로 하였음.

- 김미복 외(2016)와 이두형 외(2019a)는 농가 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경영주 연령 65세와 표준영농규모 2ha를 기준으로 농가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표준영농규모가 2ha 미만인 농가는 “고령 소농”, 2ha 이상인 농가는 “고령 중대농”으로 분류함.
 - 이와 유사하게, 경영주 연령이 65세 미만이고, 표준영농규모가 2ha 미만인 농가는 “청장년 소농”, 2ha 이상인 농가는 “청장년 중대농”으로 분류함.

- 박준기 외(2018)는 농가경제 분석을 위해 생산요소 측면과 영농성과 측면에서 농가를 유형화함.
 - 생산요소 측면에서의 유형화는 표준영농규모와 경영주 연령을 토대로 농가를 고령-소농, 고령-대농, 청장년-소농, 청장년-대농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영농성과 측면에서의 유형화는 농업총수입과 경영주 연령을 토대로 농가를 고령-낮은 성과, 고령-높은 성과, 청장년-낮은 성과, 청장년-높은 성과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우병준 외(2017, 2018)는 농가 유형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연구와 농업경영체 실태분석 연구에서 경영주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를 기준으로 농가를 9개 유형으로 구분함.
 - 9개 농가 유형은 3개 연령층(40세 이하, 41세~64세 이하, 65세 이상)과 3개 표준영농규모(0.5ha 미만, 0.5ha~2ha 미만, 2ha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함.

- 이두형 외(2019b)는 농가 유형별 자산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가의 자산 대비 농업소득 비율,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자산증가율을 토대로 농가를 8개 유형으로 분류함.
 - 자산 대비 농업소득 비율은 “농가소득/농가자산”으로 정의되고, 이 비율이 4.5%를 초과하면 고수익 농가, 그렇지 않으면 저수익 농가로 구분함.
 -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농가부채/농가자산”으로 정의되고, 이 비율이 55.0%를 초과하면 고안정성 농가, 그렇지 않으면 저안정성 농가로 구분함.

- 농가의 자산 증가율은 “당기 농가 총자산/전기 농가 총자산×100”으로 정의되고, 이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고성장 농가, 그렇지 않으면 저성장 농가로 구분함.

○ 이태호(2016)는 농업구조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에서 농업총수입 3천만 원과 경영주 연령 65세를 기준으로 농가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유형 1은 연령 65세 미만, 농업총수입 3,000만 원 미만인 농가, 유형 2는 연령 65세 미만, 농업총수입 3,000만 원 이상인 농가, 유형 3은 연령 65세 이상, 농업총수입 3,000만 원 이상인 농가, 유형 4는 연령 65세 이상, 농업총수입 3,000만 원 미만인 농가임.

○ 황수철(2018)은 농가 유형별 소득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이태호(2016)와 유사하게 농업총수입 3,000만 원과 경영주 연령 60세를 기준으로 농가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유형 I(청장년-소농)은 농업총수입 3,000만 원 미만이면서 60세 미만인 농가, 유형 II(청장년-중대농)는 농업총수입 3,000만 원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농가, 유형 III(고령-중대농)은 농업총수입 3,000만 원 이상이면서 60세 이상인 농가, 유형 IV(고령-소농)는 농업총수입 3,000만 원 미만이면서 60세 이상인 농가임.

5. 미국 사례

5.1. 2000년대 ERS 유형화

- 농업경영체를 유형화하면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입안자와 실무자에게 정책의 영향에 대한 관련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농업정책은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영향과 결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이에 2000년대 초반 미국 농무부(USDA) 산하 경제연구소(ERS, Economic Research Service)는 농가의 매출액(Gross Farm Sales)과 경영주의 직업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음.
 - 이전에는 매출규모만을 기준으로 유형화가 이루어졌음.
 - 매출규모와 경영주의 직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규모 기준의 단일한 기준에 비해 농가를 보다 동질적인 그룹으로 유형화할 수 있게 됨.
 -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개발 도구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미국에서 농가(farm)란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농가란 한 해에 걸쳐 농산품을 1,000달러 이상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곳으로 정의되고, 가족농(family farm)이란 혈연, 결혼 또는 입양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이 소유권과 농가경영지배권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를 의미함.
 - 미국에서 농가는 크게 가족농(소가족농, 대가족농)과 비가족농으로 구분됨.
- 이러한 가족농 구분과 함께 경영주의 직업과 농가 총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가를 세부적으로 분류함:
 - 소규모 가족농: 농가 총 매출액이 연 \$250,000미만인 농가. 소규모 가족농은 다음과

같이 자원빈약농가, 은퇴농, 주거/라이프스타일 농가, 저수입 주업농, 고수입 주업농으로 분류함:

- 자원빈약농가: 농가 총매출액이 연 \$100,000 미만, 농가 자산이 \$150,000 미만, 가구 총 소득이 \$20,000미만인 농가
- 은퇴농: 경영주가 은퇴한 농가(자원빈약농가는 제외)
- 주거/라이프스타일 농가: 경영주가 농업 외 직업을 주직업으로 하는 농가
- 저수입 주업농: 농가 총매출액이 연 \$100,000 미만이면서 주업농(자원빈약농가는 제외)
- 고수입 주업농: 농가 총매출액이 연 \$100,000 이상 \$249,999이하이면서 주업농
- 대규모 가족농: 농가 총매출액이 연 \$250,000 이상 \$499,999이하인 농가
- 초대규모 가족농: 농가 총매출액이 연 \$500,000 이상인 농가
- 비가족농: 비가족 법인 또는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거나 고용된 관리자에 의해 운영되는 농가

〈표 3-5〉 2000년대 ERS 농가 유형화

구분	유형	경영주의 직업	총 매출액
가족농	소규모 가족농		\$250,000 미만
	- 자원빈약농가	-	\$100,000 미만
	- 은퇴농	은퇴	\$250,000 미만
	- 주거/라이프스타일 농가	비농업	\$250,000 미만
	- 저수입 주업농	농업	\$100,000 미만
	- 고수입 주업농	농업	\$100,000-\$249,999
	대규모 가족농	-	\$250,000-\$499,999
	초대규모 가족농	-	\$500,000 이상
비가족농		-	미해당

자료: Hoppe, R. A., Perry, J. E., & Banker, D. E. (2000). ERS farm typology for a diverse agricultural sector(No. 1474-2016-120794).

○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됨.

- 농업 생산은 대규모 가족농, 초대규모 가족농, 비가족농에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소규모 가족농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농식품 생산의 대부분은 대규모 가족농에 의존하고 있음.
- 소규모 가족농은 농경지를 포함한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자연자원 및 환경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특히, 은퇴농, 주거/라이프스타일 농가는 환경보전 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습지보전제도(Wetlands Reserve Program)에 해당하는 농경지의 절반 가량을 보유하고 있음.
- 대규모 가족농, 초대규모 가족농은 소득의 대부분을 농업 소득에 의존하고 있음. 이들 농가는 농외 소득 수준도 상당히 높지만 대부분의 소득을 농업을 통해 창출함.
- 반면, 소규모 가족농은 소득의 대부분을 농외 득에 의존하고 있음.

5.2. 2010년대 ERS 유형화

○ 2000년대 ERS가 처음으로 농가를 유형화한 이후 약 15년의 시간이 지나 기존의 유형화가 조정될 필요가 있었음.

- 사료, 연료, 비료 등의 원자재 값이 상승함에 따라 농산물 가격도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생산량에 변동이 없는 농가라고 할지라도 속한 유형이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과거에 비해 생산 규모가 큰 농가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 ERS는 물가 상승, 대농 비중 증가 등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농가 유형화 방안을 변경함.

○ 경영주의 직업과 총 현금조수입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가를 세부적으로 분류함:

- 소규모 가족농: 농가 총 현금조수입이 연 \$350,000미만인 농가. 소규모 가족농은 다음과 같이 은퇴농, 부업농, 저수입 주업농, 중수입 주업농으로 분류함:
- 은퇴농: 경영주가 은퇴한 농가

- 부업농: 경영주가 농업 외 직업을 주직업으로 하는 농가
- 저수입 주업농: 농가 총 현금조수입이 연 \$150,000 미만이면서 주업농
- 고수입 주업농: 농가 총 현금조수입이 연 \$150,000 이상 \$349,999이하이면서 주업농
- 중간규모 가족농: 농가 총 현금조수입이 연 \$350,000 이상 \$499,999이하인 농가
- 대규모 가족농: 농가 총 현금조수입이 연 \$1,000,000 이상 \$4,999,999이하인 농가
- 초대규모 가족농: 농가 총 현금조수입이 연 \$5,000,000이상인 농가
- 비가족농: 비가족 법인 또는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거나 고용된 관리자에 의해 운영되는 농가

〈표 3-6〉 2010년대 ERS 농가 유형화

구분	유형	경영주의 직업	총 현금조수입
가족농	소규모 가족농		\$350,000 미만
	- 은퇴농	은퇴	\$350,000 미만
	- 부업농	비농업	\$350,000 미만
	- 저수입 주업농	농업	\$150,000 미만
	- 중수입 주업농	농업	\$150,000-\$349,999
	중간규모 가족농	-	\$350,000-\$999,999
	대규모 가족농	-	\$1,000,000-\$4,999,999
	초대규모 가족농	-	\$5,000,000 이상
비가족농		-	미해당

자료: Hoppe, R. A., & MacDonald, J. M. (2013). Updating the ERS farm typology. USDA-ERS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110).

○ 2000년대 미국 ERS의 농가 유형화 방안과 비교하여 2010년대 ERS의 유형화 방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기존에는 없던 중간규모 가족농(Midsize family farms) 유형이 추가되었음. 즉, 과거에는 규모로 농가를 구분할 경우 소규모 가족농과 (초)대규모 가족농만 있었으나 최근의 농가구조 변화를 바탕으로 중간규모 가족농 유형을 새롭게 도입함.

- 농업이 주된 직업(또는 소득원)이 아닌 가족농을 지칭하던 주거/라이프스타일 농가 (Residential/lifestyle farms)가 부업농(Off-farm occupation farms)으로 대체 되었음. 이는 농업소득만을 고려하던 과거 유형 구분과는 달리 농외소득도 포함한 새로운 유형화를 위한 조치임.
- 농가 유형화 기준인 농가 총매출액이 농가 현금조수입(Gross cash farm income)으로 대체되었음. 과거의 농가 총매출액 기준이 농가의 농외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토지 임차농이나 육계 위탁사육 농가 등의 매출액이 과대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네 번째 변화는 과거보다 농가 유형을 구분하는 금액 기준이 상향된 것으로 농가 현금 조수입으로 적용 기준이 변화한 것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일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료, 연료, 비료 등의 농업 투입재 가격과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임.

○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됨.

- 소규모 가족농이 전체 미국 농가 수의 90%를 차지하지만, 생산액 측면에서는 52%만을 차지함. 전체 미국 농가 수의 3%를 차지하는 비가족농이 전체 생산액의 15%를 차지함.
- 전체 미국 농가 수의 약 50%를 차지하는 은퇴농 및 부업농의 생산액 비중은 전체의 7% 수준에 불과함.
- 은퇴농, 부업농, 저수입 주업농은 전체 농지 중 소유 농지의 비중이 높은 반면, 중간규모 가족농, 대규모 가족농, 비가족농은 임차 농지의 비중이 높음.

○ 한편, 미국은 농가분석이나 농업정책을 시행할 때 일반적인 평균 농가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표 3-5>의 유형별 특성에 기초하여 접근함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미국은 농정 설계 시 전체 농가의 평균 연령이나 평균 규모, 평균 소득 등의 개념은 사용하지 않으며, 유형별 중간값(median)이나 분포 등을 주로 이용함.

4.3. 미국의 농업경영체 지원

○ 미국은 농업 관련 세원 확보와 농장(경영체) 지원정책의 대상을 분명히 파악할 목적으로 농장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농무부(USDA)가 부여하고 있는데, 농업인 개인이 아닌 농장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농업 활동에 투입된 농지를 단위로 부여함.

- 농장식별번호(USDA farm ID)를 부여받으면 농업대출금, 재해지원금, 농작물보험 등 다양한 농업정책에 지원할 수 있으며, 농업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¹⁷⁾

○ 농장식별번호와는 별개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가격손실보상(PLC)이나 수입손실보상(ARC), 시장축진프로그램(MFP) 등과 같은 직불금 형태의 품목별 농가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농업에 참여(Actively Engaged in Farming: AEF)’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 공동경영체, 기업체 등 모든 유형에 적용됨

- AEF의 요건은 ① 농업에 필요한 자본, 장비, 토지의 제공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경영 및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② 생산요소 제공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농업이윤이 귀속되고, ③ 농업경영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것임(2018년 미국 농업법 제 1,308조 1항).
- 여기에서 ‘경영 및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농기자재 구입 및 관리, 노동력 관리, 농산물 판매와 같은 농업경영에 대해 농업이윤에 상응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것(Active Personal Management)과 개인당 연간 1,000시간 이상 또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간의 50% 이상의 노동시간 투입(Active Personal Labor)을 의미함(Schnepf, 2019, 임소영 2020 재인용).

¹⁷⁾ 취미농(hobby farmer)도 농가식별번호를 받을 수는 있으나, 농업생산비용에 대한 소득세 공제 혜택은 부여되지 않음.

6. EU 사례

6.1. EU의 농업경영체

- EU에서 농업경영체(agricultural holdings)란 농업생산 활동이 EU의 경제 영역 내에서 기술적·경제적으로 단일한 경영관리 하에 운영되며, 농업 활동을 기본 또는 보조 활동으로 수행하는 단일 경영체임을 의미함.
- EU는 농업경영체별로 지급하는 직불제도를 가장 먼저 운영했던 만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 경영체, 또는 농장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단일한 경영단위로, 유럽 연합의 경제영역 내에서 농업부문의 1차 또는 2차 경제활동을 수행함. 이러한 농업경영체는 다른 보충적(비농업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EU에서 농업경영체는 <표 3-7>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표 3-7> EU의 농업경영체 기준

구분	농업경영체 범위
단일한 경영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적 단위 ◆ 노동력과 생산수단(기계, 건물 또는 토지 등)의 공동 사용 ◆ 단일한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단일한 경영권 하에 있어야 함. 즉, 세금 등의 이유로 둘 이상의 개인들에게 소득 등이 분할될 수 있지만, 여전히 단일한 경영권(공동 경영주 1명)을 보유하고 있으면 하나의 경제단위로 간주 ◆ 또한 서로 다른 지역의 토지(또는 가축)를 활용하더라도 기술적·경제적으로 생산수단의 공동 사용이 유지되는 한 그 경영체는 하나의 경제단위로 취급 ※ 이는 경영체의 토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라도 지리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 ◆ 이전에 각각 독립된 경영체였던 두 개 이상의 경영체들이 단일 소유자에 의해 통합된 경우, 공동 경영주가 있거나 동일한 노동 및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단일한 경영권 및 기술적·경제적 통합) 단일한 경영체로 간주됨.

농업생산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및 동물 생산 및 관련 서비스 활동은 EU 통계 경제활동 분류(NACE 2차 개정판)에 정의된 다음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해야 함. 단, 이는 EU의 경제영역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 단년생 작물재배, 다년생 작물재배, 식물·동물 생산, 타조(예류 포함) 사육, 토끼 사육, 양 봉, 꿀 및 밀랍 생산, 모피 생산을 위한 동물 사육 ◆ 혼합농업 ◆ 농업 및 환경 상태가 양호한 농지 유지(※ 2007년 전에는 ‘농업 및 환경 상태가 양호한 농지 유지’가 포함되지 않았음) ◆ 황소, 멧돼지, 숫양 및 빌리 염소 사육, 부화장 운영
기타 인정되는 특수한 농업경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요양원 및 요양원, 종교 공동체, 학교 및 교도소 소유의 농업경영체 ◆ 제조업 기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농업경영체 ◆ 목초지, 원예 또는 기타 이용가능한 농지로 구성된 공유지를 활용하며 지자체에 의해 운영 되는 농업경영체(예시: ‘동물을 양도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소를 방목하기 위해) ◆ 공유지 단위(Common land units; 개별 농업경영체에 직접적으로 속해 있지 않지만, 사용하고 있는 농지로 구성됨)로서 데이터 수집 및 기록을 목적으로 생성된 가상 개체 ◆ 생산주기 상 일시적인 중단으로 인해 기준일에 가축이 없는 축산경영체(예시: 축사의 정기적인 위생 청소, 질병 발생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 ◆ ‘단일-품목 집단경영체(single-product group-holdings)’가 ‘모집단경영체(parent holdings)’와 독립적이고, 주로 자신의 생산요소를 사용하며 ‘모집단경영체’의 생산요소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 농지를 이용한 경영체에 속하지 않고, 이동하는 가축(migrating herds)을 사육하는 독립적인 경영체
농업생산활동 또는 농업경영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레, 연체동물 또는 달팽이 농장, 양잠 ◆ 애완동물 사육 ◆ 개구리 농장, 악어 농장 또는 해양생물 농장, 양식장의 운영 ◆ 여타 인정되지 않은 다양한 동물의 사육 ◆ 모집단경영체(parent holdings)와 독립적이지 않은 단일-품목 집단경영체(single-product group-holdings) ◆ 번식 활동이 없는 승마용 마구간, 경주용 마구간, 껄럽(경주마 운동에 사용되는 토지) 운영 ◆ 애완동물보호소(kennels) ◆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사육 활동 없음) ♦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토지를 양호한 환경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작물을 재배(농업 지원을 받지 않음)하는 수렵보호구역(game reserves) ♦ 주방 정원만 있는 경영체(시장 활동 없음) ♦ 시장 활동 없이 오로지 생계를 위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영체 ♦ 농업 및 수확 후 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 사냥, 포획 및 관련 서비스 활동
--	--

자료: EU 통계국 홈페이지(<https://ec.europa.eu/eurostat>).

○ EU는 2013년 공동농업개혁을 거치면서 Regulation (EU) No 1307/2013 Title III의 제1장을 근거로 기본직불제를 도입함.¹⁸⁾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면 ① ‘최소 요건(minimum requirements)’을 충족하고¹⁹⁾, ② ‘실제 농업인’이어야 하며, ③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 또한 ④ 수급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발동(activation)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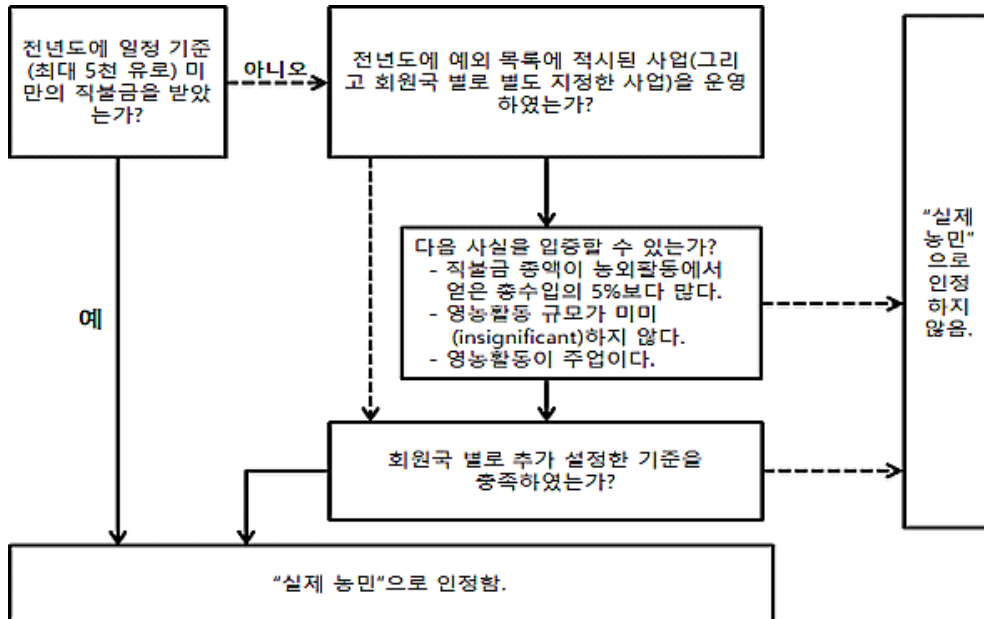
- Regulation (EU) No 1307/2013에서는 ‘농업인’을 ‘자연인, 법인 또는 이들의 집합체로, 경영체가 EU 영토 안에 위치하며,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함.
- ‘실제 농업인(actual farmer)’은 ‘농업인’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를 뜻하는데, ‘실제 농업인’ 정의를 추가한 목적은 영농활동을 하지 않거나 농사를 짓더라도 비중이 미미한 개인과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음. 이에 따라 예외 목록(negative list)²⁰⁾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예외 목록에 적시한 활동을 하더라도 해당 경영체가 수행하는 영농활동이 무시할 만한(marginal) 규모가 아니라고 증빙할 수 있으면 활동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유찬희 외, 2022a).
- ‘실제 농업인’에 대한 판단 절차는 <그림 3-4>와 같음.

¹⁸⁾ EU는 2014년 공동농업정책에서, 기존 단일직불제를 기본직불제(Basic Payment Scheme)로 전환하면서, 녹색직불제(Greening Payments)를 도입했으며,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농 직불제(Small Farmers Scheme), 청년 농업인 직불제(Young Farmers Scheme), 자연조건 제약 지역 직불제(Areas facing natural or specific constraints: ANC) 등을 신설한 바 있음.

¹⁹⁾ ‘최소 요건’ 기준은 EU 회원국마다 다른데, 경지면적이 0.3~5ha 미만이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음.

²⁰⁾ 이 목록에 등재된 사업/활동은 공항, 급수시설, 부동산서비스, 철도서비스, 스포츠 및 유흥 용지 등임.

〈그림 3-4〉 EU의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실제 농업인’ 판단 절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 2019), 유찬희 외(2022a) 재인용.

6.2. EU의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 EU에서 농업경영체에 대한 유형 구분은 1985년 6월 7일의 “농업경영체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유형 구분 시스템을 창출하기 위한 집행위원회 결정”(85/377/EEC)에 따라 실시됨.

- 농업경영체 유형화는 농가회계데이터네트워크(Farm Accountancy Data Network)와 농가구조조사(Fam Struclure Survey) 자료를 기반으로 실시
- EU 내에서 유형 구분 기준에 상응하는 농업경영체들의 계층별 실태를 파악하고, 계층들 간 및 회원국 들 간의 경영체들을 상호 비교하여 공동농업정책(CAP) 수립을 위한 정보 확보 목적

○ EU는 2007년까지 농업경영체를 영농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동시에 생산품목별 전문화

정도에 따라 구분

- 1985년부터 실시된 농업경영체 유형화는 총생산물과 보조금 그리고 공제가능한 개별비용을 고려한 표준총수입(SGM, standard gross margin)에 기반함.
- 일종의 표준소득에 해당하는 품목별 표준수입과 경영체의 표준총수입 개념 활용(농산물의 품목별 표준수입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경영체의 표준총수입을 산출)
- 영농규모에 따른 유형 구분은 경영체표준총수입의 크기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영농규모를 나타내는 단위로 유럽규모단위(ESU, European size unit)를 설정
 - ▶ 2005년 기준 ESU 한 단위는 1,200유로의 표준총수입에 해당
- 생산품목의 전문성에 의한 유형화는 경영체의 표준총수입 중에서 특정 품목군의 표준수입이 차지하는 비중(2/3)으로 결정

○ 그러나 2008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의 변화와 직접지불금의 분리로 보조금이 분리된 표준총수입은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게 되면서, 이전(집행위원회 결정 85/377/BCC)과 같은 SGM에 기반을 둔 농가 유형이 불가능해짐. 이에 따라 2008년 새로이 정해진 EU 농업경영체의 유형은 농가의 영농형태와 경제규모에 의해 결정되며, 이 두 요소는 농산품의 표준산출물(SO, Standard Output)에 기반을 둠.

- 농산품의 표준산출물(SO)이란 총생산의 표준가치로 농장가격 기준 농산품의 평균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며, EU 회원국은 5개년 조사기간 동안의 각 품목의 평균 가치로 지역 표준산출물계수를 구하고, 표준산출물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수확량, 생산량, 가격, 재배면적, 현재 사육두수 및 도축두수, 생산주기 등 기술정보, 가축의 생산성, 새끼가축의 사망률 등)는 10년 주기로 갱신함.
- 표준산출물은 매출액, 농가사용, 농가소비와 저장량 변화, 주요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포함한 것으로, 직접지불금과 부가가치세, 상품의 세금은 제외함.
- 농업경영체의 경제규모는 총표준산출물(Total SO)의 가치로 계산되며, 이는 한 농업경영체가 한 해에 생산한 모든 농산품의 각 표준산출물을 더한 값임. 표준산출물은 유로로 표현되며 농업경영체는 경제규모 수준에 따라 14개의 계층으로 분류됨.

〈표 3-8〉 EU 농업경영체의 경제규모 계층

계층	표준산출물 범위
1	2,000유로 미만
2	2,000유로 이상 ~ 4,000유로 미만
3	4,000유로 이상 ~ 8,000유로 미만
4	8,000유로 이상 ~ 15,000유로 미만
5	15,000유로 이상 ~ 25,000유로 미만
6	25,000유로 이상 ~ 50,000유로 미만
7	50,000유로 이상 ~ 100,000유로 미만
8	100,000유로 이상 ~ 250,000유로 미만
9	250,000유로 이상 ~ 500,000유로 미만
10	500,000유로 이상 ~ 750,000유로 미만
11	750,000유로 이상 ~ 1,000,000유로 미만
12	1,000,000유로 이상 ~ 1,500,000유로 미만
13	1,500,000유로 이상 ~ 3,000,000유로 미만
14	3,000,000유로 이상

자료: 집행위원회 규제(EC) No 1242/2008

○ 영농형태에 따른 농업경영체 유형은 농업경영체의 총표준산출물에서 각기 다른 경제활동의 상대적인 비중으로 결정됨.

- 영농형태는 일반유형, 주요유형, 특정유형의 3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9개의 일반유형은 21개의 주요유형으로 분류되고 이는 다시 62개의 특정 유형으로 세분화됨.

○ 총표준산출물 중 특정품목의 표준산출물이 2/3 이상이면 농업경영체는 전문농으로 분류되고 그 미만일 시 복합농으로 분류되며, 이 두 분류에 속하지 않으면 미분류농에 속함.

- 전문농은 농작물농(곡물, 콩), 원예농(채소와 화훼류), 영구작물농(포도와 과수류), 방목가축농(우유와 고기용 소과 짐승, 양, 염소), 곡식동물농(돼지, 가금류, 토끼)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복합농은 작물복합농, 가축복합농, 작물 및 가축복합농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농업경영체의 농업외 소득, 즉 기타소득활동(OGA)에 의해서도 농업경영체를 분류하는데, 농업경영체의 전체 매출액(직불금 포함) 중 기타소득활동 비중(0~10%, 10~50%, 50%이상)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6.3. 독일의 농업경영체

○ 독일은 농업경영체를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개념과 관련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으로 구분

- 일반적으로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는 이를 인정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반면에,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는 임의등록 절차를 따름. 하지만 임의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 등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농업경영체들은 지원법상의 등록제에도 등록하고 있음.

- ▶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4대 보험에 가입, 세무서 사업자 신고, (축산업의 경우) 축산업 등록, 소비자 보호·식품안전청 신고·등록 등의 절차 필요

- 독일에서는 농업회의소의 가입 여부도 농업인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

- ▶ 농업회의소는 주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인 자치기구로서 직업교육과 농업경영 지도·상담을 고유업무로 하고, 주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농림사업의 집행을 수탁업무로 수행

- 농업경영체는 보유 노동력을 기준으로 주업경영체와 부업경영체로 구분

- ▶ 주업경영체는 농업경영체당 노동력을 1.5 노동단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0.75에서 1.5 노동단위 사이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농업경영소득에서 얻는 경영체임.

○ 농업경영체 등록, 조세 관련 의무사항 이행, 농업회의소에 가입 여부, 주업경영체 여부에 따라, 조세감면 및 농업보조에서 차등적으로 지원

6.4. 프랑스의 농업인 정의 개정

- 유럽 공동농업정책인 CAP 2023-2027 프로그램은 이전 시기와는 달리 최소한의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les agriculteurs actifs)들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함.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대한 정의(la définition de l'agriculteur actif)를 2023년 5월 13일 자로 법제화함.
- EU 규정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장을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개인이거나 법인을 일컬음. 신청자가 법인 형태인 경우, 회사는 농업인으로 간주됨. 이 개념에 더해 2023년부터 직불금을 포함한 특정 CAP 보조금 지급 신청자는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Actif Agriculteur)"이어야 함.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대한 정의는 개인과 법인 여부, 법인 형태, 영농활동을 하는 수행하는 지역에 따라 정의됨.
 - 프랑스 본토(유럽대륙에 속한 프랑스령)에서의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유럽대륙에 위치하지 않은 그 밖의 영토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은 다르게 정의됨.
- 유럽 대륙에 위치한 프랑스 지역(le territoire metropolitain)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 정의
 - 농업인(개인)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수행하는 영농활동에 대해 ATEXA(l'assurance accident du travail et maladie professionnelle des exploitants agricoles, 농업에서의 노동과 질병 보장사고에 대한 농업인건강보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 Haut-Rhin, Bas-Rhin, Moselle 지방에 속한 경우에는 최소재배면적(SMA)의 2/5 이상의 면적을 경영하거나 농업 활동에 적어도 150시간을 투입하는 것과 동등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 ▶ 67세 이상의 경우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상태여야 함.
 - 법인 형태의 회사(EARL, GAEC, SCEA 등)²¹⁾

- ▶ 적어도 한 명의 공동 경영자가 위의 농업인에 해당하는 조건(1.1과 1.2)을 충족하는 경우,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됨.
- ATEXA(농업인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SARL, SAS, 일부 SCEA 등)²²⁾
 - ▶ CRPM(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농림해양수산법전)의 제722-1조 1항 또는 2항에 따른 농업활동을 수행(농작물 및 축산 사업, 농업작업기업 등)해야 하며,
 - ▶ 회사의 모든 경영진은 다음을 준수해야 함.
 - ① 농업 종사자는 사회 보호 제도에 속해있어야 함. 즉, 산업 재해 및 직업성 질병 보험인 AT/MP(accident du travail et maladie professionnelle)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② 67세 이상의 경우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상태여야 함.
 - ③ 회사 주식의 5%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경영자가 여러 명이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적어도 5%가 되어야 함).
- 생산자 농업협동조합(les sociétés coopératives de production, SCOP)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자본 대부분을 소유한 고용인 공동경영자가 AT/MP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 67세 이상의 경우 퇴직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상태여야 함.
- 위의 법인 형태에 속하지 않는 기타 법인
 - ▶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는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으로 간주됨.
 - ①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농업 고등학교, 지방 단체 등),

21) EARL(Exploitation Agrico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농업 유한책임회사), GAEC (Groupement agricole d'exploitation en commun, 공동농업경영조합), SCEA(Société Civile d'Exploitation Agricole, 농업관련 민간단체)

22) SARL(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유한책임회사), GAEC (Groupement agricole d'exploitation en commun, 공동농업경영조합), SAS(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단순화된 주식회사 형태)

② 1901년 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중 단체의 정관이 농업 활동을 명시한 경우

③ 농업활동에 목적을 둔 공익재단

○ 유럽대륙에 위치하지 않은, 그 밖의 영토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의 정의

- 농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공항·철도 서비스, 생수회사, 부동산, 운동 및 레저 시설(승마 센터 제외)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은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으로 간주됨.
- 상기 비농업 활동 중 하나를 수행하는 개인 혹은 법인은 수행하는 농업활동이 전체 경제활동의 일정 부분을 차지할 때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으로 간주됨.
 - ▶ 상업 및 회사 등록부(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RCS)에 해당 기업의 활동이 농업임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 혹은
 - ▶ 2년 전 농업수익이 2년 전 전체수익의 33% 이상인 경우

○ 프랑스 농업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2016년)

- 2023년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 정의가 법제화되기 전에는 농업인의 정의를 별도로 마련해두지 않고, 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을 정해둠.
- 2016년 프랑스의 농수산법전에 따르면 농업(exploitation agricole)은 "동물 또는 식품의 생태적 주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제 L.311-1조), 농업인(l'agriculteur)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개별 조문에서 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 ▶ 영농활동에서 근로시간의 50% 이상을 투여할 것
 - ▶ 총소득의 50%를 농장에 기반을 두고, 농림업 생산활동, 농촌관광, 기타 농림업의 활동으로 얻을 것.
 - ▶ 농업인건강보험(AMEXA)에 가입되어 있을 것.
 - ▶ 농장의 총소득 중 25% 이상을 직접적인 생산활동으로 획득할 것.

7. 일본 사례

○ 일본은 농림수산성 통계부가 5년마다 전수조사를 통해농가 및 농업경영체(농가 중 판매농가)를 조사

- 농가는 “경지면적이 10a 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5만 엔 이상인 세대”를 의미하며, 경지면적이나 농산물 판매액을 기준으로 ‘자급적 농가’와 ‘판매농가’로 분류됨
- 자급적 농가는 “경지면적이 30a 미만이고, 농산물 판매금액이 50만 엔 미만인 농가”를 의미. 즉, 경지규모와 판매금액이 모두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를 지칭
- 판매농가를 의미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위탁받아 농작업을 하고, 생산 또는 작업과 관련된 재배면적 또는 가축 사육두수가 다음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

▶ 경영 경지면적 30a 이상

▶ 농작물의 작부면적 또는 재배면적, 가축의 사육두수 또는 출하두수, 기타 사업의 규모가 다음에 제시한 규모 이상

a. 노지채소 재배면적 15a

b. 시설채소 재배면적 350㎡

c. 과수 재배면적 10a

d. 노지 화훼 재배면적 10a

e. 시설 화훼 재배면적 250㎡

f. 착유우 사육두수 1마리

g. 비육우 사육두수 1마리

h. 돼지 사육두수 15마리

i. 채란계 사육두수 150마리

j. 육계 연간 출하두수 1,000마리

k. 그 밖에 조사기일 전 1년간 농업생산물 총판매액 50만엔 상당의 사업규모

▶ 농업 관련 수탁사업

-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는 소득원천 비중, 연령, 종사일수를 기준으로 주업 경영체, 준주업경영체, 부업적경영체로 분류

▶ 주업 경영체: 소득의 50% 이상이 농업소득, 조사기일 전 1년간 자영농업에 60일 이상 종사하고 있는 65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경영체

▶ 준주업경영체: 소득의 50% 미만이 농업소득, 조사기일 전 1년간 자영농업에 60일 이상 종사하고 있는 65세 미만 세대원이 있는 경영체

▶ 부업적경영체: 조사기일 전 1년간 자영농업에 60일 이상 종사하고 있는 65세 미만 세대원이 없는 경영체

○ 일본은 「농업경영기반강화 촉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중 농업경영 개선계획을 인정받는 농업경영체를 인정농업인으로 구분

- 농업경영개선계획(5년 계획)에는 ① 경영규모 확대, ② 생산방식 합리화, ③ 경영관리 합리화, ④ 농업종사조건 개선등에 대한 5년 후의 목표와 달성방안을 기재해야 함

○ 인정농업인은 세제특례 및 다양한 정책적 혜택 부여

- 농림수산성에서는 ‘후계농업인’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달성했거나 이를 지향하는 경영체”로 정의하고 인정농업자를 이 범주에 포함시킴. 일본 정부는 인정농업자를 비롯한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지원을 집중하여 육성하고자 함(김종인 외, 2015)
- 인정농업인은 ‘농업경영 기반강화 준비금’, 일본 정책금융 공고의 ‘슈퍼 L 자금’, ‘아그리비즈니스 투자 육성’ 등의 보조금 또는 장기저리융자, 농업자연금(보험료가 전액 사회보험료 공제대상이 되는 공적 연금) 및 세제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음
- 다만, ‘농업경영 기반강화 준비금’, 농업자연금 및 세제 특례 등은 청색신고(소득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일본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청색신고’와 ‘백색신고’ 두 가지가 있음
- ▶ 청색신고’는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소득 관련 장부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신고하며, 관련 장부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등 복잡함. 그에 반해 ‘백색신고’는 ‘청색신고’에 비해 장부 작성이 간단하고 간이영수증도 허용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부담이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8. 주요 정책수단의 농업경영체 구분

8.1.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

-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요건인 대상 농지와 대상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와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규정
- 동법 제8조에 따르면, 지급 대상농지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 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²³⁾를 의미함. 따라서,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 사료작물에 이용되는 초지, 지목이 임야²⁴⁾인 토지 등은 기본적으로 대상농지에서 제외됨.
 - 또한, 지급 대상농지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3년 중 1회 이상 소득보전직불금(고정·변동) 또는 밭농업직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03년 1월 1일부터

23)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또는 이에 해당하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정의됨.

24) 다만, 지목이 임야이나 (i)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ii) '16년도 이전부터 현재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며, (iii)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농지로 취급함(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에 해당해야 함.

- 다만, 2017~2019년 직불금 수령 규정은 이 기간 종전의 직불제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직불제를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 등을 정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으로 작용함에 따라 2022년 10월 18일부로 법률에서 제외됨.²⁵⁾ 이외에도 공익직접지불제의 사업 시행 지침서상에는 농지의 특성에 따라 대상농지에서 제외하는 10가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표 3-9 참조).

〈표 3-9〉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요건

구 분	농지	농업인
지급대상	<p>□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p> <p>①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2023년부터 삭제)</p> <p>② 기존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2012~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2003~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 지역에 있는 농지 	<p>□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인</p> <p>① 기존 직불금 수령자: 2016~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p> <p>② 신규 직불금 수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혹은 전업농육성대상자, 신규농업인, 농업승계자, 임대 또는 위탁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급제외 대상	<p>①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p> <p>②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p> <p>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p> <p>④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p> <p>⑤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p> <p>⑥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농지</p> <p>⑦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내 농지</p> <p>⑧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p> <p>⑨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p> <p>⑩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농지 등</p>	<p>①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p> <p>②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p> <p>③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p> <p>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자</p> <p>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자</p> <p>⑥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p> <p>⑦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p> <p>⑧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p>

자료: 김태훈 외(2020).

²⁵⁾ 일부개정 법률은 2023년 4월 19일부로 시행되어, 2024년도 공익직불제에 반영될 예정임.

○ 다음으로 지급대상 농업인등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농업인²⁶⁾ 및 농업법인에 해당하며, 동시에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해야 함.

- ① 기존 직불제 수혜자는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4년 중 1회 이상 소득보전직불금(고정·변동) 또는 밭농업직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급받은 기록이 있어야 함. 이 조항은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며 추가된 조건으로 이는 공익직불금을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와 영농을 지속해온 농가에 우선 지급하기 위해 도입됨(김태훈, 2022).
- ②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업인은 관련 법에 의해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해당되며, 신규농업인²⁷⁾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농업인등이 대상자에 포함됨.
- 다만, 등록신청 직전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²⁸⁾이 3,700만 원²⁹⁾ 이상 또는 등록 연도에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이 1,000㎡ 미만 또는 부정수급하거나³⁰⁾ 그로 인해 처벌을 받은 자에 해당하면 지급대상 농업인등에서 제외되며, 「농지법」 제9조에 따라 농지를 전부 위탁경영하는 경우도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26) 「농어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또는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함. 한편,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경작을 입증하기 위한 경작사실확인서(혹은 임대차계약서)와 농자재 구매 영수증(혹은 농산물 판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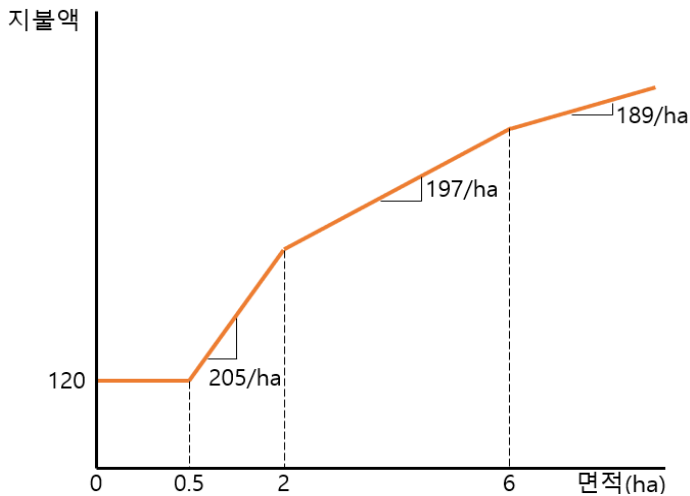
27) 신규농업인은 물적요건으로 0.1ha 이상의 농지(법인: 5ha)에서 경작하거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법인 45백만 원 이상)임을 증빙해야 함.

28)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29) 농외소득 상한 3,700만 원은 2007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을 참조하여 설정된 이래, 각종 조세혜택이나 다수의 정책사업 수혜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

30) 공익직불제에서는 면적직불 또는 소농직불의 지급요건에 대한 검증단계에서 허위서류를 제출 등으로 기본직불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지급대상 농지등을 임의로 분할신청하여 등록 또는 기본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부정수급자로 규정하고 있음(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

〈그림 3-5〉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단가



자료: 이태호(2020).

〈표 3-10〉 소농직불금의 농가 지급요건 및 기준

지급요건	기준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gong/index.do>)

○ 한편, 소농직불금³¹⁾은 정부가 공익직불제의 추진목적으로 제시한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등록 농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31)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지 경작면적이 0.5ha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을 120만 원 미만으로 수령하게 되는 농가 중 소농직불금의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소농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는 농가³²⁾를 대상으로 함. 현행 소농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가 자격 관련 세부 요건은 <표 3-10>과 같음.

○ 대표적인 지자체 사업인 농민수당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면서 국가 보조금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음.

- 공익직불제는 농지보유자를 대상으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농민수당은 농지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지역에 주소지가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음.
- 농민수당 지급금액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다양하며, 대부분 지역사랑 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함.
- 한편,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수당금액이 상이한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전라남도 화순군의 경우 2022년에 농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연 60만 원씩 지급 예정이었던 농민수당을 군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전년 대비 100% 인상한 연 12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음.

<표 3-11> 농민수당 지급 현황(광역자치단체 기준)

지자체 구분 (명칭)	조례 발의 일자	최초 지급 시기	지급 금액	광역 부담 비율	지급대상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021.05.20.	2021	인당 월5만원 (분기15만원)	50%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거주, 1년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농어업경영체 등록 (단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하)
강원도 (농업인수당)	2020.03.06.	2021	가구당 연70만원	60%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거주, 농어업경영체 등록 (단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하)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2020.09.29.	2022	가구당 연50만원	40%	신청년도 기준 3년이상 거주, 농어업경영체 등록 (단 농업외 소득 2,900만원 이하, 5년미만 귀농인 제외)

³²⁾ 농가의 범위는 거주·생계 등을 고려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함. 다만,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농식품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gong/index.do>)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2020.03.10.	2020	가구당 연80만원	40%	2021.1.1.거주, 농어업경영체 등록 (단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하)
전라북도 (농어민공익수당)	2019.10.11.	2020	가구당 연60만원	40%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거주, 농어업경영체 등록·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 (단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하)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2019.10.17.	2020	가구당 연60만원	40%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전라남도 거주 (단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하)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2021.01.04.	2022	가구당 연60만원	40%	2020.12.31.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 (단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하)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2020.06.25.	2022	인당 연30만원	40%	1년이상 경상남도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단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하)

자료: 임지현·문소영(2023).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2년 기준) 검색

8.2.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

○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은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을 낮추고 친환경축산을 늘리기 위해 2013년 2월 도입됨.³³⁾

- 허가대상 농가는 일정수준의 소득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를 준수해야 함. 또한, 지방도로나 축산 관련시설(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등)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함.
- 면적과 사육두수 기준 대규모 축산농가(기업농)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됨. 2013년 대규모 기업농가를 시작으로 2014년 전업농가에 적용된 후, 2015년에는 준전업농가, 2016년에는 사육면적 50㎡ 이상의 전농가로 확대 실시됨.
- 한편, 2016년 2월 23일 이후 소·돼지·닭·오리 사육업의 적정 사육시설 면적은 모두 50㎡ 초과인 일관된 면적으로 기준이 변화됨.

33) 「축산법」 개정(2012.2.22.)으로 축산업 허가제(13.2.23 시행) 도입 근거가 마련됨.

〈표 3-12〉 축산법과 허가·신고제에 따른 축종별 사육규모 분류기준

단위: 마릿수

구 분	기업농	전업농	준전업농	허가(50㎡)	신고(10㎡)
소(젖소)	100	50	30	7	1
돼지	2,000	1,000	500	60	1
닭	50,000	30,000	20,000	100	20
오리	10,000	5,000	3,000	100	20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 관리를 위한 가축사육 농장 현황」, 2021년 12월 기준

○ 농정당국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축종마다 세부적으로 설정해 놓음.

- 예를 들어, 한육우의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은 시설 형태가 방사식일 때, 번식우의 경우 10㎡, 비육우의 경우 7㎡, 송아지의 경우 2.5㎡임.³⁴⁾
- 시설형태가 계류식일 때, 번식우의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은 5㎡, 비육우의 경우 5㎡, 송아지의 경우 2.5㎡임.

〈표 3-13〉 한육우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두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6개월 미만)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시행 2013. 5. 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5호, 2013. 5. 16., 일부개정]

○ 한편, 「가축분뇨법」 제8조에 근거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음 (표 3-14 참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특정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음.

³⁴⁾ 번식우는 번식하는 어미소, 비육우는 고기소로 사육되는 소, 송아지는 6개월령 미만인 소임.

〈표 3-14〉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가축사육 제한구역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1. 주거 밀집지역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제 7조),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 38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 필요 지역
	3.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리지역(「한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등)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4. 생태계 및 인간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한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설정 필요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자료: 정민국·이용건·최진용(2021).

○ 그러나 시·군·구별로 가축사육 제한 범위와 지정 기준이 달라 2015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합동으로 지자체의 조례 지정 현황과 악취 확산예측 결과를 토대로 수정된 가축사육 제한거리 기준을 제안하였음.

- 수정 권고안 기준은 축종별 사육 규모에 따라 다름. 한육우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70m, 젓소는 75~110m, 돼지는 400~1,000m, 가금류는 250~650m로 현행 지자체 조례에서 운영하는 규정보다 완화된 수준임.
- 정부 합동으로 가축사육 제한 수정 권고안을 제안하였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여전히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이 많음.

Ⅳ. 농업경영체 유형화 방안

1. 농업경영체 유형화의 기본방향

○ 본 연구에서 농업경영체 유형화는 3가지 기본방향 하에서 그 방안이 모색됨.

- ① 중장기 농정방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형화, ② 맞춤형 농정과 농업경영 정보 등록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유형화, ③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유형화

1.1. 중장기 농정방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형화

○ 시기별 대내외 여건과 정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농정의 목표는 큰 맥락에서 유사함. 즉,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식량안보 강화, 미래성장을 위한 혁신기반 조성, 농산물 수급안정, 농촌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중장기 농정방향으로 간주할 수 있음.

○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비전은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으로 설정되었으며, 5대 전략으로 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② 미래 농식품산업기반 조성, ③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④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⑤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등이 제시됨.

○ <그림 4-1>의 5가지 전략과 성과목표, 세부추진과제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체 유형화는 생산품목, 영농규모, 경영정보(소득, 수입/지출, 부채 등), 연령(청년농, 고령농), 첨단기술 접목 및 융복합 여부(디지털,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공익적 가치 수행 여부(친환경, 탄소중립, 식품안전, 동물복지 등) 등이 반영되도록 고안될 필요가 있음.

〈그림 4-1〉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비 전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전 략	성과목표		세부추진과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식량 자급률 제고 국내 비축 및 해외곡물 유통망 안정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자급률: ('21) 44.4% → ('27) 55.5 · 밀/콩 자급률: ('21) 1.1/23.7% → ('27) 8.0/4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 식량작물 생산·소비체계 전환 ○ 농지 관리 체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 국내 비축 및 해외 곡물 유통망 안정적 확보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미래에 적합한 농업으로 전환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 3만명 육성 · 스마트농업 보급률: ('22) 온실 12.8%, 축사 19.8% → ('27) 30, 30 · k-Food* 수출 목표: ('22) 118억달러 → ('27) 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 스마트농업 확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구축 ○ R&D 혁신 및 기술창업 활성화 ○ 전략적 국제협력 농정 추진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 푸드테크 산업 육성 ○ K-Food* 수출 확대 ○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및 제도정비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 직접지불제도 개편 농가 경영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 달성 · 농식품펀드 1조원 추가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재해 피해 지원 ○ 농업 경영위험 대응 ○ 직접지불제도 개편 ○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 ○ 농식품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 ○ 농축협의 경제사업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농축산물 유통구조 및 수급관리 체계 개선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 공급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로컬푸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비용 절감: ('20) 48% → ('27) 45 ·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률: ('18~'22) 14.4% → ('23~'27) 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 농축산물 자율적 수급 관리체계 구축 ○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 사전 예방적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원산지 표시 등 소비자 신뢰 확보 ○ 가족 방역체계 고도화 및 민간책임성 강화 ○ 고품질 농식품 공급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로컬푸드 활성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농촌 맞춤형 사회서비스 보장 농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삶의 질 만족도: ('21) 5.7점 → ('27) 6.7 · 농촌 융복합산업규모: ('22) 3.6조원 → ('2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농촌 재생 지원 ○ 농촌 정주여건 개선 ○ 농촌 필수 생활 서비스 지원 ○ 여성농업인, 농촌 거주 여성 지원 ○ 농업·농촌 소득 기반 다각화 ○ 귀농·귀촌 활성화 ○ 농촌 교류·체류 활성화
추진 기반	혁신농정, 현장소통 · 지방중심 농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우량농지 확보·유지,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 전반의 자급률 제고, 이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 등 식량안보 체계 전반의 혁신 등이 요구됨.

- 자급률이 낮은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급률이 높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경영체들을 자급률이 낮은 품목 생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러한 품목 기반의 정책과 경영체가 효과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재배·사육하는 품목 또는 축종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를 구분하는 유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창의적인 청년들이 농업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청년들의 영농 진입과 정착, 성장을 단계에 따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를 경영주 연령과 영농경력을 함께 감안하여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은퇴가 어려운 고령 농업인의 장기 농업종사는 토지와 시설 등 농업생산자원(자산)의 보유 지속으로 이어져 유동성 부족을 낳고, 이는 청년층의 진입장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고령 농업인의 경영 이양을 촉진해 농업인력의 안정적 세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임.
- 그동안 은퇴가 어려운 고령농들이 기계화율이 높고, 위탁경영도 가능한 쌀 생산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청년농업인 육성 등 세대교체는 쌀 생산과잉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³⁵⁾ 농업경영체 유형화는 이러한 생산구조와 인력구조를 함께 고도화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함.

○ 한편, 생산·유통·소비 등 농식품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 농업경영체의 기업적 경영방식 확대,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 미래산업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할 수 있는 유형화가 요구됨.

-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반려동물 관련 산업,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 수출 등 성장잠재

³⁵⁾ 2020년 농업총조사 기준 '경영주 연령별 논벼농가 분포'를 보면 47%가 70세 이상, 80%가 60세 이상이며, 비교적 젊은 50세 미만은 6%대에 불과함.

력이 큰 농식품산업을 첨단기술 접목, 산업간 융합, 민간 투자 활성화, 기업의 자본력·기술력 활용 강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개선 등을 통해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식품 밸류체인 안팎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타산업과 융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경영제도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의 틀 안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자연재해, 농작업재해, 가축전염병 등에 대한 보험·재해대책 확대, 공익직불제 안착과 선택형 직불 확대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가소득 안정을 연계·확대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유형화를 모색해야 함.

- 농산업에 대한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경영, 고용 안정이 필요한 경영체와, 각종 복지제도 등 전반적인 사회안전망 보강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경영체로 구분이 가능할 것임.

○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자율적인 농산물 수급안정제도(계약재배, 자조금 등) 정착, 예방적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농산물 생산·유통 이력관리 확대, 농산물 부정유통 방지, 소비자 신뢰 확보, 가축전염병 대응능력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는 경영체를 육성해야 할 것임.

○ 농촌주민과 도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 탄소중립, 경관, 균형, 복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경영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1.2. 맞춤형 농정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

○ 맞춤형 농정은 정책수혜자(농업경영체)가 자신의 발전 단계(유형)에 따라 정책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만족도와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추진방식임.

- 농정당국은 기존의 전체적, 평균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농업경영체를 유형화한 다음 그 유형에 적합한 정책대상을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하였음. 예를 들어, 시장지향적 정책대상과 사회복지적 정책대상, 산업발전 측면의 정책대상과 지속가능 측면의 정책대상 등

○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는 이러한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고자 2008년에 도입됨. 즉, 농업경영체의 인구학적·경제적 특성과 영농 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함.

- 등록정보인 데이터에 기반한 중앙정부의 과학농정을 구현하고, 지자체가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농정을 지원하며, 농업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맞춤형 농정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의 유형 구분이 선행되어야 함. 이는 맞춤형 농정의 핵심이 농업경영체의 유형별로 그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임.

- 맞춤형 농정이 처음 제기된 2000년대 중반 6개 유형(쌀 전업농, 원예중소농, 축산전업농, 고령복합농, 고령영세농, 부업농)의 농업경영체가 제안되었지만, 실제 농정에서는 반영되지는 못함.
- 2016년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를 활용하여 농가 특성(연령, 경력, 후계농)과 경영 특성(재배면적, 조수입)을 기준으로 경영체를 5가지(창업농, 취미농, 고령농, 일반농, 전문농)로 유형화함. 그러나 정책연계 및 정보관리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음.

○ 농업경영체의 유형화는 맞춤형 농정 추진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유형화가 정책 설계나 정보 활용 관점과 괴리된 채 결정된다면, 농정 및 농업·농촌 현장에서 실제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유형별로 매칭될 수 있는 정책조합, 등록정보의 관리·활용 등을 함께 고려해서 유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즉, 경영체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선택가능한 정책조합들과 연계가 될 수 있어야 하며, 경영체 유형별로 제공해야 하는 등록정보의 활용 목적이 명확하고, 등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등이 용이한 유형화가 생명력을 가질 것임.
- 결국, 농업인 식별 기준(농외소득 상한 포함), 공익직불제의 개편 및 확대, 청년창업농 지원 확대, 은퇴직불제 도입, 스마트팜 육성, 신기술 융복합 장려 등과 같은 주요 농정과 연계가 원활한 유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관리·활용 측면에서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농정추진에 있어 실용성 제고는 농업경영체 유형화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임.

1.3.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유형화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는 크게 5가지 영역(경영주, 종사자, 작물재배, 농업시설, 가축사육)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현행화나 확인·점검 등에서 문제점이 있더라도, 각 농업경영체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어떤 작목(축종)을 얼마나 재배(사육)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임.
- 현재 54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농업경영체(농업인) 등록정보 중에서 경영체 유형을 구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은 경영주 연령, 경영주 영농경력, 경영체 구성원 수, 공동경영주 존재 여부(이상 일반 현황), 농지면적, 시설면적, 축사면적, 사육규모, 재배품목, 사육축종(이상 농지 및 사육 현황) 등으로 제한적임.
- 선행연구와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경영체의 영농규모나 경제규모를 서로 측정·비교할 수 있도록, 모든 경영체에서 산출할 수 있는 기준변수를 활용하여 유형을 구분하였음.

- 모든 농업경영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가능한 화폐 단위로 측정된 농가소득(농업 소득)이나 조수입이 이러한 기준변수 역할을 할 수 있음. 소득이나 생산액을 기준으로 경영체를 구분할 경우, 모든 경영체를 소득(생산액) 구간에 따라 상이한 유형들로 완전히 배분할 수 있음.

○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소득이나 생산액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경영체의 영농규모나 생산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등록정보와는 별개로 생산자원이나 산출물을 금액으로 변환하는 임의의 공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추정된 영농규모나 생산가치를 새로운 기준변수로 삼아야 함.

- 가령, 논, 밭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소유하고 복합영농을 하는 경영체의 영농규모나 벼, 콩, 딸기, 한우 등의 산출물 가치를 하나의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변수를 도출해야 함.
- 농가경제조사는 조수입을 기준으로 해당 농가의 영농형태를 결정하고 있음. 즉, 식량 농가는 조수입의 50% 이상이 식량작물의 판매액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만을 이용할 경우, 복합영농을 하는 경영체를 하나의 영농형태로 특정할 수 없으며, 선행 연구나 해외사례에서도 영농형태를 기준으로 농가나 경영체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었음.
- 화폐 단위로 측정된 소득이나 생산액 정보가 없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 국내에서는 농가의 고정자산(토지 제외, 건물, 기계, 대식물, 대동물)의 가격을 농지가격으로 나누어 경지면적으로 환산한 후 경지면적과 합한 규모의 개념인 표준영농규모(SFS)가 이러한 기준변수로 제안된 바 있음.
- 대표적인 해외사례로는 EU의 표준산출물(SO)이 있음. 이는 총생산의 표준가치로 농가판매가격 기준 각 경영체의 모든 산출물의 평균 금전적 가치로 변환하는 정해진 공식에 따라 산출됨. EU의 모든 농업경영체는 유로로 표시된 경제규모 수준에 따라 14 개의 계층으로 분류됨.

○ 표준영농규모(SFS)나 표준산출물(SO)과 같은 자의적인 변환이나 평준화된 추정을 거

친 기준변수에 따라 경영체 유형을 구분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원자료가 그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일부 변형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존재함.

- 반대로 경영체 유형화 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원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등록정보 관리나 활용(정책연계)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유형화가 이루어지면 당사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뿐만 아니라 농정당국이나 지자체 등도 경영체 유형에 대한 식별이 용이할 수 있고, 유형화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도 최소화될 수 있음.

- 농업경영체의 유형화가 등록정보의 관리 및 활용 관점과 괴리된 채 이루어진다면, 농정 및 농업·농촌 현장에서 실제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유형별로 매칭될 수 있는 정책조합, 등록정보의 관리·활용 등을 함께 고려해서 유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즉, 경영체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선택가능한 정책조합들과 연계가 될 수 있어야 하며, 경영체 유형별로 제공해야 하는 등록정보의 활용 목적이 명확하고, 등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등이 용이한 유형화가 생명력을 가질 것임.

○ 더욱이, 모든 경영체에게 동일한 등록정보를 일률적인 방식으로 요구하는 현행 방식을 경영체 유형화를 계기로 변경하고, 동시에 경영체 유형별 등록정보의 차등화를 추진한다면, 등록정보의 관리·활용에 있어 효율성은 배가될 수 있을 것임.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 기반 경영체 유형 구분

2.1. 개요

○ 2018~2022년 농업경영체 DB 정보를 토대로 농업경영체 유형화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특성별 농업경영체 분포를 산출함.

- 유형화는 데이터 전처리,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표본 데이터 구축,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주성분분석(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계층적 군집분석 및 유형화, 시사점 도출 순으로 진행함.
- 주요 특성별 농업경영체 분포 산출은 유형화를 통해 파악한 농업경영체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DB에 속한 농업경영체들의 분포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함.

○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연도별로 크게 4가지 영역(경영주 정보, 작물재배 정보, 농업시설 정보, 가축사육 정보)으로 구분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연도별 정보를 평균하여, 분석 데이터를 구축함.

○ 분석 데이터에 포함된 농업경영체들은 등록된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 정보에 기반하여 세 주요 유형으로 구분됨: 작물재배 정보만 있는 경종 농업경영체, 가축사육 정보만 있는 축산 농업경영체, 그리고 두 정보가 모두 있는 경축 농업경영체. 이중 경종 및 경축 농업경영체는 시설재배 면적의 존재 유무에 따라 추가로 노지 농업경영체, 시설 농업경영체, 그리고 노지 및 시설 농업경영체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등록 유형에 따른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는 주성분분석 및 군집분석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측 데이터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유형화가 가능하도록 함.

- 노지 경종 농업경영체: 경종 농업경영체 중 노지재배 면적만 있는 농업경영체
-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 경종 농업경영체 중 시설재배 면적만 있는 농업경영체

- 노지 및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 경종 농업경영체 중 노지와 시설재배 면적이 모두 있는 농업경영체
- 노지 경축 농업경영체: 경축 농업경영체 중 노지재배 면적만 있는 농업경영체
-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 경축 농업경영체 중 시설재배 면적만 있는 농업경영체
- 노지 및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 경축 농업경영체 중 노지와 시설재배 면적이 모두 있는 농업경영체
- 축산 농업경영체: 축산 농업경영체

○ 주성분분석 및 군집분석을 위해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로 3,000개의 표본(99% 신뢰 수준, 표본오차 $\pm 3\%$ 이내)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표본 데이터를 구축함.³⁶⁾

- 다만, 경축 농업경영체 중 시설재배 면적만 있는 농업경영체는 총 735호에 불과하여, 표본을 추출하지 않고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 및 군집분석을 시행함.

○ 주성분분석을 통해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표본 데이터에 포함된 주요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 정보(분산 기준)를 축약적으로 반영하는 핵심 주성분들을 추출함.

- 고윳값(eigenvalue) 1 이상인 주성분들을 핵심 주성분으로 선정함.

○ 군집분석은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표본 데이터에 포함된 경영주의 연령 및 영농경력 등 경영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주성분분석 단계에서 추출한 핵심 주성분들(작물재배 및 가축사육 관련 주요 특성)을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군집분석 방법으로는 군집 내 유사성을 중시하는 Ward 방법과 제곱유클리드 거리 측정 방식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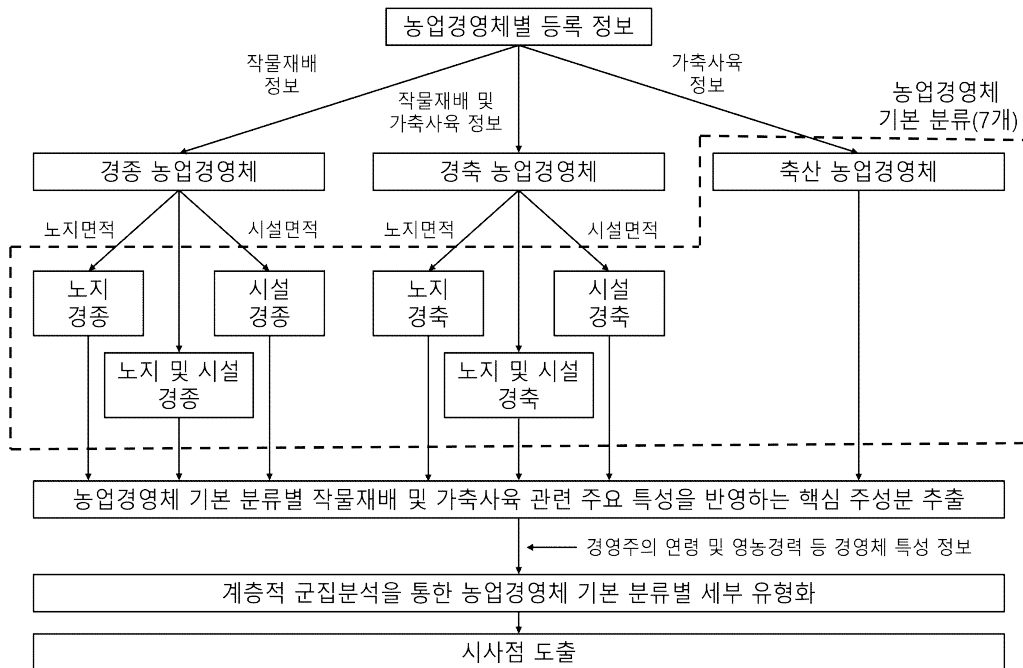
- Ward 방법은 군집 내 분산과 연관된 오차제곱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군집을 형성하므로 군집 내 유사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이 방법은 제곱유클리드 거리와

³⁶⁾ 분석 데이터에 포함된 농업경영체의 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일반적인 컴퓨팅 환경에서는 군집분석이 불가능함에 따라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함.

연관된 수식을 사용하므로, 보통 제곱유클리드 거리 측정 방식과 함께 사용함.

- 최종적으로, 덴드로그램을 바탕으로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적정 유형의 개수를 결정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함.

〈그림 4-2〉 유형화 개요도



출처: 저자 작성.

2.2. 농업경영체 유형화

2.2.1.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 및 표본 정보

- 2018~2022년 기간 1회 이상 농업경영체 DB에 등록한 농업경영체 수³⁷⁾는 2,044,059호이며, 이중 경종 농업경영체는 91.66%, 경축 농업경영체는 6.87%, 축산 농업경영체

는 1.47%를 차지함.

- 경종 농업경영체 1,873,567호 중 노지재배 면적만 있는 농업경영체, 시설재배 면적만 있는 농업경영체, 노지 및 시설재배 면적이 모두 있는 농업경영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6.28%, 1.92%, 11.80%임.
- 경축 농업경영체 140,485호 중 노지재배 면적만 있는 농업경영체, 시설재배 면적만 있는 농업경영체, 노지 및 시설재배 면적이 모두 있는 농업경영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0.78%, 0.52%, 18.70%임.

〈표 4-1〉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농업경영체 수

구분	경종 농업경영체	경축 농업경영체	축산 농업경영체	합계
노지재배 면적만 있는 농업경영체	1,616,503	113,484	-	1,729,987
시설재배 면적만 있는 농업경영체	36,022	735	-	36,757
노지 및 시설 면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221,042	26,266	-	247,308
합계	1,873,567	140,485	30,007	2,044,059

출처: 저자 작성.

-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표본은 모두 99% 신뢰수준과 표본오차 $\pm 3\%$ 를 만족하는 3,000호 크기로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모집단과 표본의 대표적인 특성 변수들의 평균과 분산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남.
-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는 모집단의 크기가 735호에 불과하여, 표본을 추출하지 않고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 및 군집분석을 시행함.

37)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농업경영체 수는 2,055,674호이나, 이중 583호는 경종 또는 경축 농업경영체이나 재배면적이 없거나 결측임. 또한, 11,032호는 축산 또는 경축 농업경영체이나 가축사육 수량이 없거나 결측임. 따라서 이들 농업경영체를 제외한 2,044,059호의 농업경영체만 분석에 활용함.

〈표 4-2〉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모집단과 표본의 평균 및 분산

구분		모집단		표본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노지 경종 농업경영체	경영주 연령	64.9	12.4	64.9	12.2
	경영주 영농경력(년)	25.1	20.5	25.3	20.2
	자영 비율(%)	68.3	40.2	68.4	40.2
	재배면적(㎡)	6,417.9	12,883.7	6,504.8	13,967.2
	재배작물 수	2.7	1.8	2.8	1.8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	경영주 연령	56.9	12.9	56.9	12.9
	경영주 영농경력(년)	18.6	16.6	18.8	16.7
	자영 비율(%)	48.7	46.9	48.6	46.7
	재배면적(㎡)	5,830.3	11,556.4	5,982.7	16,632.8
	재배작물 수	1.3	0.6	1.3	0.6
노지 및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	경영주 연령	63.4	11.6	63.2	11.5
	경영주 영농경력(년)	29.2	18.6	28.6	18.6
	자영 비율(%)	63.5	37.2	64.0	37.0
	재배면적(㎡)	13,900.4	22,031.3	13,324.3	20,355.2
	재배작물 수	4.1	2.0	4.1	2.0
노지 경축 농업경영체	경영주 연령	63.1	11.4	62.6	11.6
	경영주 영농경력(년)	31.1	16.9	30.9	16.8
	경종자영 비율(%)	61.0	37.2	60.2	37.3
	재배면적(㎡)	17,475.1	33,471.1	18,121.6	32,131.1
	재배작물 수	3.6	2.0	3.5	2.0
	사육축종 수	1.1	0.4	1.1	0.5
	축산자영 비율(%)	88.0	28.5	87.7	29.2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	경영주 연령	58.5	11.5	-	-
	경영주 영농경력(년)	23.4	16.0	-	-
	경종자영 비율(%)	59.3	45.2	-	-
	재배면적(㎡)	5,335.9	18,321.5	-	-
	재배작물 수	1.3	0.6	-	-
	사육축종 수	1.1	0.4	-	-
	축산자영 비율(%)	77.5	38.6	-	-
노지 및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	경영주 연령	62.9	9.6	63.2	9.3
	경영주 영농경력(년)	34.1	14.5	34.3	14.5
	경종자영 비율(%)	57.8	33.0	58.2	32.8
	재배면적(㎡)	28,226.0	37,044.5	27,811.2	36,332.4
	재배작물 수	5.2	2.2	5.2	2.2
	사육축종 수	1.1	0.4	1.1	0.4
	축산자영 비율(%)	77.5	38.6	77.5	38.6
축산 농업경영체	경영주 연령	56.5	13.0	56.3	13.0
	경영주 영농경력(년)	15.5	14.1	15.6	14.1
	자영 비율(%)	71.3	41.2	71.0	41.2
	사육축종 수	1.1	0.4	1.1	0.4

주: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 모집단의 크기가 735호에 불과하여, 표본을 추출하지 않고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 및 군집분석을 시행함.

출처: 저자 작성.

2.2.2. 경종 농업경영체 유형화

○ 농업경영체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에 앞서 농업경영체 수 기준 상위 10개 재배작물의 표준화된 재배면적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함. 이를 통해 주요 작물재배 정보를 축약적으로 반영하는 핵심 주성분들(고유킵 1이상인 주성분들)을 추출하고, 해당 주성분들을 군집분석에서 작물재배 정보를 반영하는 변수들로 활용함.

- 노지 경종 농업경영체 상위 10개 재배작물은 미곡류, 조미채소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두류, 서류, 엽경채류, 잡곡류, 산채류, 수실류이며, 총 4개의 핵심 주성분이 추출됨.
-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 상위 10개 재배작물은 과일과채류, 엽경채류, 조미채소류, 과실류, 과채류, 버섯류, 양채류, 기타화훼, 관엽식물류, 서류이며, 총 6개의 핵심 주성분이 추출됨.
- 노지 및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 상위 10개 재배작물은 과실류, 과일과채류, 과채류, 관상수류, 관엽식물류, 구근류, 근채류, 기타화훼, 난류, 두류이며, 총 5개의 핵심 주성분이 추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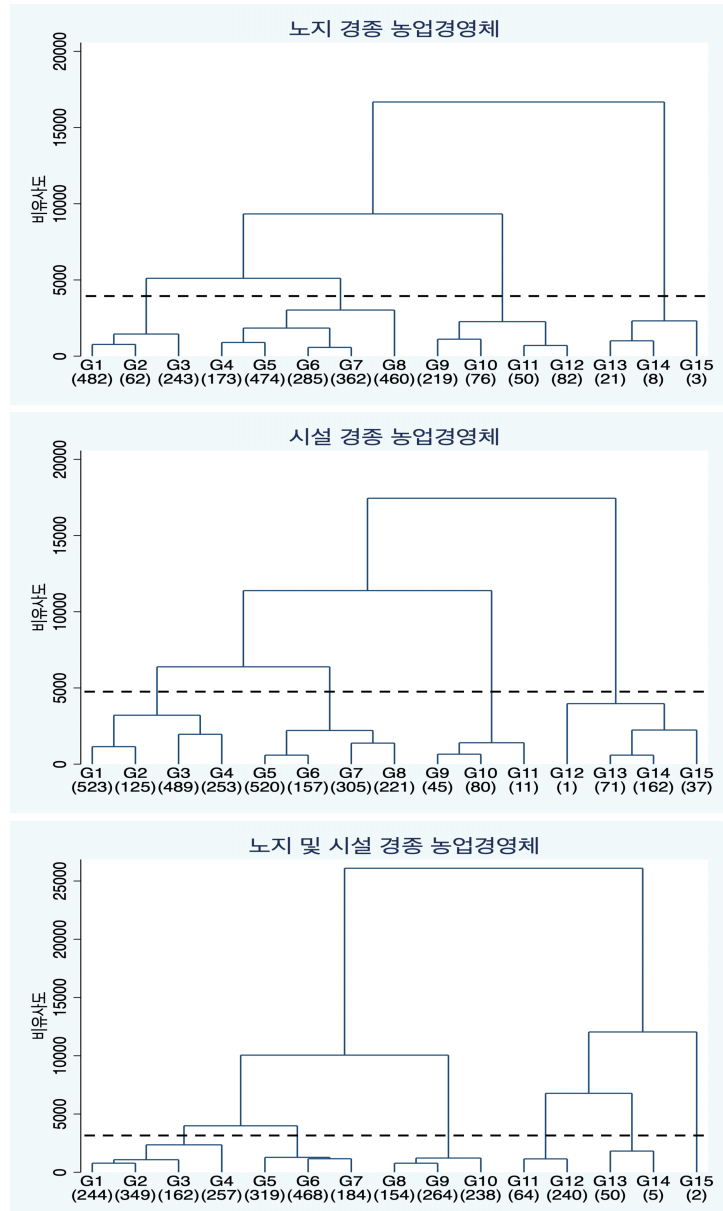
○ 군집분석은 경영체의 주요 특성 변수들과 주성분분석 단계에서 추출한 핵심 주성분들(작물재배 관련 주요 특성)을 활용하여 실시함.

- 경영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로는 경영주의 연령, 영농경력, 자영 비율, 농지 주소 수³⁸⁾, 총 재배면적, 재배작물 수를 이용하였으며, 이들은 측정 단위의 차이를 고려하여 표준화된 값으로 군집분석에 사용됨.
- 단, 노지 및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들의 경영체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에는 노지재배 면적 비중을 추가함.

○ 이후 군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지 경종 농업경영체,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 노지 및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의 적정 유형 수를 각각 4개, 4개, 6개로 선정함.

³⁸⁾ 농지 주소수는 경영체가 등록한 농지의 읍면동 주소의 개수로, 농지의 지역 집중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함.

〈그림 4-3〉 경종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덴드로그램



주: 점선은 유형 선정 기준선이며, G()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유형에 속하는 농업경영체 수를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 노지 경종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음.

- 유형1(26.23%): 연령과 영농경력이 가장 많은 유형임. 재배면적이 0.53ha로 작고, 주로 과실류와 미곡류를 재배하며, 특히 미곡류 재배면적 비율이 39.53%로 가장 높은 유형임.
- 유형2(58.47%): 전체 노지 경종 농업경영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연령과 영농경력 및 재배면적이 가장 적고, 자영 비율은 73.62%로 가장 높음. 작물 재배 경향은 유형1과 유사하며, 과실류 재배면적 비율이 19.52%로 가장 높은 유형임.
- 유형3(14.23%): 유형1과 연령과 영농경력은 유사하나, 상대적으로 넓은 1.50ha의 재배면적을 보유한 유형임. 주로 두류, 미곡류, 조미채소류, 특용작물류를 재배하며, 특히 특용작물류 재배면적 비율이 16.05%로 가장 높은 유형임.
- 유형4(1.07%): 전체 노지 경종 농업경영체의 단 1.07%만이 속하는 재배면적이 초대형인 유형으로, 재배면적이 6.95ha로 다른 유형에 비해 4배 이상 넓음. 주로 두류, 미곡류, 조미채소류를 재배하며, 특히 두류와 조미채소류 재배면적 비율이 각각 17.0%와 23.97%로 가장 높은 유형임.

〈표 4-3〉 노지 경종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연령	74.95	58.76	71.82	64.30
영농경력(년)	46.16	11.84	41.58	36.03
총 재배면적(m ²)	5,279	3,829	15,037	69,494
재배작물 수	2.52	2.58	3.95	4.50
자영 비율(%)	65.89	73.62	53.60	43.91
농지 주소수	1.25	1.23	1.64	2.42
과실류 면적비율(%)	18.94	19.52	2.62	0.97
두류 면적비율(%)	6.10	5.25	13.10	17.00
미곡류 면적비율(%)	39.53	30.83	36.13	37.91
산채류 면적비율(%)	1.66	2.22	1.28	0.08
서류 면적비율(%)	3.14	4.38	3.25	1.54
수실류 면적비율(%)	2.56	2.52	1.43	0.00
엽경채류 면적비율(%)	2.52	2.90	2.51	1.96
잡곡류 면적비율(%)	1.78	2.57	2.91	0.97
조미채소류 면적비율(%)	8.72	8.67	13.04	23.97
특용작물류 면적비율(%)	6.56	8.32	16.05	6.61
농업경영체 수	787	1,754	427	32

주1: 유형별 특성 비교에 사용한 변수들은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임.

주2: 모든 값은 평균 값임.

출처: 저자 작성.

○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는 경종 농업경영체 중 경영주의 연령 및 영농경력이 가장 적은 유형으로,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음.

- 유형1(46.33%): 전체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의 46.33%가 속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재배면적과 자영 비율이 각각 0.54ha와 4.26%에 불과함. 주로 과일과채류, 과채류, 엽경채류를 재배하며, 특히 과채류 재배면적 비율이 10.10%로 가장 높은 유형임.
- 유형2(40.10%): 전체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의 40.10%가 속하는 두 번째로 큰 유형으로 유형1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나, 자영 비율이 92.77%로 가장 높음. 주로 과일과채류, 버섯류, 엽경채류를 재배하며, 특히 버섯류와 엽경채류 재배면적 비율이 각각 12.39%와 24.23%로 가장 높은 유형임.
- 유형3(4.53%): 전체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의 4.53%가 속한 가장 작은 유형. 영농경력이 26.83년으로 가장 많고, 다른 유형에 비해 재배면적이 약 3배 이상 넓은 2.36ha이나, 자영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46.42%임. 주로 과일과채류, 엽경채류, 조미채소류를 재배하며, 특히 과일과채류와 조미채소류 재배면적 비율이 각각 54.44%와 20.58%로 가장 높은 유형임.
- 유형4(9.03%): 과실류 재배면적 비율이 84.04%인 과실류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유형임.

〈표 4-4〉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연령	56.01	57.77	58.27	57.04
영농경력	18.18	17.99	26.83	21.45
총 재배면적(m ²)	5,390	4,276	23,596	7,763
재배작물 수	1.31	1.30	1.72	1.11
자영 비율(%)	4.26	92.77	46.42	80.87
농지 주소수	1.06	1.06	1.43	1.12
과실류 면적비율(%)	6.18	4.08	0.14	84.04
과일과채류 면적비율(%)	32.10	25.79	54.44	0.15
과채류 면적비율(%)	10.10	6.93	0.97	0.41
관엽식물류 면적비율(%)	1.16	1.15	0.00	8.85
기타화훼 면적비율(%)	2.03	1.87	0.00	4.61
버섯류 면적비율(%)	5.41	12.39	0.00	0.37
서류 면적비율(%)	0.86	0.76	5.73	0.00
양채류 면적비율(%)	2.94	0.95	1.66	0.35
엽경채류 면적비율(%)	22.39	24.23	15.08	0.27
조미채소류 면적비율(%)	7.49	9.95	20.58	0.09
농업경영체 수	1,390	1,203	136	271

주1: 유형별 특성 비교에 사용한 변수들은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임.

주2: 모든 값은 평균 값임.

출처: 저자 작성.

○ 노지 및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음.

- 유형1(33.73%): 전체 노지 및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의 33.73%가 속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연령과 영농경력이 가장 많고 약 1.20ha의 재배면적을 보유함. 주로 미곡류와 조미채소류를 재배함.
- 유형2(32.37%): 전체 노지 및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의 32.37%가 속하는 두 번째로 큰 유형으로, 재배면적 및 영농경력은 가장 적으나, 자영 비율은 74.02%로 가장 높음. 주로 과실류, 미곡류, 조미채소류를 재배하며, 특히 과실류 재배면적 비율이 18.52%로 가장 높은 유형임.
- 유형3(21.87%): 노지재배 면적 비율이 28.36%로 가장 낮은, 시설 재배를 주로 하는 유형으로, 재배면적은 약 0.89ha임. 주로 과실류, 과일과채류, 미곡류, 엽경채류를 재배하며, 특히 과일과채류와 엽경채류 재배면적 비율이 각각 23.19%와 14.26%로 가장 높은 유형임.
- 유형4(10.13%): 유형1과 노지재배 면적 비율 및 전반적인 작물재배 경향이 유사한 유형임. 그러나, 유형1에 비해 재배면적은 약 3배 정도 넓은 3.71ha이며, 자영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48.84%임. 유형1과 같이 미곡류와 조미채소류를 주로 재배함.
- 유형5(1.83%): 전체 노지 및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의 1.83%가 속하는 작은 유형임. 노지재배 면적 비율이 94.72%에 달하고, 재배면적은 9.27ha로 매우 넓으나, 자영 비율은 29.52%에 불과함. 주로 미곡류와 조미채소류를 재배하며, 이들의 재배면적 비율은 각각 52.87%와 14.16%로 모든 노지 및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 유형 중 가장 높음.
- 유형6(0.07%): 전체 노지 및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 중 단 0.07%만이 속하는 재배면적이 초대형인 유형임. 유형5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재배면적은 23.39ha로 유형5의 약 2.5배에 달함. 주로 미곡류와 특용작물류를 재배하며, 특히 특용작물류 재배면적 비율이 32.95%로 가장 높은 유형임.

〈표 4-5〉 노지 및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연령	69.30	59.01	60.30	63.66	59.51	57.70
영농경력(년)	42.68	13.58	25.73	35.38	33.35	30.00
총 재배면적(㎡)	12,026	5,287	8,901	37,052	92,700	233,855
재배작물 수	4.41	3.92	3.12	5.25	6.44	8.50
자영 비율(%)	64.71	74.02	58.01	48.84	29.52	27.98
농지 주소수	1.67	1.31	1.35	1.88	3.64	5.00
노지 비율(%)	86.54	83.43	28.36	88.88	94.77	99.73
과실류 면적비율(%)	8.79	18.52	15.37	1.61	1.41	0.64
과일과채류 면적비율(%)	4.08	3.44	23.19	3.43	3.51	0.00
과채류 면적비율(%)	1.33	1.63	5.86	1.52	0.82	0.15
두류 면적비율(%)	5.86	5.61	2.22	8.65	7.15	1.41
미곡류 면적비율(%)	39.95	17.96	10.62	47.85	52.87	46.50
서류 면적비율(%)	4.41	5.98	2.20	2.87	4.59	0.00
엽경채류 면적비율(%)	5.24	7.26	14.26	1.88	2.00	3.76
잡곡류 면적비율(%)	1.74	3.18	0.46	2.76	2.49	0.00
조미채소류 면적비율(%)	10.73	13.63	8.65	13.54	14.16	9.75
특용작물류 면적비율(%)	6.91	8.56	2.87	6.37	1.86	32.95
농업경영체 수	1,012	971	656	304	55	2

주1: 유형별 특성 비교에 사용한 변수들은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임.

주2: 모든 값은 평균 값임.

출처: 저자 작성.

2.2.3. 경종 농업경영체 유형화

○ 농업경영체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농업경영체 수 기준 상위 10개 재배 및 사육 품목(작물 및 가축)의 표준화된 재배면적 및 사육수량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함. 이 과정을 통해 주요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 정보를 축약적으로 반영하는 핵심 주성분들(고유킵 1이상인 주성분들)을 추출하고, 해당 주성분들을 군집분석에서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 정보를 반영하는 변수들로 활용함.

- 노지 경종 농업경영체 상위 10개 재배 및 사육 품목은 한우, 미곡류, 조미채소류, 특용작물류, 두류, 과실류, 조사료, 서류, 잡곡류, 벌이며, 총 4개의 핵심 주성분이 추출됨.
-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 상위 10개 재배 및 사육 품목은 과일과채류, 벌, 한우, 조미채소류, 엽경채류, 버섯류, 과실류, 곤충, 과채류, 산양이며, 총 5개의 핵심 주성분이

추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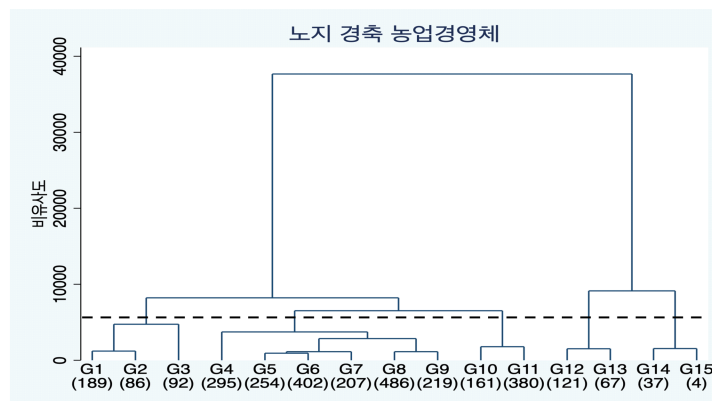
- 노지 및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 재배 및 사육 품목은 조미채소류, 미곡류, 한우, 특용작물류, 두류, 과실류, 서류, 엽경채류, 잡곡류, 서류, 엽경채류, 잡곡류, 조사료이며, 총 4개의 핵심 주성분이 추출됨.

○ 군집분석은 경영체의 주요 특성 변수들과 주성분분석 단계에서 추출한 핵심 주성분들(작물재배 및 가축사육 관련 주요 특성)을 활용하여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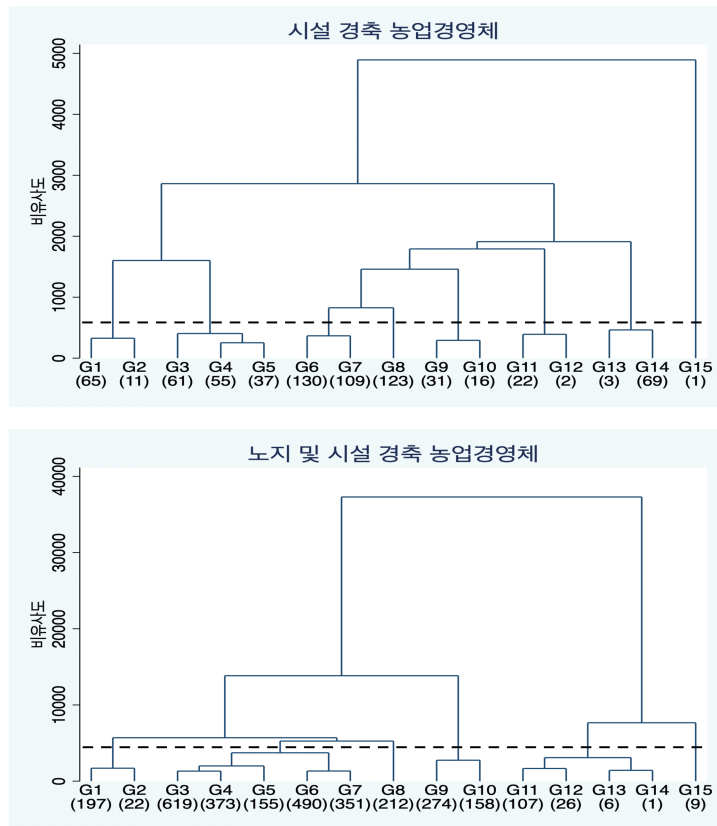
- 경영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로는 경영주의 연령, 영농경력, 경종 및 축산 자영 비율, 농지 및 축사 주소수³⁹⁾, 총 재배면적, 재배작물 수, 사육축종 수를 이용하였으며, 이들은 측정 단위의 차이를 고려하여 표준화된 값으로 군집분석에 사용됨.
- 단, 노지 및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들의 경영체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에는 노지재배 면적 비중을 추가함.

○ 이후 군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지 경축 농업경영체,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 노지 및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의 적정 유형 수를 각각 5개, 8개, 6개로 선정함.

〈그림 4-4〉 경축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덴드로그램



³⁹⁾ 농지 및 축사 주소수는 경영체가 등록한 농지 및 축사의 읍면동 주소의 개수로, 농지 및 축사의 지역 집중도를 나타내는 변수임.



주: 점선은 유형 선정 기준선이며, G()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유형에 속하는 농업경영체 수를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 노지 경축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음.

- 유형1(12.23%): 영농경력이 26.91년으로 가장 적고, 다른 유형들이 주로 한 가지 축종을 사육하는 반면, 이 유형은 두 가지 축종을 사육함. 재배면적은 0.95ha이며 주로 미곡류와 조사료를 재배함. 벌 사육수량은 상대적으로 많은 15.41군임.
- 유형2(62.10%): 전체 노지 경축 농업경영체의 62.10%를 차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재배면적이 0.71ha로 가장 적음. 주로 과실류와 미곡류를 재배하며, 특히 과실류 재배면적 비율이 15.68%로 가장 높고 벌 사육수량도 18.51군으로 가장 많은 유형임.
- 유형3(18.03%): 축산 부문 자영 비율과 미곡류 재배면적 비율이 각각 97.21%와

49.01%로 가장 높은 유형임. 재배면적은 2.63ha이며, 주로 미곡류와 조사료를 재배함.

- 유형4(6.27%): 재배면적이 8.02ha로 두 번째로 넓으나, 경종 부분 자영 비율이 41.80%로 낮은 유형임. 주로 미곡류와 조사료를 재배하고, 한우 사육수량이 61.58마리로 가장 많은 유형임.
- 유형5(1.37%): 전체 노지 경축 농업경영체의 단 1.37%만이 속하는 재배면적이 초대형인 유형으로, 재배면적이 20.40ha에 이르나, 경종 부분 자영 비율은 30.25%로 가장 낮음. 주로 미곡류와 조사료를 재배하고, 한우 사육수량이 59.94마리로 노지 경축 농업경영체 유형 중 두 번째로 많음.

〈표 4-6〉 노지 경축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연령	58.09	63.72	63.69	59.67	53.78
영농경력(년)	26.91	30.16	35.64	33.63	28.77
총 재배면적(㎡)	9,546	7,082	26,293	80,197	204,034
재배작물 수	2.91	3.13	4.51	5.03	5.15
사육축종 수	2.11	1.00	1.01	1.07	1.12
경종자영 비율(%)	67.05	63.11	53.94	41.80	30.25
축산자영 비율(%)	86.29	84.76	97.21	91.64	92.44
농지 주소수	1.51	1.25	2.26	2.86	5.07
축사 주소수	1.20	1.00	1.00	1.05	1.04
과실류 면적비율(%)	9.57	15.68	4.73	2.21	0.27
두류 면적비율(%)	5.71	6.66	6.27	5.26	2.97
미곡류 면적비율(%)	29.67	34.16	49.01	48.30	46.97
서류 면적비율(%)	2.25	3.66	1.34	2.57	0.19
잡곡류 면적비율(%)	5.97	3.76	2.46	0.95	0.28
조미채소류 면적비율(%)	8.26	9.68	8.35	5.97	2.47
조사료 면적비율(%)	16.23	5.68	12.48	20.72	37.64
특용작물류 면적비율(%)	7.96	7.17	4.59	1.68	1.11
별 사육수량	15.41	18.51	2.61	3.40	0.24
한우 사육수량	27.68	10.15	28.59	61.58	59.94
농업경영체 수	367	1,863	541	188	41

주1: 유형별 특성 비교에 사용한 변수들은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임.

주2: 모든 값은 평균 값임.

출처: 저자 작성.

○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는 경축 농업경영체 중 경영주의 연령 및 영농경력이 가장 적은 유형으로,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음.

- 유형1(10.34%): 연령과 영농경험이 가장 많으며, 과일과채류 재배면적 비율이 78.16%로 가장 높고, 벌 사육수량도 128.87군으로 가장 많은 유형임.
- 유형2(20.82%): 연령, 영농경험, 재배면적, 경종 부문 자영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유형임. 곤충 사육수량은 328만 마리로 가장 많으나, 축산 부문 자영 비율은 10.83%로 가장 낮은 유형임.
- 유형3(32.52%): 전체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의 32.52%가 속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경종 및 축산 부문 자영 비율이 각각 95.23%와 99.83%로 매우 높음. 재배면적은 0.32ha이며, 과실류 재배면적 비율이 12.46%로 가장 높은 유형임.
- 유형4(16.73%): 유형2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보이나, 축산 부문 자영 비율이 유형2와 달리 96.65%로 매우 높은 유형임. 이 유형의 경종 부문 자영 비율은 7.31%로 모든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 유형 중 가장 낮음.
- 유형5(6.39%): 재배면적은 0.28ha로 가장 적지만, 사육축종 수가 2.40으로 가장 많고 특히, 산양 사육수량이 13.35마리로 가장 많은 유형임.
- 유형6(3.27%): 연령과 영농경험이 가장 적고, 버섯류 재배면적 비율이 25.00%로 가장 높은 유형임.
- 유형7(9.80%): 엽경채류와 조미채소류 재배면적 비율이 각각 19.73%와 22.19%로 가장 높고, 경종 및 축산 부문 자영 비율도 각각 78.10%와 97.36%로 매우 높은 유형임. 이 유형의 한우 사육수량은 59.27마리로, 대부분 10마리 미만인 다른 유형들에 비해 많은 편임.
- 유형8(0.14%): 전체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 중 단 0.14%만이 속하는 경영규모가 초대형인 유형임. 경종 및 축산 부문에서 자영 비율이 100%에 이르며, 다른 유형들이 평균 1ha 미만의 재배면적을 가진 것에 비해, 이 유형은 45.42ha의 재배면적을 가짐. 또한, 한우 사육수량이 213.60마리에 달해, 다음으로 한우를 많이 사육하는 유형5와 비교했을 때 약 3.6배 더 많은 수를 사육함.

〈표 4-7〉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유형7	유형8
연령	62.50	56.90	60.13	56.11	58.88	54.12	57.17	62.00
영농경력(년)	30.35	20.21	24.25	20.19	25.99	17.95	25.72	26.00
총 재배면적(m ²)	9,466	3,854	3,218	4,144	2,848	3,402	9,087	464,220
재배작물 수	1.24	1.24	1.33	1.33	1.40	1.29	1.35	1.00
사육축종 수	1.00	1.02	1.00	1.00	2.40	1.29	1.01	2.00
경종자영 비율(%)	62.76	33.29	95.23	7.31	58.34	65.46	78.10	100.00
축산자영 비율(%)	85.11	10.83	99.83	96.65	88.28	76.99	97.36	100.00
농지 주소수	1.27	1.05	1.04	1.09	1.03	1.10	1.07	1.00
축사 주소수	1.01	1.00	1.00	1.00	1.03	1.94	1.03	1.00
과실류 면적비율(%)	6.58	9.83	12.46	7.87	3.38	2.34	11.28	0.00
과일과채류 면적비율(%)	78.16	36.38	28.74	27.85	15.62	34.97	19.48	0.00
과채류 면적비율(%)	1.64	4.71	3.88	7.22	8.74	10.42	7.75	0.00
버섯류 면적비율(%)	1.32	15.37	19.61	10.10	20.49	25.00	11.11	100.00
엽경채류 면적비율(%)	5.39	9.79	9.13	17.04	19.36	4.29	19.73	0.00
조미채소류 면적비율(%)	2.05	12.18	15.60	10.52	14.51	12.38	22.19	0.00
곤충 사육수량	0	3,281,673	6,246	2,456,245	14,043	66,948	0	0
벌 사육수량	128.87	37.94	12.68	7.60	8.94	23.80	1.53	0.00
산양 사육수량	1.05	1.24	4.28	5.45	13.35	1.75	0.56	0.00
한우 사육수량	0.67	2.70	3.45	4.98	5.01	6.79	59.27	213.60
농업경영체 수	76	153	239	123	47	24	72	1

주1: 유형별 특성 비교에 사용한 변수들은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임.

주2: 모든 값은 평균 값임.

출처: 저자 작성.

○ 노지 및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음.

- 유형1(7.30%): 다른 유형들이 주로 한 가지 축종을 사육하는 것과 달리, 이 유형은 두 가지 축종을 사육하며, 축산 부문 자영 비율이 94.48%로 매우 높은 유형임. 재배면적은 1.94ha이며, 노지재배 면적 비율은 89.94%로, 주로 과실류, 미곡류, 조미채소류를 재배함. 한우 사육수량은 18.11마리로 적은 편임.
- 유형2(66.27%): 전체 노지 및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의 66.27%를 차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 전반적인 특성은 유형1과 유사하지만, 사육하는 축종 수는 한 가지임.
- 유형3(7.07%): 재배면적이 0.92ha로 가장 작고, 노지재배 면적 비율도 26.97%로 가장 낮은 유형. 주로 과실류, 미곡류, 조미채소류를 재배하며, 특히 조미채소류 재배면적 비율이 13.21%로 가장 높은 유형이나, 한우 사육수량은 10.55마리로 가장 적음.
- 유형4(14.40%): 이 유형은 5.60ha의 재배면적과 35.41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

으며, 이는 노지 및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 유형들 중 중간 규모에 해당함. 축산 부문 자영 비율은 91.01%로 높지만, 경종 부문 자영 비율은 42.45%로 상대적으로 낮음. 주로 미곡류를 집중적으로 재배하며, 미곡류 재배면적 비율은 50.08%임.

- 유형5(4.67%): 이 유형은 12.98ha의 재배면적과 50.23마리의 한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노지 및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 유형 중 대규모에 해당함. 축산 부문 자영 비율은 92.20%로 높지만, 경종 부문 자영 비율은 31.32%로 가장 낮음. 미곡류와 조사료 재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배면적 비율은 각각 51.65%와 20.71%임.
- 유형6(0.30%): 전체 노지 및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 중 단 0.30%만이 속하는 경영규모가 초대형인 유형으로, 재배면적과 한우 사육수량은 각각 33.28ha와 93.72마리임. 주로 미곡류와 조사료를 재배하며, 특히 조사료 재배면적 비율(44.99%)이 미곡류 재배면적 비율(30.25%)보다 높은 유일한 유형임.

〈표 4-8〉 노지 및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연령	62.19	64.65	58.99	61.04	58.22	53.78
영농경력(년)	32.30	35.32	25.62	35.47	33.17	29.93
총 재배면적(㎡)	19,391	16,041	9,161	55,999	129,776	332,834
재배작물 수	5.14	5.06	3.12	6.41	6.96	6.78
사육축종 수	2.24	1.00	1.10	1.01	1.19	1.22
경종자영 비율(%)	65.81	62.44	61.15	42.45	31.32	39.93
축산자영 비율(%)	94.48	91.68	80.72	91.01	92.20	100.00
농지 주소수	1.79	1.52	1.41	3.17	4.64	3.67
축사 주소수	1.11	1.00	1.00	1.02	1.03	1.00
노지 비율(%)	89.94	88.62	26.97	93.34	97.44	99.24
과실류 면적비율(%)	10.54	7.77	11.86	3.43	0.80	0.39
두류 면적비율(%)	6.31	6.46	2.67	5.61	3.80	7.47
미곡류 면적비율(%)	34.16	39.24	10.38	50.08	51.65	30.25
서류 면적비율(%)	2.77	2.81	1.26	2.17	2.00	0.62
엽경채류 면적비율(%)	3.81	3.52	10.13	2.43	1.11	0.89
잡곡류 면적비율(%)	4.06	3.95	0.83	3.03	1.34	0.96
조미채소류 면적비율(%)	10.41	10.47	13.21	5.93	4.94	4.93
조사료 면적비율(%)	8.52	3.39	0.97	9.04	20.71	44.99
특용작물류 면적비율(%)	6.00	5.78	1.77	2.33	1.81	0.01
한우 사육수량	18.11	15.41	10.55	35.41	50.23	93.72
농업경영체 수	219	1,988	212	432	140	9

주1: 유형별 특성 비교에 사용한 변수들은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임.

주2: 모든 값은 평균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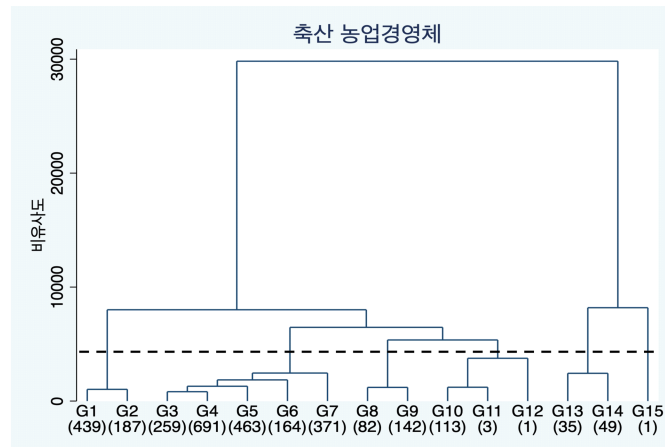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2.2.4. 축산 농업경영체 유형화

- 농업경영체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농업경영체 수 기준 상위 10개 사육축종의 표준화된 사육수량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함. 이 과정을 통해 주요 가축사육 정보를 축약적으로 반영하는 핵심 주성분들(고유킷값 1이상인 주성분들)을 추출하고, 해당 주성분들을 군집분석에서 가축사육 정보를 반영하는 변수들로 활용함.
 - 축산 농업경영체 상위 10개 사육축종은 한우, 벌, 육용계, 돼지, 육우, 산양, 젓소, 곤충, 개, 산란계이며, 총 7개의 핵심 주성분이 추출됨.
- 군집분석은 경영체의 주요 특성 변수들과 주성분분석 단계에서 추출한 핵심 주성분들(가축사육 관련 주요 특성)을 활용하여 실시함.
 - 경영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로는 경영주의 연령, 영농경력, 자영 비율, 축사 주소수⁴⁰⁾, 사육축종 수를 이용하였으며, 이들은 측정 단위의 차이를 고려하여 표준화된 값으로 군집분석에 사용됨.
- 이후 군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 농업경영체의 적정 유형 수를 6개로 선정함.

⁴⁰⁾ 농지 및 축사 주소수는 경영체가 등록한 농지 및 축사의 읍면동 주소의 개수로, 농지 및 축사의 지역 집중도를 나타내는 변수임.

〈그림 4-5〉 축산 농업경영체 덴드로그램



주: 점선은 유형 선정 기준선이며, G()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유형에 속하는 농업경영체 수를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 축산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음.

- 유형1(20.87%): 자영 비율이 1.85%에 불과한 유형, 주로 중소형 농업경영체들로 구성됨.
- 유형2(64.93%): 전체 축산 농업경영체의 64.93%를 차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자영 비율이 91.62%로 매우 높은 유형임. 이 유형은 주로 중대형 농업경영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젓소 및 육우를 사육하는 농업경영체는 소규모임.
- 유형3(7.47%): 젓소 및 육우를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수가 가장 많고 평균적으로 두 종 이상의 축종을 사육하는 중소규모 농업경영체들로 구성된 유형임. 다만, 사슴을 사육하는 농업경영체의 평균 사육규모는 모든 유형들 중 가장 큼.
- 유형4(3.90%): 축사 위치(읍면동 기준)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축종별 농업경영체 규모는 축종에 따라 극단적인 경향을 보임. 특정 축종(곤충, 기타가금류, 돼지, 벌, 산란계, 오리, 육용계, 한우)의 평균 사육수량은 가장 많으나, 일부 축종(개, 사슴, 육우, 젓소)은 가장 적음.
- 유형5(2.80%): 돼지, 육우, 젓소, 한우를 사육하는 농업경영체로만 구성된 유형으로, 젓소와 육우를 함께 사육하는 농업경영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사육축종 수가 가장 많은 유형임. 육우를 사육하는 농업경영체의 평균 사육수량은 가장 많으나, 돼지와 한우를 사육하는 농업경영체의 평균 사육수량은 가장 적음.

- 유형6(0.03%): 전체 축산 농업경영체의 단 0.03%만이 속하는 젖소 사육규모가 초대형인 유형으로, 평균 젖소 사육수량이 960.20마리에 달함.

〈표 4-9〉 축산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연령	55.57	57.25	55.43	52.10	49.16	70.00
영농경력(년)	11.41	16.47	18.62	15.40	17.43	43.00
사육축종 수	1.00	1.00	2.28	1.21	2.37	2.00
자영 비율(%)	1.85	91.62	80.14	74.40	78.14	100.00
축사 주소수	1.00	1.00	1.02	1.74	1.04	1.00
개 사육수량	223.29	226.22	110.24	18.00	0.00	0.00
곤충 사육수량(천 마리)	663.62	1,539,825.31	3.02	2,150,000.66	0.00	0.00
기타가금류 사육수량	36,840.00	56,695.93	1,589.00	505,999.98	0.00	0.00
기타가축류 사육수량	2,163.95	557,174.21	123,979.41	0.00	0.00	0.00
돼지 사육수량	1,290.38	1,802.80	493.95	3,111.53	394.00	0.00
말 사육수량	9.04	17.42	7.79	32.00	0.00	0.00
벌 사육수량	100.67	186.34	94.07	432.80	0.00	0.00
사슴 사육수량	9.00	15.28	16.67	5.40	0.00	0.00
산란계 사육수량	30,825.00	60,808.44	20,043.00	95,614.24	0.00	0.00
산양 사육수량	82.22	103.93	35.05	60.05	0.00	0.00
오리 사육수량	19,250.00	15,012.50	17.50	21,686.67	0.00	0.00
육용계 사육수량	51,783.48	68,343.42	18,607.05	57,839.82	0.00	0.00
육우 사육수량	0.00	5.38	10.37	5.22	34.27	960.20
젖소 사육수량	0.00	1.78	10.34	0.20	63.76	0.80
한우 사육수량	30.25	38.31	27.61	115.62	8.12	0.00
개 농업경영체 수	14	87	25	1	0	0
곤충 농업경영체 수	42	65	24	4	0	0
기타가금류 농업경영체 수	6	14	4	1	0	0
기타가축류 농업경영체 수	4	19	13	0	0	0
돼지 농업경영체 수	39	148	5	24	1	0
말 농업경영체 수	14	33	7	1	0	0
벌 농업경영체 수	282	518	44	20	0	0
사슴 농업경영체 수	2	21	7	1	0	0
산란계 농업경영체 수	8	62	10	5	0	0
산양 농업경영체 수	28	91	46	4	0	0
오리 농업경영체 수	8	32	1	4	0	0
육용계 농업경영체 수	55	155	22	11	0	0
젖소 농업경영체 수	0	4	81	3	80	1
육우 농업경영체 수	0	5	95	7	82	1
한우 농업경영체 수	124	694	126	56	36	0

주1: 유형별 특성 비교에 사용한 변수들은 군집분석에 사용한 경영체 특성 변수들과 각 유형에 포함된 축종별 농업경영체 수 및 축종별 농업경영체의 평균 사육수량임.

주2: 축종별 농업경영체 수를 제외한 모든 값은 평균 값임.

출처: 저자 작성.

2.2.5. 농업경영체 유형화 소결 및 시사점

- 본 절에서는 농업경영체 DB를 기반으로 농업경영체별 정보 등록 유형, 주성분분석, 군집분석을 통한 농업경영체 유형화를 실시함.
- 유형화 분석 결과, 농업경영체는 정보 등록 유형에 따라 경종 농업경영체(노지, 시설, 노지 및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노지, 시설, 노지 및 시설), 축산 농업경영체의 7개 기본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은 다시 주성분분석 및 군집분석을 통해 총 39개 유형으로 세분화됨.
- 노지 경종 농업경영체는 주로 연령, 영농경력, 재배면적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됨.
 - 노지 경종 농업경영체의 약 84.70%가 평균 재배면적이 0.53ha 이하인 유형 1과 2에 속하고, 평균 재배면적이 1.50ha인 유형 3에는 14.23%, 평균 재배면적이 6.95ha에 달하는 유형 4에는 단 1.07%의 농업경영체만이 포함됨.
 -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유형 1과 유형 2를 구분하는 주요 요인은 경영주 연령 및 영농경력으로, 유형 1의 농업경영체들은 평균 연령이 74.95세, 평균 영농경력이 46.16년에 달하는 반면, 유형 2의 농업경영체들은 평균 연령이 58.76세, 평균 영농경력이 11.84년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모든 유형에서 평균 미곡류 재배면적 비율이 30%대로 높은 것이 특징이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유형 1과 2에서는 평균 과실류 재배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규모가 큰 유형 3과 4에서는 평균 두류 재배면적 비율과 평균 조미채소류 재배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는 주로 재배면적, 자영 비율, 재배작물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됨.
 -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평균 연령은 50대 중후반으로, 노지 경종 농업경영체와 노지 및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영농경력이 적음.

-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의 약 86.43%가 평균 재배면적이 0.54ha 이하인 유형 1과 2에 속하고, 평균 재배면적이 0.78ha인 유형 3에는 9.03%, 평균 재배면적이 2.36ha에 달하는 유형 4에는 단 4.53%의 농업경영체만이 포함됨.
-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유형 1과 유형 2를 구분하는 주요 요인은 자영 비율로, 유형 1의 평균 자영 비율은 4.26%에 불과한 반면, 유형 2의 평균 자영 비율은 92.77%에 달함.
- 유형 3을 제외한 다른 유형들은 대체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나, 유형 3은 주로 과실류 전문 농업경영체들로 구성된 유형으로, 평균 과실류 재배면적 비율이 84.04%에 달함.

○ 노지 및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는 주로 영농경력, 재배면적, 노지 비율에 따라 6개 유형으로 구분됨.

- 노지 및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의 약 87.97%가 평균 재배면적이 1.20ha 이하인 유형 1, 2, 3에 속하고, 평균 재배면적이 3.71ha인 유형 4에는 10.13%, 평균 재배면적이 9.27ha인 유형 5에는 1.83%, 평균 재배면적이 23.39ha인 유형 6에는 단 0.07%의 농업경영체만이 포함됨.
-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유형 1, 2, 3을 구분하는 주요 요인은 영농경력과 노지 비율로, 유형 2에 속하는 농업경영체들은 평균 13.58년의 영농경력을 가지며, 이는 유형 1의 42.68년과 유형 3의 25.73년에 비해 매우 짧음. 또한, 유형 3에 속하는 농업경영체들의 평균 노지 비율은 15.37%로 유형 1의 86.54%와 유형 2의 83.43%에 비해 매우 낮음.
- 반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유형 4, 5, 6은 미곡류 재배면적 비율이 평균 46.50% 이상으로, 모든 경종 농업경영체들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이들 유형을 구분하는 주요 요인은 재배면적임.

○ 노지 경축 농업경영체는 주로 재배면적, 사육축종 수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됨.

- 노지 경축 농업경영체의 약 74.33%가 평균 재배면적이 0.95ha 이하인 유형 1과 2에 속하고, 평균 재배면적이 2.63ha인 유형 3에는 18.03%, 평균 재배면적이 8.02ha인

유형 4에는 6.27%, 평균 재배면적이 20.40ha에 달하는 유형 5에는 단 1.37%의 농업경영체만이 포함됨.

- 모든 유형에서 평균 미곡류 재배면적 비율이 약 30% 이상으로 높으며, 유형 2를 제외한 다른 유형들의 경우 평균 조사료 재배면적 비율도 약 12% 이상으로 높은 것이 특징임.
-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유형 1과 2을 구분하는 주요 요인은 사육축종 수와 조사료 재배면적 비율로 유형 1의 농업경영체들은 평균적으로 두 축종을 사육하고 평균 조사료 재배면적 비율이 16.23%로 높은 반면, 유형 2의 농업경영체들은 평균적으로 하나의 축종만을 사육하며 평균 조사료 재배면적 비율도 5.68%로 상대적으로 낮음.

○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는 주로 재배면적, 경종 및 축산 부문 자영 비율, 사육축종 수, 축종별 사육수량에 따라 8개 유형으로 구분됨.

-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의 대다수인 약 99.86%가 평균 재배면적이 0.95ha 이하인 유형 1~7에 속하며, 평균 재배면적이 46.42ha에 이르는 유형 4에는 단 0.14%의 농업경영체만이 포함됨.
-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유형 1~7은 경종 및 축산 부문 자영 비율, 사육축종 수, 축종별 사육수량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며, 규모가 초대형인 유형 8은 모든 경종 및 경축 농업경영체들 중 평균 재배면적과 평균 한우 사육수량이 가장 많은 유형임.

○ 노지 및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는 주로 재배면적, 사육축종 수, 노지 비율에 따라 6개 유형으로 구분됨.

- 노지 및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의 약 80.63%가 평균 재배면적이 1.94ha 이하인 유형 1, 2, 3에 속하고, 평균 재배면적이 5.60ha인 유형 4에는 14.40%, 평균 재배면적이 12.98ha인 유형 5에는 4.67%, 평균 재배면적이 33.28ha인 유형 6에는 단 0.30%의 농업경영체만이 포함됨.
-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유형 1, 2, 3을 구분하는 주요 요인은 사육축종 수와 노지 비율로, 유형 1과 2의 평균 재배면적은 각각 1.94ha와 1.60ha로 비슷하나, 유형 1의 농

업경영체들은 평균적으로 두 축종을 사육하는 반면, 유형 2의 농업경영체들은 한 축종만을 사육함. 또한, 유형 3은 평균 재배면적이 0.92ha로 유형 1과 2에 비해 작고, 평균 노지 비율도 26.97%로 유형 1의 89.94%와 유형 2의 88.62%에 비해 매우 낮음.

- 반면, 규모가 큰 유형 4, 5, 6을 구분하는 주요 요인은 재배면적으로, 유형 6은 5보다, 유형 5는 4보다 두 배 이상 넓은 평균 재배면적을 보유함.

○ 축산 농업경영체는 주로 자영 비율과 축종별 사육수량에 따라 6개 유형으로 구분되나, 축종에 따른 규모 측정 단위의 비교에 어려움이 있어 의미있는 유형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자영 비율이 가장 낮은 유형 1의 농업경영체들은 평균 자영 비율이 1.85%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유형들의 평균 자영 비율은 최소 74.40% 이상으로 높아 명확한 차이를 보임.
- 그러나 사육축종과 축종별 사육수량에 따라 세분화되는 유형 2~6은 한 마리의 한우와 한 마리의 곤충을 동일한 규모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형별 차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 결국, 축산 소득이나 조수입과 같은 축종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측정 단위가 없는 경우, 축산 농업경영체의 유형화는 사육축종과 축종별 사육수량의 차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유형화는 유형 간 차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님.

○ 유형화 과정 및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크게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 및 정확성, 데이터 활용의 유용성,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우선,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임.

- 첫째, 농업경영체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정보에 결측치가 존재하면 그 정보는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 등에 활용할 수 없으므로, 현재 임의로 수집되는 정보 중에서 중요도가 낮은 정보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

고, 중요도가 높은 정보만 의무적으로 수집하는 전략이 필요함. 예를 들어, 영농경력
과 같은 주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정보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연령이나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과 같은 객관적 정보를 통해 영농경력을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더불어, 농업경영체의 특성에 따라 데이터 수집 범위를 차별화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특정 집단의 농업경영체로부터는 소수의 필
수 정보만을 의무적으로 수집하고, 다른 집단의 농업경영체로부터는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함으로써, 관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을 줄이고 정보의 완결성
을 향상시킬 수 있음. 이러한 접근은 각 농업경영체의 특성에 맞추어 효율적인 데이
터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필요한 정보의 질과 양을 최적화하여, 전반적인 데이
터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둘째, 농업경영체 DB의 정보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가 검증 과정을 도입하고, 국
가행정망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작물재배 정보에 기록된 시설
재배 면적이 농업시설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는 동일
한데 경영주의 성별이 연도에 따라 변동되거나, 연령 변화가 없는 경우 등과 같은 모
순점이 존재함⁴¹⁾. 따라서 농업경영체 DB 관리 체계에 교차검증 과정을 도입하고, 주
민등록등본 등 국가행정망과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
치가 필요함.

○ 다음으로, 데이터 활용의 유용성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임.

- 첫째,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비교 및 분류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농업경영체의 조수입 또는 소득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함. 화폐
단위로 표현되는 농업경영체의 소득이나 조수입은 재배작물이나 사육축종에 관계없
이 다양한 농업경영체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거나 분류하는 데 있어 공통적인 기준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농업경영체의 경영 성과 및 효율성을 평가하

41) 예를 들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245***4의 경우, 2020년에는 57세 남성으로, 2021년에는 57세 여
성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는 동일한 데 성별이 다른 경우가 5
년간 총 8,649,507건의 농업경영체 등록건 중 약 6만 건(59,958건)에서 발견됨.

고 비교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임. 또한, 농업경영체 소득 및 조수입 정보는 소득 안전망 구축과 같은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정보의 의무적 수집은 보다 효과적인 농업경영체 분석 및 관리와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동일한 필지코드에 등록된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 농업경영체의 수를 점검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최대 61개의 작물재배 경영체와 137개의 가축사육 경영체가 동일한 필지코드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이는 하나의 농업경영체가 여러 개로 분할되어 등록된 가능성을 시사함. 이 수치는 2022년까지 각각 58개와 15개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농업경영체가 동일한 필지코드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과도하게 많은 농업경영체가 동일한 필지코드에 등록된 경우, 이들의 등록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로 하나의 농업경영체가 여러 개로 분할되어 등록된 사례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점검을 통해 중복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영체 등록을 정정하고, 필요 시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의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과 관련된 주요 특성들과 경영주의 연령, 영농경력, 경종 및 축산 자영 비율, 농지 및 축사 주소수, 총 재배면적, 재배 작물 수, 사육축종 수 등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의 유형화를 시도함. 그러나 분석 결과, 연령, 재배면적, 사육수량, 자영 비율과 같은 소수의 핵심 변수들이 유형화의 중요 기준으로 작용함이 확인됨.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너무 다양한 변수들을 적용하기 보다는 이러한 핵심 변수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향후 모든 농업경영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농업경영체 소득 또는 조수입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핵심 변수들과 함께 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3. 주요 특성별 농업경영체의 분포

○ 본 절에서는 농업경영체 유형화 결과에서 중요한 특성으로 확인된 연령과 재배면적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분포를 살펴봄

○ 전체 농업경영체의 분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7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가 약 31.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70~80세 미만 농업경영체가 23.04%, 50~60세 미만 농업경영체가 22.48%, 80세 이상 농업경영체가 11.58%로 뒤를 이었음.

- 청년농으로 분류되는 40세 미만 농업경영체는 62,968개로 전체의 약 3.08%에 해당함.
- 후계농에 속하는 영농경력 10년 미만의 50세 미만 농업경영체는 152,204개로 전체의 약 7.45%에 해당함.
- 농지은행의 은퇴직불제 대상인 영농경력 10년 이상의 65~79세에 속하는 농업경영체는 634,109개로 전체의 약 31.02%에 해당함.

〈표 4-10〉 연령대별 전체 농업경영체의 분포표

구분	농업경영체(개)	백분율(%)	누적백분율(%)
40세 미만	62,968	3.08	3.08
40~50세	171,267	8.38	11.46
50~60세	459,531	22.48	33.94
60~65세	349,120	17.08	51.02
65~70세	294,312	14.40	65.42
70~75세	250,286	12.24	77.66
75~80세	220,611	10.79	88.46
80세 이상	235,964	11.54	100.00
합계	2,044,059	-	-

출처: 저자 작성.

○ 전체 농업경영체의 분포를 재배면적별로 살펴보면, 0.1~0.2ha 미만의 농업경영체가 약 25.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0.5~1.0ha 미만 농업경영체가 17.95%, 0.2~0.3ha 미만 농업경영체가 16.24%, 0.3~0.4ha 미만 농업경영체가 10.80%로 뒤를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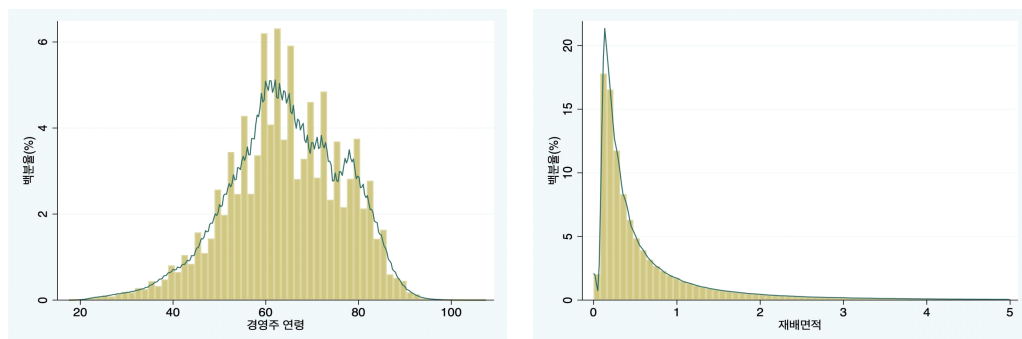
- 재배면적이 0.5ha 미만인 농업경영체가 전체의 63.02%를 차지함.

〈표 4-11〉 재배면적별 전체 농업경영체의 분포

구분	농업경영체(개)	백분율(%)	누적백분율(%)
0.1ha 미만	52,886	2.59	2.59
0.1~0.2ha	530,789	25.97	28.55
0.2~0.3ha	332,057	16.24	44.80
0.3~0.4ha	220,741	10.80	55.60
0.4~0.5ha	151,600	7.42	63.02
0.5~1.0ha	366,919	17.95	80.97
1.0~1.5ha	147,236	7.20	88.17
1.5~2.0ha	76,102	3.72	91.89
2.0~3.0ha	72,160	3.53	95.42
3.0~4.0ha	33,122	1.62	97.04
4.0~5.0ha	18,072	0.88	97.93
5.0~6.0ha	11,327	0.55	98.48
6.0~7.0ha	7,560	0.37	98.85
7.0~10.0ha	11,791	0.58	99.43
10ha 이상	11,697	0.57	100.00
합계	2,044,059	-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6〉 전체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출처: 저자 작성.

○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7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가 약 31.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70~80세 미만 농업경영체가 23.19%, 50~60세 미만 농업경영체가 22.41%, 80세 이상 농업경영체가 11.68%로 뒤를 이었음.

- 청년농으로 분류되는 40세 미만 농업경영체는 59,264개로 전체의 약 2.94%에 해당함.
- 후계농에 속하는 영농경력 10년 미만의 50세 미만 농업경영체는 146,440개로 전체의 약 7.27%에 해당함.
- 농지은행의 은퇴직불제 대상인 영농경력 10년 이상의 65~79세에 속하는 농업경영체는 628,607개로 전체의 약 31.21%에 해당함.

〈표 4-12〉 연령대별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구분	농업경영체(개)	백분율(%)	누적백분율(%)
40세 미만	59,264	2.94	2.94
40~50세 미만	166,632	8.27	11.22
50~60세 미만	451,368	22.41	33.63
60~65세 미만	343,905	17.08	50.70
65~70세 미만	290,517	14.42	65.13
70~75세 미만	247,842	12.31	77.43
75~80세 미만	219,284	10.89	88.32
80세 이상	235,240	11.68	100.00
합계	2,014,052	-	-

출처: 저자 작성.

○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를 재배면적별로 살펴보면, 0.1~0.2ha 미만의 농업경영체가 약 26.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0.5~1.0ha 미만 농업경영체가 18.22%, 0.2~0.3ha 미만 농업경영체가 16.49%, 0.3~0.4ha 미만 농업경영체가 10.96%로 뒤를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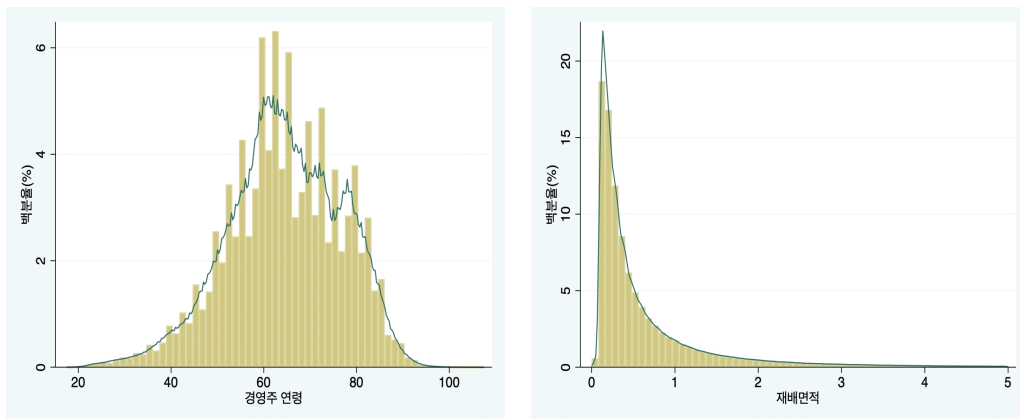
- 재배면적이 0.5ha 미만인 농업경영체가 전체의 62.46%를 차지함.

〈표 4-13〉 재배면적별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구분	농업경영체(개)	백분율(%)	누적백분율(%)
0.1ha 미만	22,879	1.14	1.14
0.1~0.2ha	530,789	26.35	27.49
0.2~0.3ha	332,057	16.49	43.98
0.3~0.4ha	220,741	10.96	54.94
0.4~0.5ha	151,600	7.53	62.46
0.5~1.0ha	366,919	18.22	80.68
1.0~1.5ha	147,236	7.31	87.99
1.5~2.0ha	76,102	3.78	91.77
2.0~3.0ha	72,160	3.58	95.35
3.0~4.0ha	33,122	1.64	97.00
4.0~5.0ha	18,072	0.90	97.90
5.0~6.0ha	11,327	0.56	98.46
6.0~7.0ha	7,560	0.38	98.83
7.0~10.0ha	11,791	0.59	99.42
10ha 이상	11,697	0.58	100.00
합계	2,014,052	-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7〉 작물재배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출처: 저자 작성.

○ 논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분포를 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0.1~0.2ha 미만의 농업경영체가 약 18.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0.5~1.0ha 미만 농업경영체가 17.64%, 0.2~0.3ha 미만 농업경영체가 15.66%, 0.3~0.4ha 미만 농업경영체가 11.15%로 뒤를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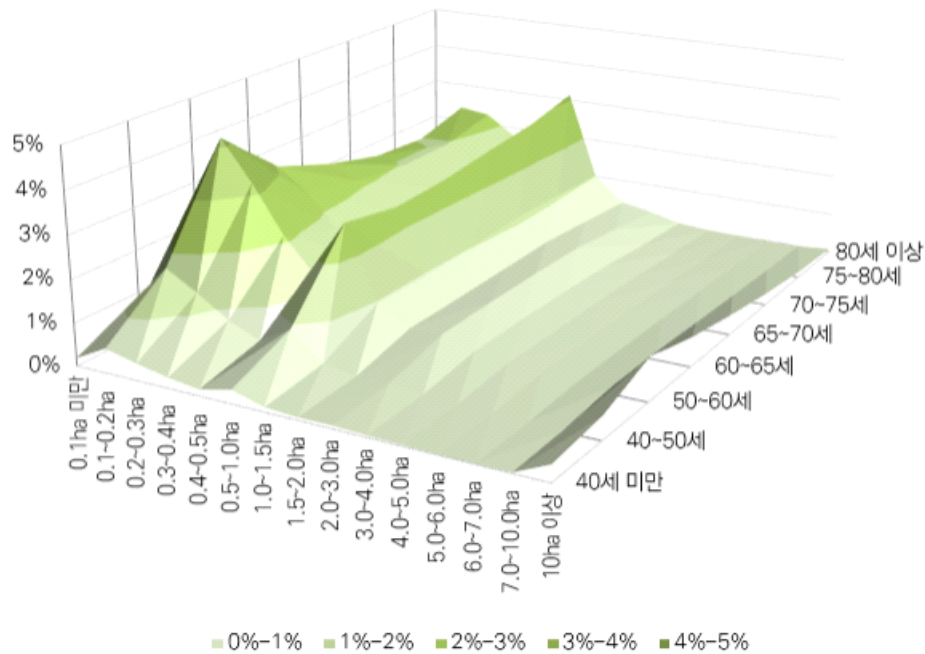
- 논 재배면적이 0.5ha 미만인 농업경영체가 전체의 61.49%를 차지함

〈표 4-14〉 연령대 및 논 재배면적별 논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구분	40세 미만	40~50세	50~60세	60~65세	65~70세	70~75세	75~80세	80세 이상	합계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0.1ha 미만	1,937	6,729	20,418	15,490	12,775	10,694	9,880	12,013	89,936	8.76	8.76
0.1~0.2ha	5,940	17,790	42,982	30,173	24,986	21,346	20,434	24,124	187,775	18.29	27.05
0.2~0.3ha	4,112	13,370	33,268	24,698	21,856	20,153	20,203	23,156	160,816	15.66	42.71
0.3~0.4ha	2,590	8,347	21,882	17,015	15,737	15,251	15,604	18,079	114,505	11.15	53.86
0.4~0.5ha	1,590	5,073	13,564	11,457	10,817	10,964	11,697	13,148	78,310	7.63	61.49
0.5~1.0ha	3,359	9,572	27,817	25,250	26,010	27,753	29,175	32,169	181,105	17.64	79.13
1.0~1.5ha	1,177	3,107	9,870	9,606	10,501	11,263	10,962	10,356	66,842	6.51	85.64
1.5~2.0ha	725	1,747	5,276	5,403	5,664	6,024	5,075	4,030	33,944	3.31	88.95
2.0~3.0ha	797	1,933	5,565	5,894	5,933	5,725	4,246	2,671	32,764	3.19	92.14
3.0~4.0ha	499	1,063	3,196	3,295	3,086	2,597	1,520	802	16,058	1.56	93.70
4.0~5.0ha	318	726	2,121	2,028	1,873	1,398	669	285	9,418	0.92	94.62
5.0~6.0ha	209	552	1,493	1,434	1,236	881	374	148	6,327	0.62	95.24
6.0~7.0ha	174	395	1,076	1,039	802	545	213	78	4,322	0.42	95.66
7.0~10.0ha	307	758	1,925	1,887	1,275	732	248	85	7,217	0.70	96.36
10ha 이상	4,080	5,649	10,577	7,189	4,816	2,857	1,431	770	37,369	3.64	100.00
합계	27,814	76,811	201,030	161,858	147,367	138,183	131,731	141,914	1,026,708	100.00	-
백분율(%)	2.71	7.48	19.58	15.76	14.35	13.46	12.83	13.82	100.00	-	-
누적백분율(%)	2.71	10.19	29.77	45.54	59.89	73.35	86.18	100.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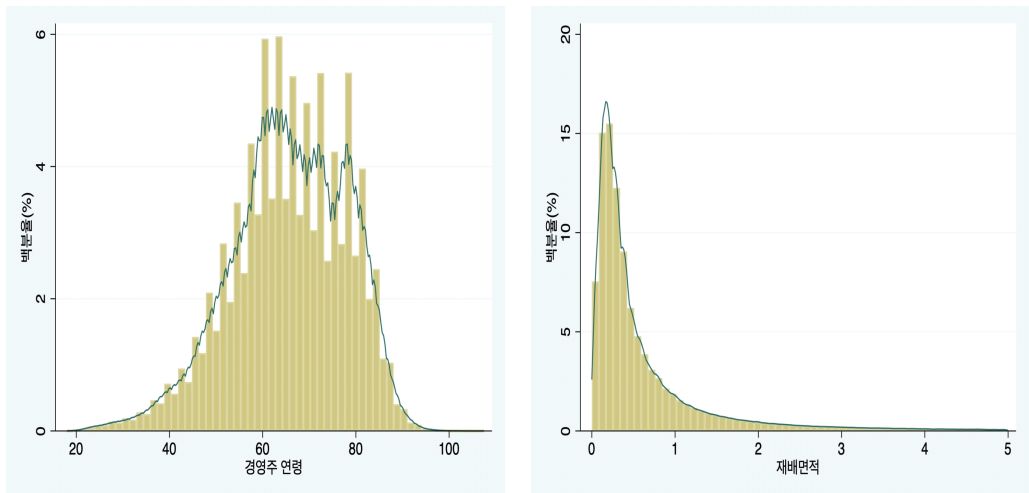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8〉 연령대 및 논 재배면적별 논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3차원 그래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9〉 논 작물재배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출처: 저자 작성.

○ 밭(노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분포를 밭(노지)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0.1~0.2ha 미만의 농업경영체가 약 32.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0.2~0.3ha 미만 농업경영체가 16.70%, 0.5~1.0ha 미만 농업경영체가 12.33%, 0.1ha 미만 농업경영체가 12.04%로 뒤를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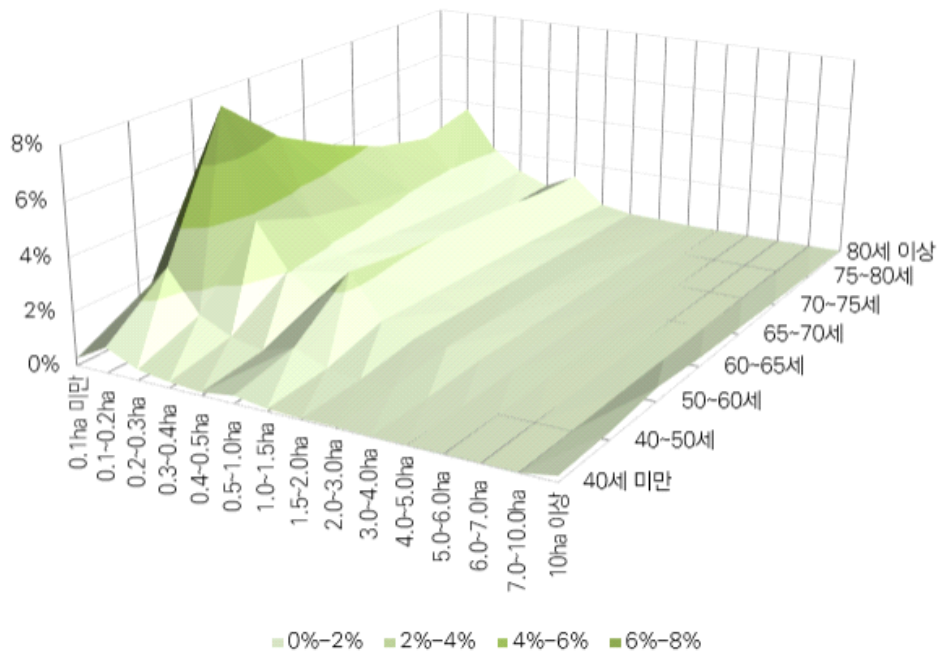
- 밭(노지) 재배면적이 0.5ha 미만인 농업경영체가 전체의 77.17%를 차지함.

〈표 4-15〉 연령대 및 밭(노지) 재배면적별 밭(노지)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구분	40세 미만	40~50세	50~60세	60~65세	65~70세	70~75세	75~80세	80세 이상	합계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0.1ha 미만	4,460	14,305	40,848	32,907	28,730	26,582	25,351	28,648	201,831	12.04	12.04
0.1~0.2ha	15,950	46,782	132,587	98,622	78,599	62,807	53,835	61,960	551,142	32.89	44.93
0.2~0.3ha	6,733	20,839	62,850	48,200	40,609	34,430	30,914	35,267	279,842	16.70	61.63
0.3~0.4ha	3,643	11,219	34,446	26,884	23,486	20,612	19,125	20,748	160,163	9.56	71.18
0.4~0.5ha	2,186	6,650	20,602	16,924	15,134	13,634	12,361	12,834	100,325	5.99	77.17
0.5~1.0ha	4,913	13,335	41,713	35,595	32,887	29,600	25,493	23,130	206,666	12.33	89.50
1.0~1.5ha	1,793	4,669	14,240	12,514	11,321	9,682	7,234	5,208	66,661	3.98	93.48
1.5~2.0ha	930	2,302	7,074	6,132	5,368	4,171	2,798	1,867	30,642	1.83	95.31
2.0~3.0ha	917	2,055	6,426	5,326	4,281	3,093	1,939	1,351	25,388	1.51	96.82
3.0~4.0ha	408	926	2,780	2,226	1,668	1,143	705	451	10,307	0.62	97.44
4.0~5.0ha	224	491	1,405	1,031	780	525	283	178	4,917	0.29	97.73
5.0~6.0ha	133	277	798	606	429	281	124	94	2,742	0.16	97.90
6.0~7.0ha	74	195	467	368	235	140	83	47	1,609	0.10	97.99
7.0~10.0ha	122	247	647	465	298	181	90	53	2,103	0.13	98.12
10ha 이상	3,798	4,811	8,671	5,572	4,003	2,544	1,403	762	31,564	1.88	100.00
합계	46,284	129,103	375,554	293,372	247,828	209,425	181,738	192,598	1,675,902	100.00	-
백분율(%)	2.76	7.70	22.41	17.51	14.79	12.50	10.84	11.49	100.00	-	-
누적백분율(%)	2.76	10.47	32.87	50.38	65.17	77.66	88.51	100.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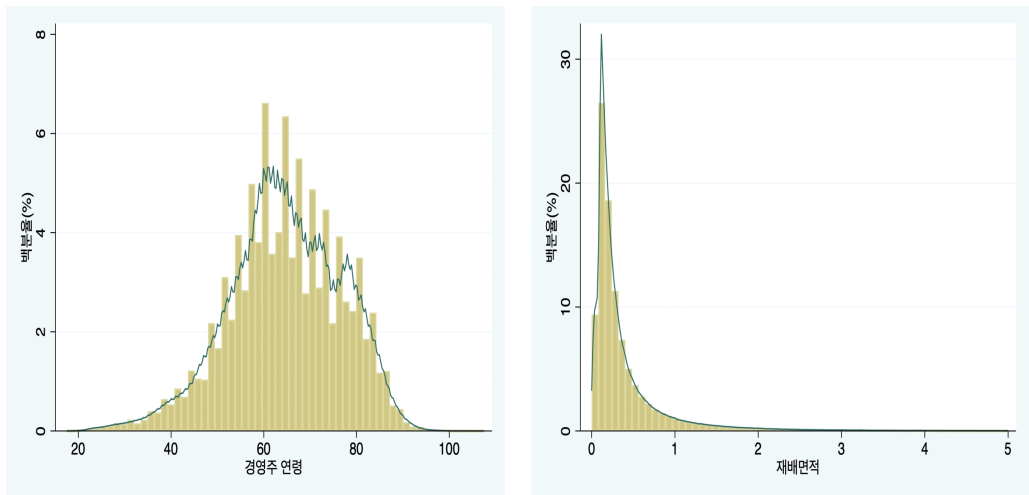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10〉 연령대 및 밭(노지) 재배면적별 밭(노지)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3차원 그래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11〉 밭(노지) 작물재배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출처: 저자 작성.

○ 시설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분포를 시설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0.1ha 미만의 농업경영체가 약 48.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0.1~0.2ha 미만 농업경영체가 13.40%, 0.5~1.0ha 미만 농업경영체가 10.97%, 0.2~0.3ha 미만 농업경영체가 9.40%로 뒤를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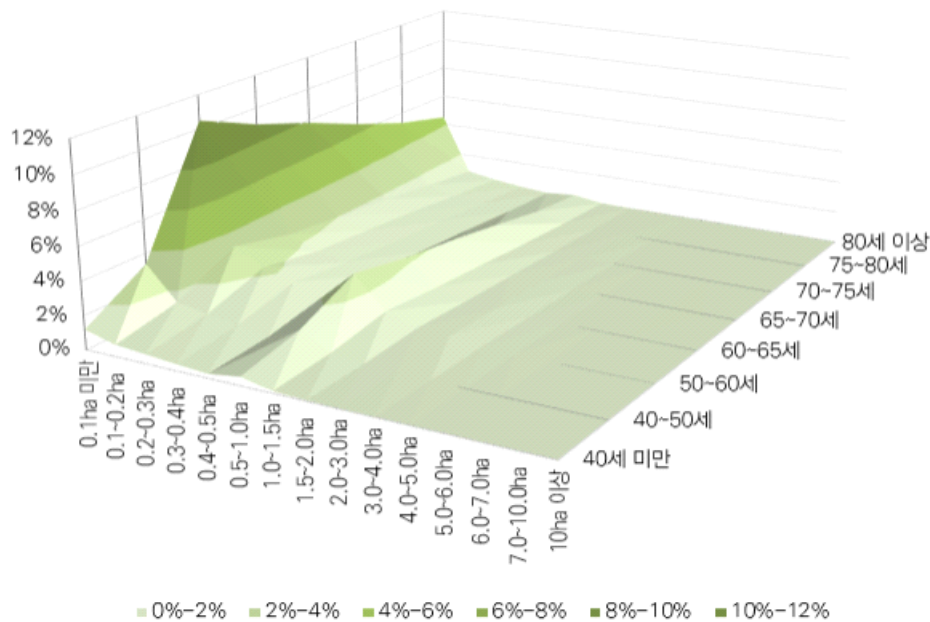
- 시설 재배면적이 0.5ha 미만인 농업경영체가 전체의 82.51%를 차지함.

〈표 4-16〉 연령대 및 시설 재배면적별 시설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구분	40세 미만	40~50세	50~60세	60~65세	65~70세	70~75세	75~80세	80세 이상	합계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0.1ha 미만	3,427	9,610	29,775	25,565	22,272	18,465	15,112	12,715	136,941	48.21	48.21
0.1~0.2ha	2,013	4,082	9,024	6,689	5,655	4,776	3,463	2,356	38,058	13.40	61.61
0.2~0.3ha	1,582	3,135	6,349	4,638	3,980	3,263	2,283	1,478	26,708	9.40	71.01
0.3~0.4ha	1,110	2,372	4,776	3,539	2,963	2,410	1,525	901	19,596	6.90	77.91
0.4~0.5ha	733	1,517	3,217	2,445	2,165	1,606	921	488	13,092	4.61	82.51
0.5~1.0ha	1,482	3,736	8,313	6,332	5,095	3,486	1,786	941	31,171	10.97	93.49
1.0~1.5ha	399	1,189	2,931	2,131	1,552	896	448	195	9,741	3.43	96.92
1.5~2.0ha	181	448	1,166	840	609	348	149	80	3,821	1.35	98.26
2.0~3.0ha	115	338	964	687	408	213	102	43	2,870	1.01	99.27
3.0~4.0ha	59	147	327	214	128	61	24	11	971	0.34	99.61
4.0~5.0ha	21	48	171	84	46	25	6	3	404	0.14	99.76
5.0~6.0ha	9	26	77	53	20	14	1	1	201	0.07	99.83
6.0~7.0ha	11	30	54	37	10	7	2	2	153	0.05	99.88
7.0~10.0ha	17	26	61	43	20	11	4	1	183	0.06	99.95
10ha 이상	11	33	67	24	13	5	1	1	155	0.05	100.00
합계	11,170	26,737	67,272	53,321	44,936	35,586	25,827	19,216	284,065	100.00	-
백분율(%)	3.93	9.41	23.68	18.77	15.82	12.53	9.09	6.76	100.00	-	-
누적백분율(%)	3.93	13.34	37.03	55.80	71.62	84.14	93.24	100.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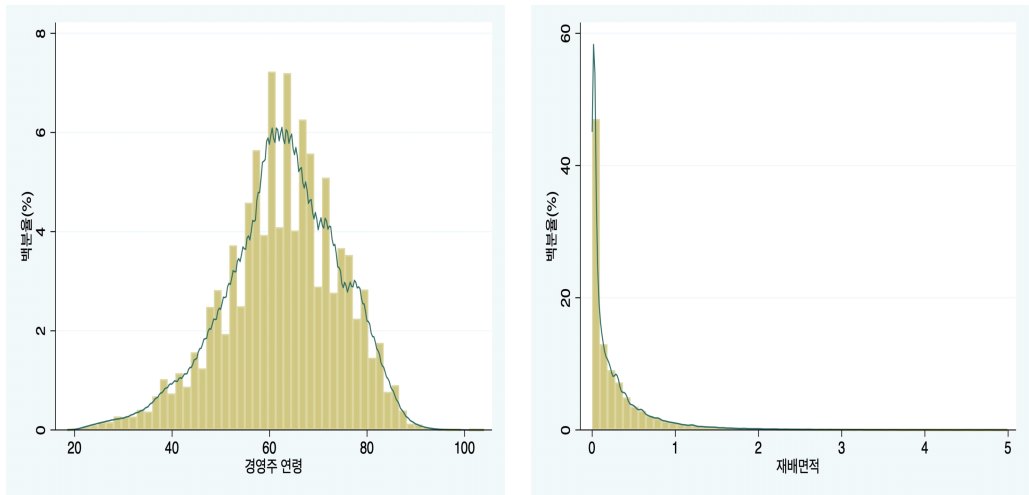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12〉 연령대 및 시설 재배면적별 시설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3차원 그래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13〉 시설 작물재배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출처: 저자 작성.

○ 재배면적 규모별 농업경영체의 작물재배(논, 밭, 시설) 면적 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4-17〉 재배면적 규모별 농업경영체의 작물재배(논, 밭, 시설) 면적 비율

구분	논			밭(노지)			시설		
	면적 (ha)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면적 (ha)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면적 (ha)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0.1ha 미만	5,171	0.62	0.62	11,176	1.55	1.55	4,223	4.84	4.84
0.1~0.2ha	28,283	3.41	4.03	78,865	10.93	12.48	5,533	6.34	11.17
0.2~0.3ha	39,878	4.80	8.83	68,485	9.49	21.97	6,630	7.59	18.77
0.3~0.4ha	39,729	4.79	13.62	55,345	7.67	29.64	6,781	7.77	26.54
0.4~0.5ha	34,893	4.20	17.82	44,783	6.21	35.85	5,841	6.69	33.23
0.5~1.0ha	127,172	15.32	33.15	143,403	19.87	55.72	21,749	24.91	58.14
1.0~1.5ha	81,350	9.80	42.95	80,911	11.21	66.94	11,781	13.49	71.63
1.5~2.0ha	58,620	7.06	50.01	52,747	7.31	74.25	6,565	7.52	79.15
2.0~3.0ha	79,595	9.59	59.60	61,198	8.48	82.73	6,872	7.87	87.02
3.0~4.0ha	55,415	6.68	66.27	35,374	4.90	87.63	3,323	3.81	90.83
4.0~5.0ha	42,019	5.06	71.34	21,851	3.03	90.66	1,793	2.05	92.88
5.0~6.0ha	34,598	4.17	75.51	14,928	2.07	92.73	1,091	1.25	94.13
6.0~7.0ha	27,971	3.37	78.88	10,365	1.44	94.16	989	1.13	95.26
7.0~10.0ha	59,752	7.20	86.07	17,279	2.39	96.56	1,499	1.72	96.98
10ha 이상	115,594	13.93	100.00	24,823	3.44	100.00	2,637	3.02	100.00
합계	830,041	100.00	-	721,531	100.00	-	87,309	100.00	-

주: 0.2~0.3ha 구간을 0.2~0.25ha 구간과 0.25~0.3ha 구간으로 구분할 경우, 각 구간에 속하는 재배면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논·밭의 경우 각각 2.31%와 2.50%, 시설의 경우 3.57%와 4.02%임.

출처: 저자 작성.

○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경영체의 분포를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60~7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가 약 37.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60세 미만 농업경영체가 23.26%, 70~80세 미만 농업경영체가 21.04%, 40~50세 미만 농업경영체가 8.58%로 뒤를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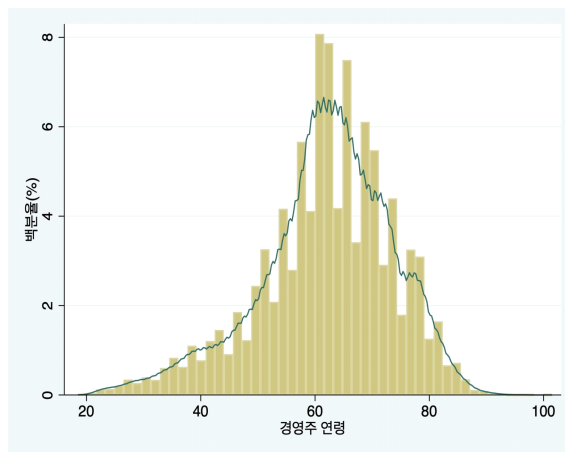
- 청년농으로 분류되는 40세 미만 농업경영체는 8,799개로 전체의 약 5.16%임.
- 후계농(영농경력 10년 미만)에 속하는 50세 미만 농업경영체는 12,378개로 전체의 약 7.26%임.
- 영농경력 10년 이상의 65~79세에 속하는 농업경영체는 60,102개로 전체의 약 35.25%임.

〈표 4-18〉 연령대별 가축사육 농업경영체의 분포

구분	농업경영체(개)	백분율(%)	누적백분율(%)
40세 미만	8,799	5.16	5.16
40~50세	14,627	8.58	13.74
50~60세	39,655	23.26	37.00
60~65세	34,371	20.16	57.16
65~70세	29,071	17.05	74.21
70~75세	21,983	12.89	87.10
75~80세	13,886	8.14	95.25
80세 이상	8,100	4.75	100.00
합계	170,492	-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14〉 가축사육 농업경영체 연령의 커널 밀도



출처: 저자 작성.

○ 축산업 허가제의 기업농, 전업농, 준전업농 규모 기준⁴²⁾을 토대로 소(한우, 젃소, 육우),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업경영체의 분포를 살펴보면, 준전업농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업경영체가 약 62.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업농 규모의 농업경영체가 13.93%, 준전업농 규모의 농업경영체가 12.38%로 뒤를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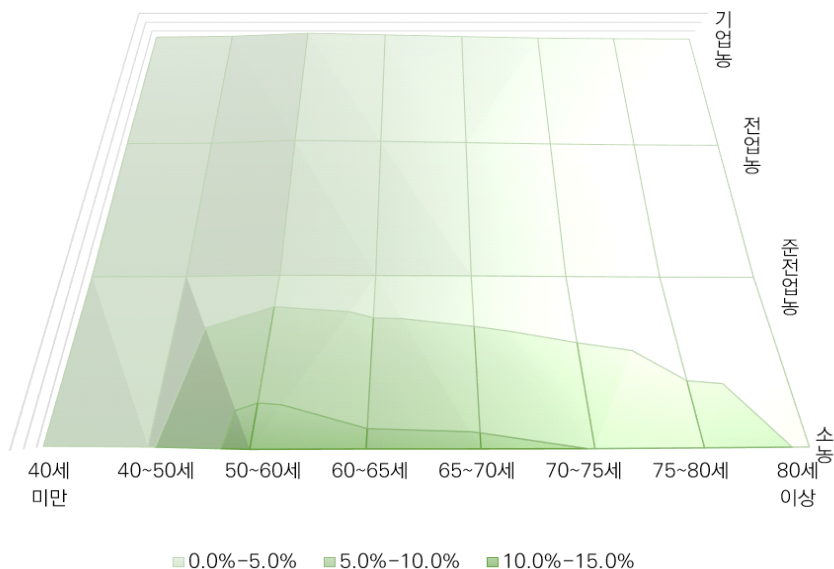
42) 준전업농, 전업농, 기업농 기준 사육 마릿수는 소의 경우 각각 30마리 이상, 50마리 이상, 100마리 이상, 돼지의 경우 각각 50마리 이상, 1,000마리 이상, 2,000마리 이상, 닭의 경우 각각 20,000마리 이상, 30,000마리 이상, 50,000마리 이상, 오리의 경우 각각 3,000마리 이상, 5,000마리 이상, 10,000마리 이상임.

〈표 4-19〉 연령대 및 축산업 허가제 기준(소, 돼지, 닭, 오리)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분포

구분	소농 (개)	준전업농 (개)	전업농 (개)	기업농 (개)	합계 (개)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40세 미만	2,665	1,269	1,724	1,560	7,218	5.82	5.82
40~50세	5,516	1,669	2,180	2,189	11,554	9.31	15.13
50~60세	14,966	3,862	4,769	4,407	28,004	22.56	37.69
60~65세	13,406	3,414	3,903	3,242	23,965	19.31	57.00
65~70세	13,236	2,720	2,687	1,908	20,551	16.56	73.56
70~75세	12,353	1,577	1,386	801	16,117	12.99	86.55
75~80세	9,236	644	504	271	10,655	8.59	95.13
80세 이상	5,605	214	139	83	6,041	4.87	100.00
합계	76,983	15,369	17,292	14,461	124,105	100.00	-
백분율(%)	62.03	12.38	13.93	11.65	100.00	-	-
누적백분율(%)	62.03	74.41	88.35	100.00	-	-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15〉 연령대 및 축산업 허가제 기준(소, 돼지, 닭, 오리)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분포(3차원 그래프)



출처: 저자 작성.

○ 소(한우, 젃소, 육우)를 사육하는 농업경영체의 분포를 축산업 허가제의 기업농, 전업농, 준전업농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면, 준전업농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업경영체가 약 66.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업농 규모의 농업경영체가 12.95%, 준전업농 규모의 농업경영체가 12.37%로 뒤를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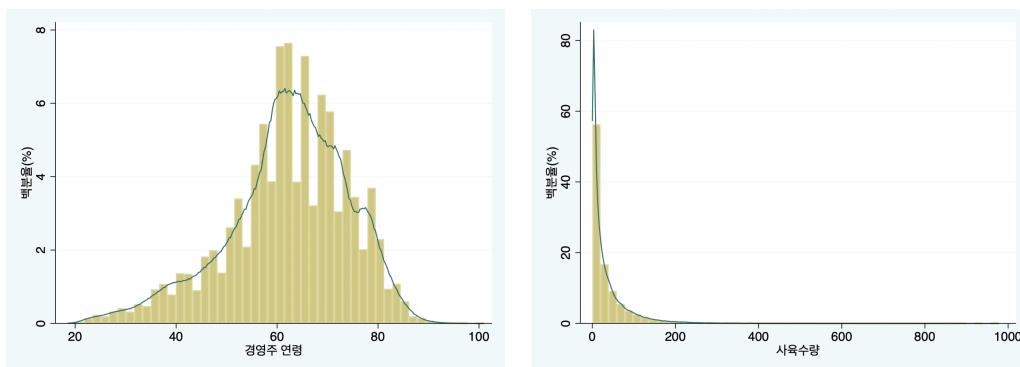
- 준전업농 기준: 사육 마릿수 30마리 이상
- 전업농 기준: 사육 마릿수 50마리 이상
- 기업농 기준: 사육 마릿수 100마리 이상

〈표 4-20〉 연령대 및 축산업 허가제 기준에 따른 소 사육 농업경영체의 분포

구분	소농 (개)	준전업농 (개)	전업농 (개)	기업농 (개)	합계 (개)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40세 미만	2,433	1,079	1,432	996	5,940	5.48	5.48
40~50세	5,125	1,421	1,709	1,314	9,569	8.83	14.31
50~60세	13,617	3,353	3,853	2,791	23,614	21.79	36.10
60~65세	12,288	2,995	3,205	2,185	20,673	19.07	55.17
65~70세	12,278	2,406	2,231	1,238	18,153	16.75	71.92
70~75세	11,727	1,403	1,115	457	14,702	13.56	85.48
75~80세	8,886	557	381	135	9,959	9.19	94.67
80세 이상	5,447	189	107	33	5,776	5.33	100.00
합계	71,801	13,403	14,033	9,149	108,386	100.00	-
백분율(%)	66.25	12.37	12.95	8.44	100.00	-	-
누적백분율(%)	66.25	78.61	91.56	100.00	-	-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16〉 소 사육 농업경영체 연령 및 사육수량의 커널 밀도



출처: 저자 작성.

○ 돼지를 사육하는 농업경영체의 분포를 축산업 허가제의 기업농, 전업농, 준전업농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면, 기업농 규모의 농업경영체가 약 29.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업농 규모의 농업경영체가 27.50%, 준전업농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업경영체가 21.88%로 뒤를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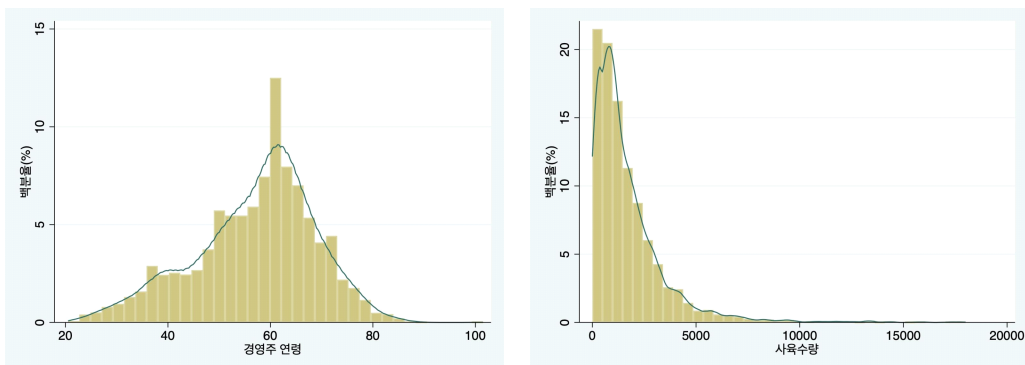
- 준전업농 기준: 사육 마릿수 500마리 이상
- 전업농 기준: 사육 마릿수 1,000마리 이상
- 기업농 기준: 사육 마릿수 2,000마리 이상

〈표 4-21〉 연령대 및 축산업 허가제 기준에 따른 돼지 사육 농업경영체의 분포

구분	소농 (개)	준전업농 (개)	전업농 (개)	기업농 (개)	합계 (개)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40세 미만	86	133	165	178	562	9.90	9.90
40~50세	111	163	272	269	815	14.36	24.26
50~60세	302	310	441	542	1,595	28.10	52.35
60~65세	248	258	346	325	1,177	20.73	73.08
65~70세	235	186	185	195	801	14.11	87.19
70~75세	148	103	102	89	442	7.79	94.98
75~80세	82	46	44	44	216	3.80	98.78
80세 이상	30	16	6	17	69	1.22	100.00
합계	1,242	1,215	1,561	1,659	5,677	100.00	-
백분율(%)	21.88	21.40	27.50	29.22	100.00	-	-
누적백분율(%)	21.88	43.28	70.78	100.00	-	-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17〉 돼지 사육 농업경영체 연령 및 사육수량의 커널 밀도



출처: 저자 작성.

○ 닭(산란계와 육용계)를 사육하는 농업경영체의 분포를 축산업 허가제의 기업농, 전업농, 준전업농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면, 준전업농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업경영체가 약 4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업농 규모의 농업경영체가 32.69%, 전업농 규모의 농업경영체가 16.95%로 뒤를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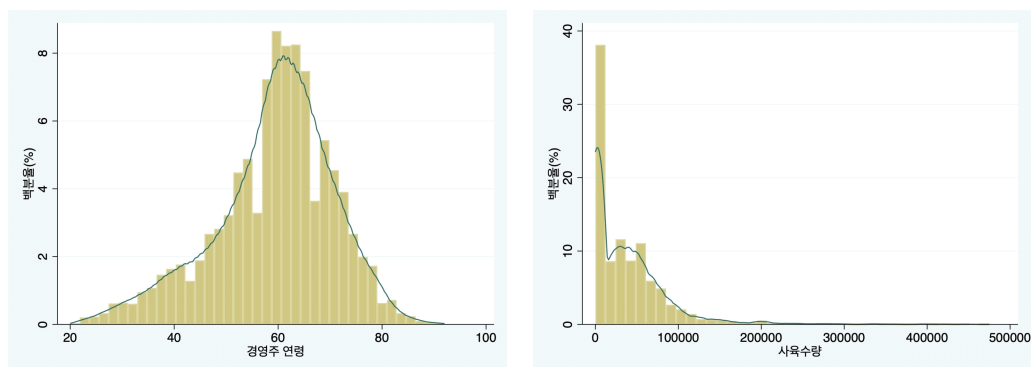
- 준전업농 기준: 사육 마릿수 20,000마리 이상
- 전업농 기준: 사육 마릿수 30,000마리 이상
- 기업농 기준: 사육 마릿수 50,000마리 이상

〈표 4-22〉 연령대 및 축산업 허가제 기준에 따른 닭 사육 농업경영체의 분포

구분	소농 (개)	준전업농 (개)	전업농 (개)	기업농 (개)	합계 (개)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40세 미만	138	52	110	309	609	6.98	6.98
40~50세	270	75	173	464	982	11.26	18.24
50~60세	985	179	390	832	2,386	27.35	45.59
60~65세	818	149	321	566	1,854	21.25	66.84
65~70세	684	120	236	371	1,411	16.17	83.01
70~75세	443	66	153	206	868	9.95	92.96
75~80세	249	39	72	74	434	4.97	97.94
80세 이상	117	9	24	30	180	2.06	100.00
합계	3,704	689	1,479	2,852	8,724	100.00	-
백분율(%)	42.46	7.90	16.95	32.69	100.00	-	-
누적백분율(%)	42.46	50.36	67.31	100.00	-	-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18〉 닭 사육 농업경영체 연령 및 사육수량의 커널 밀도



출처: 저자 작성.

○ 오리를 사육하는 농업경영체의 분포를 축산업 허가제의 기업농, 전업농, 준전업농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면, 기업농 규모의 농업경영체가 약 60.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준전업농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업경영체가 17.91%, 전업농 규모의 농업경영체가 16.62%로 뒤를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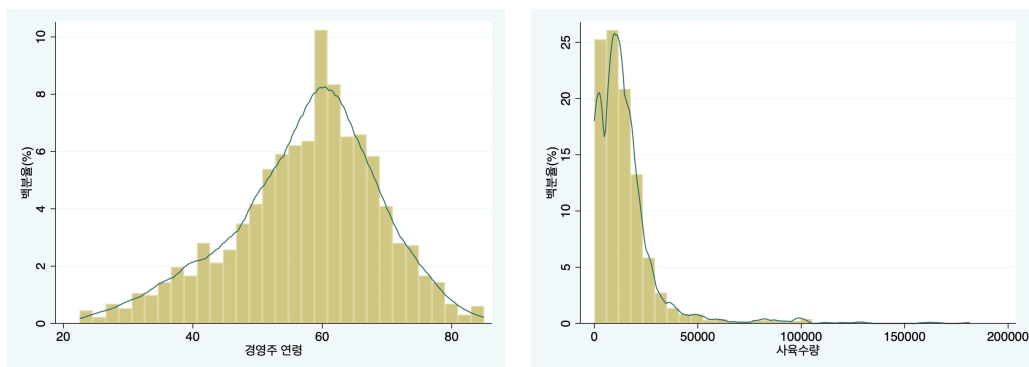
- 준전업농 기준: 사육 마릿수 3,000마리 이상
- 전업농 기준: 사육 마릿수 5,000마리 이상
- 기업농 기준: 사육 마릿수 10,000마리 이상

〈표 4-23〉 연령대 및 축산업 허가제 기준에 따른 오리 사육 농업경영체의 분포

구분	소농 (개)	준전업농 (개)	전업농 (개)	기업농 (개)	합계 (개)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40세 미만	8	5	17	77	107	8.12	8.12
40~50세	10	10	26	142	188	14.26	22.38
50~60세	62	20	85	242	409	31.03	53.41
60~65세	52	12	31	166	261	19.80	73.22
65~70세	39	8	35	104	186	14.11	87.33
70~75세	35	5	16	49	105	7.97	95.30
75~80세	19	2	7	18	46	3.49	98.79
80세 이상	11	0	2	3	16	1.21	100.00
합계	236	62	219	801	1,318	100.00	-
백분율(%)	17.91	4.70	16.62	60.77	100.00	-	-
누적백분율(%)	17.91	22.61	39.23	100.00	-	-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19〉 오리사육 농업경영체 연령 및 사육수량의 커널 밀도



출처: 저자 작성.

○ 가축사육(소, 돼지, 닭, 오리) 규모별 농업경영체의 사육 마릿수 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4-24〉 가축사육 규모별 농업경영체의 사육 마릿수 비율

축종	구분	소농	준전업농	전업농	기업농	합계
소 (한우, 젃소, 육우)	마릿수(천 마리)	683	521	990	1,578	3,772
	백분율(%)	18.11	13.82	26.24	41.83	100.00
	누적백분율(%)	18.11	31.93	58.17	100.00	-
돼지	마릿수(천 마리)	251	922	2,253	6,259	9,685
	백분율(%)	2.59	9.52	23.26	64.63	100.00
	누적백분율(%)	2.59	12.11	35.37	100.00	-
닭 (육용계, 산란계)	마릿수(천 마리)	11,623	16,358	55,922	263,451	347,355
	백분율(%)	3.35	4.71	16.10	75.84	100.00
	누적백분율(%)	3.35	8.06	24.16	100.00	-
오리	마릿수(천 마리)	115	234	1,584	17,399	19,332
	백분율(%)	0.59	1.21	8.20	90.00	100.00
	누적백분율(%)	0.59	1.80	10.00	100.00	-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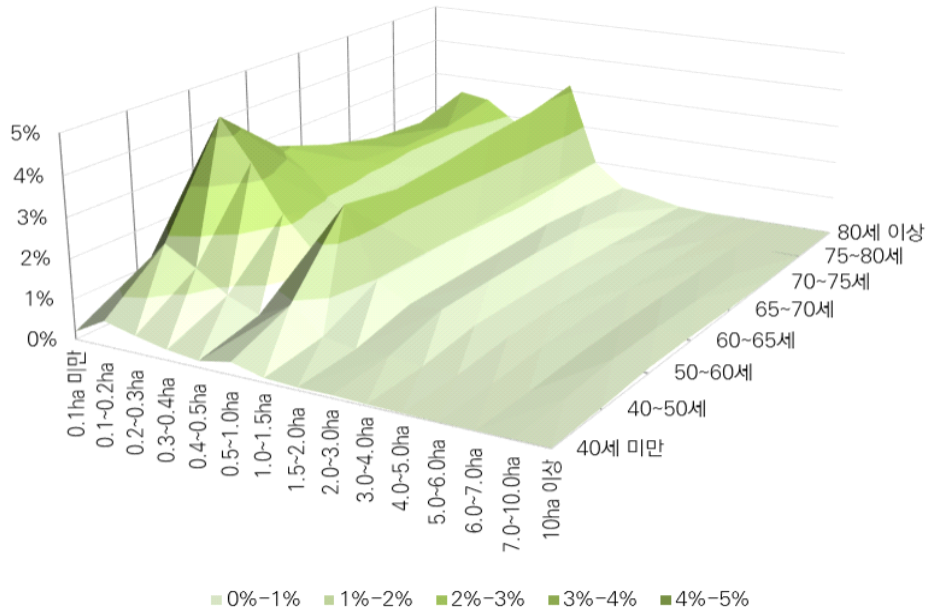
○ 미곡류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분포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0.1~0.2ha 미만의 농업경영체가 약 19.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0.5~1.0ha 미만 농업경영체가 17.96%, 0.2~0.3ha 미만 농업경영체가 16.67%, 0.3~0.4ha 미만 농업경영체가 11.81%로 뒤를 이었음.

〈표 4-25〉 연령대 및 재배면적별 미곡류 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구분	40세 미만	40~50세	50~60세	60~65세	65~70세	70~75세	75~80세	80세 이상	합계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0.1ha 미만	1,933	6,684	19,973	15,044	12,349	10,331	9,613	11,871	87,798	8.94	8.94
0.1~0.2ha	6,186	18,191	43,589	30,727	25,596	22,027	21,028	24,930	192,274	19.57	28.51
0.2~0.3ha	4,218	13,500	33,485	25,061	22,297	20,655	20,915	23,657	163,788	16.67	45.18
0.3~0.4ha	2,582	8,340	21,872	17,217	15,992	15,700	16,009	18,358	116,070	11.81	56.99
0.4~0.5ha	1,611	5,039	13,499	11,344	10,917	11,039	11,737	13,085	78,271	7.97	64.96
0.5~1.0ha	3,100	9,047	26,943	24,636	25,670	27,372	28,523	31,123	176,414	17.96	82.91
1.0~1.5ha	1,103	3,036	9,497	9,478	10,220	10,956	10,493	9,655	64,438	6.56	89.47
1.5~2.0ha	680	1,673	5,067	5,241	5,406	5,683	4,680	3,584	32,014	3.26	92.73
2.0~3.0ha	731	1,851	5,387	5,660	5,703	5,300	3,685	2,229	30,546	3.11	95.84
3.0~4.0ha	449	1,021	3,099	3,073	2,875	2,296	1,219	599	14,631	1.49	97.33
4.0~5.0ha	306	692	1,964	1,981	1,604	1,168	471	191	8,377	0.85	98.18
5.0~6.0ha	171	480	1,339	1,301	1,042	634	265	87	5,319	0.54	98.72
6.0~7.0ha	123	347	929	968	614	365	126	34	3,506	0.36	99.08
7.0~10.0ha	194	630	1,627	1,464	925	422	101	46	5,409	0.55	99.63
10ha 이상	172	475	1,267	1,035	455	169	43	21	3,637	0.37	100.00
합계	23,559	71,006	189,537	154,230	141,665	134,117	128,908	139,470	982,492	100.00	-
백분율(%)	2.40	7.23	19.29	15.70	14.42	13.65	13.12	14.20	100.00	-	-
누적백분율(%)	2.40	9.63	28.92	44.61	59.03	72.68	85.80	100.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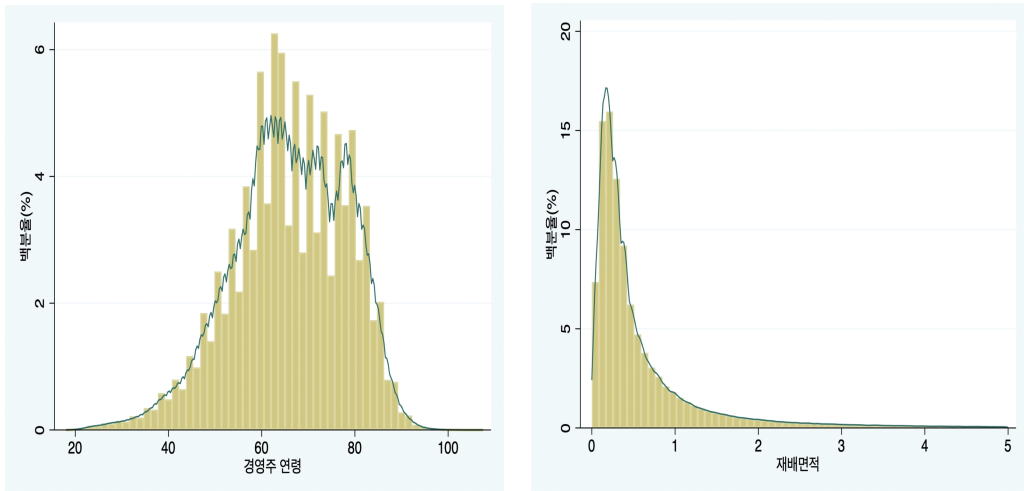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20〉 연령대 및 재배면적별 미곡류 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3차원 그래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21〉 미곡류 재배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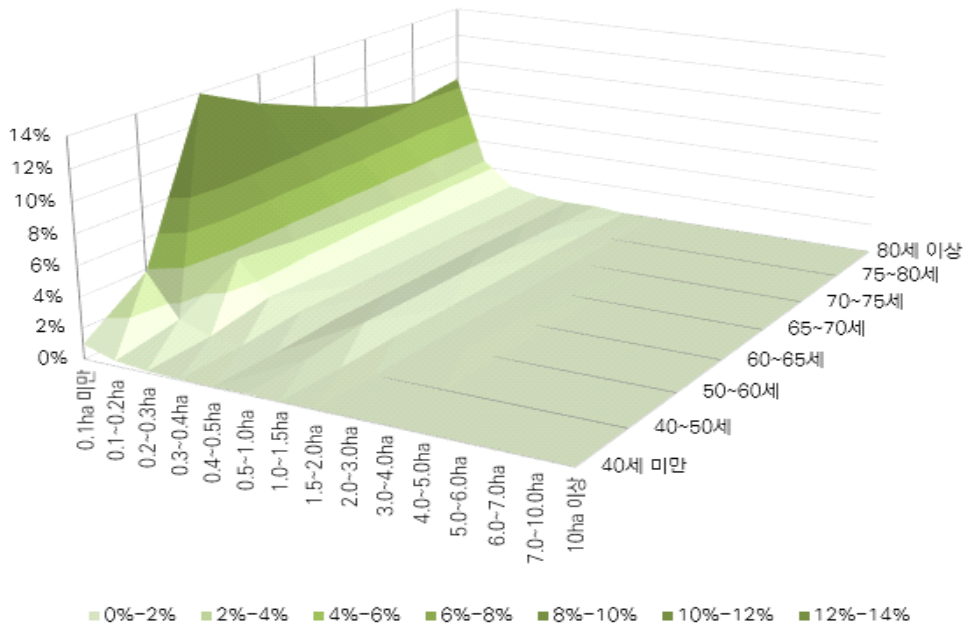
○ 조미채소류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분포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0.1ha 미만의 농업경영체가 약 67.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0.1~0.2ha 미만 농업경영체가 17.63%, 0.2~0.3ha 미만 농업경영체가 6.19%, 0.3~0.4ha 미만 농업경영체가 3.03%로 뒤를 이었음.

〈표 4-26〉 연령대 및 재배면적별 조미채소류 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구분	40세 미만	40~50세	50~60세	60~65세	65~70세	70~75세	75~80세	80세 이상	합계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0.1ha 미만	8,499	33,213	120,396	103,535	90,328	78,454	69,609	74,530	578,564	67.12	67.12
0.1~0.2ha	2,886	9,195	28,531	24,450	22,789	22,105	20,640	21,352	151,948	17.63	84.74
0.2~0.3ha	1,098	3,352	9,734	8,458	8,257	8,049	7,521	6,913	53,382	6.19	90.94
0.3~0.4ha	608	1,773	4,903	4,300	4,151	4,053	3,418	2,946	26,152	3.03	93.97
0.4~0.5ha	317	973	2,778	2,566	2,468	2,357	1,960	1,542	14,961	1.74	95.71
0.5~1.0ha	631	1,784	5,291	4,638	4,588	3,951	2,934	1,949	25,766	2.99	98.70
1.0~1.5ha	155	528	1,484	1,362	1,130	945	554	291	6,449	0.75	99.44
1.5~2.0ha	76	230	656	527	395	264	151	71	2,370	0.27	99.72
2.0~3.0ha	55	171	495	404	274	153	74	27	1,653	0.19	99.91
3.0~4.0ha	19	61	170	114	58	36	9	7	474	0.05	99.97
4.0~5.0ha	6	14	59	42	22	13	3	0	159	0.02	99.98
5.0~6.0ha	5	6	21	15	13	7	1	0	68	0.01	99.99
6.0~7.0ha	1	4	13	4	1	5	0	0	28	0.00	100.00
7.0~10.0ha	3	2	3	14	2	4	1	0	29	0.00	100.00
10ha 이상	2	1	1	2	3	1	0	0	10	0.00	100.00
합계	14,361	51,307	174,535	150,431	134,479	120,397	106,875	109,628	862,013	100.00	-
백분율(%)	1.67	5.95	20.25	17.45	15.60	13.97	12.40	12.72	100.00	-	-
누적백분율(%)	1.67	7.62	27.87	45.32	60.92	74.88	87.28	100.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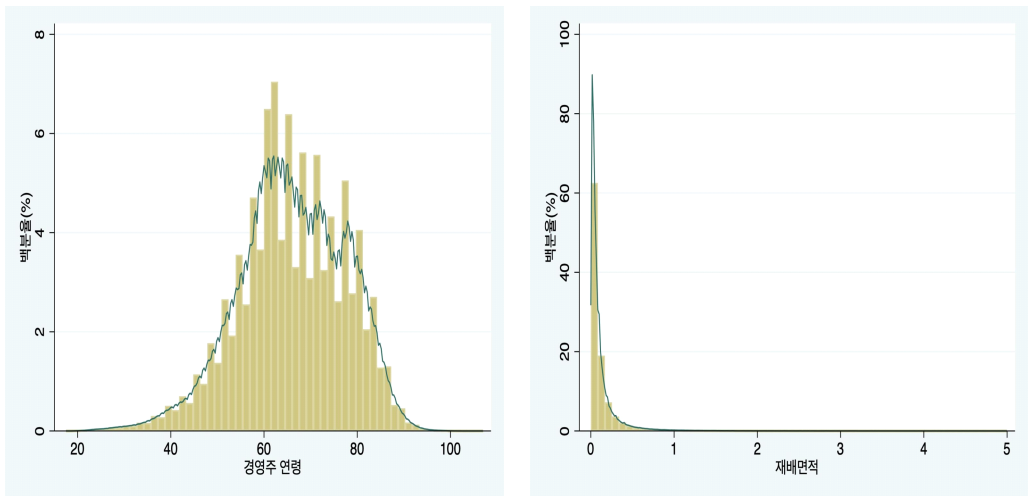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22〉 연령대 및 재배면적별 조미채소류 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3차원 그래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23〉 조미채소류 재배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출처: 저자 작성.

○ 재배면적 규모별 농업경영체의 미곡 및 조미채소류 면적 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4-27〉 재배면적 규모별 농업경영체의 미곡 및 조미채소류 면적 비율

구분	미곡류			조미채소류		
	면적 (ha)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면적 (ha)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0.1ha 미만	5,102	0.71	0.71	22,812	20.92	20.92
0.1~0.2ha	28,970	4.04	4.75	21,018	19.27	40.19
0.2~0.3ha	40,607	5.66	10.42	12,962	11.89	52.07
0.3~0.4ha	40,246	5.61	16.03	9,003	8.26	60.33
0.4~0.5ha	34,864	4.86	20.90	6,661	6.11	66.44
0.5~1.0ha	123,721	17.26	38.16	17,586	16.13	82.56
1.0~1.5ha	78,346	10.93	49.08	7,765	7.12	89.68
1.5~2.0ha	55,236	7.71	56.79	4,059	3.72	93.40
2.0~3.0ha	74,179	10.35	67.14	3,960	3.63	97.04
3.0~4.0ha	50,454	7.04	74.18	1,601	1.47	98.50
4.0~5.0ha	37,356	5.21	79.39	702	0.64	99.15
5.0~6.0ha	29,064	4.05	83.44	369	0.34	99.49
6.0~7.0ha	22,669	3.16	86.61	182	0.17	99.65
7.0~10.0ha	44,644	6.23	92.83	232	0.21	99.87
10ha 이상	51,373	7.17	100.00	145	0.13	100.00
합계	716,831	100.00	-	109,057	100.00	-

주: 0.2~0.3ha 구간을 0.2~0.25ha 구간과 0.25~0.3ha 구간으로 구분할 경우, 각 구간에 속하는 재배면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곡류의 경우 각각 2.72%와 2.94%, 조미채소류의 경우 각각 6.57%와 5.31%임.

출처: 저자 작성.

3. 농가경제조사 DB 기반 농가 유형 구분

3.1. 개요

- 농가를 영농형태, 농지면적, 농업수입⁴³⁾, 연령 등으로 분류하여 농가 유형별로 농업수입, 고정자산⁴⁴⁾, 부채, 농외소득 등 경영상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해 농가 유형별로 농업경영체DB에서 조사되지 않는 농업수입, 자산, 부채 등 경영체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유형별 경영상의 특성을 근거로 농업경영체 유형별 등록정보를 차등화하고 효율적인 정보수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2022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형태, 농지면적, 농업수입 등에 따라 분류하여 경영상의 특성을 살펴봄.
 - 『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하면 전국에서 대표성이 있는 약 3,000여 표본 농가를 임의 추출하여 수입·지출, 부채, 농가 및 가구원 특성 등 농업경영체DB에서 조사되지 않는 다양한 변수를 살펴볼 수 있음.
- 경영상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영농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 농가를 크게 식량, 원예, 축산 농가로 분류하였음.
 - 식량 농가: 『농가경제조사』상 영농 형태가 ‘논벼’, ‘전작’인 농가
 - 원예 농가: 『농가경제조사』상 영농 형태가 ‘과수’, ‘채소’, ‘화훼’인 농가
 - 축산 농가: 『농가경제조사』상 영농 형태가 ‘축산’인 농가

⁴³⁾ 식량, 원예 농가의 경우 농작물수입금액, 축산 농가의 경우 축산수입금액을 지칭함.

⁴⁴⁾ 토지, 기계·기구·비품, 대동·식물과 같이 수년간에 걸쳐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유형자산과 경작권, 영업권, 어업권 등 형태를 갖추지 않고 농가의 자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자산의 합

〈표 4-28〉 분석에 활용된 영농 형태별 농가 수

단위: 호

영농 형태	농가 수
식량	581
원예	1,097
축산	24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전체 농가를 식량, 원예, 축산 농가로 분류하고 난 뒤, 식량 농가와 원예 농가를 농지면적⁴⁵⁾을 기준으로, 축산 농가를 농업수입을 기준으로 각각 세분류하거나 전체 농가를 연령을 기준으로 세분류하였음.

- 전체 식량, 원예 농가를 농지면적에 따라 0.1ha 미만, 0.1~0.5ha, 0.5~1.0ha, 1.0~2.0ha, 2.0~3.0ha, 3.0~5.0ha, 5.0ha 이상 농가로 분류함.
- 전체 축산 농가를 농업수입에 따라 1천만 원 미만, 1천만~2천만 원, 2천만~3천만 원, 3천만~5천만 원, 5천만~7천만 원, 7천만~1억 원, 1억~3억 원, 3억 원 이상 농가로 분류함.
- 전체 농가를 경영주의 연령에 따라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농가로 분류함.

○ 식량 농가의 경우, 농지면적 기준 1.0~2.0ha 농가가 약 24.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0ha 이상의 농가가 17.38%, 3.0~5.0ha 농가가 16.87%로 뒤를 이었음.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면적 기준 0.1~0.5ha의 소규모 농가는 전체 식량 농가의 12.74%를 차지하고 있음.

⁴⁵⁾ 통계청의 토지 면적은 농지와 비농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의 농지는 토지 중 논, 일반 밭, 과수원, 묘포 등만을 포함하고, 임야, 대지, 기타를 제외한 면적의 합을 의미함.

〈표 4-29〉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 수 비중: 식량 농가

단위: %

구분	비중
0.5ha 미만	12.74
0.5~1.0ha	16.01
1.0~2.0ha	24.10
2.0~3.0ha	12.91
3.0~5.0ha	16.87
5.0ha 이상	17.38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원예 농가의 경우, 농지면적 기준 0.1~0.5ha 농가가 약 32.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0~2.0ha 농가가 19.51%, 0.5~1.0ha 농가가 18.78%로 뒤를 이었음.

- 농지면적 기준 0.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비중은 9.21% 수준임.
- 식량 농가의 농지면적별 비중과 비교하여 농지면적 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30〉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 수 비중: 원예 농가

단위: %

구분	비중
0.1ha 미만	9.21
0.1~0.5ha	32.82
0.5~1.0ha	18.78
1.0~2.0ha	19.51
2.0~3.0ha	8.48
3.0~5.0ha	7.66
5.0ha 이상	3.56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축산 농가의 경우, 농업수입 기준 1억~3억 원 농가가 약 24.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3억 원 이상 농가가 16.80%, 1천만~2천만 원 농가가 11.48%로 뒤를 이었음.
- 농업수입 기준 1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비중은 10.66% 수준임.

〈표 4-31〉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 수 비중: 축산 농가

단위: %

구분	비중
1천만 원 미만	10.66
1천만~2천만 원	11.48
2천만~3천만 원	6.15
3천만~5천만 원	10.66
5천만~7천만 원	8.61
7천만~1억 원	11.07
1억~3억 원	24.59
3억 원 이상	16.8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식량 농가와 원예 농가는 경영주 연령 기준 70세 이상 농가의 비중이 가장 높고, 축산 농가는 60~69세 농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식량 농가와 원예 농가의 경우, 경영주 연령 기준 70세 이상 농가의 비중은 각각 68.85%, 59.34%로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축산 농가의 경우, 60~69세 농가의 비중은 46.72%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 농가의 비중은 38.93%임.

〈표 4-32〉 연령별 농가 수 비중

단위: %

구분	식량	원예	축산
40세 미만	0.00	0.36	0.41
40~49세	1.55	1.37	2.05
50~59세	4.13	8.39	11.89
60~69세	25.47	30.54	46.72
70세 이상	68.85	59.34	38.93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3.2. 식량 농가 경영 특성 현황

○ 2022년 식량 농가의 평균 농업수입은 2,438만 원임. 농지면적별로 농가 간 농업수입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농업수입은 341만 원 수준으로 식량 농가 평균 농업수입의 약 14% 수준임.
-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농업수입은 8,312만 원 수준임.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와 비교하여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농업수입은 약 4% 수준에 불과함.

〈표 4-33〉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업수입: 식량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농업수입
0.5ha 미만	3,412
0.5~1.0ha	6,325
1.0~2.0ha	13,355
2.0~3.0ha	19,772
3.0~5.0ha	33,400
5.0ha 이상	83,119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농업수입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경영주 연령 40~49세 농가의 농업수입은 8,647만 원 수준인 반면, 70세 이상 농가의 농업수입은 1,683만 원 수준으로 40~49세 농가의 농업수입의 20% 수준임.

〈표 4-34〉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업수입: 식량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농업수입
40~49세	86,478
50~59세	75,434
60~69세	42,115
70세 이상	16,831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2022년 식량 농가의 평균 고정자산은 5억 4천만 원임. 농업수입과 비교하여 농지면적 별로 고정자산의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고정자산은 약 4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식량 농가 평균 고정자산의 약 88% 수준임.
-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고정자산은 8억 9천만 원 수준임.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와 비교하여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고정자산은 약 54% 수준에 달함.

〈표 4-35〉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고정자산: 식량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고정자산
0.5ha 미만	486,128
0.5~1.0ha	459,319
1.0~2.0ha	450,692
2.0~3.0ha	558,731
3.0~5.0ha	550,531
5.0ha 이상	895,532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대체로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농업수입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연령별로 고정 자산의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경영주 연령 50~59세 농가의 고정자산은 약 8억 3천만 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 농가의 고정자산은 약 5억 1천만 원 수준으로 가장 낮았음.

〈표 4-36〉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고정자산: 식량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고정자산
40~49세	745,333
50~59세	830,529
60~69세	622,487
70세 이상	513,378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2022년 식량 농가의 평균 농지부채는 2,174만 원임. 농지면적별로 살펴본 결과, 농지면적과 농지부채 간의 뚜렷한 상관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형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됨.

-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농지부채는 1,948만 원 수준으로 식량 농가 평균 농지부채의 약 90% 수준으로 높음.
-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농지부채는 6천 2백만 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음. 대규모 농가가 대출을 통한 농업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37〉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 식량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농지부채
0.5ha 미만	19,478
0.5~1.0ha	4,006
1.0~2.0ha	25,914
2.0~3.0ha	7,201
3.0~5.0ha	13,227
5.0ha 이상	62,031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농가부채는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됨. 경영주 연령 40~49세 농가의 농업수입은 1억 7백만 원 수준인 반면, 70세 이상 농가의 농업수입은 1천 6백만

원 수준으로 40~49세 농가의 농지부채의 15% 수준임.

〈표 4-38〉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 식량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농가부채
40~49세	107,220
50~59세	88,271
60~69세	30,331
70세 이상	15,733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2022년 식량 농가의 평균 농외소득은 489만 원임. 대체로 소규모 농가 혹은 대규모 농가의 농외소득은 높고, 중규모 농가의 농외소득은 낮은 것으로 확인됨.

-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농외소득은 1천만 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농외소득이 529만 원으로 뒤를 이었음.

〈표 4-39〉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외소득: 식량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농외소득
0.5ha 미만	5,294
0.5~1.0ha	3,327
1.0~2.0ha	3,532
2.0~3.0ha	3,408
3.0~5.0ha	4,987
5.0ha 이상	10,284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대체로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농외소득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경영주 연령 40~49세 농가 및 50~59세 농가의 농외소득은 약 1천 2백만 원 수준이었으나, 70세 이상 농가의 농외소득은 약 3백만 원 수준으로 낮았음.

〈표 4-40〉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외소득: 식량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농외소득
40~49세	12,064
50~59세	12,251
60~69세	9,408
70세 이상	3,302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유형별 농업수입 비중을 산출한 결과 전체 농업수입 대비 전체 식량 농가 수의 17.38%를 차지하는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농업수입 비중은 53.47%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전체 식량 농가 수의 12.74%를 차지하는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농업수입 비중은 약 1.43%에 불과함.
- 농지면적 기준 1ha 미만으로 확장하여도 농업수입 비중은 4.82%로 전체 농업수입의 5%에 미달함.

○ 유형별 고정자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고정자산 비중은 28.85%로 가장 높았음.

- 그러나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를 제외하고, 고정자산 점유 비중은 유형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고정자산 비중은 약 10%에 달함.

○ 유형별 농가부채의 비중을 살펴보면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농가부채 비중은 47.66%로 전체 농가부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와 1.0~2.0ha의 중규모 농가(농가부채 비중 26.20%)를 제외하고, 농지부채 점유 비중은 유형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농지부채 비중은 약 10%에 달함.

〈표 4-41〉 농지면적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점유비중: 식량 농가

단위: %

구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0.5ha 미만	1.43	10.05	9.77
0.5~1.0ha	3.39	13.20	2.79
1.0~2.0ha	11.13	18.49	25.80
2.0~3.0ha	9.21	12.81	4.00
3.0~5.0ha	21.04	17.07	9.95
5.0ha 이상	53.47	28.35	47.66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경영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유형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비중을 산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연령별 농가 수 비중과 유사하게 70세 이상 그룹이 가장 높고, 40~49세 그룹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농업수입 비중은 70세 이상 42.57%, 40~49세 4.72% 수준임.
- 고정자산 비중은 70세 이상 63.01%, 40~49세 1.95% 수준임.
- 농지부채 비중은 70세 이상 45.02%, 40~49세 15.57% 수준임.

〈표 4-42〉 연령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점유비중: 식량 농가

단위: %

구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40~49세	4.72	1.95	6.58
50~59세	11.84	6.26	15.57
60~69세	40.52	28.77	32.81
70세 이상	42.87	63.01	45.02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3.3. 원예 농가 경영 특성 현황

○ 2022년 원예 농가의 평균 농업수입은 4,224만 원임. 농지면적별로 농가 간 농업수입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0.1~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농업수입은 1,636만 원 수준으로 가장 낮았음. 이는 원예 농가 평균 농업수입의 약 38% 수준임.
- 반면,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농업수입은 1억 4천만 원 수준임.

〈표 4-43〉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업수입: 원예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농업수입
0.1ha 미만	33,854
0.1~0.5ha	16,361
0.5~1.0ha	37,929
1.0~2.0ha	60,708
2.0~3.0ha	67,232
3.0~5.0ha	114,053
5.0ha 이상	143,857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40세 미만 청년농을 제외하고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농업수입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경영주 연령 40~49세 농가의 농업수입은 1억 1천만 원 수준으로 가장 높은 반면, 농업수입이 가장 낮은 70세 이상 농가의 농업수입은 2천 2백만 원 수준으로 40~49세 농가의 농업수입의 27% 수준임.

〈표 4-44〉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업수입: 원예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농업수입
40세 미만	83,391
40~49세	110,927
50~59세	104,286
60~69세	66,794
70세 이상	22,968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2022년 원예 농가의 평균 고정자산은 4억 6천만 원임. 농지면적별로 고정자산의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0.5~1.0ha 미만의 농가의 고정자산은 3억 8천만 원 수준으로 가장 낮았음.
- 0.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고정자산은 각각 5억 9천만 원, 6억7천만 원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표 4-45〉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고정자산: 원예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고정자산
0.1ha 미만	598,940
0.1~0.5ha	455,161
0.5~1.0ha	379,964
1.0~2.0ha	416,769
2.0~3.0ha	451,823
3.0~5.0ha	625,193
5.0ha 이상	675,333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경영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50~59세의 고정자산이 가장 많고, 40세 미만의 청년농과 70세 이상의 고령농의 고정자산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경영주 연령 50~59세 농가의 고정자산은 6억 2천만 원 수준으로 가장 높은 반면, 40

세 미만과 70세 이상 농가의 고정자산은 각각 약 4억 3천만 원 수준으로 가장 낮았음.

〈표 4-46〉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고정자산: 원예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고정자산
40세 미만	431,029
40~49세	535,003
50~59세	622,793
60~69세	483,711
70세 이상	438,448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2022년 원예 농가의 평균 농지부채는 2,560만 원임. 대체로 농지면적 규모가 클수록 농지부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0.1~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농지부채는 1,686만 원 수준으로 가장 낮았음.
- 반면,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농지부채는 1억 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음. 대규모 농가가 대출을 통한 농업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47〉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 원예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농지부채
0.1ha 미만	27,480
0.1~0.5ha	16,861
0.5~1.0ha	20,858
1.0~2.0ha	23,052
2.0~3.0ha	33,750
3.0~5.0ha	59,547
5.0ha 이상	107,707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40세 미만 청년농을 제외하고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농가부채는 적은 경향이 확인됨.

- 경영주 연령 40~49세 농가의 농가부채는 약 2억 원 수준으로 가장 높은 반면, 70세 이상 농가의 농가부채는 1천 3백만 원 수준임.

〈표 4-48〉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 원예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농가부채
40세 미만	37,837
40~49세	199,240
50~59세	74,131
60~69세	36,080
70세 이상	13,080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2022년 원예 농가의 평균 농외소득은 470만 원으로 식량 농가 평균 농외소득 489만 원과 비슷한 수준임. 식량 농가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소규모 농가 혹은 대규모 농가의 농외소득은 높고, 중규모 농가의 농외소득은 낮은 것으로 확인됨.

-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농외소득은 1천 1백만 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5.0ha 미만의 농가가 810만 원으로 뒤를 이었음.
-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농외소득은 518만 원 수준으로 높은 편에 속한 것으로 확인됨.

〈표 4-49〉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외소득: 원예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농외소득
0.1ha 미만	5,179
0.1~0.5ha	4,247
0.5~1.0ha	3,202
1.0~2.0ha	4,912
2.0~3.0ha	4,935
3.0~5.0ha	8,109
5.0ha 이상	11,858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경영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영주 연령 50~59세 농가의 농외소득이 1천만 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 농가의 농외소득이 3백만 원 수준으로 가장 낮았음.

〈표 4-50〉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외소득: 원예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농외소득
40세 미만	4,378
40~49세	6,368
50~59세	10,802
60~69세	5,838
70세 이상	3,542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농업수입 비중을 산출한 결과 1.0~2.0ha의 중규모 농가의 농업수입 비중이 25.67%로 가장 높았음.

- 전체 원예 농가 수의 9.21%를 차지하는 0.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농업수입 비중은 약 6.34%에 수준임.
- 0.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1.0~2.0ha의 중규모 농가를 제외하고, 농업수입 점유 비중은 유형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유형별 고정자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0.1~0.5ha 규모의 소규모 농가의 고정자산 비중은 30.52%로 가장 높았음.

- 0.1ha 미만의 농가의 비중과 0.1~0.5ha 규모의 농가의 비중을 합한 0.5ha 미만 농가의 고정자산 비중은 약 42.03%에 달함.
-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고정자산 비중은 약 5.24% 수준임.

- 유형별 농가부채의 비중을 살펴보면 0.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농가부채 비중이 8.81%로 가장 낮았음.

- 그러나 농지부채 점유 비중은 유형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표 4-51〉 농지면적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점유비중: 원예 농가

단위: %

구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0.1ha 미만	6.34	11.51	8.81
0.1~0.5ha	10.70	30.52	18.86
0.5~1.0ha	15.13	15.53	14.23
1.0~2.0ha	25.67	18.06	16.67
2.0~3.0ha	12.34	8.49	10.59
3.0~5.0ha	18.88	10.61	16.86
5.0ha 이상	10.90	5.24	13.96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경영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유형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비중을 산출한 결과, 농업수입과 농지부채에서는 60~69세 그룹이 각각 45.86%, 39.51%로 가장 높고 고정자산에서는 70세 이상 그룹이 54.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2〉 연령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점유비중: 원예 농가

단위: %

구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40세 미만	0.70	0.35	0.50
40~49세	3.51	1.63	10.06
50~59세	20.26	11.64	22.97
60~69세	45.86	31.94	39.51
70세 이상	29.64	54.43	26.92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3.4. 축산 농가 경영 특성 현황

○ 2022년 축산 농가의 평균 고정자산은 약 10억 원임. 농업수입을 기준으로 유형별 고정자산의 격차는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됨.

- 농업수입 기준 1천만 원 미만 농가의 고정자산은 약 3억 9천만 원 수준으로 가장 낮았음.
- 이에 반해 농업수입 기준 3억 원 이상 농가의 고정자산은 약 19억 6천만 원 수준으로, 농업수입 기준 1천만 원 미만 농가에 비해 약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4-53〉 농업수입 기준 유형별 고정자산: 축산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고정자산
1천만 원 미만	399,249
1천만~2천만 원	470,479
2천만~3천만 원	1,066,779
3천만~5천만 원	503,474
5천만~7천만 원	749,763
7천만~1억 원	936,425
1억~3억 원	1,172,221
3억 원 이상	1,966,123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경영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40~49세의 고정자산이 가장 많고, 40세 미만의 청년농과 70세 이상의 고령농의 고정자산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경영주 연령 40~49세 농가의 고정자산은 2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가장 높은 반면, 40세 미만과 70세 이상 농가의 고정자산은 각각 약 8억 5천만 원, 6억 9천만 원 수준으로 가장 낮았음.

〈표 4-54〉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고정자산: 축산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고정자산
40세 미만	859,435
40~49세	2,127,343
50~59세	1,177,137
60~69세	1,229,518
70세 이상	693,829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2022년 축산 농가의 평균 농지부채는 1억 1천만 원임. 농업수입별로 농가 간 농지부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농업수입 1천만 원 미만 농가의 농지부채는 1백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음.
- 이에 반해 농업수입 3억 원 이상 농가의 농지부채는 2억 6천만 원 수준으로 농업수입 1천만 원 미만 농가의 부채인 1백 만 원의 약 224배에 달함.

〈표 4-55〉 농업수입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 축산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농지부채
1천만 원 미만	1,193
1천만~2천만 원	25,919
2천만~3천만 원	48,456
3천만~5천만 원	27,312
5천만~7천만 원	105,775
7천만~1억 원	71,902
1억~3억 원	189,528
3억 원 이상	267,253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대체로 40세 미만 청년농을 제외하고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농가부채는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영주 연령 40~49세 농가의 농가부채는 약 4억 8천만 원 수준으로 가장 높은 반면,

70세 이상 농가의 농가부채는 2천 7백만 원 수준임.

〈표 4-56〉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 축산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농지부채
40세 미만	300,000
40~49세	489,865
50~59세	174,837
60~69세	175,714
70세 이상	27,415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2022년 축산 농가의 평균 농외 소득은 964만 원으로 식량 농가 평균 농외소득 489만 원, 원예 농가의 평균 농외소득 470만 원과 비교하여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식량 농가 및 원예 농가와 달리 농업수입이 높을수록 농외소득 규모도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수입 기준 1억~3억 원 농가의 농외소득은 1천 4백만 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음.
- 반면, 농업수입 기준 1천만 원 미만 농가의 농외소득은 435만 원으로 가장 낮았음.

〈표 4-57〉 농업수입 기준 유형별 농외소득: 축산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농외소득
1천만 원 미만	4,354
1천만~2천만 원	5,837
2천만~3천만 원	7,330
3천만~5천만 원	6,484
5천만~7천만 원	12,454
7천만~1억 원	12,495
1억~3억 원	14,433
3억 원 이상	9,268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경영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영주 연령 50~59세 농가의 농외소득이 2천 5백만 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음. 40세 미만 청년농을 제외하고 70세 이상 농가의 농외소득은 494만 원 수준으로 가장 낮았음.

〈표 4-58〉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외소득: 축산 농가

단위: 천 원

구분	농외소득
40세 미만	226
40~49세	21,794
50~59세	25,109
60~69세	9,531
70세 이상	4,945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유형별로 농업수입 비중을 산출한 결과 전체 축산 농가 수의 10.66%를 차지하는 1천만 원 미만 농가의 농업수입 비중은 0.31%에 불과함.
 - 농업수입 기준 3천만 원 미만으로 확장하여도 농업수입 비중은 전체 농업수입의 2%에도 미달함.
 - 반면에 농업수입 기준 1억~3억 원, 3억 원 이상 농가의 농업수입 비중은 각각 21.84%, 66.76%로, 1억 원 이상 농가의 농업수입 비중은 88.6%에 달함.
- 유형별 고정자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체로 농업수입 규모가 클수록 고정자산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농업수입 기준 1천만 원 미만 농가의 고정자산 비중은 약 3.81% 수준임.
 - 농업수입 기준 1억~3억 원, 3억 원 이상 농가의 고정자산 비중은 각각 28.73%, 33.48%로, 1억 원 이상 농가의 고정자산 비중은 전체 고정자산의 62.2%에 달함.
- 유형별 농가부채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농지부채에서 1억~3억 원, 3억 원 이상 농가의 농지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농업수입 기준 1억~3억 원, 3억 원 이상 농가의 농지부채의 비중은 각각 39.34%, 38.55%로, 1억 원 이상 농가의 고정자산 비중은 77.8%에 달함.
- 반면, 전체 축산 농가 수의 10.66%를 차지하는 1천만 원 미만 농가의 농업수입 비중은 0.1% 수준에 불과함.

〈표 4-59〉 농지면적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점유비중: 축산 농가

단위: %

구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1천만 원 미만	0.31	3.81	0.096
1천만~2천만 원	0.85	5.37	2.46
2천만~3천만 원	0.77	6.20	2.38
3천만~5천만 원	2.11	5.43	2.49
5천만~7천만 원	2.59	6.54	7.81
7천만~1억 원	4.74	10.50	6.83
1억~3억 원	21.84	28.73	39.34
3억 원 이상	66.76	33.48	38.55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경영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유형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비중을 산출한 결과,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모두에서 60~69세 그룹이 각각 60.4%, 56.4%, 6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60〉 연령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점유비중: 축산 농가

단위: %

구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40세 미만	2.27	0.34	1.00
40~49세	2.38	4.31	8.16
50~59세	18.60	13.36	13.32
60~69세	60.36	56.36	66.19
70세 이상	16.37	25.61	8.31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4. 농업총조사 DB 기반 농가 유형 구분

4.1. 개요

○ 2020년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기반으로 농가유형을 분류함. 농가의 경영형태에 따라 식량 농가, 원예 농가, 축산 농가로 구분하고, 경영규모(경지면적, 사육두수), 판매금액에 따른 농가 비중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경영주 연령(만 나이 기준), 경영주 영농경력, 농외수입 비중 등 농가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함.

- 식량 농가: 「농업총조사」상 경영형태가 논벼(노지), 논벼(시설), 식량작물(노지), 식량작물(시설)인 농가
- 원예 농가: 「농업총조사」상 경영형태가 채소·산나물(노지), 채소·산나물(시설), 특용작물·버섯(노지), 특용작물·버섯(시설), 과수(노지), 과수(시설), 약용작물(노지), 약용작물(시설), 화초·관상작물(노지), 화초·관상작물(시설), 기타작물(노지), 기타작물(시설)인 농가
- 축산 농가: 「농업총조사」상 경영형태가 축산인 농가

○ 영농형태별 농가 구성을 살펴보면, 식량 농가가 전체의 53.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원예 농가 42.7%, 축산 농가 4.2% 순으로 나타남.

〈표 4-61〉 영농형태별 농가 수

단위: 호, %

구 분	농가 수	비 중
식량 농가	549,740	53.1
원예 농가	442,189	42.7
축산 농가	43,264	4.2
전체 농가	1,035,193	100.0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 다음으로 식량 농가와 원예 농가는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축산 농가는 판매금액 기준⁴⁶⁾으로 세분류하였음.

- 식량 농가와 원예 농가는 경지면적에 따라 0.1ha 미만, 0.1~0.5ha, 0.5~1.0ha, 1.0~2.0ha, 2.0~3.0ha, 3.0~5.0ha, 5.0ha 이상 농가로 분류함.
- 축산농가는 판매금액에 따라 120만 원 미만, 120만 원~1천만 원, 1천만~3천만 원, 3천만~5천만 원, 5천만~7천만 원, 7천만~1억 원, 1억~2억 원, 2억 원 이상 농가로 분류함.

○ 식량 농가의 경우, 경지면적 기준 1ha 미만 농가가 72.2%로 영세 소농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0.1~0.5ha 농가가 4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0.5~1.0ha의 농가가 22.6%, 1.0~2.0ha 농가가 14.5%로 뒤를 이었음.
-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 기준인 1,000㎡ 미만 농가는 전체농가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2〉 경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 수 비중: 식량 농가

단위: 호, %

구 분	농가 수	비 중
식량 농가	549,740	100.0
0.1ha 미만	2,891	0.5
0.1~0.5ha	269,972	49.1
0.5~1.0ha	124,054	22.6
1.0~2.0ha	79,596	14.5
2.0~4.0ha	41,611	7.6
4.0~6.0ha	13,524	2.5
6.0ha 초과	18,067	3.3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46) 축산의 축종이 다양하고 다수의 축산농가가 다 축종을 사육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판매액을 기준으로 세분류 함.

○ 원예 농가도 식량 농가와 마찬가지로 경지면적 기준 1ha 미만 농가가 77.7%로 영세 소농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0.1~0.5ha 농가가 5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0.5~1.0ha의 농가가 20.8%, 1.0~2.0ha 농가가 13.4%로 뒤를 이었음.
- 1,000㎡ 미만 농가 비중은 1.5%로 나타났지만, 실제 원예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의 물적 기준(노지)인 660㎡ 미만에 해당하는 농가 비중은 0.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표 4-63〉 경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 수 비중: 원예 농가

단위: 호, %

구 분	농가 수	비 중
원예 농가	442,189	100.0
0.1ha 미만	6,817	1.5
0.1~0.5ha	244,869	55.4
0.5~1.0ha	91,886	20.8
1.0~2.0ha	59,097	13.4
2.0~4.0ha	27,324	6.2
4.0~6.0ha	6,273	1.4
6.0ha 초과	5,877	1.3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 축산 농가의 경우, 판매액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을 판매하는 농가 비중이 60.4%로 절반 이상의 농가들이 중소규모 판매 농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천만~3천만 원 판매하는 농가 비중이 23.9%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20만~1천만 원 판매농가(18.5%), 3천만~5천만 원 판매농가(13.2%), 2억 원 이상 판매농가(11.8%) 순으로 집계됨.
- 한편, 실제 농업경영체 가축 사육 농가의 등록기준인 “330㎡ 이상의 농지~”에 해당하는 농가는 전체 축산 농가의 79.0%로 나머지 21.0% 농가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4〉 판매액 기준 유형별 농가 수 비중: 축산 농가

단위: 호, %

구 분	농가 수	비 중
축산 농가	43,264	100.0
120만 원 미만	2,077	4.8
120만~1천만 원	8,013	18.5
1천만~3천만 원	10,344	23.9
3천만~5천만 원	5,710	13.2
5천만~7천만 원	4,155	9.6
7천만~1억 원	3,858	8.9
1억~2억 원	4,012	9.3
2억 원 이상	5,095	11.8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4.2. 식량 농가 특성

○ 식량 농가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7.3세이며, 60대, 70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됨.

- 경영주 연령이 60대인 농가 비중이 3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70대(30.9%), 50대(17.4%), 80대 이상(14.1%) 순임. 40대 이하 비중은 6.3%에 불과함.
- 경지면적 규모별·연령별로 살펴보면, 경지면적이 0.1~0.5ha이고 경영주 연령이 60대와 70대인 농가가 전체 식량 농가의 각각 14.8%, 14.2%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4-65〉 경지면적 규모별·연령별 농가 수 비중: 식량 농가

단위: %, 세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평균연령
식량 농가	0.08	0.85	5.33	17.44	31.31	30.87	14.11	67.3
0.1ha 미만	0.00	0.01	0.03	0.09	0.14	0.16	0.09	67.0
0.1~0.5ha	0.03	0.48	3.05	9.27	14.75	14.23	7.29	66.3
0.5~1.0ha	0.01	0.12	0.90	3.28	6.51	7.82	3.93	67.4
1.0~2.0ha	0.01	0.08	0.53	2.01	4.54	5.23	2.07	66.8
2.0~4.0ha	0.01	0.06	0.36	1.29	2.87	2.41	0.57	64.7
4.0~6.0ha	0.00	0.03	0.16	0.54	1.08	0.56	0.09	62.8
6.0ha 초과	0.01	0.07	0.31	0.97	1.42	0.45	0.06	60.4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 식량 농가 경영주의 평균 영농경력은 33.7년이며, 20년 이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됨.

- 경영주의 영농경력이 20년 이상인 농가의 비중이 7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15년(9.5%), 5~10년(7.9%), 5년 미만(6.0%), 15~20년(4.9%) 순으로 집계됨.
- 경지면적 규모별·영농경력별로 살펴보면, 경지면적 '0.1~0.5ha'와 영농경력 '20년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농가 비중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지면적 '0.5~1ha'와 영농경력 '20년 이상' 농가 (17.7%), 경지면적 '1~2ha'와 영농경력 '20년 이상' (12.4%) 농가 순임.

〈표 4-66〉 경지면적 규모별·영농경력별 농가 수 비중: 식량 농가

단위: %, 년

구 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평균 경력
식량 농가	6.05	7.86	9.47	4.88	71.74	33.7
0.1ha 미만	0.05	0.06	0.07	0.03	0.32	28.3
0.1~0.5ha	4.54	5.60	6.29	3.02	29.65	27.1
0.5~1.0ha	0.90	1.28	1.75	0.96	17.68	34.3
1.0~2.0ha	0.36	0.53	0.76	0.46	12.37	36.9
2.0~4.0ha	0.13	0.24	0.33	0.22	6.65	36.6
4.0~6.0ha	0.03	0.07	0.11	0.07	2.18	35.5
6.0ha 초과	0.03	0.09	0.16	0.12	2.89	33.8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 식량 농가의 평균 농외수입 비중은 26.6%이며, 10% 미만 비중에 해당하는 농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농외수입 비중이 10% 미만인 농가의 비중이 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90% 이상인 농가(15.1%), 70~90%인 농가(8.4%) 순으로 집계됨.
- 경지면적 규모별·농외수입 비중별로 살펴보면, 경지면적 '0.1~0.5ha'와 농외수입 비중 '10% 미만'을 모두 만족하는 농가 비중이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지면적 '0.5~1.0ha'와 농외수입 비중 '10% 미만' 농가 (14.6%), 경지면적 '0.1~0.5ha'와 농외수입 비중 '90% 이상' 농가 (12.5%) 순임.

〈표 4-67〉 경지면적 규모별·농외수입 비중별 농가 수 비중: 식량 농가

단위: %

구 분	10% 미만	10~30%	30~50%	50~70%	70~90%	90% 이상	평균 농외수입 비중
식량 농가	60.98	4.17	4.94	6.48	8.37	15.06	26.6
0.1ha 미만	0.30	0.02	0.02	0.03	0.07	0.09	29.9
0.1~0.5ha	26.17	1.26	1.57	2.71	4.90	12.51	35.9
0.5~1.0ha	14.60	0.90	1.21	1.79	2.14	1.93	21.3
1.0~2.0ha	10.20	0.79	0.99	1.16	0.91	0.43	14.4
2.0~4.0ha	5.51	0.55	0.64	0.54	0.26	0.08	11.2
4.0~6.0ha	1.78	0.25	0.23	0.13	0.05	0.02	10.1
6.0ha 초과	2.42	0.40	0.29	0.12	0.04	0.01	9.0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 식량 농가의 92.3%는 3천만 원 미만을 판매하는 농가

- 120만~1천만 원을 판매하는 농가가 전체 식량 농가 중 48.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20만 원 미만 판매농가(29.3%), 1천만~3천만 원 판매농가(14.8%) 순임.
- 경지면적 규모별·판매규모별로 살펴보면, 경지면적 '0.1~0.5ha'와 판매액 '120만 원 미만'을 모두 만족하는 농가 비중이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지면적 '0.1~0.5ha'와 판매액 '120만~1천만 원'인 농가(22.6%), 경지면적 '0.5~1ha'와 판매액 '120만~1천만 원'인 농가(16.3%)가 뒤를 이었음.

〈표 4-68〉 경지면적 규모별·판매규모별 농가 수 비중: 식량 농가

단위: %

구 분	120만원 미만	120만~1천만 원	1천만~3천만 원	3천만~5천만 원	5천만~7천만 원	7천만~1억 원	1억~2억 원	2억 원 이상
식량 농가	29.30	48.20	14.78	3.71	1.84	1.21	0.75	0.20
0.1ha 미만	0.01	0.51	0.01	0.00	0.00	0.00	0.00	0.00
0.1~0.5ha	25.48	22.58	0.93	0.08	0.02	0.01	0.01	0.00
0.5~1.0ha	3.14	16.32	2.78	0.22	0.06	0.03	0.01	0.00
1.0~2.0ha	0.55	7.08	5.91	0.64	0.19	0.07	0.03	0.01
2.0~4.0ha	0.10	1.36	3.94	1.42	0.47	0.20	0.08	0.02
4.0~6.0ha	0.02	0.21	0.74	0.77	0.43	0.20	0.08	0.01
6.0ha 초과	0.01	0.15	0.47	0.58	0.67	0.70	0.54	0.16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4.3. 원예 농가 특성

○ 원예 농가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5.0세이며, 60대, 70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됨.

- 경영주 연령이 60대인 농가 비중이 3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70대(25.9%), 50대(21.6%), 80대 이상(9.0%) 순임. 40대 이하 비중은 7.9%에 불과함.
- 경지면적 규모별·연령별로 살펴보면, 경지면적이 0.1~0.5ha이고 경영주 연령이 60대와 70대인 농가가 전체 원예 농가의 각각 18.9%, 14.8%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4-69〉 경지면적 규모별·연령별 농가 수 비중: 원예 농가

단위: %, 세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평균연령
원예 농가	0.11	1.21	6.58	21.59	35.66	25.88	8.97	65.0
0.1ha 미만	0.00	0.02	0.10	0.28	0.46	0.44	0.24	67.0
0.1~0.5ha	0.06	0.64	3.56	11.56	18.90	14.78	5.89	66.3
0.5~1.0ha	0.02	0.24	1.30	4.28	7.42	5.75	1.77	67.4
1.0~2.0ha	0.01	0.16	0.88	2.95	5.23	3.37	0.76	66.8
2.0~4.0ha	0.01	0.09	0.47	1.64	2.54	1.19	0.24	64.7
4.0~6.0ha	0.00	0.02	0.12	0.45	0.58	0.21	0.04	62.8
6.0ha 초과	0.00	0.04	0.13	0.44	0.54	0.14	0.03	60.4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 원예 농가 경영주의 평균 영농경력은 27.7년이며, 20년 이상 영농경력 농가 비중이 60% 정도를 구성함.

- 경영주의 영농경력이 20년 이상인 농가의 비중이 6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15년(12.8%), 5~10년(12.5%), 5년 미만(8.0%), 15~20년(6.3%) 순으로 집계됨. 원예 농가는 경영주의 영농경력이 비교적 짧은 10년 이내 농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식량 농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경지면적 규모별·영농경력별로 살펴보면, 경지면적 '0.1~0.5ha'와 영농경력 '20년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농가 비중이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지면적 '0.5~1ha'와 영농경력 '20년 이상' 농가(13.9%), 경지면적 '1~2ha'와 영농경

력 '20년 이상' (10.0%) 농가 순임.

〈표 4-70〉 경지면적 규모별·영농경력별 농가 수 비중: 원예 농가

단위: %, 년

구 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평균 경력
원예 농가	7.96	12.50	12.82	6.26	60.46	27.7
0.1ha 미만	0.16	0.20	0.20	0.08	0.90	28.3
0.1~0.5ha	6.01	8.56	8.28	3.75	28.79	27.1
0.5~1.0ha	1.12	2.17	2.38	1.24	13.87	34.3
1.0~2.0ha	0.46	1.04	1.22	0.69	9.96	36.9
2.0~4.0ha	0.15	0.38	0.51	0.34	4.81	36.6
4.0~6.0ha	0.03	0.08	0.12	0.08	1.10	35.5
6.0ha 초과	0.03	0.07	0.12	0.09	1.03	33.8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 원예 농가의 평균 농외수입 비중은 27.0%이며, 10% 미만 비중에 해당하는 농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농외수입 비중이 10% 미만인 농가의 비중이 5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90% 이상 농가(17.7%), 70~90% 농가(8.9%) 순으로 집계됨.
- 경지면적 규모별·농외수입 비중별로 살펴보면, 경지면적 '0.1~0.5ha'와 농외수입 비중 '10% 미만'을 모두 만족하는 농가 비중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지면적 '0.5~1.0ha'와 농외수입 비중 '10% 미만' 농가 (13.5%), 경지면적 '0.1~0.5ha'와 농외수입 비중 '90% 이상' 농가 (12.3%) 순임.

〈표 4-71〉 경지면적 규모별·농외수입 비중별 농가 수 비중: 원예 농가

단위: %

구 분	10% 미만	10~30%	30~50%	50~70%	70~90%	90% 이상	평균 농외수입 비중
식량 농가	59.50	4.57	5.32	7.05	8.91	14.66	27.0
0.1ha 미만	0.87	0.05	0.07	0.12	0.20	0.22	29.9
0.1~0.5ha	29.05	1.73	2.23	3.83	6.26	12.28	35.9
0.5~1.0ha	13.47	1.08	1.35	1.72	1.60	1.56	21.3
1.0~2.0ha	9.58	0.90	0.97	0.88	0.60	0.42	14.4
2.0~4.0ha	4.56	0.50	0.47	0.35	0.18	0.12	11.2
4.0~6.0ha	1.03	0.14	0.11	0.08	0.03	0.03	10.1
6.0ha 초과	0.94	0.14	0.12	0.07	0.03	0.02	9.0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 원예 농가의 90.5%는 5천만 원 미만을 판매하는 농가

- 120만~1천만 원을 판매하는 농가가 전체 원예 농가 중 40.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20만 원 미만 판매농가(25.8%), 1천만~3천만 원 판매농가(17.8%), 3천만~5천만 원 판매농가(6.9%) 순임.
- 경지면적 규모별·판매규모별로 살펴보면, 경지면적 '0.1~0.5ha'와 판매액 '120만~1천만 원'을 모두 만족하는 농가 비중이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경지면적 '0.1~0.5ha'와 판매액 '120만~1천만 원'인 농가(22.7%), 경지면적 '0.5~1.0ha'와 판매액 '120만~1천만 원'인 농가(8.4%) 순으로 나타남.

〈표 4-72〉 경지면적 규모별·판매규모별 농가 수 비중: 원예 농가

단위: %

구 분	120만원 미만	120만~ 1천만 원	1천만~ 3천만 원	3천만~ 5천만 원	5천만~ 7천만 원	7천만~ 1억 원	1억~ 2억 원	2억 원 이상
식량 농가	25.77	40.00	17.82	6.89	3.95	2.79	2.05	0.72
0.1ha 미만	0.01	1.41	0.07	0.02	0.01	0.01	0.01	0.01
0.1~0.5ha	22.71	26.26	4.73	0.91	0.40	0.22	0.11	0.04
0.5~1.0ha	2.29	8.43	6.34	1.87	0.85	0.58	0.35	0.07
1.0~2.0ha	0.57	2.95	4.65	2.43	1.28	0.79	0.54	0.16
2.0~4.0ha	0.14	0.74	1.55	1.27	1.00	0.76	0.55	0.16
4.0~6.0ha	0.03	0.12	0.29	0.23	0.23	0.22	0.23	0.07
6.0ha 초과	0.02	0.08	0.20	0.17	0.18	0.21	0.26	0.21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4.4. 축산 농가 특성

○ 축산 농가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1.7세이며, 50대와 60대의 비중이 높은 편임.

- 경영주 연령이 60대인 농가 비중이 4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대(25.3%), 70대(18.6%), 40대(8.2%) 순임. 타 경영형태와 비교하여 40대 이하 경영주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판매 규모별·연령별로 살펴보면, 판매액이 1천만~3천만 원이고 경영주 연령이 60대인 농가가 전체 축산 농가의 10%로 가장 높은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액이 120~1천만 원이고 경영주 연령이 60대인 농가(7.2%)가 다음으로 많았음. 한편, 4~5% 비중을 차지하는 조합이 7개 정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됨.

〈표 4-73〉 판매 규모별·연령별 농가 수 비중: 축산 농가

단위: %, 세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평균연령
축산 농가	0.46	2.95	8.23	25.34	41.35	18.57	3.09	61.7
120만 원 미만	0.03	0.16	0.39	1.26	1.75	0.97	0.25	62.1
120만~1천만 원	0.06	0.29	1.10	3.70	7.19	5.03	1.16	64.7
1천만~3천만 원	0.07	0.50	1.51	5.29	9.96	5.66	0.92	63.4
3천만~5천만 원	0.06	0.37	1.05	3.40	5.69	2.33	0.30	61.6
5천만~7천만 원	0.05	0.31	0.81	2.55	4.27	1.47	0.15	60.8
7천만~1억 원	0.03	0.30	0.86	2.67	3.77	1.18	0.11	59.9
1억~2억 원	0.06	0.35	0.99	2.79	4.03	0.96	0.09	59.1
2억 원 이상	0.10	0.67	1.51	3.71	4.70	0.97	0.12	57.7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 축산 농가 경영주의 평균 영농경력은 29.3년이며, 20년 이상 영농경력 농가 비중이 71.4%로 매우 높은 편임.

- 경영주의 영농경력이 20년 이상인 농가의 비중이 7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15년(10.3%), 5~10년(6.8%), 15~20년(6.5%), 5년 미만(5%), 순으로 집계됨.
- 판매 규모별·영농경력별로 살펴보면, 판매액 ‘1천만~3천만 원’과 영농경력 ‘20년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농가 비중이 1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판매액 ‘120만~1천만 원’과 영농경력 ‘20년 이상’ 농가 (11.9%), 판매액 ‘3천만~5천만 원’과 영농경력 ‘20년 이상’ (10.0%) 농가가 뒤를 이었음.

〈표 4-74〉 판매 규모별·영농경력별 농가 수 비중: 축산 농가

단위: %, 년

구 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평균 경력
축산 농가	4.96	6.79	10.29	6.51	71.44	29.3
120만 원 미만	0.88	0.65	0.77	0.31	2.19	20.5
120만~1천만 원	1.40	1.82	2.21	1.15	11.94	28.2
1천만~3천만 원	1.07	1.48	2.45	1.58	17.33	30.9
3천만~5천만 원	0.48	0.75	1.31	0.88	9.78	30.5
5천만~7천만 원	0.27	0.52	0.90	0.60	7.32	30.6
7천만~1억 원	0.28	0.40	0.86	0.61	6.76	29.9
1억~2억 원	0.26	0.53	0.79	0.59	7.10	29.8
2억 원 이상	0.33	0.63	1.00	0.79	9.02	28.5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 축산 농가의 평균 농외수입 비중은 14.2%로 타 경영형태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농외수입 비중이 10% 미만인 농가의 비중이 70.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외수입 비중 증가할수록 농가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판매 규모별·농외수입 비중별로 살펴보면, 판매액 ‘1천만~3천만 원’과 농외수입 비중 ‘10% 미만’을 모두 만족하는 농가 비중이 1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판매액 ‘120만~1천만 원’과 농외수입 비중 ‘10% 미만’ 농가 (11.4%), 판매액 ‘2억 원 이상’과 농외수입 비중 ‘10% 미만’ 농가 (9.76%), 판매액 ‘3천만~5천만 원’과 농외수입 비중 ‘10% 미만’ 농가 (9.4%) 순임.

〈표 4-75〉 판매 규모별·농외수입 비중별 농가 수 비중: 축산 농가

단위: %, 년

구 분	10% 미만	10~30%	30~50%	50~70%	70~90%	90% 이상	평균 농외수입 비중
축산 농가	70.11	7.39	7.48	6.97	4.57	3.47	14.2
120만 원 미만	2.41	0.11	0.12	0.22	0.34	1.61	41.6
120만~1천만 원	11.35	0.91	1.23	1.93	1.96	1.13	22.3
1천만~3천만 원	16.17	1.59	2.15	2.42	1.25	0.33	14.7
3천만~5천만 원	9.40	1.03	1.32	0.93	0.40	0.12	11.5
5천만~7천만 원	7.15	0.81	0.88	0.50	0.22	0.04	9.4
7천만~1억 원	6.61	0.90	0.73	0.43	0.18	0.06	9.1
1억~2억 원	7.26	0.92	0.61	0.29	0.11	0.08	7.2
2억 원 이상	9.76	1.13	0.45	0.24	0.11	0.10	5.3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5. 주요 농정수단 반영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5.1. 공익직불제 식별 기준 활용

○ 우리나라 농정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 공익직불제는 지급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지급단가도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실상 농업경영체를 효과적으로 구분하고 있음.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구분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가 바뀌는 경지면적 기준점 '0.5ha', '2ha', '6ha'
- 논과 밭, 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직불금 차등화
- 농외소득 상한 3,700만 원

〈표 4-76〉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경지면적에 따른 지급단가 변화

(단위: 만 원)

진흥지역 여부	논, 밭 구분	소농직불	면적직불		
		0.5ha 이하	0.5ha~2ha	2ha~6ha	6ha 초과
진흥지역 안	논, 밭	120	205	197	189
진흥지역 밖	논		178	170	162
	밭		134	117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

○ 공익직불제 지급요건은 농업경영체(개인) 등록기준보다 엄격하기에 자연스럽게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가 농업경영체를 두 집단으로 구분

- 2020년 도입 당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 대상 43만 농가와 면적직불금 대상 69만 농업인(농업인)에 각각 5,174억 원과 1조 7,579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지급면적은 112만 ha에 달함.
- 2020년 면적직불금 수혜 농업경영체는 2020년 전체 173만 농업경영체 중 39.8%에 해당하며, 소농직불금 수혜 농가는 2020년 전체 103만 농가 중 41.6%에 이름.⁴⁷⁾ 기

본형 공익직불제의 전체 수혜면적은 2020년 경지면적 156만 ha의 72%(소농직불금 지급면적: 9.1%, 면적직불금 지급면적: 62.9%)임.⁴⁸⁾

- 2021년 소농직불금 지급농가는 전년 대비 2만 농가가 늘어나지만 2022년도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2021년 면적직불금 지급 농업경영체는 전년대비 1만 8천여 농업경영체가 감소하였지만, 2020년에는 5천 경영체가 더 신청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면적직불금의 지급단가 1구간(2ha 이하)에 속한 농업인의 경우, 0.5ha 이상의 면적에서도 소농직불금(12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⁴⁹⁾, 시행 초기 1년 차에 이 구간에 속하여 면적직불금을 신청했던 농업인이 시행 2년 차에는 농가 단위로 소농직불금에 지원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표 4-77〉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현황

(단위: 억 원, 천 ha, 천 호, 천 명)

구 분		지급액	지급면적	지급인원
2020년	소농직불금	5,174	143	431
	면적직불금	17,579	985	690
	전체	22,753	1,128	431 / 690
2021년	소농직불금	5,410	146	451
	면적직불금	16,853	937	672
	전체	22,263	1,083	451 / 672
2022년	소농직불금	5,405	144	450
	면적직불금	16,538	914	679
	전체	21,943	1,058	450 / 679

주 : 지급 인원 소농직불금은 농가 기준이며, 면적직불금은 농업인(농업경영체) 단위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개방,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 지급 데이터.

47) 농업경영체 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서비스 자료이며, 농가 수는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자료임. 2020년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인 2.2명을 감안하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수혜농가는 최소 73만 5천 농가(전체 농가의 72%)임. (농업경영체 수/농가 수) 비율을 적용할 경우(1.67), 최소 84만 4천 농가(전체 농가의 81.5%)가 공익직불제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됨.

48) 경지면적은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자료임. 2020년 휴경농지(6만 3천ha)와 유휴지(2.8천 ha)를 제외한 150만 ha를 기준으로 하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면적은 전체면적의 75.2%임.

49) 비진흥 지역 밭의 경우, 지급단가가 ha 당 100만 원으로 1.2ha 미만의 면적에서는 소농직불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면적직불금을 받게 됨.

5.2. 농업인의 「진입-성장-은퇴」 성장단계 고려

○ 농업인의 발전 단계, 즉 「진입준비-정착-성장-성숙-은퇴준비-은퇴」라는 성장단계를 고려한 분류 기준을 추가

- ‘예비농업인’과 ‘은퇴준비농업인’을 별도의 농업인 유형으로 분리할 필요

○ ‘예비농업인’ 제도는 농업 기반인 시설, 축사 등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농업경영인 또는 농업종사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장관이 정하는 수준의 농업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창업 준비자금, 농지 구입자금, 세제 지원, 실무 교육 연수 등 영농개시 초기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적으로 부여

〈표 4-78〉 농식품 분야 청년농 지원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준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사업내용)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 대상 실습 위주의 장기교육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 양성 ○ (지원대상) 18세 이상 40세 미만	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 (사업내용)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을 위해 실습 중심의 장기체류형 교육 지원 ○ (지원대상) 40세 미만(귀농 예정자)	교육
진입·정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사업내용)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및 교육을 지원 ○ (지원대상) 18세 이상 40세 미만(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	초기 소득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사업내용) 고령·은퇴이농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 장기임대 지원 ○ (지원대상) 농업인(18세 이상 40세 미만 우선 지원)	기반 (농지)
	농업스타트업단지	○ (사업내용) 집단화된 유희부지, 국공유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 정비 후 장기임대·매도 지원 ○ (지원대상) 18세 이상 40세 미만(소유농지가 없을 것)	기반 (농지)
	선임대후매도	○ (사업내용)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 희망 농지를 매입하여 최장 30년 동안 임대 후에 매도 ○ (지원대상) 18세 이상 40세 미만	기반 (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사업내용) 임대온실 지원으로 청년농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 (지원대상) 18세 이상 40세 미만	기반 (시설)
	후계농업경영인	○ (사업내용)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 농업인 및 농업인이 되고자 하	자금,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육성자금	는 자에 대하여 기반구축 및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50세 미만(영농경력 10년 이하)	후계농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 (사업내용) 농업분야 ICT 진전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 ○ (지원대상) 40세 미만	자금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 (사업내용)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및 생활 여건 개 선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 (지원대상) 40세 미만(귀농 청년 등) 우선 지원	주거
성장	영파머스펀드	○ (사업내용) 청년농 성장을 위한 전용 투자펀드 ○ (지원대상) 50세 미만(축산 1차 생산·가공·유통에 종사하는 영농정 착지원사업 선정자, 후계농지원사업 선정자 등)	자금, 후계농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농업인 대학)	○ (사업내용)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 등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교 육 과정 운영으로 지역선도 청년 인재 양성 ○ (지원대상) 40세 미만(예비 농업인 포함)	교육
	청년농CEO 양성과정 운영 (농업마이스터대)	○ (사업내용) 농업마이스터대학과 연계한 체계적인 품목기술 및 창업교 육 운영으로 청년농 육성에 기여 ○ (지원대상) 40세 미만(창업 초기 단계 청년농업인)	교육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 (사업내용) 2040세대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영농투자 전 전문분 야 컨설팅을 통해 투자실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 도모 ○ (지원대상) 19세 이상 50세 미만(컨설팅 완료 후 1년 내 농업투자 예정자)	교육, 후계농
	2040세대 스텝업 기술교육	○ (사업내용) 2040세대 농업인 품목 전문인력 양성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20~49세(품목경력 2년 이상 등)	교육, 후계농

○ 은퇴농업인은 연령, 경작규모 상한, 영농경력 등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건강 보험료 감면, 교통 수단 지원, 농업인 연금,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 등 생산 비연계 농업인 복지 지원 대상자로 법적 지위를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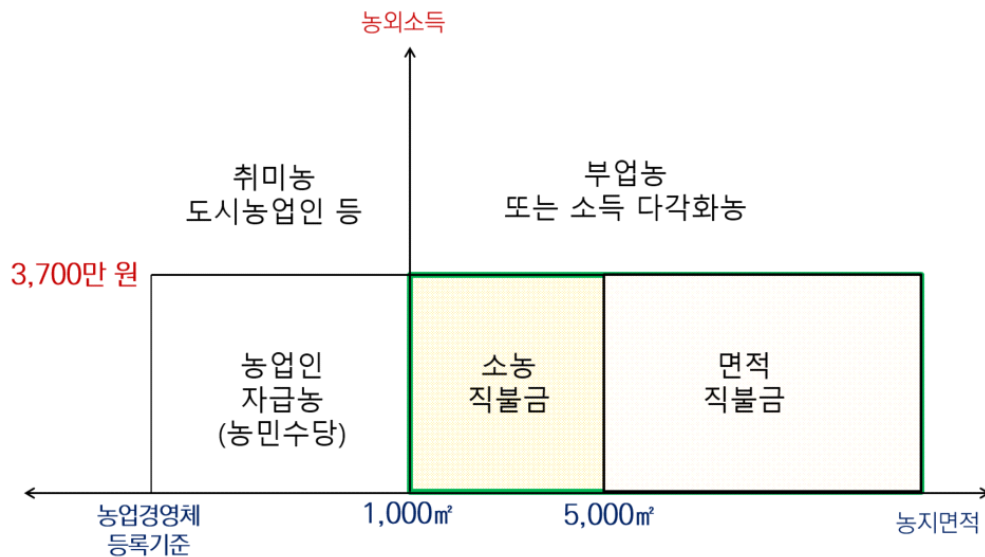
- 2024년부터 은퇴직불제 시행

- ▶ (신청대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서 최대 4ha까지 신청 가능
- ▶ ‘매도’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신청 가능(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 씩 최대 10년간 수령)

5.3. 핵심농정 기반 농업경영체 유형화 방안

- 공익직불제가 농정에서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직불제 대상 농업인(주업농)은 우리나라 농정의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발전단계에 따른 맞춤형 농정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임.

〈그림 4-24〉 공익직불금의 농지면적과 농외소득 기준 농업인 유형화



-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요건 중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① 농업경영체 등록 ② 농지면적 1,000㎡ 이상 ③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농업인을 유형화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농지면적 1,000㎡ 이상 &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 기본형 직불제 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정부 정책사업의 주요 대상에 해당하는 주업 농업인 집단임.
 - (농지면적 1,000㎡ 이상 &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일정 규모의 농지를 경영하지만, 겸업 또는 사업외의 활동으로 소득을 창출하여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업농 또는 소득다각화농에 해당하는 집단임. 이 집단의 경우, 농업경영체에는 경영주인 농업인으로 등록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정부 정책사업에서는 배제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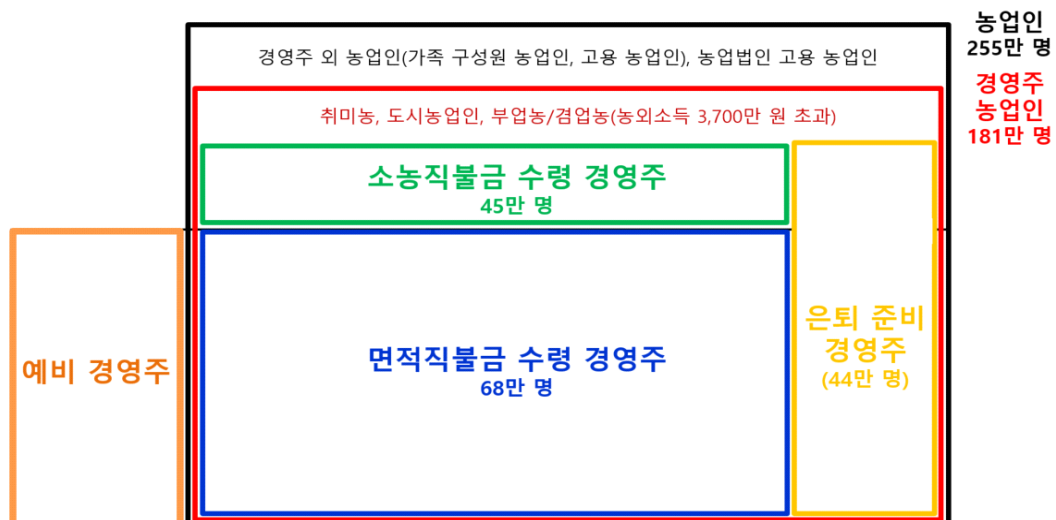
집단임.

- (농지면적 1,000㎡ 미만 &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 농업경영체이며, 농외소득이 3,700만 원이지만, 농지면적이 1,000㎡ 미만으로 기본형 직불제에서 배제된 농민 또는 자급농에 해당하는 집단임. 이 집단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수당을 받을 자격을 갖춘 집단임.
- (농지면적 1,000㎡ 미만 &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지만,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고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취미농 또는 도시농업인을 포함함. 이 집단은 대부분의 농업 정책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농업인’과 ‘개인 농업경영체’를 경영인과 종사자를 기준으로 재정의(농가경영체 신설)하면 농업을 주업 또는 부업으로 삼는 모든 연령대 및 성장단계의 개인과 농가경영체를 포괄하는 일반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 가능

- 일단 농업법인은 논의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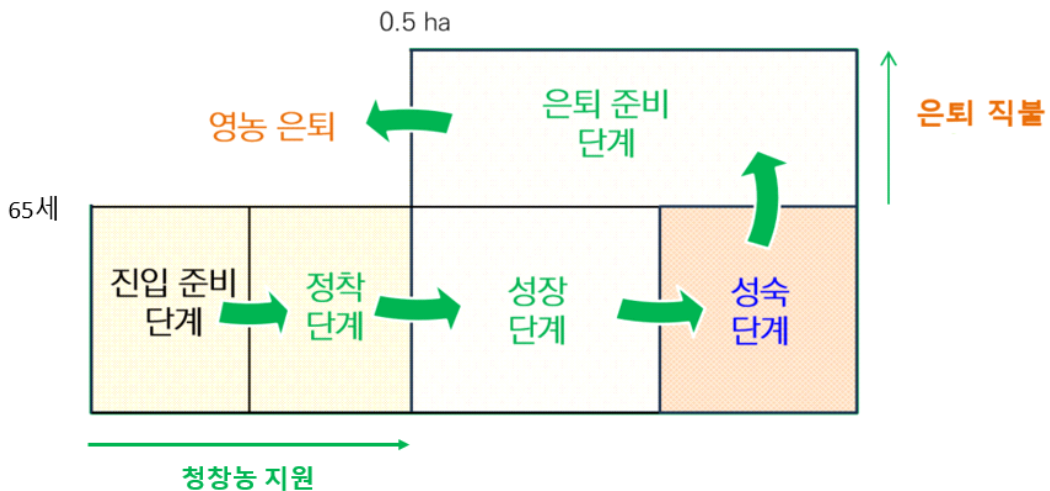
〈그림 4-25〉 농업인과 농업경영체(농가경영체) 개념 조정과 유형화



○ <그림 4-26>과 같이 기본형 직불제의 소농·면적직불금 해당 여부와 경영주 연령(65세 또는 75세)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진입준비-정착-성장-성숙-은퇴준비-은퇴」 단계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음.

- (소농직불금 수혜 & 75세 미만) 정착 단계에 해당하는 청년농·귀농인은 영농 초기 대다수 영농규모가 소규모로 소농직불금 대상에 해당할 확률이 높음.
- (면적직불금 수혜 & 75세 미만) 성장단계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농업경영을 확대한 75세 미만의 농업인이 해당함. 이 집단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면적직불금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음.
- (면적직불금과 선택직불금 수혜 & 75세 미만) 성숙단계로 선택직불금도 수령하면서 공익적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는 유형
- (면적직불금과 & 75세 이상) 성숙단계에서 고령에 진입하면서 점차 생산성이 감소해 영농규모를 축소할 의향이 높음. 영농규모가 축소될 경우 소농직불금을 수령하면서 본격적인 은퇴준비단계에 진입함. 이 단계에 속하는 농업인에게는 은퇴를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등의 정책을 제공하는 등 신규농업인에게 농지가 이양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함.

<그림 4-26> 농업인 성장단계에 따른 유형화(청창농 지원 및 은퇴직불제 연령 기준)



- 면적직불금 수령 농가경영체를 우리 농업의 Active/Actual Agricultural Holdings 또는 적극적으로 영농을 영위하는(Actively Engaged in Farming: AEF) 경영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 선택직불금 수령 농가경영체는 공익적 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주체로서 정책지원을 집중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
- 추가적으로 면적직불금 수령 농가경영체의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우선, 품목군에 따른 유형화 가능(식량작물/원예작물/축산경영체로 세분류)
 - 다음으로, 농업조수입 또는 농업소득에 따른 유형화(중/대 경영체로 세분류) 고려할 수 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를 기반으로 유형화를 한다면, 재배면적과 사육규모를 활용할 수 있음(중/대 경영체의 경계는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

6. 소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와 농업총조사, 농가경제통계 등 외부 통계자료를 토대로 농업경영체 유형화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원자료에 충실한 유형화가 가장 합리적이며, 등록정보의 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도 유효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 농업경영체 DB 기반 군집분석에 따르면 경종 경영체는 경영주 연령과 재배면적(논, 밭, 시설 등)이 유형화의 중요 기준으로 작용함. 축산 및 경축 경영체는 추가적으로 사육종 수와 축종별 사육수량이 유형화의 기준변수로 작용함.
- 현행 DB 기반 농업경영체 유형화의 단점 중의 하나는 각 경영체의 영농규모를 ‘별도의 조작없이’ 하나의 기준으로 측정·비교할 방법이 없다는 것임.
 - 즉, 논 3,000평, 딸기 비닐하우스 5동, 100두 한우 축사를 각각 가지고 있는 세 경영체의 토지면적만을 단순히 비교하여 영농규모의 대소를 가늠할 수 없음. 복합농의 경

우도 하나의 기준으로 영농규모를 측정할 수 없음.

- 하나의 기준으로 영농규모나 생산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과거 제안된 바 있는 표준영농규모(SFS)⁵⁰⁾나 EU의 표준산출물(SO)⁵¹⁾과 같은 변환 공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추정된 영농규모나 생산가치를 새로운 기준변수로 삼아야 함.
- 또한, 모든 농업경영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가능한 화폐 단위로 측정된 농가소득(농업소득)이나 조수입과 같은 신규 정보가 DB에 추가될 경우, 모든 경영체를 소득(조수입) 구간에 따른 상이한 유형들로 완전히 배분할 수 있음.

○ 그러나 굳이 각 경영체의 영농형태를 하나의 유형으로 배분할 필요가 없다면, 그래서, 복합영농을 하는 경영체가 영농형태별로 구분한 여러 유형에 중복하여 속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자의적인 변환이나 평준화된 추정을 거치지 않고 등록정보 DB 원자료를 기반으로 한 유형화가 가능함.

- 이 경우, 단일한 영농규모 기준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경영체별로 그 값을 산출해 그 크기에 따라 유형화하는 대신, 경영체 유형화 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원자료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기에, 등록정보 관리나 활용(정책연계)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의 5가지 영역(경영주, 종사자, 작물재배, 농업시설, 가축사육) 중에서 작물재배, 농업시설, 가축사육 영역의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생산구조의 차이가 뚜렷한 **경종농업**, **시설농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경영체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즉, 농업경영체 유형을 작물재배 정보가 있는 경종농업경영체, 시설 재배면적 정보가

50) 농가의 고정자산(토지 제외, 건물, 기계, 대식물, 대동물)의 가격을 농지가격으로 나누어 경지면적으로 환산한 후 경지면적과 합한 규모의 개념임.

51) 총생산의 표준가치로 농장가격 기준 농산품의 평균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며, EU 회원국은 5개년 조사기간 동안의 각 품목의 평균 가치로 지역 표준산출물계수를 구하고, 표준산출물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수확량, 가격 등의 데이터는 10년 주기로 갱신함. EU의 농업경영체는 유로로 표시된 경제규모 수준에 따라 14개의 계층으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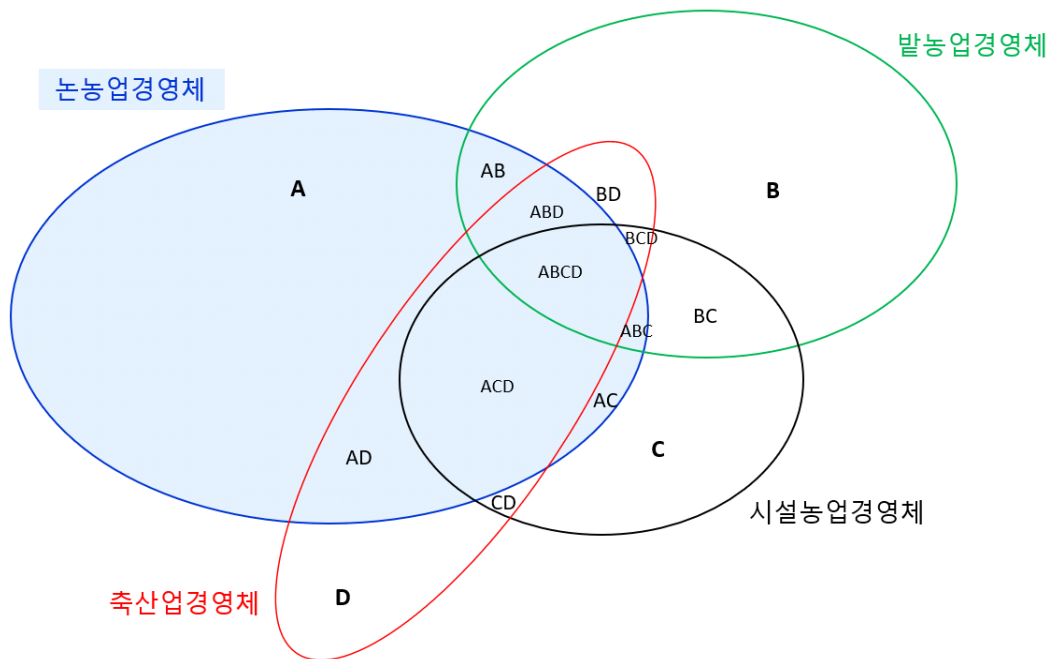
있는 시설농업경영체, 가축사육 정보가 있는 축산업경영체로 영농형태에 따른 유형 구분이 가능

- 나아가 경종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나 생산구조의 차이가 큰 논·밭 농사를 구분하기 위해, 논 재배면적 정보가 있는 논농업경영체와 밭 재배면적이 있는 밭농업경영체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농업경영체 DB의 생산자원 보유 정보(작물재배, 농업시설, 가축사육)에 기반하여 1차적으로 크게 4가지 경영체 유형(① 논농업경영체, ② 밭농업경영체, ③ 시설농업경영체, ④ 축산업경영체)을 구분할 수 있음.

- 대분류 4가지 영농형태(생산자원 보유 기반)의 조합에 따른 복합영농을 모두 고려하면 1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가능

〈그림 4-27〉 농업경영체 DB 기반 영농형태별 대분류 및 세부 유형화



〈표 4-79〉 농업경영체 DB 기반 15가지 세부 영농형태별 유형

세부 영농형태 구분	대분류 영농형태				유형 비중
	논	밭	시설	축산	
논 단일영농 (A)	√				14.73%
논&밭 복합영농 (AB)	√	√			23.76%
논&시설 복합영농 (AC)	√		√		0.88%
논&축산 복합영농 (AD)	√			√	0.55%
논&밭&시설 복합영농 (ABC)	√	√	√		4.86%
논&밭&축산 복합영농 (ABD)	√	√		√	3.03%
논&시설&축산 복합영농 (ACD)	√		√	√	0.05%
논&밭&시설&축산 복합영농 (ABCD)	√	√	√	√	0.90%
밭 단일영농 (B)		√			40.59%
밭&시설 복합영농 (BC)		√	√		5.07%
밭&축산 복합영농 (BD)		√		√	1.97%
밭&시설&축산 복합영농 (BCD)		√	√	√	0.34%
시설 단일영농 (C)			√		1.76%
시설&축산 복합영농 (CD)			√	√	0.04%
축산 단일영농 (D)				√	1.47%

○ 그러나 상기 세부 영농형태에 따른 15개 유형을 다시 영농규모에 따라 세분류하고자 하면, 하나의 기준으로 측정·비교할 수 없다는 문제에 재직면하게 됨.

○ 반면, 각 경영체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원에 따라 4가지 대분류 영농형태 유형이 중복될 수 있게 허용할 경우, 별도의 조작이나 가정 없이 각 생산자원의 영농규모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할 수 있음.

- DB 기반 전체 농업경영체 수는 2,044,059개(2018~2022년 기간 1회 이상 농업경영체 DB에 등록한 농업경영체 수)
- ① 논농업경영체 1,026,708개, ② 밭농업경영체 1,675,902개, ③ 시설농업경영체 284,065개, ④ 축산업경영체(소, 돼지, 닭, 오리 사육 경영체만 집계) 124,105개
- 즉, 한 농업경영체가 논, 밭, 시설, 축사 정보를 모두 DB에 등록했다면, 이 경영체는 상기 4가지 영농형태별 유형에 모두 해당하게 됨.

○ 일차적으로 DB 기반 영농형태(생산자원 보유)에 따른 유형 분류(중복 허용)를 완수했다면, 다음은 농정과 연계한 유형 세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6년에 농식품부가 시도한 유형화는 영농경력과 연령, 경영지표(재배면적 상위 30%, 조수입 5천만 원, 3천만 원)를 기준변수로 활용함(그림 3-3 참조)
- 본 연구에서는 영농규모(재배면적, 사육두수), 경영주 연령과 영농경력, 농외소득 3,700만 원을 추가적인 유형화 기준으로 고려함.

○ 먼저, 규모화, 전업농 육성 등의 농정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영농규모를 기준으로 상기 4가지 영농형태별 유형을 세분화함.

- 영농규모 구분은 주요 정책수단에서 설정한 규모기준과 함께 영농규모 (누적)분포, 해당 구간의 경영체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전체 농업수입/자산/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가경제조사 참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
- 예를 들어, 논농업경영체는 논 재배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세분류됨(그림 4-28 참조). 0.5ha 미만인 경영체(기초경영체), 0.5ha 이상 2ha 미만인 경영체(일반경영체), 2ha 이상인 경영체(전문경영체)

〈그림 4-28〉 논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논 재배면적)별 세부 유형화

	논 재배면적 구간 (ha)	경영체 수 (개)	비중	누적 비중	전체 면적 대비 비중	누적 비중	
기초	0.1 미만	89,936	8.76%	8.76%	0.62%	0.62%	농업인 기준
	0.1~0.2	187,775	18.29%	27.05%	3.41%	4.03%	
	0.2~0.3	160,816	15.66%	42.71%	4.80%	8.83%	
	0.3~0.4	114,505	11.15%	53.86%	4.79%	13.62%	
	0.4~0.5	78,310	7.63%	61.49%	4.20%	17.82%	
일반	0.5~1.0	181,105	17.64%	79.13%	15.32%	33.15%	소농직불금 기준
	1.0~1.5	66,842	6.51%	85.64%	9.80%	42.95%	
	1.5~2.0	33,944	3.31%	88.95%	7.06%	50.01%	
전문	2.0~3.0	32,764	3.19%	92.14%	9.59%	59.60%	면적직불금 구간 기준
	3.0~4.0	16,058	1.56%	93.70%	6.68%	66.27%	
	4.0~5.0	9,418	0.92%	94.62%	5.06%	71.34%	면적직불금 구간 기준
	5.0~6.0	6,327	0.62%	95.24%	4.17%	75.51%	
	6.0~7.0	4,322	0.42%	95.66%	3.37%	78.88%	
	7.0~10.0	7,217	0.70%	96.36%	7.20%	86.07%	
	10 이상	37,369	3.64%	100.00%	13.93%	100.00%	
	합계	1,026,708	100.00%		100.00%		

○ 같은 방식으로 논농업경영체뿐만 아니라 밭농업경영체, 시설농업경영체, 축산업경영체도 각각의 영농규모 기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기초, 일반, 전문)으로 구분 가능

- 밭은 논 규모의 절반 수준에서 영농규모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시설재배의 경우, 0.1ha와 0.5ha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축산업경영체는 준전업농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업경영체를 기초경영체로, 준전업농 규모와 전업농 규모의 농업경영체를 합쳐 일반경영체로, 그리고 기업농 기준을 초과하는 농업경영체는 전문경영체로 각각 분류함.

○ <그림 4-29>과 같이 영농형태와 영농규모로 유형을 구분하면 16가지 세부유형이 도출됨. 논/밭/시설/축산 품목군별로 설계되는 품목육성 프로그램은 기초경영체를 배제하고 일반경영체와 전문경영체를 타겟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그림 4-29> 영농형태 유형별 영농규모 기준 유형 구분

논농업경영체	논 0.5ha			논 2ha		
	기초 (61.5%) 17.8%	일반 (27.5%) 32.2%	전문 (11%) 50%			
밭농업경영체	밭 0.25ha			밭 1ha		
	기초 (54.6%) 17.5%	일반 (34.9%) 38.2%	전문 (10.5%) 44.3%			
시설농업경영체	시설 0.1ha			시설 0.5ha		
	기초 (48.2%) 4.8%	일반 (34.3%) 28.4%	전문 (17.5%) 66.8%			
축산업경영체	준전업농 기준			기업농 기준		
	18.1% 소 기초 2.6% 돼지 (62%) 3.4% 닭 0.6% 오리	40.1% 일반 (26.3%) 20.8% 9.4%	41.8% 전문 64.6% (11.7%) 75.8% 90.0%			

주: 영농형태별 경영체 개수의 비중(괄호 안 백분율 표기)으로 그래프를 나타냄. 단, 흰색으로 표시한 백분율은 해당 생산자원의 전체면적에서 각 유형 경영체들의 면적(합계)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축산업경영체는 소, 돼지, 닭, 오리의 사육두수 비중을 흰색으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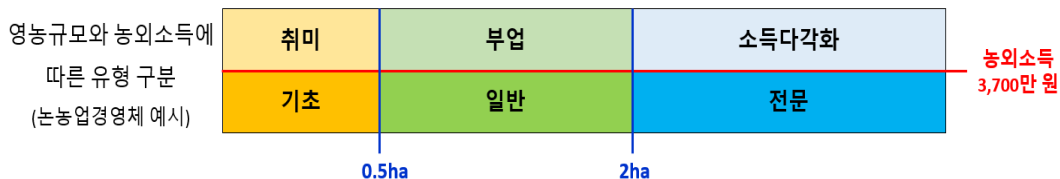
○ 4가지 생산자원별 전문경영체의 개수 비율은 모두 10%대이지만 이들이 보유한 생산자원의 비중은 대부분 절반 이상임을 알 수 있음.

- 밭과 소의 경우 전문경영체의 생산자원 보유비중은 각각 44.3%와 41.8%로 상대적으로 낮음. 반면, 닭과 오리는 전문경영체의 사육두수 비중이 각각 75.8%와 90%에 달함.
-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성(economies of scale)으로 인해 기초경영체보다 일반경영체가, 또 일반경영체보다 전문경영체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들이 산출한 생산량의 비중은 생산자원의 비중보다 더 클 것임. 즉, 논과 밭 영농형태(축산의 소 사육 포함)에서 기초경영체의 생산량 비중은 10% 초반까지 줄어 들 수 있음.
- 이렇게 개수 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초경영체들의 생산자원 보유 비중과 생산량 점유 비중이 매우 작은 반면, 상대적으로 소수인 전문경영체들의 생산자원 보유 비중과 생산량 담당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사실은, 현재와 같이 모든 경영체에게 동일한 등록정보를 같은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등록정보의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유형 구분 지표는 '농외소득(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임.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자 요건, 농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격 등과 같이 '농외소득 3,700만 원'은 다양한 제도 및 농림사업에서 농업인을 구분하는 기준 역할을 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경영주의 농외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영체는 영농규모에 따라 취미경영체(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인 기초경영체와 동일한 영농규모), 부업경영체(일반), 소득다각화경영체(전문)로 구분함.
- 부업경영체나 소득다각화경영체는 주요 농업정책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농촌활성화, 6차산업화, 신기술 융복합 관련 지원사업의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는 경영체 유형임.

〈그림 4-30〉 영농규모별 농외소득 3,700만 원 기준에 따른 유형 구분



○ 다음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은퇴직불제 시행을 통한 경영이양 촉진과 같은 최근의 농정 방향을 고려할 때, 경영주 연령과 영농경력은 해당 농업경영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정부는 매년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독립 영농경력) 18세 이상부터 만5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있음. 농정당국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으로 직후 5년까지 연 1.5% 고정금리에 세대당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5년 거치 20년 상환), 선정된 후계농의 영농 경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
-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 지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함.
-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은퇴직불제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서 최대 4ha 까지 신청 가능함. 매도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함.

○ 경영주 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라 개별 경영체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으로의 진입, 영농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 생산자원의 이양과 은퇴 등 생애주기적 성장경로의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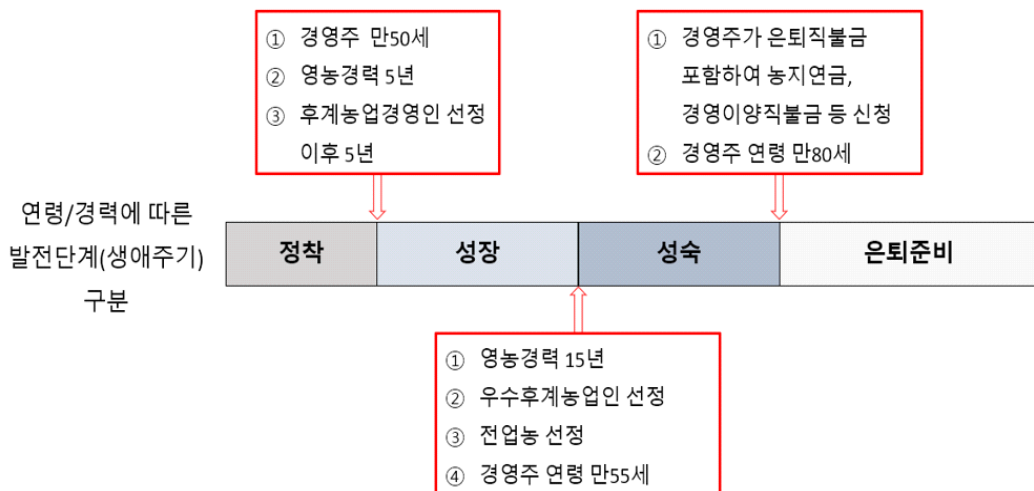
- 따라서 경영주의 연령과 영농경력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들을 특정한 유형으로 분류

하기보다는 경영체의 발전단계 또는 생애주기 차원에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일 것으로 판단됨.

○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영주 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성장 경로)를 정착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은퇴준비단계로 구분함.

- 경영주가 만50세 미만, 영농경력 5년 미만,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5년 이내 등의 세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 모든 경영체는 정착단계인 것으로 분류함.
- 다음으로, 영농경력 5~1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5년 초과, 경영주 연령 만55세 미만 등의 세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 모든 경영체는 성장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함.
- 한편, 경영주가 은퇴직불을 포함하여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 등을 신청했거나, 경영주 연령이 80세 이상인 농업경영체는 은퇴준비경영체로 분류함.
- 경영주 연령이 만55세 이상이거나 영농경력이 15년 이상이면서, 우수후계농업인 또는 전업농으로 선정되었고, 성장단계를 지났으나 은퇴준비단계에는 해당하지 않은 모든 경영체는 성숙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함.

〈그림 4-31〉 경영주 연령/영농경력에 따른 농업경영체 발전단계 구분



○ <그림 4-31>의 연령/경력에 따른 경영체의 성장단계 구분은 <그림 4-29>와 <그림 4-30>의 영농형태와 영농규모, 그리고 농외소득 상한에 따른 경영체의 유형 구분과 결합하여 활용 가능함.

- 따라서, 개별 농업경영체는 일차적으로 보유한 생산자원의 종류에 따라 영농형태에 따른 4가지 유형에 중복하여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영농규모와 농외소득(3,700만원)과 같은 추가적인 기준들이 적용되고, 연령/경력에 따라 상이한 발전단계를 대입하면, 모든 경영체는 상호배타적으로 특정 '단계-유형'의 조합에 속하게 됨.
- 예를 들어, 논과 시설하우스를 영농에 투입하는 경영체는 일차적으로 논농업경영체 유형과 시설농업경영체 유형에 중복하여 포함됨. 만약, 이 경영체의 논 재배면적이 2.5ha이고, 시설 재배면적이 0.05ha이며, 농외소득이 3,000만 원, 경영주 연령은 63세, 영농경력 18년이라고 하면, 이 경영체는 성숙단계의 논농업전문경영체 유형이자 시설농업기초경영체 유형으로 특정됨.⁵²⁾
-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농업경영체 유형화는 모든 조합의 복합경영체를 포괄하고 있으나 이들을 특정하여 별도의 독립된 유형으로 분류하지는 않음.

52) 이 경영체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어느 한 영농형태의 전문경영체에 해당하므로 경영주 정보와 종사자 정보는 상세하게 입력해야 하며, 작물재배는 논 필지의 경우 모든 품목을, 시설 필지의 경우 품목군만을 각각 입력해야 할 것임.

V.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차등화 방안

1. 개요

○ 2018~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를 살펴보면 크게 5가지 영역(경영주 정보, 종사자 정보, 작물재배정보, 농업시설 정보, 가축사육 정보)에서 총 138개의 세부정보가 수집되고 있음(표 5-1 참조).

- 경영주 정보: 연령, 영농경력, 영농형태, 재배면적 등 39개 정보
- 종사자 정보: 연령, 영농경력, 영농형태 등 23개 정보
- 작물재배 정보: 농지 및 재배 면적 현황, 재배 면적별 농업경영체 현황 등 36개 정보
- 농업시설 정보: 시설의 종류, 형태 등 15개 정보
- 가축사육정보: 가축사육 현황 관련 25개 정보

〈표 5-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 (개인 경영체)

경영주 정보(39)	종사자 정보(23)	작물재배 정보(36)	농업시설 정보(15)	가축사육정보(25)
경영체등록번호	경영체등록번호+농업	경영체등록번호+농지	경영체등록번호+농지	경영체번호+시설일련
최초등록일자	인일련번호	일련번호+품목일련번호	일련번호+시설일련번호	번호+축종일련번호
국적	경영체등록번호	호	호	경영체등록번호
내외국인	농업인일련번호	경영체등록번호	경영체등록번호	시설일련번호
경영주법인명	구분	농지 일련번호	농지일련번호	축종일련번호
마을명	경영주외 농업인 성명	품목 일련번호	시설일련번호	시설주소코드
생년월일	생년월일	농지 주소코드	농지 주소코드	대장구분
성별구분	성별구분	대장구분	대장구분	사육시설 시도
성별	성별	농지 시도명	농지 본번	사육시설 시군구
연령	연령	농지 시군구명	농지 부번	사육시설 읍면동
경영주 주민등록 주소	경영주와의 관계	농지 읍면동명	시설형태	사육시설 리
코드	내외국인	농지 리명	시설종류	시설 본번
법정동 시도	취업동기	농지 본번	시설면적	시설 부번
법정동 시군구	영농시작일	농지 부번	설치년도	소재지 공부 면적
법정동 읍면동	영농경력	공부 지목	운영현황	시설 공부 면적
법정동 리	직종	실제 지목	개인법인구분	실제 시설 면적
경영주 주민등록 상세	농업시작형태	경영형태	생성일	경영형태
주소	농업종사형태	공동 경작 여부		용도

경영주 정보(39)	종사자 정보(23)	작물재배 정보(36)	농업시설 정보(15)	가축사육정보(25)
경영주 주민등록 도로 명 주소코드 경영주 주민등록 도로 명 읍면동 일련번호 도로명 시도 도로명 시군구 도로명 읍면동 도로명 리 도로명 경영주 주민등록 도로 명 상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취업동기 영농시작일 농업종사기간 취소복원명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형태 취소복원명(농업) 취소복원명(임업) 농업인번호 결재일자 생성일자 경영주법인명(비식별 화처리)	공동경영주 여부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 국민연금 가입자구분 농업인번호 생성일자 경영주외 농업인 성명 (비식별화처리)	공부 농지면적 실제 농지면적 휴경 면적 폐경 면적 품목코드 대분류 품목명 중분류 품목명 소분류 품목명 노지 재배 면적 시설 재배 면적 재배 면적 합 농지 소유자 명 PNU코드 시설 일련번호 가지번 여부 공유지분명수 쌀이모작여부 개인 법인 구분 생성일자 농지 소유자 명(비식별 화 처리)		대분류 축종명 중분류 축종명 소분류 축종명 축종코드 사육수량 PNU코드 개인법인구분 생성일자

자료: 저자 작성

○ 한편, 농가소득 안정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농업경영 진단 및 경영개선 전략 수립, 그리고 소득기반 재정지원의 확대를 위해서 농업소득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 그러나 농업소득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농·축·임산물이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국세청 소득신고를 통한 농업소득 파악의 징검다리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기됨 (임소영 외, 2022).

-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다수 정책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기에 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농업소득 추산에 용이함.

-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촌 지역 소재 관서 수가 많아 현장 접근성 면에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유형별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차등화하여 일부에게는 현행 정보 중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정보 중 일부를 줄여 간소화하게 하고, 일부에게는 현행 정보를 유지하게 하며, 또 다른 일부에게는 매출액(또는 생산량), 종사자 관련 추가 정보를 요구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2. 차등화 방안

○ 앞서 제시된 영농규모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된 영농형태별로 등록해야 하는 경영정보의 범위를 차등화함. 즉, 기초 유형 경영체에게는 현행 정보를 간소화하게 하고, 일반 유형 경영체에게는 현행 정보를 유지하게 하며, 전문경영체에게는 매출액, 종사자 등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하도록 함(표 5-2 참조).

- 논농업경영체는 논재배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등록정보를 차등화 함: 0.5ha 미만인 경영체(현행정보 간소화), 0.5ha 이상 2ha 미만인 경영체(현행정보 유지), 2ha 이상인 경영체(생산액 정보 추가 요구)
- 밭농업경영체는 밭재배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등록정보를 차등화 함: 0.25ha 미만인 경영체(현행정보 간소화), 0.25ha 이상 1ha 미만인 경영체(현행정보 유지), 1ha 이상인 경영체(매출액 정보 추가 요구)
- 시설농업경영체는 밭재배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등록정보를 차등화 함: 0.1ha 미만인 경영체(현행정보 간소화), 0.1ha 이상 0.5ha 미만인 경영체(현행정보 유지), 0.5ha 이상인 경영체(매출액 정보 추가 요구)
- 축산업경영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등록정보를 차등화 함: 준전업농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업경영체(현행정보 간소화), 준전업농 규모와 전업농 규모의 농업경영체(현행정보 유지), 기업농 기준을 초과하는 농업경영체(매출액

정보 추가 요구)

〈표 5-2〉 영농형태 유형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차등화 방안

구분	논농업경영체	밭농업경영체	시설농업경영체
0.1ha 미만	현행정보 간소화	현행정보 간소화	현행정보 간소화
0.1~0.25ha			현행정보 유지
0.25~0.5ha			
0.5~1.0ha	현행정보 유지	매출액, 종사자 등의 정보 추가 요구	
1.0~2.0ha			
2.0ha 이상	매출액, 종사자 등의 정보 추가 요구		

2.1. 현행정보 간소화

○ 신청서 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여 영세한 농업인이 혼자 작성하기 쉽지 않고 작성 지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영농 이력, 영업 기간, 신청서 사유 등 상당 수의 경영주 관련 정보는 정보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정보임.
- 실제로 농업경영체 등록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신청자 일반 현황 관련 정보는 그 정확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표 5-3) (유찬희 외, 2022, p.73).

○ 농업 시작 및 종사 형태, 농업 종사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농업 시작 및 종사 형태, 농업 종사 기간 등에 대한 정보는 등록정보로서의 가치도 낮을뿐더러 실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임.
- 따라서 농업 시작 및 종사 형태, 농업 종사기간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한 입력을 제외하도록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서류 작성 부담을 경

감시할 수 있을 것임.

- 단,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1) 신청인의 종사상 지위, 2) 공동경영주 여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입력하도록 함.

〈표 5-3〉 응답자가 생각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항목의 필요성

구분		공무원				공무직			
		농업인/ 비 농업인 여부확인 현자조사 시 필요	농업경영체 관련 통계정보 생산 용도	불필요	기타	농업인/ 비 농업인 여부확인 현자조사 시 필요	농업경영체 관련 통계정보 생산 용도	불필요	기타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업인	농업 시작 형태	20.0	21.3	58.8	0.0	17.2	19.7	63.1	0.0
	농업 종사 형태	25.0	35.0	40.0	0.0	25.5	28.0	46.5	0.0
	농업 종사 기간	21.3	28.8	50.0	0.0	17.8	21.0	61.1	0.0
	신규 등록 사유	21.3	22.5	56.3	0.0	21.7	13.4	64.3	0.6
[일반현황] 경영주 외의 농업인	경영주와의 관계	72.5	21.3	6.3	0.0	68.2	25.5	5.7	0.6
	농업 시작 형태	17.5	21.3	61.3	0.0	14.6	21.7	63.7	0.0
	농업 종사 형태	26.3	28.8	45.0	0.0	22.9	26.1	51.0	0.0
	농업 종사 기간	23.8	27.5	48.8	0.0	19.7	19.7	60.5	0.0
	공동경영주 여부	43.8	26.3	30.0	0.0	40.8	26.1	31.2	1.9
농지 등 농작물 재배	실제 지목	71.3	22.5	5.0	1.3	61.8	28.7	9.6	0.0
	자경 면적	72.5	25.0	2.5	0.0	61.8	31.8	6.4	0.0
	임차 면적	72.5	25.0	2.5	0.0	62.4	31.2	6.4	0.0
	임차 기간	76.3	21.3	2.5	0.0	65.6	29.3	4.5	0.6
	실제 경작 면적	80.0	18.8	1.3	0.0	72.6	24.8	1.9	0.6
	휴경 면적	73.8	17.5	8.8	0.0	71.3	25.5	2.5	0.6
	폐경 면적	72.5	18.8	8.8	0.0	72.0	24.8	2.5	0.6
	시설 종류	62.5	33.8	3.8	0.0	61.1	27.4	11.5	0.0
	시설 면적	71.3	26.3	2.5	0.0	69.4	27.4	3.2	0.0
	재배 품목	68.8	28.8	2.5	0.0	65.6	28.7	5.7	0.0
	재배 면적(노지/시설)	72.5	26.3	1.3	0.0	68.2	29.3	2.5	0.0
	필지 삭제 사유	71.3	21.3	7.5	0.0	65.6	26.8	3.2	4.5
가축·곤충 사육 시설 및 사육 규모	시설 면적(실제)	77.5	21.3	1.3	0.0	68.8	24.8	6.4	0.0
	경영 형태(자영)	73.8	25.0	1.3	0.0	59.2	27.4	13.4	0.0
	경영 형태(임차 및 기간)	77.5	22.5	0.0	0.0	62.4	28.7	8.9	0.0
	용도(축사/부대시설)	68.8	27.5	3.8	0.0	61.1	25.5	13.4	0.0
	사육 품목(종)	75.0	23.8	12.5	0.0	68.8	29.3	1.9	0.0
	사육 규모	75.0	23.8	1.3	0.0	71.3	26.1	2.5	0.0

자료: 유찬희 외 (2022b)

○ 그러나 전문적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사업 및 시험은 지원자격 중의 하나로 일정 수준의 영농(재배) 경력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일반·전문경영체를 대상으로는 농업 시작 및 종사 형태, 농업 종사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입력하도록 함.

- 예를 들어,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의 응시자격 요건 중의 하나로 1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요구됨. 이를 증빙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함.

- 또한,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지원(2040세대 스탭업 기술교육)’사업의 지원자격 중의 하나로 2년 이상의 품목 재배경력이 요구됨.

○ 종사자 정보의 경우도 기초경영체에 대해서는 간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즉, 종사자의 취업동기, 영농시작일, 영농경력, 직종,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형태 등의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도 낮을뿐더러 실제 여부를 검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입력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 보임.

- 그러나, 기초경영체일지라도 종사자의 공동경영주 여부,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구분, 국민연금 가입자구분 등 농업인 식별이나 각종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의 대상 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는 현재와 같이 입력하도록 함.

○ 농업·농촌의 인력난 해소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 상황인데다, 농업 고용노동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농업부문 고용노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취합·분석·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현행 종사자 정보의 항목을 일률적으로 수정하거나 적어도 일반·전문경영체를 대상으로는 종사자의 고용 형태나 고용경로, 노동시간, 수행작업, 영농경력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추가로 요구해야 할 수 있음.

- 이에 더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비자 유형, 근로여건(노동환경)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음.

- 같은 맥락에서, 고령농이 늘어나면서 위탁영농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위탁영농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경영주 정보에 위탁영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시간, 비용, 시기, 위탁 분야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는 농작물 재배 정보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정보 정확성이 떨어지고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유찬희 외, 2022).
 - 설문조사 결과 신청자 농작물 재배 정보, 사육·시설 정보는 대체로 필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5-4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필지 내에 다양한 작물 재배하는 경우가 많고 연중 품목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입력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큼(유찬희 외, 2022, p.74).
 - 특히, 논에 비해 밭은 재배작물이 자주 변경되는데, 연중 다모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음. 이로 인해 농업인의 작물 정보 입력의 시기와 즉각적인 갱신 여부가 정보의 정확성을 좌우하는데, 영농현장에서는 작물 정보의 잦은 갱신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쉽지 않은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표 5-4〉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농지면적, 주로 기르는 작물이나 축종이 계속 바뀜	47.2
실제 경작하지 않는 토지 소유주가 등록함	39.0
농지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써주지 않음.	4.7
잘 모르겠음.	9.2

자료: 유찬희 외 (2022b)

- 기초 유형 경영체 집단을 대상으로 현재와 같이 세부 품목으로 구성된 농작물 재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되, 개별 품목의 농작물 재배 정보 확인 절차 및 현행화는 생략하고 대신 품목류에 대한 정보 확인 및 현행화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초 유형 경영체 집단에 대한 개별 품목 재배 정보 확인 절차 및 현행화 생략을 통해 현지 조사 및 현행화 단계에서의 업무 부담 및 행정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는 작물을 35개로 분류하고 있어, 통계청의 9개 분류와 비교하여, 이미 매우 상세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음(표 5-5 참조). 따라서 품목군 정보만을 조사·확인하더라도 충분히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됨.

〈표 5-5〉 통계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작물 분류 비교

통계청 (9)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35)
논벼농가	미곡류
과수농가	맥류
채소농가	두류
특작농가	잡곡류
화훼농가	서류
전작농가	과실류
축산농가	수실류
기타농가	과일과채류
2종겸업	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양채류
	산채류
	채소종자류
	특용작물류
	버섯류
	인삼류
	약용작물류
	화목류
	초화류
	난류
	선인장/다육식물류
	숙근류
	구근류
	관엽식물류
	화훼종자류
	기타화훼
	산림종묘
	수목류
	관상수류
	조경수
	조경재
	조사료
	사료: 목초종자

자료: 저자 작성

○ 기초 유형 경영체 집단을 대상으로 개별 품목이 아닌 품목류 재배 정보만을 조사·확인 하도록 하더라도, 전체 농업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품목별 전체 생산량, 매출액 등의 추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

-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재배면적 0.5ha 미만의 식량농가 및 재배면적 0.1ha 미만의 원예농가의 농업수입 점유비중은 각각 1.48%, 6.34% 수준임.

〈표 5-6〉 농지면적별 농업수입 점유비중

단위: %

구분	식량 농가	원예 농가
0.1ha 미만	1.43	6.34
0.1~0.5ha		10.70
0.5~1.0ha	3.39	15.13
1.0~2.0ha	11.13	25.67
2.0~3.0ha	9.21	12.34
3.0~5.0ha	21.04	18.88
5.0ha이상	53.47	10.90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다만, 기초 유형의 재배 품목정보 확인 절차 및 현행화 생략의 경우,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품목정보를 활용하는 정책사업을 고려해야 할 것임. 대표적으로 의무(18개 품목) 및 임의(9개 품목) 자조금에서는 농업경영체의 품목정보를 거출금 납부대상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파프리카, 마늘, 양파 등 밭작물 품목에 해당하는 자조금 단체에서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1,000㎡ 이상을 자조금의 회원가입 및 납부대상자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밭작물 품목 재배에 해당하는 밭농업경영체의 경우, 타 유형과 달리 기초 유형(재배면적 기준 0.25ha 이하)에 포함되더라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하면 재배 품목정보 확인 절차 및 현행화를 실시하는 것이 등록정보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조미채소류 기준, 재배면적 0.1ha에 포함되는 경영체는 대략 21%임.

농장명 (법인명)				성 명 (대표)		생년월일 (설립일)	
주 소				휴대전화			
품 목		농장소재지(대표지의 00필지로 기재)				재배면적(㎡)	
포도	노지						
	시설	※ 단순 비가림시설은 노지로 작성					
복숭아							
단 감							
뽕은감							
사 과							

상기 본인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목별 의무 자조금단체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안내 및 동의

※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이 동의서의 기재항목 및 이와 같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 등록 말소 시까지
4.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의권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무자조금사업과 각종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단체,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위탁업무 수행조직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
3.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이 동의서의 기재항목 및 이와 같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의무자조금단체 등록 말소 시까지
5.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의권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품목별 의무자조금 사업과 각종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료: 자조금통합지원센터.

- ‘등록정보 차등화’의 일환으로 기초경영체(소규모 경영체)는 전체 농지면적(농지대장의 필지정보와 일치)과 품목군에 대한 정보만 등록하게 할 경우,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기초경영체의 등록정보를 현행보다 간소화하면, 건강보험, 연금보험, 농민수당 등의 혜택을 목적으로 한 비농업인의 등록을 더욱 유인할 수 있고, 실경작 농업인을 식별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그러나, 농업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0.1ha 미만의 농지면적을 가진 농업 경영체들을 대상으로 한 세부적인 등록기준은 사실 재배 품목군에 따라 설정되어 있음.

- 1000㎡ 미만의 농지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하는 개별 품목이 아닌 품목군이나 시설과 농지면적이 매칭된 등록기준이 등록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기 ‘등록정보 차등화’로 인한 혼선이나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즉,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하는 사람’, ‘660㎡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일정 사육규모 이상으로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50㎡ 이상인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사람’ 등이 등록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현행 등록기준으로 제시된 품목군(일부 품목 포함)과 시설을 반영할 수 있는 품목군 카테고리 설정해 기초경영체가 재배품목군으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경영체 입장에서는 현재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정보 차등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은 상당 부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농업경영체는 주력 품목(가령, 양파) 하나만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해당 품목군(조미채소류)으로 분류되고, 나아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를 자가 점검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실제 현장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관련 법인 「농어업경영체법」이 준용하고 있는 「농어업식품기본법」상 농업인 기준(1000㎡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편람에 추가된 등록기준에 따라) 이루어짐.

-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어업식품기본법」 시행령과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에 명시된 농지면적과 관련한 농업인의 요건을 반영한 ‘경영주인 농업인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업무편람에 제시하고 있음.

〈경영주인 농업인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증빙서류
가.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하는 사람 (휴경·폐경 면적은 제외)	①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인삼경작확인서(인삼재배농지만 적용),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서식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중 1가지 ② 농자재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농산물 판매 영수증 중 1가지
나.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하는 사람	
다.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라.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1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1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소·돼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① 별지 제1호서식의 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 수탁계약서 중 1가지 ② 사료구매 영수증, 가축입식 증명서, 가축출하 내역서 중 1가지
마.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사람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일반건축물대장 ②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경영체영농사실 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③ 원료콩 구입 영수증 또는 콩나물 판매 영수증
바.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소·돼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①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② 사료구매 영수증, 가축입식 증명서, 가축출하 내역서 중 1가지
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3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신고확인증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편람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의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는 「농어업식품기본법」 시행령의 연간 농산물 판매액(120만 원) 관련 농업인 기준(②)을 충족하는 데 소요되는 농지면적을 재배품목에 따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농어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1000㎡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외에 추가로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

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규정함. 이는 「농지법」 시행령의 농업인 정의 규정과도 일치함.

- 이에 더하여 '660㎡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을 재배하는 사람'과 '일정 사육규모 이상으로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도 농업인에 포함시키고 있음⁵³⁾.
- 여기에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인까지도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50㎡ 이상인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음.

○ 또한, 기초경영체의 재배품목 정보가 품목군으로 대체될 경우,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도 농정당국에 제약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함.

- 가령,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나 의무자조금제도는 농업경영체의 재배품목과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렇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된 사업·제도에 대해서는 제도개편에 앞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특히, 개별 연계 사업·제도의 신청요건이나 자격기준이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나 등록정보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인하는 사업·제도의 등록요건 변경'도 병행하여 접근해야 함.

○ 한편, 등록정보 차등화는 차등화된 경영체와 연계사업의 매칭, 그리고 가족(농)경영체로의 재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은 대부분 경영체 당 지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소규모 경영체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와 같은 농정방향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농업경영체를 규모나 여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차등화해서 설정하고, 지원사

⁵³⁾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제2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57호, 2022.7.27.).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은 농업인 범위를 둘러싼 현장의 민원 증가를 이유로 2019년에 농업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음.

업들도 이에 부합하게 차등화하여 설계된다면, 지원사업이 증가한다고 해서 농업경영체 수가 증가하는 상황은 해소될 수 있을 것임.

2.2. 종사자와 매출액 정보의 추가 요구

○ 농정당국이 농업인력의 부족이나 미스매칭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농업노동력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종사자 정보 입력항목을 일부 수정·보완할 경우 농업노동 및 고용노동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일정 영농규모를 초과하는 일반·전문 농업경영체는 가족 종사자 외에도 고용노동 종사자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초 농업경영체가 비가족 종사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전문 농업경영체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부 일반 농업경영체가 대부분의 고용노동을 활용하는 집단일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들의 종사자 정보 항목을 개편하여 효과적으로 수집·분석하면 대략적인 농업고용노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일단 전문경영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의 고용 형태나 고용경로, 노동시간, 수행작업, 영농경력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일반경영체까지 종사자 관련 추가정보 입력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점차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해서도 비자 유형, 근로여건(노동환경)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농업소득 안전망 강화, 영농 효율화, 농업경영자금 확보, 소득기반 재정지원 확대 등의 측면에서 농업경영체의 농업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농업경영체(농가)는 농업수입 10억 원 미만의 소득세 과세 면제 대상으로 국세청을 통한 농업수입 파악이 쉽지 않음.

○ 국세청 소득신고를 통한 농업소득 파악을 위해서는 지출 및 수입 자료 수집, 기록, 신고 서식 작성, 신고서류 제출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농가의 고령화, 영세한 경영규모 등을 고려할 때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기록이 쉽지 않은 실정임(임소영 외, 2022).

- 전체 농가의 약 70.2%가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연 1천만 원에 미달하는 영세한 농가로 농산물 판매 및 비용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이 쉽지 않음(표 5-7 참조).
- 전체 농가의 약 39.82%가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의 고령 농가로 농산물 판매 및 비용 관련 자료 수집 및 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표 5-8 참조).

〈표 5-7〉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수

단위: 호, %

구분	농가 수	비중
~1천만 원	727,044	70.23
1천~2천만 원	106,066	10.25
2천~3천만 원	64,292	6.21
3천~5천만 원	56,595	5.47
5천~7천만 원	31,766	3.07
7천만~1억 원	22,850	2.21
1억~2억 원	17,169	1.66
2억~5억 원	6,503	0.63
5억 원 이상	2,908	0.28
합계	1,035,193	100.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20년

〈표 5-8〉 연령별 농가 수

단위: 호, %

구분	농가 수	비중
40세 미만	12,426	1.20
40대	61,974	5.99
50대	202,331	19.55
60대	347,714	33.59
70대	292,157	28.22
80세 이상	118,591	11.46
합계	1,035,193	100.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20년

○ 한편,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및 주요 판매처에 대한 정보는 농업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⁵⁴⁾

- 2014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때 농업소득, 자산, 부채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음.
- 그러나 2019년 개정된 시행령에서 관련 항목이 삭제되었음.

○ 전문 유형 경영체에 한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시 매출액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비교적 경영 규모가 커서 판매 및 생산비용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기록이 비교적 용이한 전문 유형 경영체에 한해서만 매출액 정보를 요구하도록 함.
- 반면, 비교적 경영규모가 영세하여 기초자료의 수입과 기록이 쉽지 않은 기초 및 일반 유형 경영체를 대상으로는 현재와 같이 매출액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 매출액 자료가 확보되면, 매출액에 정해진 소득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대략적인 전문 유형 경영체의 농업소득 추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임.

○ 농산물 매출액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 유형 경영체는 농산물 판매전표, 거래내역서, 정산서 등 매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농산물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판매처에 따라 다름(표 5-9 참조).
- 농산물 판매금액 증빙 서류 수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소영 외, 2022), 판매 관련 증빙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76.1%로, 농업경영체의 대략적인 농산물 매출액 증빙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 경영규모가 큰 전문 농업경영체 유형으로 한정할 경우, 이러한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임.

⁵⁴⁾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 2조 1항 제1호 관련 별표 1(검색일 2024. 1. 11.)

〈표 5-9〉 판매처별 농업인 매출 증빙 서류

판매처	증빙 서류
농협	정산서
소비자 직판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택배 송장 혹은 영수증
산지유통인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산지공판장	판매전표
도매시장	판매전표
대형 유통업체	거래내역서
기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계약서류, 거래내역서

자료: 임소영 외 (2022)

○ 한편, 전문 유형 농업경영체에 한해서는 경영체 등록정보 자료 갱신 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임.

-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고, 변경 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소득은 연 단위로 파악되어야 하므로 현재 3년으로 설정된 등록정보 자료 갱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 농업경영체(순차적으로 일반 농업경영체까지 확대)의 경우 작물재배(가축사육) 정보를 최소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현행화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농형태별로는 대체로 이모작, 이기작이 가능한 논농업경영체와 밭농업경영체와 달리, 연중 생산이 가능한 시설농업경영체에 한하여 분기별로 작물재배 정보의 현행화를 의무화한다면, 해당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같은 맥락에서 축산경영체의 경우, 축산물이력제 대상이 아닌 축종에 대해선 연 2회(상반기, 하반기) 가축사육 정보의 현행화를 요구해야 함.

Ⅵ.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활용 방안

1. 등록정보 관리방안

- 최근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일부 개정(2023.8.16.)되었고, 시행(2024.2.17.)을 앞두고 있음.
 - 등록기준 외에도 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농자재구매영수증 등) 제출 요청 및 농업경영정보 실태조사 실시 근거, 구체적인 직권말소 사유 규정, 거짓·부정등록 증명(확인)자 과태료 부과, 거짓·부정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1년) 및 벌금형(500만 원) 처분 등이 포함됨.
- 따라서 지금까지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시 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상시관리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비농업인과 비농업법인의 등록 방지 및 부적격(거짓등록, 자격미달 등) 농업경영체 말소 등 경영체의 사후적 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토지대장 등 행정정보를 활용한 대규모 교차검증이 가능하고, 농업경영정보 실태조사 및 현지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농정당국은 농업경영체 부정등록검증시스템 개발·운용을 준비 중임.
- 본 연구에서 제안한 농업경영체 유형화와 등록정보 차등화를 추진할 경우,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업무 프로세스(신규등록-갱신-현지조사-말소)에서 등록정보 관리체계를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1.1. 신규등록

○ 신규등록 전 단계로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서비스를 통한 신규등록 유형 확인 절차 신설

- 유형(기초경영체, 일반경영체, 전문경영체)별 등록정보 차등화에 따라 정보를 증빙하는 데 필요한 자료도 차별적일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사전진단서비스를 통해 신규등록자의 유형을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필요서류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사전진단서비스의 등록유형은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농형태, 영농면적, 경영주 연령 또는 영농경력, 농외소득 등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 및 안내함.

- 기초 및 일반경영체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의 신규 등록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증빙자료만이 요구되겠지만, 전문경영체에 해당할 경우 필요에 따라 매출액 정보, 소득정보 등 민감한 정보와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 등이 더욱 폭넓게 요구될 것임.

○ 등록정보 차등화에 따른 매출액 정보, 소득정보 등 추가적인 정보는 시스템적으로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와 별도의 구비서류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로 분류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소득정보에 해당하는 농외소득은 국세청의 협조하에 소득금액증명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음. 매출액 정보의 경우, 농협(스마트 판매 시스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출지원시스템, 농수산식품거래소) 등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농업인의 판매정보를 확인 가능함. 다만, 시스템 구축 이전 관계기관 간 정보 이용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하고, 정보 확인을 위해 정보 수집대상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요구됨.

- 판매영수증 중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택배 송장 혹은 영수증,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판매전표, 거래내역서 등은 구비서류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데 이들 서류는 교차검증이 가능하여 정보수집을 위해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3만 원 이상 거래에서 인정되지 않은 간이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자료에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할 것임.

- 농업경영체의 농업소득 및 매출액 정보를 시스템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업ON의 농업경영장부 서비스를 통해 영농일지와 입출금 장부를 전문경영체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음.

-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농업ON은 2019년에 개설되어 농업경영장부 외에 도매시장 가격 등 가격 정보, 지원사업 정보, 기술 컨설팅, 그 외 농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임.

- 농업ON에서는 농업경영장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농업인은 농업ON의 경영장부를 통해 품목별, 거래처별, 입출금 및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농가의 자산과 부채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 종합적인 경영상태 파악에 용이하다. 농업ON의 농업경영장부시스템은 영농일지, 입출금장부, 회계장부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농업인이 작성한 기록에 근거하여 회계 진단과 분석을 제공함.

○ 농업경영장부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농일지, 입출금장부를 작성하기 전 농업인이 해당 농가의 영농 관련 정보와 자산·부채 정보를 먼저 등록하여야 함. 영농 관련 항목에는 품목, 비료, 농약, 거래처, 교육, 고용 노동력, 농지와 관련된 사항을 등록함. 그러나 구체적인 사용량, 일자 등을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비료명, 농약명, 노임 등에 대한 사항을 등록하고, 자산·부채 관련 정보에는 토지, 건물, 영농시설물, 대농기구, 유동자산, 차입금이 포함되며 자산명, 규격, 구입 및 설치 연도와 가격 등을 등록함.

○ 영농일지에는 작업내용, 교육내용이 포함되며, 농업인이 등록내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음. 영농 작업내용 등록 사항은 작업 시작일 및 종료일, 해당 품목, 작업단계, 작업내용, 면적, 사업유형(생산, 유통, 판매, 가공, 체험, 시설관리, 기타)임. 다음 단계로 사용한 농약 및 비료 종류, 고용한 농업노동력 인원수 및 결제 방법, 사용한 농기구 관련 사항, 날씨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통해 농업인, 농업법인의 농업소득, 판매량 및 판매액 등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2014년에 개정된 관련 법 시행령에 있었음. 그러나 2019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은 농업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뀌었고⁵⁵⁾, 이는 현행 시행령까지 유지되고 있음. 따라서, 농업경영체 유형화에 따라 상기에서 논의한 정보들을 등록단계에서 수집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 현재의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별표1의 '8.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주요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및 주요 판매처. 다만, 농업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를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주요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및 주요 판매처 등. 다만, 농업경영체 유형 상 기본 등급, XX 등급에 해당할 경우 등록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⁵⁵⁾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별표1

- 기존 등록자의 경우, 시스템상에서 농업경영체 유형을 분류하여 이를 고지 및 확인시키고, 유형에 따른 추가적 등록정보를 안내해야 할 것임.
 - 기초경영체는 품목정보를 별도로 갱신하지 않아도 등록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전문경영체의 경우에는 추가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야 함.
- 한편, 전문경영체는 판매액 정보가 추가로 요구되는바, 신규등록 단계에서 재배면적 상 전문경영체에 포함될지라도 판매액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없는 경영체의 경우 일반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한편, 이들은 판매액 정보 제공을 통해 전문경영체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전문경영체로 변경에 따른 인센티브, 판매액 관련 증빙 서류 및 절차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음.

1.2. 갱신(현행화)

- 농지 정보의 현행화는 등록정보 유형화와 별개로 농지대장 정보, 농업경영체관리시스템, GIS기반 현장확인 시스템이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포함됨에 따라 시스템상에서 현행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전담기관의 업무를 가중하여 다소 비효율적이라 평가되는 재배 품목 현행화의 경우, 현행화 방법, 시기, 횟수 등을 등록유형에 따라 설정하면 전담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선, 기초경영체는 현행화 대상에서 제외함(단, 밭농업경영체이며 1,000㎡ 이상 재배하는 기초경영체는 현행화 대상임).
 - 영농형태에 따라, 논농업경영체와 밭농업경영체는 작부체계(이모작, 이기작)를 고려하여 연 2회(상반기, 하반기) 현행화하며, 연중 내내 생산이 가능한 시설농업경영체는 분기별로 현행화하여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해야 함.

- 축산업경영체의 경우, 축산물이력제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현행화가 가능한 축종은 확인 절차 없이 시스템상에서 시스템적으로 현행화하며, 그 밖의 축종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현행화함.

○ 농업ON을 이용하여 영농일지를 작성하는 경영체의 경우(전문경영체), 시스템상에서 품목 현행화가 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한편, 등록정보 유형화에 따른 등급별 정책지원이 차등화될 경우, 전문경영체는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큰 폭으로 개선된 만큼 이 유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정보는 반드시 정보의 갱신이 될 수 있도록 현행화를 의무규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은 추가적인 정보의 현행화 유무를 전문경영체 유형(등급)에 대한 적격성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임.

1.3. 현지조사

○ 실경작 현지조사는 현행 모든 농업경영체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시 필수적인 절차로 수행되고 있음. 그러나, 농업경영체 유형화에 따라 영농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고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전문경영체는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업농에 해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담기관의 업무효율성을 위해 해당 절차를 생략 또는 표본조사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반면에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고 기초 및 일반경영체 유형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비농업인의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현지조사 횟수를 현행 등록단계 1회에서 연 1회로 또는 3년 중 2회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이들이 등록 이후 영농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한편,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여 현지조사 시 관련 정보에 관한 확인을 생략하는 방안도 도입하여 현지조사의 효율

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 6-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 가능한 공공기관 자료

공공기관	연계 가능 자료	연계 내용
기획재정부	부정수급자정보	부정수급자 정보를 연계한 비농업인 식별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농업인 정보를 연계한 실경작 식별
	농림어업총조사	농업인 정보를 연계한 실경작 식별
	귀농귀촌어 통계	귀농귀촌인의 정보를 연계한 실경작 식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농외소득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행정정보	가축 사육 현황 파악
	공익직불제 지급정보	농업인 정책수혜 파악과 실경작 식별
	후계농업 정보	농업인 정책수혜 파악과 실경작 식별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업인 정책수혜 파악과 실경작 식별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약 구매자 정보를 연계한 실경작 농업인 식별
국토교통부	토지대장정보	토지의 소유자 정보 확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주소지 확인
법무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사전고지 및 결과 통보 시 당사자의 출국 또는 입국 사실 확인
	가족관계 정보	경영주외농업입확인(가족) 또는 경영체 분리 확인
	등기필정보	실제 거주지 파악으로 부재지주 추정
각 지자체	농민수당 지급 자료	실경작 식별
농업협동조합	농자재판매정보시스템	농자재 구매자 정보를 연계한 실경작 농업인 식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작물재해보험 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수해 이력 파악을 통한 실경작 식별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이력관리 정보	가축 사육 현황 파악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정보시스템(농지대장)	농지소유 현황 파악
	임대차정보	농지임대차, 임차농 정보 파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청구자료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 입원 기간 정보를 활용한 고령 은퇴농 식별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건강보험가입정보	근로소득자의 재직여부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농의 장기요양 여부 확인

자료: 저자 작성.

1.4. 말소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미이행 따른 조치는 기본적 등록정보와 추가적 등록정보를 구분하여 ‘등록정보 말소’ 및 ‘등록유형 탈락’을 결정해야 함.
 - 농업경영체 자격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등록정보(현행 등록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현행화 미이행은 현행과 동일하게 등록정보 말소 절차를 진행함.
 - 반면에 전문농업경영체 유형(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현행화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일반경영체 유형으로 격하시키거나 전문경영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함.

2. 등록정보 활용방안

- 농업경영체 등록이 농림사업 신청의 선결요건으로 설정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현재 농림사업 92개, 비농업분야 사업 및 제도 31개, 지자체 자체사업 370여 개에 연계되어 사용되고 있음(문한필 외, 2023).
 - 이에 따라, 타 부처·기관이나 지자체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은 2023년 기준 등록정보 조회 16만여 건, 분석가공 제공 5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음.
 - 반면, 농업인 입장에서는 세제혜택을 위한 농업인 자격증명이나 보조금 신청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기에, 정부는 발급 관련 농업인의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해 옴.⁵⁶⁾
 - 한편, 일반에게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통계서비스(농림사업정보시스템)⁵⁷⁾를 통해서 지역별·연령별·품목별 등으로 집계된 각 등록항목의 평균값이 제공되고 있음.

⁵⁶⁾ 무인민원발급기(2019.10), 정부24(2020.4), 어디서나 민원처리(2020.9), 농협 조합원 관리시스템(2021.5), 공공Mydata(2021.10),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2021.11)

⁵⁷⁾ <https://uni.agrix.go.kr/docs7/biOlap/dashBoard.do>(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 서비스)

○ 그러나 이러한 활용은 당초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한적 또는 소극적인 활용이라고 볼 수 있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농업경영체 유형화(등록정보 차등화 포함)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는 대다수 연계사업에서 농업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만 사용되고, 일부 농림사업에서만 사업대상 식별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세부적인 등록정보는 개별 사업대상의 식별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농업경영체 유형화는 각 유형에 따라 신청가능한 모든 농림사업들을 메뉴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농림사업이 각각의 경영체 유형 중 어떤 유형들이 신청가능한 지를 매칭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임. 이는 신규로 설계되는 농정 프로그램들에도 적용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가장 큰 차별성은 다른 어떤 DB/통계와 달리 개별 경영체의 재배작물(사육가축)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임. 이 정보(품목 재배면적, 가축 사육두수)가 특히 갱신이 지연되기에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이 정보의 현행화가 개선될 경우 그 정책적 활용도와 가치는 다른 어떤 DB/통계보다 클 것임.

- 품목(축종)별 재배면적과 사육두수 정보가 모든 경영체별로 등록되어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취합될 경우, 개별 품목의 수급 예측, 가격 전망 등의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할 수 있음.
- 품목에 따라서는(특히 밭작물) 갱신(현행화)의 한계가 분명 존재함에도 수급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전수조사 자료를 산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DB의 시계열적 변화를 토대로 현시점의 표본조사 등과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그 효용성은 충분할 것으로 기대됨.
- 수급 및 가격 전망 기초자료로서의 효용이 충분하다고 입증될 경우, 오히려 갱신 주기를 단축해야 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단, 농업인에게는 잦은 정보제공의 댓가를 제공해야 함.

- 이외에도 공간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계할 경우, 전국단위 외에도 지자체단위 농업구조, 농지이용, 작물재배(축종사육)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소멸 대응, 농지 등 농업자산의 보전, 지역농정의 설계와 집행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1. 농업경영체 유형화에 따른 등록정보 활용방안

- 현재 농림사업은 정책목표가 소득/후생 증대, 품목 육성, 생산성 향상, 사회적 가치 실현 등으로 다양하며, 정책대상도 농지, 개인 시설, 공동 인프라, 인력/경영체 등으로 다양한 반면, 이들 농림사업의 신청 자격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만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많음.
 - 이는, 실무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농업인 여부를 판정하는 데에만 활용하지, 개별 농림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식별하는 데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농업경영체가 보유한 영농자산(논, 밭, 시설, 가축)별 영농규모, 농외소득(3,700만 원), 연령 및 영농경력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유형화하여 개별 정책사업의 대상이 되는 유형(들)만을 제시하도록 한다면, 사업대상 식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성격상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전업농가를 대상자 우선순위로 설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이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로 전문경영체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를 명시하여 해결할 수 있음. 또한, 영세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를 기초농업경영체로 한정할 수 있을 것임(표 6-2 참조).
- 또한, 연령 및 영농경력에 따른 유형과 영농규모 및 농외소득에 따른 유형을 혼합한 정책 설계 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영체 유형화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요건을 설정한다

면,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도입의 목적인 맞춤형 농정 실현에도 더욱 부합할 것이며, 유형별 농업경영체에게도 지원가능한 정책사업을 메뉴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성장단계에 있는 경영체일지라도 영농형태별 경영체 유형(기초, 일반, 전문)에 따라 경영체의 영농여건이 다르고 필요한 정책도 모두 다를 것임. 예를 들어, 성장단계의 기초경영체는 자본과 자원이 제한적이고 영농경험이 짧아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과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을 제공해야 하지만, 성장단계의 전문경영체는 더 발전된 기술, 시장 확대, 그리고 고급화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임.

〈표 6-2〉 농림사업에서 농업경영체 유형화 활용 예시

사업명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 자격			정책 대상				정책 목표				해당 농업경영체 유형		
	농업인	법인	필지	농지 기반	개인 시설	공동 인프라 제도	사람 (경영 체)	소득/ 후생	품목 육성	생산성 향상	사회적 가치	기초	일반	전문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	○				○	○	○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	○	○		○				○				○	○
농업인안전보험, 영세농 지원	○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2.2. 등록정보 차등화로 확보한 추가 정보 활용방안

○ 전문경영체에 요구되는 생산액(판매액) 정보는 농업경영체 성과 기반 정책평가, 농업경영체 성과 보상체계 도입,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 또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 성과 기반 정책평가) 각 농업경영체의 생산액(판매액)을 분석하여, 정

부 지원정책의 영향을 평가함. 예를 들어, 특정 작물에 대한 보조금이 생산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함. 또한,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생산액 및 판매액의 추이를 분석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정책 혜택을 받은 전문경영체의 장기적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평가하고 이를 정책평가에 활용함.

- (농업경영체 성과 보상 체계 도입) 성과지표인 생산액(판매액)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해당 농업경영체(전문경영체)에 인센티브(긍정적 보상) 또는 디스인센티브(부정적 보상)를 제공할 수 있음.
-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규모 대비 판매액이 높은 농업경영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혁신적인 농업기술이나 관행을 식별하고 이러한 기술이나 관행을 다른 농업경영체에 전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 (기후변화 또는 국지적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응) 개별 경영체의 판매액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나 기타 국지적 환경적 요인이 특정 작물이나 축산물의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재배 또는 사육 전략을 마련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농업인력 실태파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종사자 정보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비가족 종사자를 많이 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경영체에 대해서 우선 입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전문경영체는 종사자의 고용 형태나 고용 경로, 노동시간, 수행작업, 영농경력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일반경영체까지 입력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해서도 비자 유형, 근로여건(노동 환경)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한다면,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급이나 농업·농촌 현장 외국인 노동자 인권 관련 실태 파악 및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강마야, 김기흥, 이도경. 2020. 「충남 농정대상자인 농업인과 농민의 개념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2020-08, 충남연구원.
- 김관수, 이태호, 안동환, 조정찬, 임채환, 허민정. 2019.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도입에 대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수석, 김태곤, 강혜정. 200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김종선, 변아름. 2013. 「맞춤형 농정 지원 등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김종선, 정서연. 20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2013.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실태와 활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이경해. 2020.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관계 정립 및 협력 방안」, (사)환경농업연구원.
- 김정호, 최은아. 2015. 「농업경영체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유찬희. 2019. 「일본 농업구조 정책의 동향과 주요 쟁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한호, 이태호, 남대희, 우아미, 민진경. 201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농가 유형별 특성 분석 및 DB 구축 개선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김현희. 2016. 「농업인·농산물 관련 법령의 정의규정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6, “20여 년 만에 농업경영체 지원 패러다임 바뀐다”. 보도자료
- 문한필, 강혜정, 김윤형, 윤영석, 전종범, 손찬호, 전가빈. 2022. 「실경작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업경제학회.
- 문한필, 조규대, 조재성, 윤영석, 손찬호, 양재은, 정재윤. 2023. 「농업경영체 등록 연계사업 실태조사 연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유찬희, 김종인, 승준호, 김현정. 2022a.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 재정립과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찬희, 이순미, 승준호, 이세진. 2022b.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 체계 재정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명현. 2021.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정의 : EU와 스위스의 사례와 시사점”. 농정연구, 77(0), 129-144.
- 임소영, 조승연, 윤채빈. 2021.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현출. 2023. “미래 ‘농산업경영체’ 구조 변화와 정책 과제”. 농업·농촌의 길 2023 발표자료.
- 한석호, 김수석, 채광석, 유찬희, 남경수, 정호연. 201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 DB 분석 및 활용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홍정학. 2023. “농업인 소득과세 현황과 개선방안”. 2023년도 농식품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

- Brian C. Briggeman, Allan W. Gray, Mitchell J. Morehart, Timothy G. Baker, and Christine A. Wilson. 2007. "A New U.S. Farm Household Typology: Implications for Agricultural Policy".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29.
- EU Commission. 2018. "Pilot projects on using IACS for agricultural statistics".
- Jasper Womach. 2005. 「Agriculture: A Glossary of Terms, Programs, and Laws, 2005 Edition」. CRS Report for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Robert A. Hoppe and James M. MacDonald. 2013. 「Updating the ERS Farm Typology」.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 Huffman, W.E. "Agricultural Household Models: Survey and Critique." In *Multiple Job-holding among Farm Families*, M. C. Hallberg, J. L. Findeis, and D. A. Lass, eds., pp. 79-111.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91.
- Shively, G., & Pagiola, S. (2004).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local labor markets, and deforestation in the Philippine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Economics*, 9(2), 241-266.
- Fafchamps, M. (1993). Sequential labor decisions under uncertainty: An estimable household model of West-African farmers.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1173-1197.
- Meghir, C., & Weber, G. (1996). Intertemporal nonseparability or borrowing restrictions? A disaggregate analysis using a US consumption panel.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1151-1181.
- Phimister, E. (1995). Farm consumption behavior in the presence of uncertainty and restrictions on credit.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7(4), 952-959.
- Deaton, A. (1988). *New Approaches to Household Survey Data from Developing Countries*. Princeton, Woodrow Wilson School-Development Studies.
- Briggeman, B.C. "A New U.S. Farm Household Typology: Implications for Agricultural Subsidies." Unpublished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2006
- Briggeman, B. C., Gray, A. W., Morehart, M. J., Baker, T. G., & Wilson, C. A. (2007). A new US farm household typology: Implications for agricultural policy.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29(4), 765-782.
- Hoppe, R. A., Perry, J. E., & Banker, D. E. (2000). ERS farm typology for a diverse agricultural sector (No. 1474-2016-120794).
- Hoppe, R. A., & MacDonald, J. M. (2013). Updating the ERS farm typology. *USDA-ERS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110).

Wang, H., Feil, J. H., & Yu, X. (2023). Let the data speak about the cut-off values for multidimensional index: Classification of human development index with machine learning.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s*, 87, 101523.

Graskemper, V., Yu, X., & Feil, J. H. (2021). Farmer typology and implications for policy design—An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 approach. *Land Use Policy*, 103, 105328.

<https://agriculture.gouv.fr/les-regles-transversales>, 검색일: 2023.10.23.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ARTI000047544479/2023-05-15>, 검색일: 2023.10.29.